

국문초록

전환기 러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정체성: 러시아연방 부랴찌야공화국의 사례 연구

김효섭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소련방공화국의 민족적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소련방공화국에서 발생한 민족주의·분리주의는 러시아연방의 민족지역에서 민족부활과 주권선언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주권선언은 '소비에트·민족'이라는 정체성의 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주권선언은 민족지역의 다민족사회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초래하였다. 즉, 민족성에 따라 주권선언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민족지역의 주권선언, 지역주의는 정체성의 정치를 수반하였다. 소비에트정체성이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민족정체성, 지역정체성이 태우되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회, 즉 지역주의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과 민족을 둘러싼 정체성 정치의 과정,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 따른 지역주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로 러시아연방의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부랴찌야공화국을 사례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의 목적은 실질적인 자치권의 획득이었다. 특히, 경제주권의 획득이었다. 점점 악화되는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치공화국은 경제정책 수립의 권한이 없었다. 주권선언이라는 지위상승을 통해 연방공화국과

동등한 권한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권선언에서 사용한 기제는 '민족'이었으며, '민족기제'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들간에 동일하지 않았다. 민족성에 따라 '주권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민족'과 '민족지역'을 둘러싼 정체성의 정치로 나아갔다. 주권선언은 중앙-지방관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민족기제가 개입함으로써, 러시아민족과 명목민족간의 문제로서 나타났다. 러시아민족은 '민족'을 주권선언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인식하였지만,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은 '민족'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민족갈등을 야기하였다.

셋째, 주권선언은 연방체제의 변화, 즉 중앙-지방관계를 변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권선언 당시 소연방차원에서 팽배한 민족주의, 분리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러시아민족과 소수민족간의 갈등으로 전화되기도 하였다.

넷째, '민족정치과정', '민족담론'은 1994년을 기점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밖으로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면서 주권선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고, 안으로는 '민족정치과정'을 지속할 만한 여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이었다. 연방조약 체결이 전자를 대표한다면, 후자는 '민족의 실체'가 없거나 약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부랴뜨민족은 역사적으로 철저한 '민족형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족상태로 존재하였고, 역사적 민족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인구의 25%, 반면에 러시아민족은 70%—이 작기 때문에, 민족정치과정이 지속되기 힘들었다.

다섯째, '민족담론'은 '경제담론'으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교체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러시아연방의 시장화, 사유화 정책 시행으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경제문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주권선언의 시기에는 '민족담론'이 권력과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었지만, 경제 자체가 직접적인 문제가 된 시점에서 민족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여섯째, 유럽러시아 지역을 위한 자원공급기지였던 부랴찌야지역은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제개방으로 세계경제공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역사적으로 공통성을 지니고, 세계 경제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다. 부랴찌야지역의 경제활동 방향의 변화, 대외경제 방향의 변화는 러시아연방에서 부랴찌야지역의 지정학적 위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중·일과 동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부랴찌야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은 러시아사회와 변화와 세계경제공간의 변화와 함께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러시아연방에서 발생한 지역주의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연방에서 지역주의의 발생은 '지역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소비에트시기에 중요한 범주도 변수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지만, 주권선언으로 인해 러시아의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지역의 출현은 지역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발현인데, 그 요소들은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제도화된다. 이러한 지역의 출현은 공산당, 이데올로기 등 소비에트 통치(통제)기제가 사라지면서 가능해졌다. 지역의 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 구성요소는 민족과 경제다.

둘째, 체제 전환기, 국가형성기에 민족지역에서 '민족의 의미와 역할'의 문제이다. 국가형성이라는 전환기에 중심적인 기제와 담론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족'이었다. 주권선언을 통해 지역의 이익과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이 동원'되었으며, 이는 이러한 주권선언을 민족지역이 주도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국가형성이 완수되거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면서 민족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경제가 차지하였다. 민족은 국가(지역)형성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국가(지역)발전의 과정에서 그 힘과 역할이 줄어든다.

셋째, 전환기 러시아 지역주의 특성 변화이다. 지역주의 특성 변화는 지역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며,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동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지역담론의 변화가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지역정체성의 변화가 또한 담론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전환기 지역주의의 발생은 지역의 출현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민족담론'이다. 지역출현기의 민족담론은 러시아연방의 명목 민족인 러시아민족과 소수민족간의 문제이나, 지역형성기 민족담론은 지역내부 구성원간의 문제로 전환된다. 지역형성기에 민족담론은 약화되며, 지역정체성은 민

족지역에서 다민족지역으로 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족담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제담론이 대체하게 되며, 지역정체성은 경제발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주요어 : 지역주의, 지역정체성, 정치성의 정치, 민족주의, 민족부활, 민족정치과정, 주권선언, 전환기, 지역 출현, 지정학, 러시아연방, 부랴끼야공화국

학 번 : 98208-801

<목 차>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 지역과 방법	6
1) 연구지역(대상)	6
2) 연구지역 선정 기준과 이유	9
3) 연구방법	16
3. 연구흐름도	17
4. 연구지역 개관	18
1) 위치와 자연환경	18
2) 정치체계와 행정구역	22
3) 사회경제적 특성	25
4) 부랴뜨민족의 분포	32
제2장 문헌연구와 이론적 배경	33
1. 지역주의	33
1) 지역주의의 개념과 특성	33
2) 지역주의 이론	37
3)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41
2. 러시아의 지역주의	46
3. 러시아 지역주의 연구 동향	52
1) 서구·러시아에서의 연구	52
2) 국내 연구	58

제3장 전환기: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 지역의 '주권화 행진'	61
1. 소연방 해체 과정과 특징	62
1) 소연방체계	62
2) 소련해체와 연방구성공화국의 독립	67
2.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주권선언과 연방형성	74
1) 주권선언	74
2) 러시아연방 형성	77
3. 지역경제협력체 결성	84
제4장 부랴찌야공화국의 발전과정과 주권화 과정	87
1. 공화국 발전과정	87
1) 자치공화국 수립(1923년)	87
2) 민족지역분리(1937년)	89
3) 공화국명 변경(1958년)	96
4) 주권선언-공화국수립(1990년-)	97
2.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화 과정	98
1) 공화국의 주권선언	98
2) 주권선언의 배경 및 목적	108
3) 주권선언에 대한 입장	114
4) 소결	120
제5장 민족부활-민족담론의 대두	121
1. 민족의식의 자각과 형성	122
1) 민족의식 자각의 배경	124
2) 민족정체성 형성	135
3) 민족단체의 결성	149

2. 민족발전과 통합 모색	160
1) 민족지역의 통합	160
2) 이산민족의 결집	175
3) 민족문화·전통의 부활	182
3. 민족관계의 변화와 그 영향	190
1) 민족갈등의 발생	190
2) 민족관계에 대한 주민인식	194
3) 비원주민의 이출	199
4. 민족담론부활과 그 영향	204
 제6장 지역정체성 형성과 변화	206
 1. 지역정체성 형성	207
1) 민족지역성 회복 계기	207
2) 지역상징·대표성	216
2. 지정학적 위상 부각: 민족에서 경제로	220
1) 민족담론의 쇠퇴	222
2) 쇠퇴 원인	223
3) 경제교류 방향의 변화	230
 제7장 요약 및 결론	235
 참고문헌	243

<표 목차>

<표 1-1> 러시아연방의 공화국별 명목민족 비중과 주권선언	10
<표 1-2> 러시아연방의 주요 민족별 인구수 (1989)	14
<표 1-3> 부랴찌야공화국의 주요민족별 인구수(1989)	15
<표 1-4> 부랴찌야공화국의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	21
<표 1-5> 부랴찌야공화국의 연도별 인구수	25
<표 1-6> 부랴찌야지역의 민족구성의 변화	28
<표 1-7> 주요민족의 거주지별 인구수	29
<표 1-8> 업종별 생산액 비중	31
<표 1-9> 러시아연방내 지역별 부랴뜨민족의 분포(1989)	32
<표 2-1> 지역주의현상의 유형과 특징	35
<표 2-2> 지역주의 이론	39
<표 3-1> 소연방 구성공화국 형성 및 연방가입일자	65
<표 3-2> 구 소련의 행정구역 상황(1990년)	67
<표 3-3> 소련에서 분리독립운동의 전개 과정	70
<표 3-4> 소연방공화국의 주권·독립선언 일정(1990년)	73
<표 3-5> 지역경제협력체 결성 상황	86
<표 4-1> 1인당 소득과 주요식료품가격과의 상관관계(당해년도 12월 기준)	112
<표 5-1> 부랴찌야지역의 주요민족별 인구구성의 변화	127
<표 5-2> 민족별 모국어 인식률과 제 2언어 구사율	130
<표 5-3> 부랴뜨민족의 모국어 인식률과 제2언어 구사율(1989)	132
<표 5-4> 교육기관, 집, 직장에서 사용 언어(1994년)	133
<표 5-5> 부랴뜨민족회의 창설에 관한 단체별 입장	154
<표 5-6> 부랴뜨어 출판 상황	184
<표 5-7> 민족관계에서 부정적 현상의 발생 빈도	193
<표 5-8> 민족관계에 대한 주민인식	196
<표 5-9> 민족관계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197
<표 5-10> 민족관계에 대한 민족별 인식	198
<표 5-11> 민족별 이출입에 따른 순인구증가	201

<표 6-1> 공화국명 변경 여부에 대한 주민의식	212
<표 6-2> 공화국명 변경 찬성 이유	213
<표 6-3> 공화국명 변경 반대 이유	214
<표 6-4> 대통령 자격 요건에 관한 주민의식(율관우대)	217
<표 6-5> 부랴찌야지역에서 소유형태별 기업사유화 현황	223
<표 6-6> 적자기업과 기관의 비중	224
<표 6-7> 부랴찌야공화국의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수	225
<표 6-8> 1인당 월평균 금전 소득	227
<표 6-9> 지역예산 중 연방교부금 비중	229
<표 6-10> 부랴찌야공화국의 국가별 수출입(1990-1992)	232
<표 6-11> 부랴찌야공화국의 수출지역별 총액	232
<표 6-12> 부랴찌야지역의 수출입량(1995-2002)	234

<그림 목차>

<그림 1-1> 러시아 지역주의의 변화 가능성	3
<그림 1-2> 민족지역 주권선언의 내용적 연관성	3
<그림 1-3> 연구흐름도	18
<그림 1-4> 인구 1,000명당 출생률과 사망률	26
<그림 3-1> 소연방 행정구역체계	66
<그림 3-2> 러시아연방 행정구역체계	81
<그림 5-1> 부랴찌야지역 주요민족의 인구변화	128
<그림 5-2> 민족담론부활과 그 영향	204
<그림 6-1> 공화국명을 둘러싼 지역·민족정체성 구조	215
<그림 6-2> 지역정체성 인식 유형	220
<그림 6-3> 러시아와 부랴찌야의 실업률 변화	226
<그림 6-4>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 주민 비율	227
<그림 6-5> 수출지역별 비중	233

<그림 6-6> 수입지역별 비중	233
<그림 7-1> 지역 출현의 과정	239
<그림 7-2> 전환기 러시아에서 지역주의의 특성 변화	241

<지도 목차>

<지도 1> 연구지역도	8
<지도 2> 공화국별 명목민족 비중	12
<지도 3> 부랴찌야공화국 행정구역도	23
<지도 4> 소연방지도	63
<지도 5> 부랴뜨-몽골 자치주(1922)	88
<지도 6> 민족지역 단일 행정구역 형성(1923)	89
<지도 7>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 영토 분리(1937)	92
<지도 8> 행정구역 제조정(1937. 12.)	94
<지도 9> 부랴뜨 부족별 분포	230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2년 10월 모스크바 남부의 뮤지컬 극장인 '문화궁전'에서는 체첸출신의 반군들이 체첸전쟁의 증거를 요구하며, 700여명을 불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3일간 계속된 인질극은 34명의 인질범과 130여명이나 되는 러시아인들의 희생으로 끝을 맺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전암 후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상승하였다. 테러뿐만 아니라, 분리독립에 대한 러시아국민들의 두려움과 우려가 막대한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인질극을 진압한 정부에 대한 저지로 나타났다. 체첸인은 러시아국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체첸 지역은 러시아연방의 땅이라는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의 정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오랜 역사적 축원인 독립국가수립을 향한 체첸인들의 열망과 체첸을 러시아에서 절대 분리·독립시킬 수 없다는 일반적인 국민정서는 이렇듯 반복적인 테러와 인명피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체첸문제는 단지 분리독립, 테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영토를 둘러싼 '정체성의 정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체첸공화국에서처럼 비록 분리독립과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은 아님 자라도,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¹⁾의 영토적 통합성을 위협하고, 구성민족간 갈등을 앙상하는 상황은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도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과 소련해체라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RSFSR, 이하 러시아공화국)²⁾을 비롯해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련(USSR)의 해체는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공화국들의 독립의 다른 표현이다. 1990년 3월 발틱 3국을 필두로 진행된 연방공화국의 독립·주권선언 열풍은 러시아연방(당시 러시아공화국)에도 물어닥쳤다. 이른바 '주권화의 행진 парад суверенитетов'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러시아연방의 14개 자

1) 러시아연방(RF)은 1991년 12월 25일 러시아공화국(RSFSR)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치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했고, 4개의 자치주가 주권공화국을 선언했으며, 주, 변강주와 같은 지방은 보다 많은 권한이 보장되는 공화국의 지위를 주장하였다. 일명 '민족주의의 마뜨료슈카(матрёшка национализма)⁽³⁾'라 불리는 현상이 러시아연방의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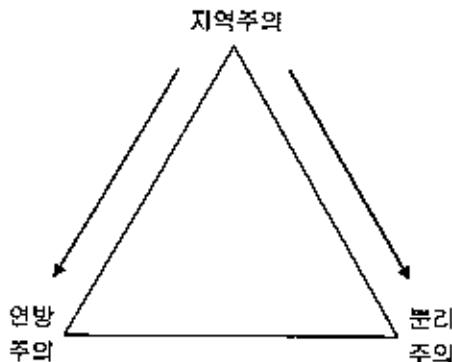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과정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에서 지역이 중요한 주체이자 변수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⁴⁾ 러시아연방 중앙정부는 러시아도 소련과 같이 해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정치·경제 체제의 전환 국면에서, 분리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의 대두로 연방체제와 국가통합의 유지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주권·독립선언을 한 지역들을 어떻게든 러시아연방의 틀 속에 묶어두어야 했기에, 연방중앙은 지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가해체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연방중앙의 대처방식은 중앙과 지역간 조약체결을 통해 새로운 연방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현재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연방체제는 이러한 정치적 국면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왜 주권선언을 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소연방공화국처럼 분리독립으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그들은 왜 분리주의가 아니라 연방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환기 러시아에서 발생한 지역주의는 연방주의적 특성뿐만 아니라, 분리주의적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주권선언은 분리주의로 발전할 수도 있었고, 연방주의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그림 1-1> 참조). 이 연구의 첫 번째 문제제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에 대한 답으로 단지 구 소연방과 러시아공화국의 구성 주체들간에는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방체제의 문제만을 언급한다면, 일면적이고 형식적인 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연방공화국은 연방가입·탈퇴의 권한이 있었음에 반해, 주권선언을 한 러시아연방내 자치공화국들은 이러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분리주의로 발전하지 않고 연방주의의 틀 속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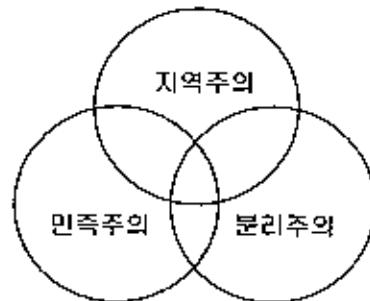
3) 마뜨료슈카는 러시아 전통 인형으로서 양파의 껍질을 벗긴 것과 같이 한 인형 속에 똑같이 생긴 인형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4) Bradshaw M., Stenning A. and Sutherland D., 1998, "Economic Restructuring and Regional Change in Russia", in John Pickles and Adrian Smith(eds), *Theorising Transi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Soviet Transformation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147.

소연방공화국 중에서는 발틱 3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 외 연방공화국은 주권선언을 한 것처럼, 러시아연방에서도 일부 자치공화국은 분리독립선언을,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공화국들은 주권선언을 하였다. 이들은 주권선언에서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연방체제를 유지할 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연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한 소유 여부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독립선언과 주권선언의 차이는 연방중앙의 인정 여부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라는 틀 속에 연방중앙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타자’로 존재하는 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권선언을 주도한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특히 민족지역이 ‘왜 분리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은 연방중앙에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환기 러시아에서 지역이 중요한 정치·경제의 주체로 등장하고,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1-1> 러시아 지역주의의 변화 가능성



<그림 1-2> 민족지역 주권선언의 내용적 연관성

분리주의가 한 국가 내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념이라고 한다면⁵⁾, 분리주의는 지역주의와 민족주의의 가장 침예한 발양태라 할 수 있다.

5) Shlapentokh V., Levita R., Loiberg M., 1997, "The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 Regionalism as Past and Contemporary World Development," in *From Submission to Rebellion: The Provinces Versus the Center in Russia*, WestviewPress.

또한, 다민족국가의 민족지역(ethnic regions) —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에서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을 바탕으로 민족적 이해 증진을 위해 발생하는 운동은 지역주의의 하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민족지역들의 주권선언은 분리주의적 성격과 민족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고 할 수 있다.⁶⁾ 분리독립과 주권선언을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민족지역이었기 때문이다(<그림 1-2>).

지역주의는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자 운동이며, 일정한 영역성과 지역의식,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발생한다. 소연방의 해체는 소비에트시기 동안 국민적, 국가적 통합을 이루어온 정체성의 해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물력, 소연방 해체는 당과 사회주의 아데올로기의 종식뿐만 아니라, '우리-소비에트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해체, 통합 아데올로기의 소멸을 의미한다. 새로운 민족·지역정체성은 해체된 소비에트 정체성의 틈새에서 민족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등장한 것이다.

국가해체, 국가형성⁷⁾이라는 전환기에 발생한 러시아의 지역주의는 연방구성주체들의 자기정립과정을 동반하였다. '소비에트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연방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꾀함에 따라, 각 지역들은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었다.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연방을 구성하는 일주체인 우리(지역)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소비에트시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채 수면아래에 잠복해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지역정체성은 외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에 대한 지역구성원의 인식과 합의(답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며, 그 합

-
- 6) 국지적, 또는 소규모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적 아데올로기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의와 분리주의를 강화한다. 이러한 선념은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어와 유구한 문화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hlapentokh V., et al., 1997:5).
 - 7) '소비에트 국민'이라는 개념은 흐르시조프가 제20차 당대회에서 주창한 것으로 스탈린의 민족정책과 민족벽해를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다(심현용, 2001, "러시아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현대러시아연구회 편, 「현대 러시아의 이해」, 퇴설당, p. 172). 이러한 아데올로기, 정체성을 통치기제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브레즈네프시대부터이다.
 - 8) 국가해체는 전일적인 사회주의공간을 형성하였던 구 소련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 형성은 구 소련에서 독립하여 러시아연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연방은 1990년 6월 12일 소련에서의 주권선언 후 1992년 구성주체(체첸, 파파르스탄 공화국 제외)들과 연방조약을 체결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Tapkov CA, 2001: 199-200).

의의 과정은 지역구성원들의 사회적 특성, 지역의 역사, 지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에 좌우된다.

공화국, 주, 변강주, 자치구 등 89개의 구성주체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130여 개의 민족⁹⁾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인 러시아연방에서 이러한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 수밖에 없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그만큼의 다원화된 의식과 지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국가적 지향과 민족적 지향이 하나이지만, 다민족국가, 다민족사회에서는 민족적 지향과 국가적 사회적 지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점이 '러시아의 지역주의'를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분리독립의 물결 속에 지역주의는 분리주의로 치달아 국가적, 사회적 통합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민족구성원간의 반목과 대립을 양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체첸공화국을 제외하고,¹⁰⁾ 러시아연방의 다른 민족지역이 분리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목표를 둘러싼 구성원간의 경쟁과 합의, 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경쟁과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과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요인의 규명은 체제전환의 국면에 직면한 여지가 있는 다민족(연방)국가의 해체와 통합문제를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제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지역에서 발생한 주권화와 지역주의를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기 러시아연방에서 (민족)지역의 주권화와 지역주의를 초래한 정치 ·

9) 1989년 진행된 전연방인구조사(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에서 소연방에 존재하는 민족수는 총 128개였다. 인구조사시에 민족성의 파악은 객관적이 기준이나 특정 지표에 의해 파악적이고 동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시된 128개 민족 중에서 응답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세시민 민족 외에, '독자적인 민족'임을 주장하는 '소수민족 집단'은 그 자체로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위의 민족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민족집단을 공식적인 민족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주후에 논의할 문제로 하였다. 1969년 이후 10년 단위로 조사한 인구조사에서 총 민족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1959년에는 126개, 1970년에는 122개, 1979년에는 123개 민족으로 구분되었다.

10) 주권선언 초기 파파르스탄이 러시아연방과 국제법상 동등한 국가로서 조약체결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파파르스탄도 초기에 분리주의적 경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다)민족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수단으로 사용된 기제와 담론은 무엇이며, 그 기제와 담론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는가?

셋째, 지역주의의 특성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넷째, 지역주의를 주도한 집단은 누구이며, 지역주의는 지역구성원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연구 지역과 방법

1) 연구지역(대상)

연구지역은 러시아연방의 동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한 부랴찌야공화국이다(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Republic of Buryatia). 부랴찌야공화국은 이르쿠츠크주, 치타주, 사하-이꾸찌야공화국, 투바공화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으로는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서쪽에 위치한 바이칼호수가 이르쿠츠크주와 경계를 이룬다. 부랴찌야공화국은 고라스노야흐스크주, 이르쿠츠크주 등과 함께 동시베리아경제지역에 속했으며, 7개의 행정관구 농 시베리아관구에 속해 있다. 면적은 남한의 약 3.5배인 351,300km²에 달하나, 인구는 2002년 현재 약 1,019,400명이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Улан-Удэ, Ulan-Ude)에 전체인구의 약 36%가 거주하고 있다.

명목민족¹¹⁾인 몽골계통의 부랴뜨민족과 에벤크족이 대대로 이 지역에 거주하였

11) 명목민족(тиулая нация, titular nation)은 공화국명(또는 지역명)으로 사용되는 민족을 말한다. 소비에트시기 민족지역의 지역명과 행정구역명은 대대로 그 지역에 살아온 원주민명(토착민족명)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 소련지역에서 지역명을 통해 그 지역이 어떤 민족의 역사적 민족지역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공화국의 명목민족은 우크라이나민족이며, 체첸공화국의 명목민족은 체첸민족이다. 특별히 '명목민족'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것은 다민족국가인 소련에서 명목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일정한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전환기 러시아연방에서 지역주의, 민족주의 등이 활동하였을 때, 문제의 중심에 섰던 민족이 바로 명목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명목민족으로서의 지위는 자신의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민족구성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랴찌야공화국의 명목민족

고, 17세기 중엽 러시아제국에 귀속되었으며, 1923년 러시아공화국내 자치공화국(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으로 존재하다가 1990년 10월 주권선언을 하였으며, 1994년 신헌법채택과 대통령선거를 거쳐 현재의 부랴찌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러시아제국에 귀속된 후 러시아인들의 이주는 계속되어 19세기 중엽에 이미 러시아인들이 공화국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¹²⁾ 1926년 현재의 부랴찌야공화국에 해당되는 영토에 거주하는 총인구 386,900여명 중에 러시아인이 238,200명으로 인구의 61.6%를 차지하였으며, 부랴뜨민족은 33.7%를 차지하였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 후 시베리아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러시아인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인 등 술라브민족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26년~1939년 사이에 150,000여명이 이주하여 원주민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¹³⁾ 1989년에는 전체인구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였다. 부랴뜨민족은 이 지역의 명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말 공화국 전체 인구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부랴찌야공화국은 동시베리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풍부한데, 특히 목재와 광물이 풍부하다. 공화국의 북동부지역의 산지는 금광과 석탄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남부지역은 스템지대로서 천통적으로 유목이 발달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서 목양산업은 급격히 쇠퇴하였다.¹⁴⁾ 바이칸호수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강이 부랴찌야공화국을 통과하는데, '9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목재산업을 비롯해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었다. 이로 인해 공화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 부랴뜨민족 구성원이 인근 사하-이꾸찌야공화국에 거주한다면, 그 구성원은 명목민족으로서의 자위를 누리지 못하였다.

- 12) Кубузан В. М. Русские в мире. Динамика численности и расселения(1719-1918). Формирование этн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границ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С-Петербург, 1996. С.280.
- 13) Мангатаева Д. Д. Население Бурятии: Тенден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Улан-Удэ:БНЦ СО РАН, 1995, С.71.
- 14) Хрущева А. Т.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и, М., 2001, С.639-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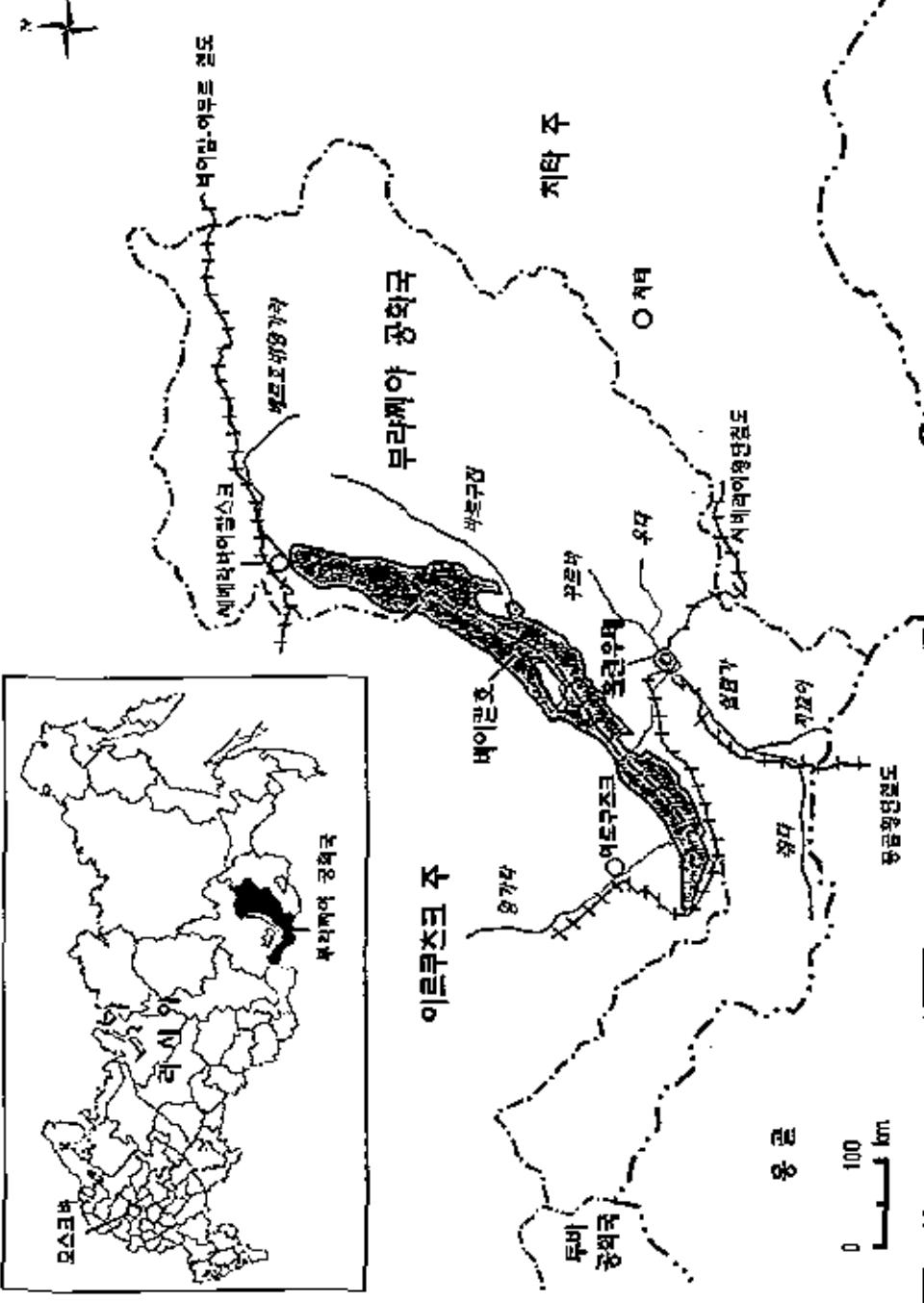
도

한국지도

한국

0 100
km

한국



2) 연구지역 설정 기준과 이유

부랴찌야공화국을 연구지역으로 설정한 첫 번째 근거는 '주권화의 행진'에 동참 하였다는 것이다. 전환기 러시아의 지역주의는 주권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부랴찌야공화국은 1990년 10월 8일 러시아연방의 지역들 중에서 여섯 번째로 주권선언을 하였다.

두 번째 민족지역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지역주의는 민족주의, 분리주의적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민족지역인 자치공화국의 주권선언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권선언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민족자결권으로 인해 민족지역의 명목민족 중 일부는 주권선언의 의미를 '민족주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개의 기준에 의한다면, 러시아의 지역주의를 고찰하는 데 있어 러시아공화국 당시 자치공화국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전환기 러시아의 지역주의는 주권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1990년 8월부터 시작된 주권선언은 1993년까지 이어졌다. 먼저 자치공화국들이 주권선언을 한 뒤 자치주가 그 뒤를 잇고, 1993년에서야 벤강주, 주들이 주권선언을 하였다. 주, 벤강주의 주권선언은 연방조약 체결 뒤, 공화국과 동등한 연방구성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권한의 차이가 존재 했기에, 이로 인해 발생하였다. 주, 벤강주들의 주권선언은 구 소비에트 시절 자치공화국들의 주권선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에서 지역주의를 주도한 것은 자치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연구지역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자치공화국 중에서 선정되었다. <표 1-1>에서 보듯이, 현재 러시아연방에는 총 21개의 공화국이 있지만, 러시아공화국 당시 자치공화국은 16개였다. 그 중 아르케야, 알타이, 까라차예바-체르카시야, 하카시야 4개 공화국은 구 소련시기에 자치주였으나, 1991년 7월 3일에 공화국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앙구세찌야공화국은 1991년 11월 체첸-앙구세찌야 자치공화국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되었다. 체첸지역에서 분리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분리주의를 재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연방은 앙구세찌야공화국을 분리하였다.

<표 1-1> 러시아연방의 공화국별 명목민족 비중과 주권선언

	공화국명	민족비중(%)		주권선언	비고
		명목 민족	러시아		
자치공화국	바슈코르토스탄	21.9	39.3	90.10.1 1	
	무라찌야	24.0	69.9	90.10.8	
	다게스탄	-	9.2	-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인해 '주권선언' 하지 않음.
	까바르지노~발카리야	48.2	31.9	91.1.31	
	깔리키야	45.4	37.7		몽골계민족, 불교.
	까렐리야	10.0	73.6	90.8.10	
	모바	23.3	57.7	90.8.30	
	마리	43.3	47.5	90.8.24	핀-우그르계.
	모르드바	32.5	60.8	-	핀-우그르계. 30%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
	북오세찌야	53.0	29.9	90.12.2 6	
	파파르스탄	48.5	43.3	90.8.30	러시아와 동등한 국가로 조약체결 요구.
	투파	64.3	32.0		1940년 소련 가입
	우드무르트	30.9	58.9		핀-우그르계 민족. 30%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
	제첸-잉구세찌야 (잉구세찌야)	57.8	23.1		분리독립선언 91.11월 제첸에서 분리
자치주	추바쳅	67.8	26.7	90.10.2 4	투르크계 민족. 22%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함.
	사하-이구찌야	33.4	50.3	90.9.27	
	아티케야	22.1	68.0	91.7.3 승격	번강주에서 분리
	알타이	31.0	60.4	"	"
	까라차예바-체르케시야	31.2	42.4	"	"
	하카시야	11.1	79.5	"	"

자치공화국이었다고 해서 모두 다 주권선언을 한 것은 아니었다. 까프까즈산맥과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다게스탄공화국과 불가강 유역에 있는 모르드바공화국은 주권선언을 하지 않았다. 다게스탄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내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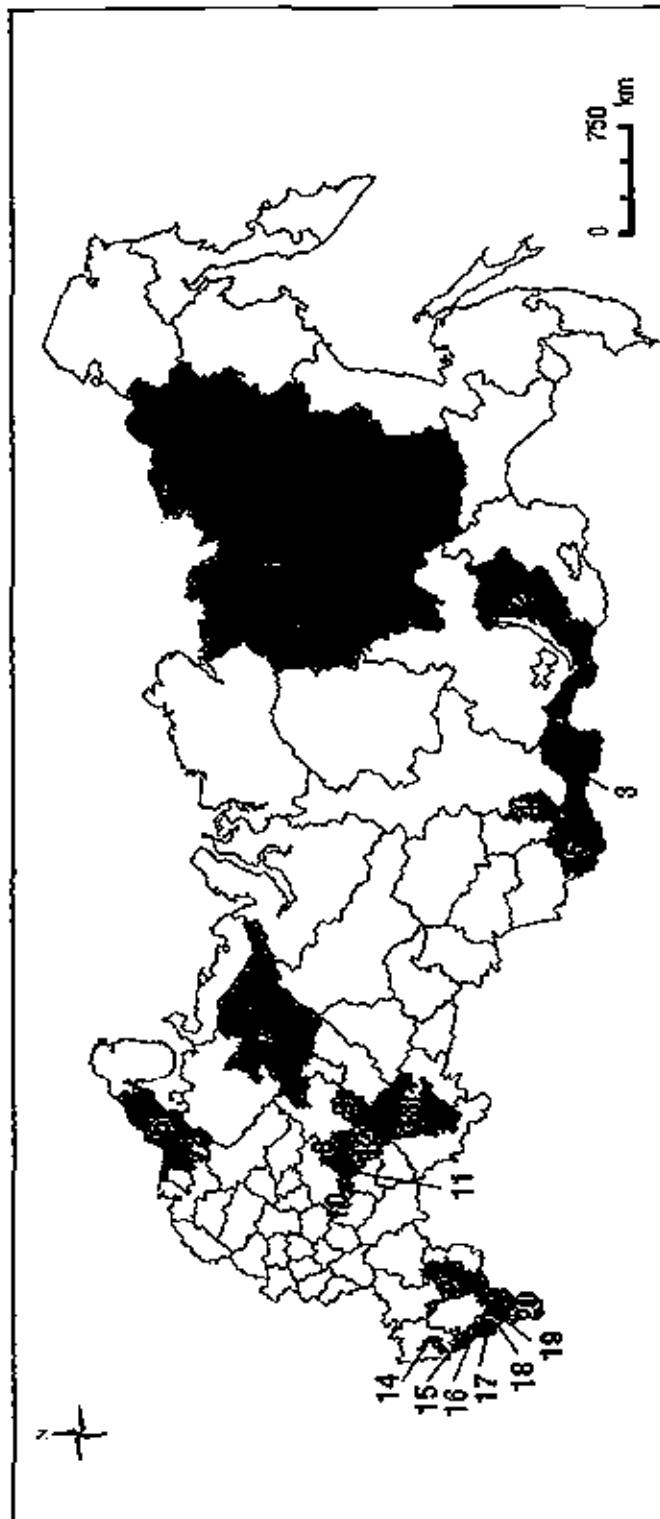
인 복잡한 민족구성이 그 이유였다. 다케스탄은 다른 민족지역과 달리 특정민족의 땅이라 할 수 없다. 여러 부족과 민족이 대대로 함께 거주해 왔다. 따라서 다케스탄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족을 명목민족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¹⁵⁾ 주권선언은 지역주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개의 자치공화국은 주권선언에 그친 다른 지역들과 달리 분리·독립을 선언하였다. 체첸공화국은 완전한 분리독립을 선언하여 현재까지 그 과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파파르스탄공화국은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아니라, 국제법을 갖는 동등한 국가로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 바로 분리주의적 경향이 존재했었고, 현실적으로 분리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조건이라 함은 독립하였을 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를 말함이다. <지도 2>에서 보듯이, 불가강 유역의 우르무르트, 추바쉬 등은 러시아연방의 한가운데에서 다른 지역에 둘러싸여 있어 현실적으로 분리독립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역주의가 분리주의로 발전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을 지역 내부과정, 즉 지역 내부의 민족정치과정에서 찾는다는 것은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부랴찌야공화국은 분리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시베리아남부지역에 위치한 부랴찌야공화국은 봉건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봉건은 혈통적, 언어적, 역사적으로 부랴찌야공화국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분리주의를 포함한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데서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15)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케스탄공화국에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부족대표들의 소비에트가 최고기관으로 존재한다.

(1989) 20-21 अक्टूबर को भारत में विद्युत उपलब्धि

1	19-10-1989	6	10-11-1989	11	12-11-1989	12	13-11-1989	13	14-11-1989	14	15-11-1989	15	16-11-1989	16	17-11-1989	17	18-11-1989	18	19-11-1989	19	20-11-1989	20	21-11-1989	21	22-11-1989	22	23-11-1989	23
2	20-10-1989	7	11-11-1989	8	12-11-1989	9	13-11-1989	10	14-11-1989	11	15-11-1989	12	16-11-1989	13	17-11-1989	14	18-11-1989	15	19-11-1989	16	20-11-1989	17	21-11-1989	18	22-11-1989	19	23-11-1989	20
3	21-10-1989	9	13-11-1989	10	14-11-1989	11	15-11-1989	12	16-11-1989	13	17-11-1989	14	18-11-1989	15	19-11-1989	16	20-11-1989	17	21-11-1989	18	22-11-1989	19	23-11-1989	20	24-11-1989	21	25-11-1989	22
4	22-10-1989	10	14-11-1989	11	15-11-1989	12	16-11-1989	13	17-11-1989	14	18-11-1989	15	19-11-1989	16	20-11-1989	17	21-11-1989	18	22-11-1989	19	23-11-1989	20	24-11-1989	21	25-11-1989	22	26-11-1989	23
5	23-10-1989	11	15-11-1989	12	16-11-1989	13	17-11-1989	14	18-11-1989	15	19-11-1989	16	20-11-1989	17	21-11-1989	18	22-11-1989	19	23-11-1989	20	24-11-1989	21	25-11-1989	22	26-11-1989	23	27-11-1989	24



부랴찌야공화국은 바로 이러한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랴찌야공화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연방과 마찬가지로 다민족지역으로 민족별 인구구성이 러시아연방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러시아연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러시아연방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데 있어 더 높은 연관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특정지역의 특정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었거나 특정 민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주의는 애초부터 민족주의나 분리주의적 경향으로 발생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민족구성의 측면으로 체첸공화국의 분리주의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주권선언 한 공화국의 민족구성은 지역주의의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민족은 러시아연방의 ‘명목민족’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민족으로, 전체 인구의 82%정도인 약 1억 2천만 명이다. 그 다음이 따따르민족으로 약 550만 명, 전체 인구의 3.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부랴뜨민족은 약 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3%를 차지하며, 민족구성원 수에서 러시아연방에서 16번째이다.

부랴찌야공화국에는 100여 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다.¹⁶⁾ 그 중 러시아민족이 전체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은 249,500여명으로 24%이다. 러시아민족과 부랴뜨민족이 전체의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민족은 우크라이나민족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등 슬라브민족은 20세기 초 북쪽지역에 광산개발(특히 금광)이 본격화되면서 유입되었고, 1970년대부터 바이칼-아무르철도(BAM)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이 밖에 러시아연방에서 두 번째로 많은 따따르민족도 공화국인구의 1%이지만, 러시아민족과 부랴뜨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의 영향력은 공화국에서 그리 높지 않다.

16) 부랴찌야공화국에 100여개 이상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족들은 그 수가 적고, 러시아인, 부랴뜨,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인은 3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민족지역으로 보이는 것은 러시아연방의 인구조사방법, 민족식별방법의 문제점에서도 기인한다. 객관적인 민족식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는데, 이에 따라 민족구성원이 1-2인에 지나지 않는 민족도 다수를 차지한다.

둘째, 부랴찌야공화국은 지역주의 연구의 주요 접근법 중 하나인 중심-주변관계가 잘 드러나는 지역이다. 소비에트 시기 지역에 분포하는 기업들 중 95%가 소연방이나 러시아연방 소유였으며, 유럽러시아지역을 위한 자원공급기지 역할로 인해 원료추출·개발 분야가 주요 산업이었다. 중심-주변관계는 공간적 특성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동고횡단철도(TMGR)가 수도인 울란우데에서 만나고, 북쪽으로는 바이칼-아무르횡단철도(BAM) 지나간다. 그러나, 정작 지역내 교통연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부랴찌야공화국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북쪽의 바이칼-아무르철도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지역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교통망을 통해서도 전형적인 주변부지역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지역의 역할과 함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악설적으로 태평양연안으로 빨어가는 TSR과 BAM, 유럽러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TSR, 동고·중국으로 가는 TMGR은 지정학적, 지역주의적 지향의 선택방향이 된다.

<표 1-2> 러시아연방의 주요 민족별 인구수 (1989)

단위: 천명, %

	인구 ¹⁾	비율
러시아	120,000	82.0
파파로	5,500	3.8
우크라이나	4,400	3.0
추바쉬	1,800	1.2
바슈끼르	1,400	0.9
벨라루시	1,200	0.8
모르드바	1,100	0.7
체첸	900	0.6
독일	840	0.6
유대인	540	0.4
부랴뜨	420	0.3
전체	147,000	100

주: 1) 10,000 단위에서 반올림함.

출전: Сидоров Н.К., 2002. с.39를 재구성.

셋째, 시베리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전세계 육지면적의 1/8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걸쳐 있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의 정체성과

독특성, 국가성에 관한 문제는 러시아사상사의 오랜 논란거리였다.¹⁷⁾ 17세기 루즈브 대제가 쌍뜨-뻬쩨르부르크에 신수도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러시아의 정체성은 20세기 말 전환기적 상황에 다시 부각되었다.

<표 1-3> 부랴찌야공화국의 주요민족별 인구수(1989)

단위: 천명, %

민족	인구수	비율
러시아	726.2	69.9
부랴드	249.5	24.0
우크라이나	22.9	2.2
파파르	10.5	1.0
벨라루시	5.3	0.5
에벤枷	1.7	0.2
유대인	1.2	0.1
아르메니아	2.3	0.2
아제르바이잔	1.7	0.2
모르드바	1.3	0.1
까자흐	1.3	0.1
기타	16	1.5
전체	1,038.2	100.0

자료: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89.

소련체제와 구성공화국의 분리독립이라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체성과 이념이 필요하였는데, 유라시아주의는 유럽과 러시아에 절쳐 있는 러시아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이념이었다. 특히, 러시아 전체 면적의 3/4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은 유라시아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충분조건이었다. 시베리아지역은 소비에트시절 유럽 지역을 위한 자원과 원료공급기지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경제개방화 이후에는 인접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의 진출은 시베리아지역의 경제지향을 바꾸기에 충분하였다.¹⁸⁾ 따라서, 시베리아지역은 러시

17) 신범식, 1998,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두 측면에 대한 일고찰”, 「러시아 연구」 제 8권 2 호, p.249.

18) Совет по внешней и обор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тратегия для России: Новое освоение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асть I, Сибир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блемы интеграции и дезинтеграции с.63-83. Москва 2001.

아에게도 중요하지만, 석유수입원의 다원화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물론 해외지역 연구라는 특성상 문헌의 수집과정도 현지조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것은 연구주제의 특성과 현 시기의 러시아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역주의가 주민들의 지역의식, 지역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은 주민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역주의는 민족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였고, 지역주의를 주도한 집단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많은 측면에서 역사적 검증을 받았기에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과장할 것이고, 현 시점에서 돌아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사고를 왜곡해서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와 지역주의에 반영된 의식의 문제는 주로 신문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내중매체가 그리 발전하지 않았던 소비에트시기에 민감하고 역동적인 정치적 의사개진과 선동의 많은 부분이 신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 지역의 역사를 반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의는 어떤 사안, 사건을 일으키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찰하는데서 신문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 출판된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발간된 인구, 경제, 산업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사례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주의의 특성 분석의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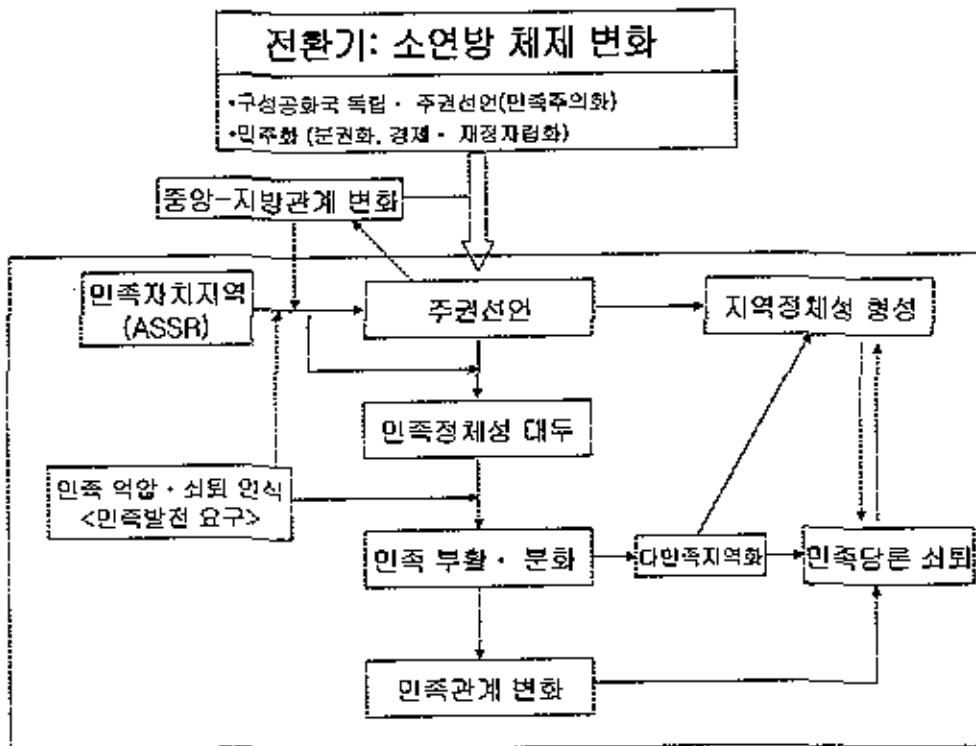
현지조사는 러시아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와 사례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모스크바는 현지조사지역에 포함사건 것은 지역주의가 중앙-지방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구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많은 자료들이 중앙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주

의 양상이 러시아연방의 다른 지역, 특히 민족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주의와 유사한 패턴과 경향을 지니고 있는지, 혹, 사례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1차 현지조사는 2002년 4월말부터 2003년 9월초까지 모스크바와 울란우데에서 진행하였다. 정확히 1년간 모스크바에 머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에서 나타난 분리독립, 주권선언에 관련된 각종 문헌들을 수집·분석하였고, 2003년 4월 말부터 부랴찌야공화국의 울란우데에서 신문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모았다. 1차 현지조사에서 미진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2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주로 울란우데에서 신문자료를 보완하고 주민과 각급 단체와 인터뷰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도 모스크바에 한달 간 체류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3. 연구흐름도

이 연구는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였던 지역들의 주권선언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현상과 그 특성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1990년대 러시아연방에서의 지역주의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연방에서 진행된 개혁·개방과 분권화 등 정치·경제적 변화와 연방구성공화국들의 분리독립과 주권선언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 연구지역인 러시아연방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소연방체제와 소연방에서 진행된 분리·독립과정을 살펴보았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은 이를 대하는 민족적 입장에 따라 민족주의적 경향과 지역주의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부랴찌야공화국은 부랴뜨민족의 민족지역이자 다민족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주의 변화과정은 복잡한 민족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1-3> 연구흐름도

4. 연구지역 개관

1) 위치와 자연환경

부랴찌야지역은 동시베리아의 흥미로운 지역 중의 하나로 놀라울 정도로 자연적 다양성이 있으며, 바이칼호에 의해 계약을 받음과 동시에 바이칼로 인한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부랴찌야공화국은 동시베리아지역의 남부지역이며 바이칼호의 동부에 위치하는데, 동경 $98^{\circ}40'$ - $116^{\circ}50'$, 북위 $49^{\circ}55'$ - $57^{\circ}15'$ 사이에 걸쳐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부랴찌야지역의 약 58%가 극북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이다. 지역 면적의 약 73%가 산림으로 덮여 있고, 농경지가 11%이며, 사슴목장 1%, 수역(水域) 6%, 그리고 그 외 토지가 9%이다.¹⁹⁾ 부랴찌야지역은 주로 산지 지형을 이룬다.

지형의 특성은 서남부지역은 높은 산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러시아연방의 투마공화국과 몽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동부지역에는 높은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다.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서남부지역으로 해발고도 3,491m인 문쿠-사르덟산이 있는 동싸얀산맥지대이다. 그 외 하마르-다반(Хамар-Дабан)과 울란-부르가스(Улаан-Бургасы), 바르구진(Баргузинская), 바이칼(Байкальский)산맥으로 이루어진 바이칼 산악지대, 실린가 중산간지대, 비첨 고원지대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거대한 산맥과 산맥 사이에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²⁰⁾ 구시나야죠르스크(Гусиноозёрск), 우진스크(Узинск), 바르구진스크(Баргузинск), 베르흐네안гар스크(Верхнеангарск) 등의 분지가 있는데, 이 분지 주변에는 호수가 존재한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타이가 산림지대에는 흑담비, 여우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질 좋은 모피를 얻기 위해 16-17세기에 처음으로 러시아민족이 시베리아로 진출하였다. 지역의 삼림은 이루는 주요수종은 낙엽송, 소나무, 삼나무 등이다. 부랴찌야지역의 동, 북, 서남지역을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봉골로 이르는 길에는 넓은 스텝지대가 펼쳐져 있다. 동, 북지역에는 산지툰드라와 산지타이가지대가 넓게 분포한다. 끝없이 뻗어갈 것 같은 시베리아의 삼림지대, 타이가지대는 수도인 울란우데를 지나면서 남쪽으로는 산지스텝지역이 펼쳐져 있다. 이 곳에서는 여름이면 시베리아를 연상시키는 온창한 산림 대신에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는 양떼와 말·소떼를 볼 수 있다. 봉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준사막지대가 나타난다. 초원과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지만, 이 지역도 해발고도가 500m 이상이며, 부랴찌야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은 바이칼 호수면으로 해발고도가 456m이다.

부랴찌야지역에는 25개 이상의 강이 있으며, 이 중 99%가 작은 강이며 길이도 100km가 채 되지 않는다. 지역을 흐르는 이러한 강들은 3개의 유역 – 바이칼호,

19) Гомкомстат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2003,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80 л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юбилейный выпуск С.8.

20)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Научное изд-во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8. с.92.

레나강, 앙가라강 – 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 부랴찌야지역의 50% 이상이 바이칼 유역이다.²¹⁾ 바이칼 호수로 흘러드는 대부분의 강은 부랴찌야지역을 지난다. 실린 가강, 치코이강, 힐록강, 베네흐네 앙가라강, 바르구진강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강은 몽골지역에서 흘러와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를 지나는 실란가강이다. 이 외에 레나강을 통해 북극해로 흘러드는 동부고원지대의 비incinn강과 씨파강이 있는데, 비incinn강은 바이칼-아부르철도가 건설되기 전까지 여름철에 인근지역에서 나는 금 등의 지하자원을 운송하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세계적인 자연 유산의 보고인 바이칼호의 보존과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 강의 오염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바이칼유역에 속하는 부랴찌야지역의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부랴찌야지역의 기후는 그 지리적 위치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태평양과 북빙 양(북극해)에서 약 3,000km, 대서양에서 약 7,000km 거리에 위치하므로, 극심한 대륙성기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우며, 연교차가 극심하고 연평균 강수량은 매우 작다. 봄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지만, 비는 거의 오지 않는다. 구름이 적고 건조하며, 일조량이 많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청명한 날이 많다. 청명지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나 오데사 지역과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특성은 부랴찌야공화국을 표상하는 국가의 공식 상징에도 반영되었다.²²⁾

연평균 대기온도는 -0.4 ~ -9.2°C이며, 10월부터 3월까지는 시베리아고기압대의 영향을 받아 기압이 매우 높다. 특히 겨울철에 몽골 북부와 투바공화국, 부랴찌야 남부지역은 전세계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1,040mb 정도이다. 이러한 고기압으로 바람이 별로 불지 않고, 혹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평균 기온은 1월에는 영하 24°C이며 가장 따뜻한 7월의 평균기온은 17°C이다. 그러나, 부랴찌야지역 내부에서도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특성에 따라 기온의 차가 매우 크다. 남서, 남부지역의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9°C이며 동부의 비incinn고원지대지대는 무려 영하 34°C에 이른다. 산지 사이에 있는 분지지역은 낮기온이 영하 30°C이하이며,

21) Гомкомстат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2003,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80 л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юбилейный выпуск, с.8.

22)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Бурятии, Москва: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1. с.30.

가장 떨어질 때는 영하 55°C에 이른다.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의 연평균기온은 영하 1.7°C이다.²³⁾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바이칼호이다. 바이칼 연안지역은 겨울철에 인근지역보다 8-10°C 가량 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더 시원하다. 이 지역의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8-20°C이며, 7월 평균기온은 13-15°C이다. 바이칼지역은 가을철이 봄철보다 조금 더 따뜻한데, 가장 더운 달은 8월이며, 가장 추운 달은 2월이다. 기온의 연교차는 시베리아지역과 약 30°C가량 차이가 난다.

<표 1-4> 부랴찌야공화국의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

단위:mm

자역	남부	실린가 중산간	바이칼인근 동부	바이칼 남부
강수량	160-180	230-280	330-400	1000-1200

출처: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Бурятии. 2001. с.37

부랴찌야지역의 강수량은 지형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북부와 서부의 높은 산지지역에는 1년에 약 1,000-1,5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반면에, 동부와 남부지역은 그 보다 3-5배 작은 180-250mm를 기록하며, 300mm를 넘는 지역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바르구진과 구시나아죠르스크 분지는 180mm에 그친다. <표 1-4>에 보듯이, 부랴찌야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스텐지대인 남부지역은 연 강수량이 160-180mm에 지나지 않으며, 실린가 중산간지대는 230-280mm, 바이칼연안의 동부지역은 330-400mm 정도이며, 바이칼남부지역이 바이칼호의 영향으로 연평균 1,000-1,200mm로 강수량이 가장 많다. 대부분의 강수량은 7-8월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지역 전체적으로는 두 달간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약 60-80%를 차지한다. 특히 동부지역에서는 95%정도가 두 달간에 집중되는데,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

강수량의 차이는 겨울철 적설량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바이칼 연안에서는 60-90cm가량 쌓이는 반면에, 하마르-다반 산맥의 동쪽으로는 약 20cm를 넘지 않

23) Ibid, с.31-41.

으며, 남부 스탑지역에서는 채 2cm도 쌓이지 않는다.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랴찌야지역은 전반적으로 겨울철 적설량이 많지 않다.²⁴⁾

지역 전반적으로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그리 심하지 않으나, 실린가강과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따라 생태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 또한, 1970년대부터 바이칼-아무르철도가 개발되면서 이 철도가 지나가는 북부지역도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2) 정치체제와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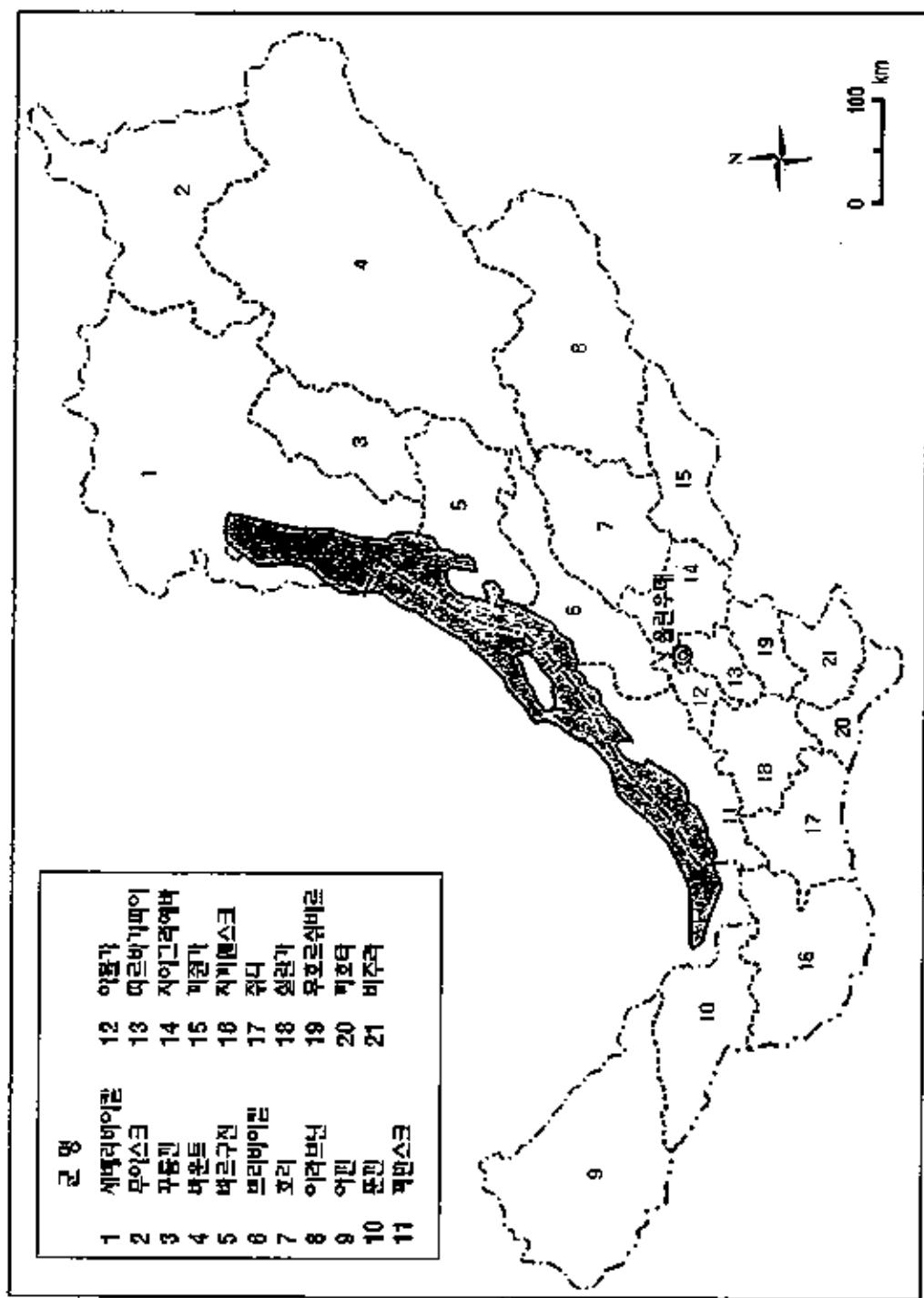
부랴찌야공화국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로서 연방에 소속된 21개 공화국 중 하나이다. 1990년 10월 주권선언을 하고, 1994년 2월 22일 '신헌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에트체제를 철폐하고 공식적으로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은 러시아연방 헌법과 별개의 독자적인 헌법을 지니고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헌법 제 1, 2조에 의하면, "부랴찌야는 대내외 정책을 수행할 자신의 헌법과 법률을 지니며, 이는 영토내에서 다른 어떠한 법보다 상위의 권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이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와 권한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1990년대 부랴찌야공화국의 형성과정 당시 연방 중앙이나 러시아민족의 가장 큰 우려였던 분리주의의 문제를 부랴찌야공화국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통해 명확히 해결하였다.²⁵⁾

24) *Ibid.*, с.38.

25) 공화국 헌법 제 64조에 의하면, "부랴찌야공화국은 자신의 영토에서 국가권력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나, 다만 러시아연방에 자발적으로 이양한 권한은 예외로 하며, 공화국과 연방간의 동치에 관한 문제는... 연방 헌법재판소(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Constitutional Court)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Абаева Л. Л., Ширяев С.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модель этнологическ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РАН Институт Энз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М., 1999. с.21-22.)

지도 3) 행정구역도



그러나, 공화국 국가기관들의 정책수행과 활동은 연방기관과의 빈번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랴찌야공화국 헌법과 연방 헌법간의 모순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체계와 조항의 불일치에서 기인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은 자신의 헌법이 영토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은 점차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푸틴정부의 수립과 연방의 재중앙집권화 정책으로 인해 주권선언을 통해 획득한 지역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연방과 지역간의 권한과 책임 및 소유권 등에 관해서는 조약과 협정체결을 통해 해결하였다. 특히 국방, 안보 및 대외정책에서의 권한은 연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은 대통령제 형태의 국가이면서 구 소비에트 전통이 일부 반영된 의회공화국이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3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화국의 대통령이 행정수반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은 4년의 임기로 헌법에는 중임을 허용하나, 2002년 당선된 대통령은 1994년 이후 3선을 역임하고 있다.²⁶⁾ 입법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나로드닉 후랄’(Народный Хурал)로 부랴뜨어로 ‘민중회의’를 의미한다. 인구와 지역 비례에 따라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북부소수민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부랴찌야공화국의 원주민 중 하나인 에벤크민족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바운트군에서는 에벤크민족만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의회는 총 65명으로 구성되며 4년 임기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역의 21개 군에서도 독자적인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지방행정장(군수)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행정구역체계는 21개군과 2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Ulan-Ude)와 바이칼호의 북부 호안에 위치한 세베라마이칼스크(Северобайкальск)시가 독립적인 행정단위를 이루고 있다.

26) 현 부랴찌야공화국 대통령인 포타포프는 2002년에도 대통령에 당선되어 3선이다.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헌법은 수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기법’을 개정하여 3선도 가능케 하였다. 물론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현 부랴찌야공화국의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특성

(1) 인구

2002년 현재 부랴찌야지역의 인구는 총 1,019,400여명으로 부랴찌야공화국이 수립 후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시베리아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러시아지역에서 급속한 인구유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표 1-5> 부랴찌야공화국의 연도별 인구수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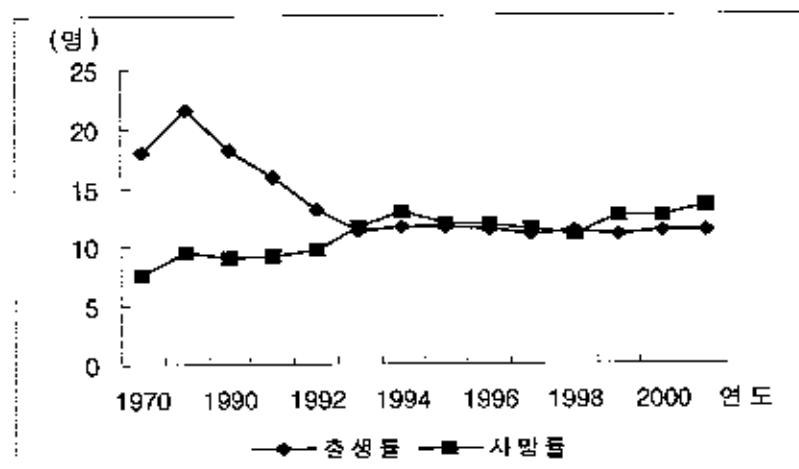
연도	전체인구수	도시		농촌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23	349.8	32.2	9.2	317.6	90.8
1939	545.8	167.3	30.7	378.5	69.3
1959	673.3	276.5	41.1	396.8	58.9
1970	812.2	362.6	44.6	449.6	55.4
1979	900.8	512.5	56.9	388.3	43.1
1989	1,038.2	640.3	61.7	397.9	38.3
1992	1,056.5	630.7	59.7	425.8	40.3
1994	1,049.9	623.5	59.4	426.4	40.6
1996	1,049.6	627.4	59.6	422.2	40.2
1998	1,042.7	624.1	59.9	418.6	40.1
2000	1,031.9	616.8	59.8	415.1	40.2
2002	1,019.4	609.1	59.8	410.3	40.2

자료: Бурятская АССР в Цифрах(1923-1973). 1973.

Госкомстат РБ.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40.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던 인구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1992년 1,056,500여명이었던 인구는 2002년 1,019,400명으로 약 37,000여명이 감소하였다. 10년 동안 약 3.5%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감소는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른 인구유출이 인구유입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자연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1993년 들어 처음

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부랴찌야 지역의 출생률은 1970년대 가족계획이 보급되어 1980년대의 2.16%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였다.²⁷⁾ 반면에 사망률은 1970년 0.77%, 1980년 0.95%이던 것이 1993년에 들어서는 1%대를 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1.35%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는 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말부터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지역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1990년대 사회경제적 위기는 가계경제의 압박은 물론 생존자체를 위협하여 자연히 출산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적 복지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률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었다.



<그림 1-4> 인구 1,000명당 출생률과 사망률
출처: Госкомстат РБ.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54-55.

부랴찌야지역의 인구변화는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준다. <표 1-5>에 보듯이, 1923년에는 전체 인구(349,800명)의 약 9.2%인 32,200여명이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193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30%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도시인구의 증가, 도시화는 사회주의 시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1989년에 이르러서는 640,000여명이 도시에 거주하였으며, 도시화율이 61.7%에 이르렀다. 2002

27) Мангатаева Д.Д., Чимитова Е.В. Социаль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Регион: Экономика и Социология. 2003. №1. с.98-112.

년 도시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60% 가량인 609,10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 전체 도시인구의 약 2/3가량인 367,40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산업화·도시화가 부랴찌야지역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도시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의 도시화율은 1989년보다 1.7% 감소한 59.8%이다. 전체인구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도시화가 정체되거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1990년대 일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부랴찌야지역만이 아니라, 러시아연방 차원에서 진행된 현상이다. 1989년 러시아연방의 도시화율은 73.4%였는데 2002년 현재 73.3%로 0.1%감소하였다.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러시아연방에서 도시 중 약 300개 이상의 도시형태의 촌락²⁸⁾이 농촌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100만 명 가량의 도시인구가 감소하였다.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약간의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이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경을 초래하였다.²⁹⁾

[2] 민족구성과 분포

부랴찌야공화국은 100여 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지역이다. 부랴찌야 지역으로 이민족의 유입이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 러시아제국에 귀속되면서부터이다. 16-17세기 모파를 찾아 시베리아지역으로 러시아민족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1645년 러시아제국에서 니콘의 종교개혁이 단행된 후 종교적 박해를 피해 구교도(старообрядцы)들이 시베리아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다민족 사회로 변화한 것은 러시아혁명 후 소연방 시기로서, 시베리아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위해 소연방의 유럽지역 민족들이 이주하면서부터이다. 1930년대 산업화정책의 시행과 2차 대전 이후 군수산업 등 농화학공업을 유럽러시아 지역

28) 러시아연방에는 행정구역 상 도시에 포함된 교외지역의 노동자 집단주거지가 있다. 소비에트시절 교외에 산업시설이 업시하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교외주거지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행정구역을 변경한 촌락은 이러한 것에 해당된다.

29) Соколин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переписи//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и-XXI век. №12. 2003. с.32-33.

에서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지역 등 내륙으로 옮기면서 부랴찌야공화국에도 이들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1950년대 이후에는 2차 대전을 전후해 소연방에 가입한 발트 3국의 민족들도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부랴찌야지역은 소연방 영토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민족들이 분포하게 되었다

<표 1~6> 부랴찌야지역의 민족구성의 변화

단위: 천명

	1926	1939	1959	1970	1989
전체	388.9	545.8	673.3	812.2	1,038.2
러시아	238.2	393.1	502.6	597.0	726.2
부랴뜨	130.2	116.4	136.8	178.7	249.5
우크라이나	1.0	13.4	10.2	10.8	22.9
타타르	1.1	3.8	8.1	10.0	10.5
벨라루시	-	1.8	1.6	2.3	5.3
예벤크	1.1	1.8	1.3	1.7	1.7
유대인	4.5	3.9	2.7	2.1	1.2
기타	12.8	11.6	11.0	9.6	20.9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Бурятия в зеркале статистики. 1997. с.8

명색이 ‘부랴찌야공화국’이며 대대로 부랴뜨민족이 이 지역에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은 부랴뜨민족이 아니라 러시아민족이다. 1989년 전체 인구 1,038,200여명 중에 러시아민족은 약 70%인 726,200여명에 이른다. 반면에 부랴뜨민족은 약 24%인 249,200여명이다.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랴뜨민족의 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정도로 러시아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민족구성의 측면이 1980년대 말 1990년대에 부랴찌야지역의 민족정치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이 외에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은 러시아연방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타타르이다. 1989년 현재 우크라이나민족은 전체 인구의 2.2%인 22,900여명이고, 타타르민족은 10,500여명으로 인구의 약 1%를 차지한다. 부랴찌야지역의 원주민 중의 하나인 예벤크민족은 약 1989년 현재 약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표 1-7> 주요민족의 거주자별 인구수

단위: 천명, (%)

인족	1970			1979			1989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부랴뜨	178.6 (100.0)	41.9 (23.5)	136.7 (76.5)	206.8 (100.0)	74.2 (35.9)	132.6 (64.1)	249.5 (100.0)	111.0 (44.5)	138.4 (55.5)
러시아	596.9 (100.0)	300.0 (50.3)	296.7 (49.7)	647.7 (100.0)	404.0 (62.4)	243.7 (37.6)	726.1 (100.0)	480.1 (66.1)	246.0 (33.9)
예멘크	1.6 (100.0)	0.2 (12.5)	1.4 (87.5)	1.5 (100.0)	0.3 (20.0)	1.2 (80.0)	1.6 (100.0)	0.4 (25.0))	1.2 (75.0)
우크라이나	10.7 (100.0)	7.2 (67.3)	3.5 (32.7)	15.3 (100.0)	13.1 (85.6)	2.2 (14.4)	22.8 (100.0)	20.2 (88.6)	2.6 (11.4)
타타르	9.9 (100.0)	4.0 (40.4)	5.9 (59.6)	10.3 (100.0)	5.3 (51.5)	5.0 (48.5)	10.5 (100.0)	6.4 (61.0)	4.1 (39.0)

주: 1. 인구수는 해당연도 소연방 인구조사 자료임.

2. 1970년 부랴뜨민족의 전체인구는 인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78,700여명이나 도시와 농촌인구를 반올림한 뒤 합계를 맞추기 위하여 원저자가 조작함.

출처: Мангатаева Д. Д. 2003. с.105

부랴뜨민족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3년 공화국이 수립된 아래 계속 낮아졌다. 1923년에는 전체 인구 338,900여명 중 130,200여명이 부랴뜨민족으로서 인구의 약 33.5%를 차지했는데, 63년 동안(1923-1989년) 그 비중이 10%가량 감소하였다. 반면 러시아민족은 1926년 238,200여명(61.4%)에서 8.5%가량 증가하였다. 부랴찌야지역이 다민족사회로 변하고, 지역 구성원 중에서 유럽민족의 비중의 증가는 소연방의 발전과정과 사베리아지역의 개발과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이민족의 유입으로 원주민, 즉 부랴뜨민족과 예멘크민족의 비중이 계속 낮아졌다. 이러한 인구유입으로 부랴찌야공화국의 민족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개별 민족의 이동의 특성에 따라서도 독특한 지리를 보여준다.

<표 1-7>에서 보듯이, 민족별 거주지역에서 확인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원주민인 부랴뜨민족과 예멘크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비중이 월등히 높다. 부랴뜨민족의 경우, 1970년에 4명 중 3명꼴(76.5%)로 농촌에 거주하였다. 지속적인 이촌향도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도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55.5%). 예멘민족은 부랴뜨민족보다 농촌거주 비율이 더 높아 1989년에도 75%의 주민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예멘민족은 1980년대 말까지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양식(수렵과 목축)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민족의 경우에는 1970년에 이미 반 이상의 주민들이 도시에 거주하였으며(50.3%), 1989년에는 3명 중 2명꼴(66.1%)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타타르민족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능가하였다.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거주지역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민족별 이동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민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역에 정착하였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랴찌야지역에는 고려인들도 거주하고 있는데, 1990년대 초반 330여명이 있다. 이들 중에는 소비에트시절부터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있다.

[3] 산업구조와 경제현황

부랴찌야지역은 시베리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풍부하다. 텅스텐, 몰리브덴, 금, 석탄, 보오코사이트 등의 매장량이 많아 소연방과 유럽러시아지역을 위한 원료와 자원의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전통적으로 소, 양, 말 등을 기르는 유목민의 땅 부랴찌야지역은 20세기 초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농업지역에서 농산업지역으로 변화하였다. 1998년 현재 지역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3%이고, 농업이 14.1%이다. 그 외 건설, 교통, 상업 등이 각각 7.8%, 10.7%, 12.3% 등을 차지하고 있다.³⁰⁾

부랴찌야지역의 면적은 유럽러시아지역의 5-6개 주들을 합한 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러시아연방 인구의 약 7%가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산업이 러시아연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인구, 면적의 규모에 비해 훨씬 미약하다. 1999년 부랴찌야공화국의 지역총생산은 러시아연방의 국가 총생산의 0.5%에 지나지 않으며, 제조업과 상업은 각각 0.3%, 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농업의 비

30)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тат. сб. В.2т. Т.1/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М., Р32 2000. С.474.

중은 0.7%로 다른 산업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³¹⁾

<표 1-8> 업종별 생산액 비중

단위: %

	1923	194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전기	3.7	0.5	2.7	1.5	3.8	4.5	27.0	29.3	29.6
연료	-	0.2	1.9	1.3	2.1	2.5	5.7	5.2	3.5
철강	-	-	0.1	0.4	0.4	0.4	0.6	0.5	0.3
비철금속	-	4.2	3.9	-	1.5	3.4	14.8	11.7	13.1
기계	0	32.5	20.4	25.7	26.5	22.9	22.3	29.5	31.2
산림·목재·제지	-	17.5	17.6	12.5	12.8	13.2	9.9	7.3	6.9
건자재	-	2.9	7.6	5.7	5.2	5.5	3.4	2.6	2.0
유리	11.8	3.5	1.4	1.6	1.2	0.8	0	0	-
경공업	26.8	4.4	10.1	26.8	29.7	28.7	3.1	2.6	2.4
식료품	53.8	33.2	33.6	21.9	15.4	12.6	9.9	9.0	9.1
기타	3.9	1.1	0.7	-	1.4	5.5	3.3	2.3	1.9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80лет, 2003, с.162.

제조업은 지역경제의 선도산업으로서 2002년 현재 지역 총생산의 약 1/3을, 지역 전체 고용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원료 지향산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전기에너지관련 산업과 비철금속산업이 발달하였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02년 현재 전체 제조업에서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에너지관련 산업이 그 다음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다.

소련방과 러시아연방이 극심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기 시작한 1990년 이후에 부랴찌야지역의 산업도 급격히 쇠퇴하였다. 1990년의 공업생산량은 1989년에 비해 이미 4%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8년까지 지속되었다. 외환위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1998년의 생산량은 1990년의 51%에 지나지 않았다. 1999년부터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1990의 57% 수준에 이르렀고, 2002년 현재는 79%까지 회복하였다.³²⁾

3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тат. сб. В.2т. Т.1/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я. -М., Р32 2000. С.475.

32)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80л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юбилейный выпуск/Конгостат Республ

4) 부랴뜨민족의 분포

부랴뜨민족은 오래 전부터 바이칼 호수의 동서에 분포하는 남시베리아의 몽골족의 일파로 역사적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3세기이다. 1240년에 출간된 '비사'(secret story)라는 책은 몽골부족 중에서 호리-투마트, 이카레스, 바르훈, 부랴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부랴뜨어에는 많은 방언들이 존재하며, 이 방언은 대개 종족별로 나뉜다. 그러나 수 백년 동안 방언이 발전하고, 개별 지역에서의 서로간의 상호작용으로 종족 간의 구별이 많이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신령가 지역의 북쪽에 정착한 불라가뜨(Булагат)족은 호리족의 말투(говор)를 사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발전과정을 통해 부랴뜨어의 방언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일부 방언은 소멸되어 현재 부랴뜨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표 1-9> 러시아연방내 지역별 부랴뜨민족의 분포(1989)

단위: 명, %

구 분	인구수	비 율
소 연 방	421,380	100.0
합 계	417,425	99.1
러시아 연방	부랴뜨자치공화국 우스찌-오르다부랴뜨자치구 아게부랴뜨자치구	249,525 49,298 42,362
그 외 연방공화국	3,955	0.1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СССР.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СССР, 1991

1989년 소련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소연방 영토에 부랴뜨민족은 총 421,3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인 417,425명(99.1%)이 러시아연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랴찌야공화국을 비롯한 바이칼 인근의 3개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민족구성원은 전체 민족구성원의 81%에 이른다.

제2장 문헌연구와 이론적 배경

1.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 개념과 특성

지역주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이론이나 태도, 주장의 중심에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이 그 주의의 주체가 되던가 또는 대상이 됨을 말한다. 왜 지역을 강조하는가? 지역이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은 본래 주민들의 민족적, 종교적 구성과 경제제도, 생활전통의 특성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영역(territory)이다.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저변에는 현재의 지역의 모습이 실제 그 본질이나 능력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거나, 이러한 외부의 힘에 의해 지역의 발전이 저체되던가 지역발전이 왜곡되고 있다던가 또는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따라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이데올로기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막 마온(Mac Mahons) 대통령의 제임기(1873-79)에 중앙집권적인 국가통합 정책에 대한 지방의 저항적 투쟁의 총체적 개념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¹⁾, 존재하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지역, 지방(정부)의 발전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지역주의가 발생하였다.²⁾ 즉 유럽국가들의 정치와 국가형성과정에서 주변부의 역할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안영진, 2004:400). 1970년대까지 지역주의는 원초적 감정에 입각한 분파주의(sectionalism)에 불과한 것이었고, 근대화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 현상으로 치부되었다.³⁾ 근대화과정은 역사적 기원과 경험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공간을 동질적인 공간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인식되었기에 분파주의적 경향의 지역주의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자연

1) 안영진·박영한, 1998, “서유럽의 지역주의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3(1), pp.57-74.

2) Федерализм: Энциклопедия. -М.:Изд-во МГУ, pp.418-419.

3) 최영진, 1999, 「지역주의이론과 한국정치」, 서울:가산출판사, p.37.

히 사라지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도 사라지기는커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전 지구적인 보편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주의는 1980년대부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제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⁴⁾

지역주의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이 처해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그 양상과 특징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각국의 정치환경이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문화와 역사가 다르며, 자리가 다르기에 나타나는 지역주의의 양상도 서로 달랐다. 최영진(1999)은 이렇듯 다양한 지역주의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표 2-1>참조).⁵⁾ 물론 저자가 언급하였듯이, 본격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정리한 것이 아니므로 유형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지역주의를 문화·역사적인 측면에서부터 중앙-지방의 권력관계,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운동적 측면까지 제반 관련 조건들을 고려하여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는 지역주의의 유형을 문화적 거리, 즉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이 정도화된 배제·박탈 및 차별의 존재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비교적 문화적 이질감이 크고, 정치적 배제와 차별 빛 박탈의 경험이 존재할수록 지역주의를 주동하는 주체·집단들의 정치적 결집정도가 높다. 만약 중앙이나 국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과 민족성이 다른 민족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의는 분리주의의 형태나 극단적인 민족주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주의가 민족주의, 분리주의 또는 연방주의와의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한다.

-
- 4) 물론 우리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확연히 갈리는 문제의 원인을 '지역주의'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주의가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세력에 의한 '지역패권주의', '지역분할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5) 최영진(1999)은 미국의 흑인문제도 지역주의에 포함시켰으나, 지역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와 삼관없이 지역주의는 인정한 영역성(territoriality)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표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2-1> 지역주의 현상의 유형과 특징

유형 ^b	지역	문화적 거리	배제/차별	박탈 경험	권력구조	국가 대응	정치적 결집
A	보스니아	민족·종교 ·언어적 이질감	문화적 차별	폭력적 박탈 체험	세르비아 패권	폭력적 통합지향	분리주장/ 연봉청소
A	스리랑카 타밀족	강한 거리감	배제/차별 경험	폭력적 박탈 체험	종양권력 패권	폭력적 통합지향	분리독립 주장
A'	캐나다 제프	장한 문화적 이질성	문화적 분리구조	박탈체험 없음	권력분립/ 공정성 확보	분권화	웨백지역 분리주장
A→A'	스페인 바스크	높은 거리감	배제/차별	물리적 충돌	중앙권력 독점	분권화 연방주의	지역분리 운동
A'	브라질 원주민	높은 거리감	보이지 않는 배제/차별	임상적 박탈체험	반인권권	폐권적 흡수지향	통합된 상대
A	중국 티벳	강한 거리감	자치지역	폭력적 박탈 체험	지방 자치정부	억압적 분권화	분리독립 운동
B	영국 스코틀랜드	낮은 거리감	문화적 문업과 유대	박탈체험 없음	영국 패권	분권화	낮은 수준의 결집
B	프랑스 브리타뉴	중간 수준의 문화적 이질성	동학문화회복	박탈체험 없음	권력분립 증설	분권화	경제 분화적 가치요구 수준
B	벨기에 왈루지방	중간수준의 문화적 이질성	동합문화	박탈체험 없음	권력의 공정성	권력분립	직접적 없음
B'	이탈리아 남부	강한 거리감	배제/차별 체험	물리적 충돌 없음	북부패권	통합/분권	낮은 수준의 결집
C	한국 전라도	낮은 수준의 거리감	문화적 차별	폭력적 박탈	영남패권	폐권적 통합지향	80-90% 결집
C	구 솔련 아르메니아	반족적 이질성	생계적 우대	폭력적 충돌	우대지역	분권화	분리독립 주장

주: A 유형: 문화적 거리감, 배제·박탈 체험, A' 유형: A와 같지만, 평화적 분권화 운동이 거래적 임.

B 유형: 문화적 거리감·배제경험 있으나 박탈의 체험은 없는 경우.

C 유형: 문화적 거리감은 없으나 박탈의 체험이 있는 경우.

출처: 최영진, 1999, p.36.

중앙정부의 통치방식과 지역정책은 지역주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획일화와 객관적으로 물질적인 집중화는 지역주의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혼히 중앙집권적 체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이해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우선시하고, 지역적·기능적 이해보다 전국적 이해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체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과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공평

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중앙에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대로 지역주의는 공공부문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높이고,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자치를 통해 소수집단을 보호하며, 지역·지방수준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⁶⁾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과 이해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국가적 목표와 총량적 발전이라는 담론 속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조직되거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지역주의옹호자들의 주요 비판대상이며,⁷⁾ 지역주의는 이러한 획일화와 집중화에 반대하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운동의 총체이자 이와 연관된 견해 체제라 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조종에 내맡겨지지 않은 지역공동체적 의사결정권의 확득이 바로 지역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요체”라 할 수 있다.⁸⁾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주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지역의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하향식 지역정책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일으키며, 때로는 지역주의의 극단적 형태 중의 하나인 지역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운동도 지역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역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는 하향식 지역정책, 공간정책으로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며, 개발·이용되더라도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지역주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유우익(1981)은 지역주의를 초래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지역은 서로 다른 입지효용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데,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최적입지의 원리는 지역자체로 보았을 때는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며, 둘째, 총량적 성장이 반드시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해당지역의 발전이나 복지 증진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셋째, 지역간 생활수준의 차이와 위계적 구조의 형성으로 인해 특히 낙후

6) Kim, Seongjin, 2000, *Regionalism in the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of the USSR and Russia: A Case Study of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Glasgow : University of Glasgow, p.5.

7) Федерализм:Энциклопедия, -М.:Изд-во МГУ, 2000. С.418.

8) 유우익, 1986, “현대시리학의 이론과 실제”, 「현대사회」 24, 현대사회연구소, p.258.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며, 넷째,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참여가 봉쇄되거나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한 지역주의도 ‘영토성’에 기반한 지역의식이 기반이 될 때, 지역주의도 발생,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⁹⁾

따라서, 지역주의는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역성과 지역적 범주를 정치화하는(politicize) 정치적, 문화적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인정한 영역적 범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식을 전제로 한다.

그것(지역주의-민자 주)은 인간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자리잡은 영역성(territorialität)과 일상생활의 반복된 접촉유대의 궤적 위에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연대의식, 즉 지역의식의 자각이자 그 적극적 표출이다. 더러는 지역감정이라 불리어 그 배타성이 자각되기도 하지만, 지역의식(regionalsbewußtsein)은 공유하는 생활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인체감과 지역주민간의 상서적 교감을 통해 생기나는 애착에서 비롯된다. 지역의식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향토애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의식은 그 질속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유우익, 1986:258-259)

지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문화·정치적 기획인 지역주의는 지역의식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리학이나 이와 연관된 사회과학에서는 지역주의를 영토집단론이 제도적 지위(institutional status)를 획득하고자 하는 지향으로 이해한다. 지역에서 자치(sамоуправление, self-government)를 향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권리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¹⁰⁾ 지역주의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현상으로 지역공동체의 고유성과 독창성, 문화경관의 풍부함과 다양성이 그 기반이 된다. 문화현상으로서의 지역주의의 중심개념에는 주민들의 지역의식, 지역정체성이 있다.

2) 지역주의 이론

지역주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지역주의가 발

9) 유우익, 1981, “중심도시문화와 지역주의,” 「도시문제」, 16(11), pp.30-41.

10) Стрелецкий В. Н. Культурный ландшафт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Известия АН. Серия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2003, №2. с.126-127.

생하는 각각의 지역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듯이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만큼 다양하다.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지역성에 따라 보호·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해와 그러한 이해가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그리고 운동으로서 지역주의를 주동하는 주체들의 측면에서 달리 바라볼 수 있다.

서구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던 초기에는 지역주의는 보수적인 운동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주의를 지역배타주의(particularism)와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는 데, 그것이 좋은 나쁘든 일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파슨스(Parsons T.)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저항’은 근본주의나 ‘사회적 보수주의’ 형태로 근대문명 발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인 ‘문화적 보편주의¹¹⁾’에 대한 저항에서 지역주의가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²⁾ 안영진(2004:406)은 이를 확산론이라 명명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인습적인 동원으로 종국에는 사라질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대화의 병리 현상인 지역주의는 근대화과정에서 통합의 결여로 발생하며, 민족지역의 구지배층에 의한 대중동원으로 드러난다(<표 2-2> 참조).

이러한 관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가장 고전적인 지역주의 이론인 민족 존속론¹³⁾(안영진, 2004)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기반한 민족의식의 존재양태를 통해 민족(지역)분쟁을 설명하는 것으로 원초적 가치(primordial values)에 대한 집착이 근대화의 통합과정에서 소진되지 않고 잔존

11) Parsons T., 1978, *Action Theory and the Human Condition*, New York:Free Press, p.345.

12) Shlapentokh V., Levita R., Loiberg M., 1997, *From Submission to Rebellion: the Provinces versus the Center in Russia*, WestviewPress, p.10.

13) 안영진(1998)은 전통적인 민족적(ethnic) 특성과 문화가 근대화과정에서 근대적 국민, 민족(nation)으로 통합되지 않고 지속하게 될 것으로써 갈등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속론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표 2-2> 지역주의 이론

구분	확산론	내부식민지론 · 문화분업론	민족(ethnic) 존속론	사회운동론
대표론자	근대화론자	해치터(M. Hechter)	코너(W. Connor) · 스미스(A.D. Smith)	게데스(D.Gerde s)
방법론	근대화론	정치경계학(종속이론)과 험리적 선택론	문화사회학	정치과정론
지역주의 개념	근대화에 대한 전통자 역의 저항 이 데올로기	주변부 해방무 정의 근거 이념	민족국가 건 설을 목표로 하 는 종족운동	중앙집중화과정 에서 나타나는 중 앙국가에 대한 지 역의 저항적 정치 운동
지역주의 의 발생 원인 및 배경	통합의 결 여 및 근대화 의 병리현상	종족에 의한 경제적 저발전 및 종족적 특수 성에 대한 사 회 · 문화적 차별	민족의식 각 성, 교육, 근대화 를 통한 기존 사 회갈등과 민족적 특수성의 결합	국가의 통합모 델이 보여주는 한 계 내지 실패
사회적 남자자	부족과 같 은 전통 지역 주민	종족	'대자적' 민족 화	지역주민
복표설정	한국적 목 표 설정 불가, 일부 구지배 질서나 전통 적 가치 또는 사회질서 유 지	내부식민지 상 태와 차별적인 분업에서 해방	단원민족국가 건설	자치주의, 연방 주의, 분리주의 등 다양함
표출양식	구지배층에 의 한 대중동 원	중간층 역할 중요, 동원강도는 제충구조의 위계 화와 파편화 정 도, 표출조직의 무임승차 해갈능 력에 좌우됨	대중운동 · 민 족적 정서에 대 한 호소 및 인텔 리의 영향력 중요	다양한 표출형 태를 가진 사회운 동, 국가의 갈등 해결능력과 지역 주의 세력의 동원 능력이 중요
전망	근대화의 진척에 따른 중심부문화의 확산으로 해 소	불평등구조의 해소여부에 좌우 되나, 사회 재화 의 제공으로 주 권요구의 포기도 가능	원칙적으로 민족국가수립시 까지 지속	제도화되더라도 사회운동으로 전 존

출처: Jung, 1999, p. 57; 안영진, 2002, p. 345에서 재인용.

하는 민족 정체성의 견고함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제 3세계 민족갈등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으로 차용되고 있으나,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제 3세계의 후진성을 확인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¹⁴⁾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은 산업화의 문제와 지역갈등을 연계해서 해명하는 것으로 서구의 민족·지역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틀로 간주되고 있다. 근대화를 통해 민족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민족집단의 자의식은 더욱 발전한다는 것이다.¹⁵⁾

지역주의를 설명할 때, 흔히 중심-주변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인한다. 근대화,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의 공간구조가 특정지역이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지역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 불균등발전으로 자원과 권한이 집중된 중심지역은 계속 발전하는 반면에, 주변지역은 점점 더 어려운 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주변지역에서 개발되는 자원과 생산되는 부가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역으로 끌임없이 유출되면서, 주변지역은 발전의 잠재력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화와 지방분권화 등 정치적 변화는 주변지역의 지역의식을 성장케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의가 발생한다.

중심-주변관계를 좀더 발전시킨 것이 '내부식민지론'이다. '문화적 분업(cultural division of labor)'이 핵심개념인 내부식민지론은 문화적, 인종적 경계에 따라 분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계급적 역압과 착취 역시 주변부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따라서 주변부지역은 분업을 통해 중심지역의 식민지 역할을 하게 된다.¹⁶⁾ 헤치터는 지역주의적 동원이 중심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의 증속 또는 저발전이라는 착취구조의 성립을 의미하는 내부 식민지화나 특정지역의 종족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구조화하는 문화적 분업에서 비롯된다고 한다.¹⁷⁾

14) 아로슬라브 크레치(J. Krech), 코반(A. Cobban), 그리고 콘너(W. Connor)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의를 바라보고 있다(최영진, 1999: 38-39).

15) Arend Lijphart, 1977, "Political Theories and the Explanation of Ethnic Conflict in the Western World: Falsified Predictions and Plausible Postdictions," in Milton Esman(ed.), *Ethnic conflict in the Western Worl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최영진, 1999: 39 재인용).

16) 최영진, 1999, 「지역주의 이론과 한국정치」, p. 40.

17) 안영진, 2004,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해한 것인가?", 박찬옥 외 저음, 「지식정보사회의 자리와 탐색」(개정판), 한울아카데미, p.406.

지역주의를 초래한 원인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국가형성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로칸과 어윈(S. Rokan & D. Urwin)은 국가형성초기의 국민형성(nation-building)과 국가형성(state-building)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지역주의 전기과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지역주의적 저항과 동원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서 중앙이 어떤 통합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¹⁸⁾

최영진(1999)이 지역주의 이론을 세 가지 형태로 파악한 반면에 안영진(2004)은 하나를 덧붙여 사회운동론을 들고 있다. 게데스(D. Gerdes)가 대표론자로서, 그는 지역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령의 정치사회적 연관성에 비추어 지역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¹⁹⁾ 게데스는 지역주의를 종족·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이들의 복합적 집중화 과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역주의 운동의 주체는 민족적 정체성에 의해 개인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쟁하는 지역의 사회·정치적 행위자로서 지역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보고 있다.²⁰⁾ 이러한 경향의 지역주의는 다양한 표출형태를 가진 사회운동, 중앙정부의 갈등해결능력과 지역주의 세력의 동원능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3)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지역주의가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일정한 영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의식, 지역정체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주의가 때로는 지역감정이나 지역배타주 의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지역의식, 지역정체성의 본질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지역주의의 발생은 '우리 지역', '우리 고장' 등의 의식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는 배타적인 성질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자신들과 다른 '남'(타자)을 전제하고 동반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이며, '우리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의 구분, '우리 지역'의 확정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

18) Stein Rokan & Derek Urwin, 1983, *Economy, Territory, Identity*, London:Sage(최영진, 1999, *op cit.*, pp. 40-41에서 재인용).

19) 안영진·박영한, 1998, "시유길의 지역주의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3(1), p.59.

20) 안영진, 2004, *op cit.*, p.408.

이 아니다. '자아의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²¹⁾ 지역정체성과 지역을 구성하는 '우리'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구성된다.²²⁾

하비(D. Harvey, 1989)는 근대 후기 사회의 특징으로 '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 사회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와 적대에 의해 분할되며, 이러한 문화에 의해 개개인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정체성의 구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것이다. 정체성이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지역정체성도 인간의 의식이나 사회적 활동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정체성도 지역 집단, 지역주체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identity)이 인정될 때에만 정체성의 정치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개개인과 집단들은 어떤 특질(dimension)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의미의 적절성에 대해 경쟁한다.²³⁾ 권력을 향한 투쟁인 정체성의 정치는 사회적 관계의 혜계모니 체계속에서 발생한다(Jackson and Penrose, 1993: 207).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정하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질적인 공간단위인 지역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거나 구성된다.²⁴⁾ '공간과 지역의 사회적 구성'²⁵⁾이

-
- 21) 주체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니며, 일관된 '자아'를 중심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우리 내부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모순된 정체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와 동일화는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통합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서사'를 만들기 때문이다(Hall S., Held D., McGrew T., 1992, *Modernity and its Future*, Polity Press(전효관·김수진 외 옮김, 2000,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p.325-327))
- 22) 정체성은 사회적 과정으로 다른 행위주체들이 만드는 이미지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형성되다. 허(Hall S., 1993:135)은 정체성은 암묵적인 주관성의 담론이 역사와 문화적 담론과 만나는 지점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 23) Johnston R. J., 1997, *Geography and Geographers: Anglo-American Human Geography since 1945*, 5th Edition, London · New York · Sydney · Auckland: Arnold, p.292.
- 24) 최근 20여년 동안 서구에서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장소가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지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Thrift, 1983; Pred, 1984; Paasi, 1991; Taylor, 1991; Entrikin, 1991; Murphy, 1991; Massey, 1995; Safr, 1997; Allen et al., 1998; Macleod, 1998), 한국의 지리학계에서도 공간과 장소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문으로 섬승희(2000), 이강원(2000), 백선혜(2004) 등이 있다.
- 25) 물론 공간과 지역의 사회적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타 사회과학에서와는 달리 지리학에

라는 관점은 지역주의를 바라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다. 지역주의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지역의 범위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영역'이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정치, 문화적 기획'의 특성에 따라 새롭게 지역이 만들어 질 수도 있고,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적 특성이 부각되면서 그 범위도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지리학계에서 지역주의와 정치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경계(boundary)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⁶⁾ 경계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어디에 없는지를 표시함으로써 정치성을 정의할 때 도움이 되며 중요하다.²⁷⁾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자체로 드러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나 정치성의 정치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 특히 담론을 치배하고 해제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집단들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양'(the Oriental), 동양인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가치에서 장소와 사람을 표현한 개념이 아니다. '동양', '동양인'은 단지 '서양', '서양인'이 아닌 것으로 이해 될 뿐이다.²⁸⁾ 누가 그 지역의 구성원이고 누가 속하지 않는가에 대한 배타적인 설명은 '타자의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어떤 주민', '어떤 집단'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에 따라 지역주의의 특성과 지역의 범위도 달라진다. 누가 무엇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지역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리학은 비롯한 사회과학의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성의 관심

서는 침례한 문제로 남아 있다. '지표면은 인간의 의식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관점과 '모든 지역을 단지 관찰자의 발명품으로 간주하며, 현상은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보다 지역관찰자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대해 더 많은 시사점을 던져둔다'라는 주장 사이의 대립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대립은 서로에 대해 '사회적 질정론'과 '구성주의와 존재론적 상대주의의 결합'이라는 비판으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Agnew J., "Regions on the mind does not equal regions of the mi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1), 1999, pp.91-96.)

- 26) 정치성의 형성에서 경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파시(Paasi A., 1991), 머피(Alexander B. Murphy, 1993), 뉴먼(Newman D.) 등이 있다.
27) Rose, Gillian, 1995, "Place and Identity: a sense of place," in Doreen Massey and Pattes(eds), *A Place in the World?*, p.103.
28) Rose G., 1995, *ibid*, p.104.

을 갖는 것은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정치성의 정치는 정치성의 차이가 금지되자도 인정받지도 못한 사회에서 정치성의 집합적 차이의 인정, 즉 정치성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Agnew, 2002:124). 불안정한 세계에서 정치성을 향한 투쟁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정치성 체제의 붕괴의 결과이다. 의사소통 공간의 확대와 관습에 기초한 공동체의 붕괴는 전통적인 동일시화(identification)²⁹⁾ 과정을 봉괴시켰다.³⁰⁾

지역정체성 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지역’이라는 의식은 타자에 대한 배타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타자’의 구분과정은 정치성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 과정으로 나타난다. ‘자아’와 ‘타자’의 구분, 포섭과 배제의 과정을 통해 정치성을 형성하며, 정치성 형성의 결과는 주로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지리학에서 지역정체성은 지역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정작 지역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과 지역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이 지역의 특성(personality)이나 지역과 주민간의 조화나 결합 등 지역의 원초적인 특성(primitive nature)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³¹⁾ 지리학자들은 지역정체성의 범위를 개념화하였지만(Werlen, 1993; Paasi, 2002), 지역과 지역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서사(narratives)는 ‘어떤 정치성이었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과 의제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은 사회·정치공간으로서의 지역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이러한 정치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집단행동과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³²⁾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열정이 어떻게 지역화되느냐는 것이고, 지역을 구성하는 제도들(institutions constitutive of region-building)³³⁾과 고유의 권력관계가 중요하다.³⁴⁾

29) 정치성과 동일시는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시는 정치성 획득과정이나 정치성의 식별 행위, 즉 정치성 수립과정이다(Д. Е. Николаевна, 1997, Социальные идентификации личности во пост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1992–1997),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М.)

30) Agnew J. A., 2002, *Making Political Geography*, London: Arnold, p.124.

31) Paasi A., 2003, “Region and place: regional identity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p.476.

32) Keating, M., “Rethinking the region: culture,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atalonia and Galicia,” *Europe Urban and Regional Studies*, 8, pp.217-243.

콜로소프와 미라넨코(Колосов В. А., Мироненко Н. С., 2002: 275-276)는 지역정체성을 인간이 사회집단과 일체감을 느끼는 형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종 어려운 사업상의 문제로 누군가를 처음 만나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등을 묻는 것은 ‘지역’을 통해 친근감을 강화하여 사업상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이지, 정말로 ‘(출신) 지역’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강릉사람’, ‘강원도 출신’, ‘한국사람’, ‘동북아시아인’ 등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지역을 통해 타자와의 동일시를 이루고자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과 사회가 공간에서 통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간성(the sociospatial)이 개인과 집단의 ‘생산’에서 개념화되는 방식이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이 제도화되는 과정의 해석이며, 영토적 경계, 상징,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경계를 긋고, 상징과 제도적 관습을 형성하는 담론, 실천(practices), 의례를 만들거나 동시에 이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이러한 실천과 담론은 ‘지역의 정체성’(identity of region)과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 또는 지역의식)을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지역의 정체성’은 한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하는 정치, 문화활동, 지역마케팅, 커버넌스, 정치·종교적 지역주의화의 담론과 분류에 사용된 자연과 문화, 인간의 특성을 보여준다.³³⁾ 또한 지역정체성은 정치, 경제, 문화·역사, 민족정체성 등이 얹힌 다양한 계층구조를 지닌다.³⁴⁾

지역인식(regional identification)의 문제는 문화·역사적 배경(contexts)과 정치·경제적 배경이 서로 얹힌 것을 의미한다. 정치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서 동일시(identification)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시는 ‘경험된 실제’(experienced reality)에 대한 태도를 해석하고 제공할 때에만 나타나는데, 문화와 역사가 그 단계에 개입한다(Bloom, 1990:52). 이러한 경험은 정치·사회적으로 조작되고, 집단적 경험에 미약하거나 전무한 이데올로기는 단지 언사로만 머물 가능성이 높고, 집단간 동일시, 지역과의 동일시를 유발하는 데에서도

33) 지역형성에 개입하는 제도들로 파시(Paasi, A.)는 경제, 거버넌스, 언어, 미디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지역형성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파시(1986)를 참조.

34) Paasi A., 2003, *ibid*, pp.476-477.

35) Paasi A., 2003, *ibid*, p.478.

36) Петров Н. 2003. Формиров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Центр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России/под. ред. В. Гельман и Т. Хопфа. -СПб.Изд-во Европ. уни-т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Летний сад. с.125-186.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정치적 정체성과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은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형태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족·정치적 정체성은 국토나 국경, 민족영토분쟁, 인구이동, 선거결과 등의 연구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³⁷⁾ 특히, 1980년대 이후 구 소련이나 동유럽지역에서 발생한 문화독립운동이나 민족갈등 현상은 지역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정치적 정체성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정체성과 지역의식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³⁸⁾ 여기에 대한 해답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개인이나 가족사에 해绑되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구 소련이 해체된 후 민족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구 소련방공화국(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등)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의 경우에 지역정체성과 지역의식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역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법, 계도적으로는 구 소련방공화국의 국민이지만, 민족주의적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정체성, 민족의식은 지역정체성, 지역의식과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역의식,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정체성의 정치는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2. 러시아의 지역주의

러시아에서 지역주의는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고, 어떤 공간구조를 배경으로 발생하는가? 지역의 특성과 차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개별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주의의 성격과 특징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과 범주, 또는 그 지역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우리는 지역을 나누거나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구분과 구획은 러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지역주

37) Колесов В. А., Мироненко Н. С., 2002, Гео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Учебник для вузов, -М.: Аспект Пресс, с.275-276.

38) Paasi A. 2003, *ibid*, pp.479-480.

의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주의의 발생은 ‘차이’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지역이 동질적이라면 지역주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정체성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정체성의 정치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레이비슈(Грейвич, 2001)는 그 특성과 발생 배경에 따라 러시아의 지역주의화를 4가지 형태로 구분한다.³⁹⁾

첫째, 동-서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우랄산맥을 중심으로 유럽러시아지역과 아시아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그 개발과 이용방식이 상이하였다. 유럽러시아지역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4에 지나지 않지만, 인구의 80%가량이 집중되어 있고 조밀하게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인구와 총생산량, 기업수 등 70%이상이 유럽러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아시아지역은 20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석유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우랄산맥인구이나 서시베리아지역에서 추출되지만, 첨제공장 등은 대부분 유럽러시아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동-서간의 차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이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리 상이하지 않다. 물론 우랄산맥 이동(以東)의 아시아지역에도 원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러시아민족의 시베리아인들이 이미 3-4세기 전에 이루어졌고, 현재 주민들의 인구구성도 일부 공화국이나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러시아민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전체평균보다 높다.

둘째, 남-북간 차이이다. 북부지역내에서도 지역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자원도 풍부하고, 수출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단적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인 모스크바와 콩트-페페르부르크가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북부지역은 인구와 국민총생산의 3/4을 차지한다. 이러한 자원과 산업의 집중은 지역주의가 발생할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심-주변부간의 관계로 러시아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일반적 틀 중의 하나이다. 지역내 차이는 지역간 차이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데, 이는 경제와 산업이 발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모스크바는 국내총생산량의 12%, 기업과 세금의 30%, 전체인구의 6%를 차지

39)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и проблемы/Под ред. А. И. Третьякова и С. С. Артоболевского. -М.:Эдиториал УРСС, 2001. с.44-45.

하고 있다. 최근의 개방화와 서구화로 중심과 주변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이후 해외자본투자가 기존에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나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발전한 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심-반주변-주변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채취와 가공이라는 1차 산업부터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이 나타나는 등 근대화, 서구화로 인한 계층체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넷째, 러시아민족 지역과 비러시아민족지역간의 문제이다. 연방체제의 비대칭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민족원리’가 적용되는 공화국이 ‘행정-영토원리’가 적용되는 주나 변강주 등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지니는 문제점과 관련된다. 연방 중앙은 공화국, 주, 변강주, 자치주, 자치구 등과 각각 연방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공화국 등 민족지역은 주, 변강주 등 일반행정구역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러시아의 32개 민족지역 중에서 명목민족의 인구가 러시아민족을 비롯한 비명복민족보다 많은 지역은 단지 다섯 지역에 불과하므로, 민족지역에 주어진 특권은 일반행정구역의 불만을 초래하여 지역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러시아연방의 지역을 구분하는 이러한 4개의 축은 특성에 따른 지역구분과 지역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러시아연방에서 이미 발생했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틀로서는 한계가 있다. 지역적 차이의 존재가 모두 지역주의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지역주의, 지역주의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주의(화)는 주로 지역이나 지역적 요소의 역할 상승의 반영을 의미한다. 고로바초프 시기 이전까지는 지역주의화는 단지 지역과 국가사이의 연계의 강화, 보다 큰 지역으로의 통합을 의미하였다.⁴⁰⁾ 즉, 공간적 분류형태로서의 단순한 ‘구역화 районирование(zoning, division into districts)’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⁴¹⁾ 지역주의화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러시아와 구 소련의 지역정책과 연관된다.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단기적으로 산업화를 통

40) Словарь иностранных слов. Изд-е 11-е стереотипное.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84. С.422.

41) Алаев Э. Б.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Понятийно-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Мысль, 1983. С.117.

한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 지역정책의 핵심목표였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구분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임의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지역이 지니는 역사,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은 지역정책의 목표달성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문제였다. 따라서 지역구분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국토를 경제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는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것만큼 보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러시아는 국토를 11개의 경제지역⁴²⁾으로 구분하여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주의화를 공간적 발전과정의 구조화로 설명한다. 공동체, 차이, 경제의 공간에서의 문리, 즉, '지역형성'으로 인식한다. 외부로부터의 인위적인 경제설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이고 내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짐을 강조한다. 지역주의화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내 특정 사회집단이 지역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운동으로, 삼위일체로서의 지역주의가 성장·발전하는 현상이다. 그 3가지는 첫째, 지역공동체의 독창적인 정신과 지역정책이며, 둘째, 지역의 이러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권위적 중앙집권주의와 중앙의 빈약한 지원에 반대하는 지역자치이며, 셋째, 정치·정책, 행정분야에서 지역적 이해와 필요에 대한 고려이다.⁴³⁾

1990년대 들어 러시아에서 지역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은 구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연방 형성이라는 과정에서 각 지역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⁴⁴⁾ 전환기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둔

42) 경제지역(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은 영토적,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일부분으로, 공간적 분업의 토대 하에 경제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1개 경제지역은 중앙, 북서, 북부, 블라디보스토크, 농부체르노谮, 북까프카즈, 블가우역, 우랄, 서시베리아, 동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경제지역으로 자연적, 경제적 조건이나 역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Садоров М.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и регионалистика России: Учебник-атлас. -М.:ИНФРА, 2002. - С. 24-29).

43) Трейвик А. И., Артоболевский С. С. Введение: что такое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и надо ли с ней бороться/под Трейвик А. И., Артоболевский С. С.(ред.)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и проблемы, М., 2001. С.3.

44) 공화국의 주권화는 엘리트의 현실적인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나 주권화가 주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할 것이라는 대중들의 생각과도 관련된다. 또한, 명목민족에게는 민족적인 자존심, 공화국의 모든 주민들에게는 지역자존심의 보상과도 밀접히 관련된다(Дронжева Л. Этническая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Проблемы Совместимости/Лапина Н.Ю. (ред),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цессы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Власть, М., 2002. С. 16-17.).

파할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국가적 정체성, 지역적 정체성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역과 집단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쪽을 빠웠기 때문이다. 구 소련 국민들은 이전의 국가정체성(우리-소비에트 국민)과 그들의 역사적 선택의 올바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다. 70여년 동안 이어져온 사회주의의 허점이 하루아침에 제기되면서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다. 많은 지역과 국민들이 자신의 사회적 자위, 민족성, 민족적 연대를 바꾸어야 했던 조건에서 민족·지역정체성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안전하게 하는 변화하지 않는 가치로 새롭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변화는 변화된 조건과 지역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다. 자신이 속한 집단과 지역의 처지에 대한 이해는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기존에 형성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지역주의의 한 측면이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역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미 형성된 중앙과의 관계나 중앙에 의해 형성된 지역적 특성은 지역주의 발생의 배경이 된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발생원인을 ‘중심-주변관계’, ‘중앙-지방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소비에트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형성된 중심-주변관계는 전환기 러시아에서 지역주의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었다. 소비에트 시절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지역을 위해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중앙이나 유럽러시아지역을 위해 개발함으로써 부와 자원의 끊임없는 역외 유출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과 생산량의 측면에서는 타지역을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소득이나 생활수준에서는 타지역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를 전후한 정치적 전환 국면, 즉 분권화, 민주화 과정에서 지역적 요구로 분출되었다. 1993년 우랄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옐친 전 대통령의 고향이며 그의 정치적 기반으로 유명한 스베多层次스코주가(주도-예카제린부르크) 우랄공화국을 선포한 것이나, 시베리아의 19개 지역이 ‘시베리아협정’을 결성한 것은 중심-주변관계가 전환기 러시아에서 지역주의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다만(Родоман, 2002:291)은 러시아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민족적 측면에서도 중심-주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는 러시아민족과 소수민족간의 관계와 관련된다. 러시아 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 러시아적 경제활동양식과 소수민족의 경제활동 양식 등에서 식민주의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러시아 영토의 확장

과정과 소수민족의 동화과정을 통해 중심-주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⁴⁵⁾

그러나, 중심-주변관계를 식민지적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때,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였을 때,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식민지개념은 주로 두 나라, 두 민족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한국내의 특정 민족과 타민족, 특정계급·계층과 타 계급·계층에 적용할 때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식민지란 개념은 지배와 억압, 착취와 수탈을 원천인 개념이지만, 지역간 불평등, 민족간 불평등,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대중문화와 소수문화의 관계는 '억압·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지방 관계는 러시아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물론 러시아적 상황에서 중앙-지방관계는 중심-주변관계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소비에트시기 초중앙집권화로 인해 중앙-지방관계에서 대부분 중심-주변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관계로서 러시아의 지역주의를 마라보는 것은 과거에 형성된 공간구조나 정치·경제체제의 문제보다 새롭게 변화하는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공화국의 주권선언 후 1990년대 초반 러시아연방은 각 지역들과 조약체결을 통해 '국가형성'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와중에 지역주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방중앙과 각 지역간의 조약체결의 방식을 통한 연방형성, 국가형성과정에서 각 지역들은 연방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획득하고자 하였고, 이는 지역주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지역주의에서 중앙-지방관계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center-local economic relation)에서도 그 중요성이 제기된다. 중앙과 지방간 경제관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리-경제적 분절의 문제이다. 지역간 분업, 지역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앙계획경제의 붕괴로 지역산업은 급속히 쇠퇴하였다.⁴⁶⁾ 지역간 교역이 붕괴되자, 지역내 생산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게다가 연방교통보조금의 지금 중단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은 지역간 교류를 크게 위축시켰다. 둘째, 계획경제 파탄과 자유화, 시장화라는 경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

45) Родонан Б.Б. Внутренний Колониализм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Поляризованный Биосфер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Омск, Сибирь, 2002. с.291-297.

46) Smith G., 1995, "The Ethno-Politics of Federalism without Federalism", David Lanchod, *Russia in Transition: Politics, Privatisation and Inequality*, London-London and New York. pp.21-35.

처하기 위해 지역 또는 도시들은 지역간 경제협력 전략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시베리아의 19개 지역이 참여한 시베리아 협정(Сибир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Siberian Agreement)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세연방주의(fiscal federalism)다. 조세연방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 재정적 분권화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의 재정적 조정기능을 통하여 지역간의 분배적 정의를 유지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여 연방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⁴⁷⁾ 이는 앞의 두 문제와 달리 중앙과 지방간의 직접적인 문제로 정치적 역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에서 중앙에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며, 중앙은 지방에 교부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이를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간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특히, 독립체산제(хозрасчет)가 시행되고, 가격보조비, 사회복지비 같은 사회적 지출과 인프라, 공익사업, 군인주택 등에 관한 세목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출압력은 더욱 높아졌다. 농업지역이나 산업쇠퇴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 문제에 대처한 방법은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세금협상이었다.⁴⁸⁾ 게다가 지방교부금은 지역균형이나 지역적 필요에 의해 제공되기보다 오히려 지리·정치와 관련되었다. 연방중앙과 조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이었던 지역은 지방세 중 중앙에 납부하는 비율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하는 반면에,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은 더 많이 받았다.⁴⁹⁾

3. 러시아 지역주의 연구 동향

1) 서구·러시아에서의 연구

서구에서 소련의 지방에 관한 연구는 언어적 문제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47) 장덕준, 2001, “러시아의 연방제도와 중앙-지방관계”, 『러시아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pp. 150-151.

48) Kirkow, Peter, 1998, *Russia's Provinces: Authoritarian Transformation versus Local Autonomy?*, London: Macmillan, pp.62-63.

49) 1992-93년간 지방교부금의 단지 10%가 낙후된 만족공화국이나 지역으로 이전된 반면에, 90%가 부유하거나 지역주의 만족주의가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으로 이전되었다(Graham Smith, 1995, *op cit*, p. 31).

힘들었기에 197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연구를 주도한 것은 'Soviet Studies'와 'Slavic Review'이다. 연구는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째 소비에트 지역 연구분야로 소비에트 가격 체제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둘째 일반적으로 인문지리 분야에서 많이 논의된 것으로 환경적, 공간적 평등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⁵⁰⁾ 당시는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소비에트시기였으므로, 지리학자들의 관심은 경제활동의 분포, 서비스와 자원개발 패턴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에트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관료제 과정과 이에 따른 공간형태에 대한 연구가 지리학의 주를 이루었다.⁵¹⁾ 당시에 지역주의(화)는 생산력 극대화를 목표로 한 산업시설과 노동력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되는 구역화의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구역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지역주의화의 문제에서는 지역성의 식별의 문제가 중요한데, 핵심은 지역의 자원잠재력(인적자원 포함)과 접근성의 문제였다. 후선 (Hooson, 1968:122-3)은 소련의 지역구분의 지표로 6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6가지 지표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규모, 인구(도시성장률), 자원접근성, 농·산업의 결합을 통한 경제전문화, 역사적으로 결합된 공동체, 민족적 고려이다. 지역구분의 지표로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도 포함시켰다는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역사적 공동체의 결속과 민족에 대한 고려를 지역식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은 지역적 동질감, 지역의식을 지역구분의 기준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⁵²⁾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소연방차원의 지역 구분에서 적용되었을지 모로나, 러시아연방의 민족지역을 식별하는 데에서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비에트시절 러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구분이 바로 경제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에서 분리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가 발생하면서, 소비에트학(sovietology)에서 지역, 지방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술락신(S. Sulakshin, 1992)은 구 소련지역 연구의 초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를 더 이상 러시아의 미래가 모스크바와 중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50) Pallot, Judith, 1983, "Recent approaches in the geography of the Soviet Un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7(4), pp.519-520.

51) Pallot, 1983, *ibid*, p.521.

52) Vardys V. S., 1972, "Geography and Nationalities in the USSR: A Commentary," *Slavic Review*, 31(3), pp.564-570.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사나또바(Сенатова, 1996)에 의하면, 지역의 역할이 강화된 것, 즉 개혁의 주도권과 국가통치의 중심이 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중앙집권적 계획·공급체제의 소멸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⁵³⁾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지역의 역할이 강화되는 원인으로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를 들었다면, 치리꼬바(А. Е. Чирикова, 2001:359-372)는 정치·경제체제보다 지역엘리트의 정치적 성장을 그 이유로 세우고 있다. 지역엘리트의 정치력의 상승으로 인해 중앙-지방관계, 연방체제의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지역엘리트의 성장은 지역 경제력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국가 자산의(собственность) 20%가량이 지역통제 하에 있고, 추가로 66%가 지방자치단체(муниципалитет)가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지역엘리트가 약 6-7인 정도에서 2000년에는 14인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푸틴 정권에 의해 재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지방정치인들은 이미 수중에 장악한 광범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더 높여 가고 있다. 파풀렌코(Павленко С. Ю., 1996)도 러시아연방의 지역주의화를 지역행정관리와 산업·기업가와 같은 지역엘리트간 결탁 및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 바도프스끼 등(Бадовский Д. В. et al., 1995:3-23)은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지역엘리트 집단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연방지도자와 지역통치 세력간 이해 충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지역주의, 연방주의에 관한 연구 중 지역엘리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주의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역엘리트들의 성장을 들고 있음에 반해, 파루크진(Фарукшин М. Х. 1994:67-79)은 시각을 달리 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연방의 지역 중에서 정치·경제력이 가장 큰 파파르스탄을 사례로 연구한 논문에서 지역엘리트들의 성장과 관련이 제약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재정적, 물질적 자원이 법·제도 등이 중앙의 관할 하에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3) Сенатова О. О. Региональный авторитаризм на стадии его становления/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й пространства/Под общ. ред. Т. И. Заславского. -М:Аспект Пресс. 1996. с.146-151.

시각을 달리 하여, 지역엘리트의 성장이 아니라, 중앙엘리트의 영향력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주의,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로우니(Rowney D., 1997)를 들 수 있다. 비록 모스크바(중앙)가 1990년대 초 여전히 러시아 정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들의 통제력은 과거 소비에트시기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주의, 민족주의는 이미 중앙의 통제력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지역주의, 민족주의의 진로는 중앙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스토너-웨이스(Stoner-Weiss, 1997)는 1990년대 ‘주권화 행진’을 바탕으로 중앙-지방관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러시아 지역주의를 중앙-지방관계에서 고찰하는 것은 정치체계의 민주화·분권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환기 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통치기제의 소멸로 중앙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중앙집권(centralization)에서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주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적 계층구조에서 하위 단계로의 권력이전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권력의 지역적 배분과 관련된다.⁵⁴⁾ 권한과 권력이 중대한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을 하는데, 그 기획의 과정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술라펜토흐 등(Shlagentokh V., et al., 1997.5-26)도 민주화·분권화의 측면에서 지역주의를 연구하였다. 그는 지역주의를 더 많은 지역자치나 분권을 얻기 위한 정치·경제적 행위나 이데올로기로 정의하였는데, 러시아연방에서의 민주화가 지역주의를 초래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로 인해 형성된 열린 공간에서 지역 엘리트의 충원과 선발에 미치는 중앙의 힘의 약화로 지역주의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1990년대 초 헌법개정과정에서 경쟁하던 대통령과 의회는 지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지역의 힘의 강화, 지역주의 강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테구(Teague E., 1994)도 술라펜토흐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1990년대 초 연방체제 형성과 조약체결 및 헌법 제정 등 법, 제도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중심-주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중심-주변관계의 형성과 변화는 연방중앙(모스크바)내에서의 권력투쟁, 즉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투쟁에 좌우되었다고 보고 있다. 연방조약의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분권화 과정은 지역의 일방적인 승리, 즉 지역주도로 진

54) Smith, B. C., 1985,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George Allen & Unwin: London, p.1.

행되었는데,⁵⁵⁾ 이는 중심-주변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Kathryn Stoner-Weiss, 1999). 라피더스(Gail W. Lapidus, 1999:74-82)는 분리주의를 촉진하거나 제어하는 국내적, 국제적 요인을 밝힌 뒤, 지방으로의 권한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러시아는 연방제 국가이므로 중앙-지방관계를 연구할 때, 연방주의 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다. 더구나 1990년대 초반 주권선언으로 인한 지역주의, 분리주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연방관계의 재편이 요구되었고, 러시아연방의 형성과정이 각 구성주체와의 연방조약이나 협정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방주의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측면으로 논의되었는데, 하나는 연방체제 형성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중앙-지방관계, 중심-주변관계의 측면에서다. 살리고프(M. С. Саликов)는 분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민족원리'와 '행정-영토원리'라는 이중적인 행정구역체제, 연방체제의 문제를 지역주의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방관계, 중심-주변 관계, 연방체제의 문제 등 러시아의 지역주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주의의 발생원인과 전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발생한 지역주의가 러시아의 정치, 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데, 이는 1990년대 초·중반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격변의 시기에 치해 있었으므로, 변화 자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역주의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술라펜토흐(Shlagentokh V., et al., 1997:203-218)를 들 수 있다. 그는 지역주의가 미친 긍정적 결과로 권위주의적 경향이 감소하고, 지역의 문화적 지적 발전 가능성을 들고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지역주의가 지역배타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지적하였다.⁵⁶⁾

러시아연방의 지역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⁵⁷⁾ 이는 러시아연방의 지역주의가 민족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

55) 중앙은 지방자치의 속도를 늦추거나 통제하길 원했지만, 하약하고 일관되지 않는 중앙의 제도로 인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Stoner-Weiss, 1999, "Central Weakness and Provincial Autonomy: Observations on the Devolution Process in Russia," *Post-Soviet Affairs*, 15(1), pp.87-106.

56) 지역배타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바이파리자치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브라스노야르스크 번 강주 산하에 있는 바이파리자치구는 세계적인 니켈 산지인 노릴스크로 유명하다. 자치구는 니켈산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면강주와 오랫동안 간증과 반목을 겪었다.

57) 이러한 측면에서 탈소비에드, 러시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민족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

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중에 민족성, 민족주의, 민족정체성과 연관된 연구들이 많다.⁵⁸⁾ 차킬로프(Чакилов В. Р., 2000)는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와 그 후 전환기는 민족주의가 강화되던 시기이므로, 즉 '주권화 행진'의 형태를 띠고 구 소련지역에서 민족갈등으로 이어지던 시기이므로 민족정치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민족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⁵⁹⁾

스타브라키스(Stavrakis P. J. 1997)는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민족(ethnicity)은 중심적인 개념이지만, 민족갈등과 공동체간 갈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역변수와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다위샤 등(Dawisha K. & Parrott B., 1994)은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민족성(ethnicity)의 문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방의 지역주의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지역주의가 발생한 원인은 소비에트시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소수민족들의 반전이 저해되었고, 이러한 민족문제에 경제적 차취가 더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이저(Kaiser, 1994)는 구 소련의 민족주의 연구에서 고국(homeland)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민족 영토성의 동원을 촉진하는 요소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요소로는 고국의 경계밖에 존재하는 민족구성원들의 자리적 동원; 원주민의 사회적 동원과 고국의 자원에 대한 비원주민과의 지속적 접촉과 경쟁; 탈민족화의 위협 지각;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의 집중화가 있다. 그는 민족공동체에 의해 영토 경계에 결부된 의미를 조사하는 것이 민족주의 연구와 러시아의 민족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주의를 고찰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지역주의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지역의

다.

58) 바디스는 이미 1970년대에 소비에트에서 민족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역학자들이 지역주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제시하였다.(Vardys V. S., 1972, "Geography and Nationalism in the USSR: A Commentary," *Slavic Review*, 31(3), pp.564-570.)

59) 이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Breslauer G. W., 1996, "Identities in transition: an introduction," in V. E. Bonnell(ed) *Identities in Transition: Eastern Europe and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Lynn N. J. and Fryer P., 1998, "National-territorial change in the republics of the Russian North," *Political Geography*, Vol.17, No.5, pp.567-588; Bremmer, Ian, 1997, "Post-Soviet nationalities theory: past, present, and future," in Ian Bremmer and Ray Taras(eds),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26. 등)

식,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구의 학자들에 비해 구 소련 출신들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정체성, 지역정체성의 문제는 정치, 역사, 사회, 문화 등 복잡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게다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고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드라 뷔제바(Дробижева, 2002)와 콜로소프(Колосов, 2002) 등은 구 소련방공화국과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족·지역정체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구소련의 국가·국민정체성(우리-소비에트국민·민족)의 해체로 인해 각 국민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체성은 거주지역이나 민족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2) 국내 연구

한국에서의 러시아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의 개혁·개방과 한러수교를 인해 자료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회주의의 맹주로서의 소련의 몽胧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198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나온 문헌과 자료를 통해 진행되던 연구에 비하면 가히 혁명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연구는 특정분야와 주제에 편중되었다. 어문학과 역사학을 제외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러시아 국내정치, 경제, 외교 및 한-러 관계에 한정되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필요에 비해 연구자가 제한되었던 객관적 한계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한계, '러시아 지역주의' 관련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의 '러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앙-지방관계', '러시아 연방제', 그리고, '러시아의 민족정책'의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김우준(2000)은 러시아 중앙과 지방간 관계는 이들간에 체결한 조약의 지속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한 관계를 규정하는 변수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나 중앙과 지방간의 정치·경제적 관계, 또는 지방의 사회적 상황을 들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중앙-지방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개혁과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장덕준, 2000)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전홍찬·장덕준(2000)은 중앙-

지방간의 갈등이 개혁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한구(1995:324)는 러시아 연방제의 특성, 즉 '민족원리'와 '행정-영토원리'라는 이중적, 비대칭적 연방제의 형성을 소수민족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영토원리'는 단순히 통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분한 것이고, 다민족국가로서의 러시아의 국가적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을 공화국이나 자치구로 지정한 것이다. '소비에트민족', '국체주의'라는 의제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비대칭적 연방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연방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연방체제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구성주체간에 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⁶⁰⁾ 한종만(1999)은 러시아연방제의 비대칭성을 상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체제의 위기에 직면한 연방중앙이 분리주의적 경향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과 종속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비대칭성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김성진(2001)은 러시아연방제는 특정 국면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기원을 소련의 연방제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주로 한국의 학자들이 러시아연방제를 전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특이한 연방제로 묘사하는 것에 반대하여, 벨기에, 스페인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러시아연방과 유사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기본적으로 연방제, 연방관계의 틀 속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접근(심현용, 2001)과 연방관계발전의 측면에서 정치제도상의 문제점(장덕준, 2001)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중앙-지방관계, 러시아연방제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도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성종환(2003)은 소수민족의 언어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파악방안을 제시하였고, 권세은(2001)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논쟁들을 고찰하였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연구로, 이미 1990년대 말에 러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신범식, 1998)가 진행된 바 있다. 신범식(1998)은 러시아의 정체성을 '유라시아'로 보고 있다.

소련의 해체와 관련한 국내 대부분의 연구들이 민족주의, 민족정책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반해, 양승환(1992)은 구 소련의 해체를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러시아의 정체성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 한종만(2004)은 동북아지역에서 극동·시베리아의

60) 이에 관한 연구로는 강원식(1999, 2000), 권세은(2001) 등이 있다.

지정학적 위상과 지역통합의 측면에서 지역주의를 고찰하였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인구감소는 동북아지역의 지역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장 전환기: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 지역의 '주권화 행진'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에 들 더 있고,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꿈꾸던 그 날, 1991년 12월 31일에 소연방은 70여 년 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 전세계 육지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던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0세기 초 세상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회주의 제국 소련은 20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새로운 역사적 실험이었던 사회주의제국 건설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크레믈린·붉은광장으로 대표되던 사회주의의 천옹성 소련의 해체는 더욱 놀라운 충격이었다.

이제껏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체제를 꿈꾸며,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70여 년 간의 다양한 사회주의적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충격만큼, 소연방의 해체에 따른 충격과 파장도 컸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유럽에서 나타난 사회주의의 위기와 소련에 대해 비록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종언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사별하는 것치고는 매우 역동적이었으며,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광대한 영토만큼이나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소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연방공화국간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련의 해체, 연방공화국들의 분리독립이라는 과정은 다민족지역이었던 연방공화국내부에서도 마치 소연방해체 과정을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비록 소비에트연방 구성공화국의 지위를 지니지는 못하였지만, '민족문화의 자치'가 인정되었던 자치공화국에서 소연방구성공화국들이 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함께 노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3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인 러시아공화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연방구성공화국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장에서는 소련의 해체, 소연방 구성공화국들의 주권선언 및 분리독립과정, 그리고 러시아공화국의 구성주체들의 주권선언의 과정과 원인 및 그것이 미친 영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리독립을 선언한 연방구성공화국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행정구역체제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러시아공화국내에서 주권선언을 한 자치공화국, 자치주 등의 구성주체들은 또 어떤 체계 속에 포함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이러한 주권선언의 특징과 그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소연방 해체 과정과 특징

1) 소연방체제

[1] 소연방 형성시기와 과정

소련의 공식명칭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하 소연방 또는 소련, CCCP, USSR)¹⁾으로 1917년 11월 7일²⁾ 러시아에서 블레비키 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정권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1917년), 벨라루시(또는 백러시아, 1919년)와 자까프까즈연방³⁾이 참여하여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연방을 결성하였다.

이들 공화국들은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민족국가의 성격을 지닌 공화국으로 형성되었으나, 문법과 상호 밀접한 경제협력의 바탕에서 외부의 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수월하도록 공화국들을 결합시키자는 네 의견을 모았다. 초기에는 결합의 방식으로 모든 공화국들이 자치의 권한을 가지고 러시아연방공화국 구성원으로 들

-
- 1) 소련의 정식 명칭은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CCCP)으로 영어로는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이다. 소련은 또한 소비에트연합(Soviet Union, Советский Союз)이라고도 불린다.
 - 2) 러시아구역으로는 10월 25일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러시아는 윤리우스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917년 11월 7일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을 혼히 10월 혁명이라고도 한다.
 - 3) 자까프까즈연방(Transcausus, Закавказ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은 그루지야(1921년), 아르메니아(1922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1922년) 결성한 까프까즈 산맥 남부의 연방국가였다. 이들은 1936년 다시 3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어간다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이 방안은 각 공화국의 주권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는 혜난의 비판에 의해 평등한 권리와 가진 모든 공화국들의 자발적 연합에 의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단일의 연방체 다민족국가'를 창설하였다.⁴⁾



<지도 4> 소연방 지도

1991년 해체되기 전까지 소련은 러시아혁명 후 단서일 내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1922년 소비에트연방이 결성된 이후 점차 확대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24년에 우즈베크공화국과 투르크멘공화국, 키르기즈공화국이 새로 소련에 가입하였다. 소련의 영토확장은 1940년에 아르메니아 3국이 연방에 가입함으로써 총 15개 공화국 연방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⁵⁾ 소

- 4) 기연수, 1995, “소련연방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결성”, 정한구·문수연 편역, 「러시아정치의 이해」, 나남: 서울, p.249.
- 5) 초기 소비에트연방형성 시기와 1991년 해체 직전의 소연방은 15개 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의 공화국이 연방공화국으로 참여하였다가 다시 자치공화국으로 그 지위를 약화시켰다. 핀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까렐리아자치공화국(ASSR)은

연방 구성공화국의 공화국수립시기와 연방가입일자는 <표 3-1>과 같다.

소련은 구 러시아제국과는 달리 평등한 권리를 지닌 공화국 연방을 지향하였다. 지리적 위치, 인구규모 및 민족성(ethnicity)과 상관없이 연방구성공화국은 모두 동등한 자격을 지녔다. 1924년 제 1차 소연방 헌법은 1922년 연방 구성 당시 각 구성주체들간에 체결된 조약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각 구성공화국간의 지위의 동등함은 이 헌법에도 명시되었다.

현법 70조에는 소련이 "사회주의적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민족의 자유로운 민족자결 및 평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발적인 결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일의 연방제 다민족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기연수, 1995:247).

그러나, 70여년 간 존재했던 소련이 헌법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15개 구성공화국 간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동등하였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비록 국명에서 연방임을 명시하고 형식적으로는 연방체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연방과 당시 러시아공화국을 동일한 국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그 만큼 소연방체제는 연방구성주체간 평등한 체계는 아니었다.

새로운 국가의 연방구조는 헌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볼셰비키의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에 반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회주의의 기본원리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나 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연방구성공화국들에게 '사회주의 모국' 러시아공화국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자칫 사회주의혁명의 저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모스크바, 코렐를로 상징되는 볼셰비키, 중앙집권세력은 그들의 권력을 점차 넓혀 나갔고, 전 영토나 다른 공화국에도 그 힘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결과 다른 연방공화국들도 모스크바에 종속되기 시작하였다.⁶⁾

1940년에 까렐리아-핀 공화국(SSR)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1956년까지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 후 다시 원래의 까렐리아 자치공화국(ASSR)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러시아연방공화국(RSFSR)에 속하는 자치공화국의 지위로 강등되었다(Нации и этнос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Петрополис'", 1999. с.77-78.

6) 법적으로는 동등한 연방관계를 형성하였지만, 공산당독재라는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중앙집권화는 편연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는 연방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중앙집권화로 귀

<표 3-1> 소연방 구성공화국 형성 및 연방가입일자

구성공화국 ¹⁾	공화국 형성일자	소연방 가입일자
러시아연방	1917년 11월 7일(10월 25일)	1922년 12월 30일
우크라이나	1917년 12월 25일(12월 12일)	1922년 12월 30일
벨라루시	1919년 01월 01일	1922년 12월 30일
아제르바이잔	1920년 04월 28일	1922년 12월 30일
아르메니아	1920년 11월 29일	1922년 12월 30일
그루지야	1921년 02월 25일	1922년 12월 30일
카자흐	1924년 08월 26일	1936년 12월 05일
몰도바	1924년 10월 12일	1940년 08월 02일
키르기즈	1924년 10월 14일	1924년 12월 05일
타지크	1924년 10월 14일	1929년 12월 05일
우즈벡	1924년 10월 27일	1924년 10월 27일
투르크멘	1924년 10월 27일	1924년 10월 27일
라트비아	1940년 07월 21일	1940년 08월 05일
리투아니아	1940년 07월 21일	1940년 08월 03일
에스토니아	1924년 07월 21일	1940년 08월 06일

주: 1) 소연방구성공화국명은 일괄적으로 공화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련이 해체되기 전의 명칭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2)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공화국은 자까흐까즈공화국(까프까즈 산맥 이남이라는 의미)으로 소비에트연방에 참여함.

자료: V. V. Totchev i dr. 1984, p.204; 기연수, 1995, p.24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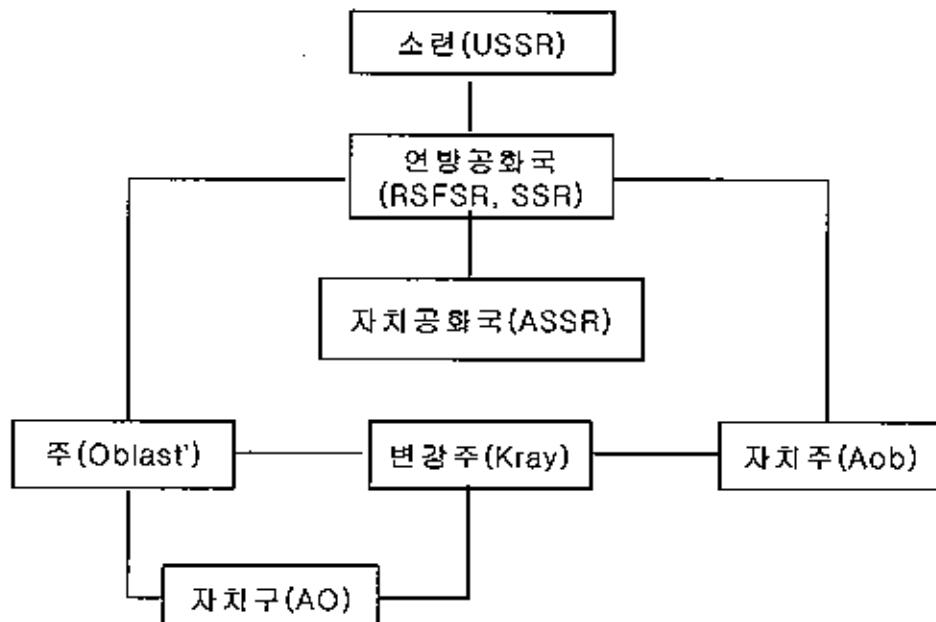
(2) 소련 행정구역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련은 15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SSR)의 연방국가이다. 연방은 러시아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SSR)명에 '명목민족명'을 불인 14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었다. 즉, 우크라이나민족이 명목민족인 우크라이나공화국, 카자흐민족이 명목민족인 카자흐공화국과 같은 15개 '명목민족공화국'이 소연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림 3-1>에 보듯이, 소연방은 연방 산하에 15개 연방(구성)공화국이 있고, 연방구성공화국은 자치공화국(ASSR,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주

결되었다. (Shaw D. J. B., 1999, pp.31-33.)

(Oblast'), 변강주(kray), 자치주(AOb, Autonomous Oblast')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와 변강주 밑에 다시 자치구(AO, Autonomous Okrug)가 존재한다. 자치공화국은 연방공화국 산하의 행정구역이었지만, 주나 변강주와 달리 소련 인민대표자회의에 대의원을 파견했듯이 이중적인 지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소련방 행정구역체계

1920년대 소비에트연방이 결성된 뒤 몇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변화가 있었다.⁷⁾ 가장 큰 변화는 2차 대전 후에 일어났다. <그림 3-1>은 소비에트시절에 행정구역 변화를 겪은 뒤, 소련해체 직전의 최종적인 행정구역체계이다. 그리고, 자치공화국과 자치주, 변강주, 주 밑에는 시와 군(Rayon)이 있다. 소련을 구성하는 행정구역을 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7) 1945년 크림자치공화국(ASSR)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합 300주년(1954년이 300주년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크림자치주로 명칭을 변경한 뒤 러시아공화국의 산하가 되었다. 그리고 까렐-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SSR)이 까렐리야자치공화국으로 그 지위를 변경한 뒤 러시아공화국에 가입하였다.(Гладкий Ю. Н., Добросок В. А., Семенов С. П.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и: Учебник. —М.: Гардарики, 2001. с.69-70.).

<표 3-2> 구 소련의 행정구역 상황(1990년)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변강주	주	군	도시
러시아	16	5	10	6	49	1,834	1,030
우크라이나					25	480	429
벨라루시					6	117	99
우즈벡	1				10	155	124
까자흐					17	222	83
그루지야	2	1				65	61
아제르바이잔	1	1				61	65
라투아니아						44	92
몰도바						40	21
라트비아						26	6
키르기즈					2	40	21
타지크		1			2	44	16
아르메니아						37	27
투르크멘					3	45	19
에스토니아						15	33
합계	20	8	10	6	114	3,225	2,126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СССР.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СССР, 1990, с.5

자치공화국은 총 20개인데 이 중 16개 자치공화국이 러시아공화국에 속해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러시아공화국은 13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였으며, 이러한 자치공화국으로 인해 그 명칭(RSFSR)에서 드러나듯 연방국가의 형태를 띠었다. 연방국가가 다시 연방의 일원으로 소비에트연방에 가입한 기이한 체제였다. 그 외 나머지 4개 자치공화국은 우즈벡공화국, 그루지야공화국,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각각 1, 2, 1개씩 속해 있는데, 연방구성공화국명을 사용하는 명목민족과는 다른 민족이 역사적으로 거주해 온 민족지역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자치주는 8개로 그 중 5개가 러시아공화국에 속해 있었으며, 10개의 자치구와 6개의 변강주도 모두 러시아공화국 내에 존재하였다. 그만큼 러시아공화국은 영토가 광활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행정구역의 원리에 의해 구분된 주는 총 114개였다. 이러한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주, 변강주 밖에 인구밀집지역인 시와 주로 농촌지역인 군이 존재하였다.

2) 소련해체와 연방구성공화국의 독립

[1] 연방구성공화국에서 분리·독립운동의 발생

소련은 1991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렇다면 소련은 언제부터 해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해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소련이 해체되자 전세계적 관심을 끌었고, 그 관심만큼 다양한 해석이 줄을 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소련의 형성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소비에트연방 헌법에서는 각 구성공화국간 동등한 권리로 지닌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적이었으며 형식적인 연방이었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소비에트국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정치적인 인사'에 머물렀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실체적 정체성',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체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⁸⁾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접근하는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원을 달리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분석들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고, 그만큼 소비에트연방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수면 위로 불거지고 실제적인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해체의 원인에 대한 잔단은 실로 다양하지만, 언제부터 해체의 징후가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더불어 그의 경제적 패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개된 글라스노스트(개방, glasnost')와 민주화 정책은 예기치 못한 중앙정부권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구성공화국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들간에 분리·독립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야기되었다.⁹⁾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이 연방관계와 민족관계라는 다른 측면에서 불거졌다.

물론 민족갈등과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단지 1980년대 후반에야 나타났고, 아시기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¹⁰⁾ 소비에트시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

8) 그람낙(Крамник В. В. 2002:187-198)은 구 소련 해체의 원인을 정체성의 위기에서 찾고 있다. 즉, 소련의 해체라는 것이 탈동일시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나쁜 친은 '미국은 (연방구성주체 간-팔자주) 문배에 기초한 내부적 통일이라면, 구 소련은 속박적 토대 하의 외부적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9) 기연수, 1995, *op cit*, pp.251-252.

10) Smith G., 1991, "The State, Nationalism an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Soviet

나 그 정도가 1980년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연방체제의 유지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부에 소비에트연방에서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의 발흥과 전개과정¹¹⁾을 그레함 스미스(Graham Smith, 1991)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¹²⁾

제 1 단계는 ‘민족의식의 태동기’로 침체되어 가던 소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개혁·개방정책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제 민족들의 민족의식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를 성공시키기 위해 고르바초프가 제창한 글라스노스트는 민족운동을 야기하였다. 문화적인 해금에 따라 각 연방공화국들은 민족고유의 언어, 종교, 교육, 문화, 역사, 전통적 봉습 되찾기에 열을 올렸고 이는 자연히 민족감정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둘째, 일반 대중들도 쏟아져 나오는 당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수비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재고찰된 중앙당국에 의한 탄압의 역사를 재인식함으로써 체제와 중앙권력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 셋째, 성역시되어 왔던 중앙 권력이 비판당하고 비판자가 무사함을 본 대중들의 중앙권력에 대한 고포감이 사라지고 유사시에도 이에 도전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넷째, 소비에트체제에 대한 환멸은 자연히 자신이 귀속할 만한 다른 공동체를 차지 했는데 자연히 주변의 민족공동체가 사회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공동체로 다가왔다. 글라스노스트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 이

Republies,” in Catherine Merridale & Chris Ward,(eds), *Perestroika: The Historical Perspectives*, London: Edward Arnold, pp. 209-213.

11) 신형작(1995: 5-6)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연방체제의 해체, 구성공화국의 분리·독립이라는 주변이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과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소련 공산당과 규진세력, 그리고 이를 놓고에서 조율하여 왔던 고르바초프의 세력 변동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였다. 제 1기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내에서 개혁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던 시기였고, 제 2기는 소연방정권에 대항해 구성공화국의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연방정권의 권위가 약화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러시아공화국의 힘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제 3기는 러시아공화국의 최고권력이 당시의 우파세력(엘친 등)에게 장악되고 소연방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주도권 생활이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이때 러시아공화국은 소연방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다른 인방구성공화국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였다. 제 4기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러시아공화국으로 이전되어 소연방이 해체되었다.

12) 고재남, 1996, p.202에서 재인용.

려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켰다.¹³⁾

<표 3-3> 소련에서 분리독립운동의 전개 과정

단계	시기	특징
1단계	1985-1988	민족의식의 태동기
2단계	1988-1989	분리독립운동의 대두기
3단계	1989-1990	독립·주권선언기
4단계	1991	해체기

출처: Smith G., 1991, pp.209-213; 고재남, 1995, pp.202-207에서 정리

브레즈네프 아래 '소비에트 국민'으로 살아왔던 민족들이 자신의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끔 하였으며, 소련방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민족과 자민족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 2단계는 '분리주의'와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이다. 소연방 구성 공화국을 비롯한 민족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태동하였다. 아르메니아의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에 포함되어 있는 나고르나-카라바흐 자치주와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아르메니아에 양도할 것을 주장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¹⁴⁾, 각 구성공화국에서는 민족주의단체(<표 3-4> 참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인민전선 등 민족 운동단체들의 주도하에 일어난 민족운동이 1988년 발트 3국에서 시작하여 자까프 까즈(코카서스 이남), 몰도바, 그리고 전 소련지역으로 확대되었다.

3단계는 본격적인 '주권(독립)선언기'로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민족운동단체가 점점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지만, 실제 연방정부(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문제

13) Dallin, 1992:298; 흥현역, 2003:189-190에서 개인용.

14) '민족의식'에 대한 자각이 싹튼 뒤, 자민족의 영도회복에 대한 움동은 구 소련지역 도치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에 아르메니아의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던 나고르나 카라바흐 자치주와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아르메니아에 양도한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1987년 10월 17-18일에 있었다. 이들은 이미 1985년 가을 제 27차 당대회가 준비되고 있을 때부터 이러한 요구를 주장하였으며, 1986년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7년부터 5월부터 그 활동을 강화한 단체는 아르메니아인 8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 중에 3만 1천 명은 나고르나 카라바흐 자치주의 주민이 서명한 것이었다. (장옥경 역, 2002, 러시아민족문제의 역사, 신아사: 서울, p.203 (보흐단 나학일로·빅토르 스보보다 공저, Soviet Disunion: A History of the Nationalities Problem in the USSR, Russia))

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4단계는 연방구성주체의 독립, 주권선언에 대해 연방정부가 각각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1991년 말에 소비에트연방을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게 되었다. 물론 소련은 연방의 해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신연방조약'을 모색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신연방조약을 작성, 1991년 3월 17일 이의 지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켰는데, 이 초안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경제, 환경, 대외관계 등에 대한 조정권에 한정시키는 소위 '9+1 협정'을 그해 4월 슬라보 3국, 중앙아시아 5국,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연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통과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지만, 이러한 조율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재남, 1996:205).

(2) 연방구성공화국의 분리·독립

소연방 구성공화국들이 본격적인 독립선언과 주권선언을 하면서 연방체제 자체의 존립이 위기로 대두된 시기는 스미스(Smith G., 1991)의 민족·분리주의의 발전 4단계에 따르면 주로 3·4단계에 해당된다.

주권·독립선언을 이끌었던 것은 역시 발틱 3국이었다. 1990년 3월 11일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선포하였다. 이어 에스토니아가 3월 30일에 라트비아가 5월 4일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공화국이 1990년 6월 12일 주권선언을 하였고,¹⁵⁾ 나머지 연방구성공화국도 그해 주권선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공화국이 1990년 12월 12일 주권선언을 하였다. 각 공화국의 주권선언일자와 독립선언일자는 <표 3-4>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구성공화국간에도 그 선언의 형태와 목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발틱 3국이 먼저 '독립선언'을 한 것에 반해, 나머지 구성공화국은 초기에는 '독립선언'이 아니라 '주권선언'을 한 것이다. 독립선언과 주권선언의 명백한 차이는 소비에

15) 러시아공화국은 1990년 6월 12일 주권선언을 한 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로써 러시아공화국 영토에서 정치기관의 권한에 관한 결의(Постановление съезда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Росси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기준에 연방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구성공화국 내의 기관으로 이전한다는 결의로 실질적인 주권의

트 연방체제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다. 발트 3국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러시아연방은 비롯한 다른 구성공화국은 여전히 연방체제의 유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1990년 러시아연방의 주권선언은 소연방의 해체를 의도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러시아연방은 1990년 6월 12일 주권선언을 하면서도 소연방의 유지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방체제는 기존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연방구성주체간 조약체결을 통해 새로운 연방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조약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체결되지 못했다(Федоров В.П., 2002)

1990년 6월 12일 러시아연방은 주권선언을 하면서도 연방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은 주권선언문의 전문에 밝히고 있다. 다만 소연방 중앙에 자나친 권한이 주어졌던 형식적인 연방체제를 주권선언 이후에 다시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주권선언문의 전문에서 언급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략), 둘째 러시아는 연방구성공화국에 어떠한 특별도 부여되지 않는 동등한 공화국의 연방을 지향한다.¹⁶⁾

그리고 연방에 주어진 특권, 대부분의 자원이 연방소유였던 것이 주권선언 이후에는 러시아연방이 관할한다고 협명하였다.¹⁷⁾

이러한 연방 구성공화국의 분리·독립선언에 연방 중앙은 무방비상태,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하면서 전제적인 개혁프로그램의 성공은 연방문제의 해결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발트 3국의 분리·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1990년 1월 리투아니아에서의 고르바초프의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다민족 국가에서는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화국 내부와 공화국 간의

16) Сборник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СФСР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Союзном Договоре и Референдуме—М.Сов. Россия, 1991. С.64.

17) “러시아연방의 경제적 주권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소연방이 관리해왔던 지하자원에 관한 권리를 박탈하여 금, 금강석, 우라늄 등에 관한 권리를 러시아연방의 권한으로 귀속 시켰다(신형직, 1995:22).

상호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폐레스트로이카는 전국 파경에 이를 것이다. 우리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연방체, 즉 정치적 주권과 경제적 자주성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연방체가 필요하다.¹⁸⁾

<표 3-4> 소연방공화국의 주권·독립선언 일정(1990년)

연방공화국	주권선언	독립선언	주도단체 및 출범년도
리투아니아		3월 11일	사유디스(1988.6)
에스토니아		3월 30일	에스토니아 인민전선(1988.4)
라트비아		5월 4일	라트비아 인민전선(1988.7)
러시아	6월 12일		다양한 민족운동단체, 러시아인민전선(1988.12)
우즈베크	6월 20일	8월 31일	비톨리크(통일)(1988.11), 1989년 5월 분열됨
몰다비아	6월 24일	8월 27일	몰다비아 인민전선(1989.1)
우크라이나	7월 31일	8월 24일	루흐 ¹⁹⁾ (1988.11)
벨라루시	7월 27일	8월 26일	아드라드제니네(부활)(1989.6)
투르크메니스탄	8월 22일	10월 27일	아그자비클리크(통일)(1990.1)
아르메니아	8월 23일		카라바흐위원회(1988.2) 아르메니아 국민운동(1990. 봄)
타지크스탄	8월 24일	9월 9일	아시카라(공개)(1989. 6)
아제르바이잔	9월 13일	8월 31일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1988.7)
카자흐스탄	9월 25일	12월 16일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 운동(1989.2) 등 연합세력
그루지야	11월 16일	4월 9일	민족구국위원회 ²⁰⁾ (1989.10)
키르기즈스탄	12월 12일	8월 31일	야샤르(공개)(1989.7)

주: 1) 폐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기 위한 인민전선

2) 1990년 5월 '라운드 테이블'과 '조정위원회'로 분열됨

출처: 기연수, 1995:252, 고재남, 1996:204를 재구성

고르바초프(연방 중앙은) 당시 발생했던 민족갈등과 민족간 긴장을 민족의 이해에 대한 무관심과 공화국과 민족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실패 등 과거 역사에서 행해진 불법적인 조치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시정

18) Известия, 1990. 1. 12; 기연수, 1995, p.256에서 채인용.

하고자 새로운 연방조약을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방조약은 초기에 중앙에서 작성하고 엄격한 제한 조건들이 많았으나, 최종형태는 공화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더욱 분권적 형태의 연방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되었다.¹⁹⁾

1990년 12월 중순에 소집된 제 4차 소련 인민대표자회의는 고르바초프의 '신연방조약 초안'을 통과시켰고, 이의 채택을 끝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1991년 3월 17일에 치러진 이 국민투표에는 발트 3국과 몰도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가 불참한 가운데, 총 유권자의 80%가 참여하여 75%가 이를 지지하였다. 1991년 9월 6일에 발트 3국의 독립이 인정된 가운데 고르바초프는 소연방을 노슨한 형태의 '주권 국가연방'으로 묶어두려는 노력을 펼쳤다. 이때까지도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연방 잔류의사를 밝혔다. 이때까지 소연방체제는 유지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1991년 12월 1일 실시된 우크라이나 국민투표에서 연방탈퇴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됨으로써 상황은 급변하였다. 이미 분리독립한 발트 3국에 이어 우크라이나마저 분리독립하게 되면서 연방체제는 유명무실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1991년 12월 7일 민스크에서 독립국가연합 결성이 선포되고, 이어 12월 22일에 알마타에서 발트 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 창설을 결의함으로써 소연방의 해체는 공식화되었다.²⁰⁾ 1992년 1월 1일부로 독립국가연합체제로 바뀜에 따라 소연방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2.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주권선언과 연방형성

1) 주권선언

소연방 구성공화국을 휩싸고 있던 주권선언의 열풍은 러시아연방에까지 다다랐다. 이미 1990년 6월 12일 러시아연방이 주권선언을 한 뒤, 자치공화국에서 잇따라 주권선언을 하였다. 맨 처음 주권선언을 한 것은 북카프카즈지역에 위치한 북

19) Правда 1990. 11. 24. с.1; Известия, 1991. 2. 22.

20) 고채남, 1995, pp.212-214.

오케아찌야 자치공화국이었다. 1990년 7월 20일 주권선언을 하였다. 1990년 8월에서 1991년 1월 사이에 따파르스탄, 까렐리야, 꼬미, 우르무르뜨, 야꾸찌야, 부랴찌야, 바슈키르토스탄, 칼미끼야, 마리, 추바쉬, 체첸-잉구체찌야, 투바, 까바르지노-반카리야공화국이 잇달아 주권을 선언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개의 자치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인 모드르바공화국은 1990년 12월 최고회의에서 모드르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다게스탄은 1991년 3월 13일 인민대표자대회에서 공화국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 당시 16개 자치공화국 중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지역은 다게스탄²¹⁾과 모드르바 2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²²⁾

민족과 지역의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투쟁에 앞장 선 지역은 따파르스탄, 바슈키르토스탄, 사하-이꾸찌야공화국 같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까렐리야, 꼬미, 추바쉬, 투바공화국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자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 뒤쳐진 낙후된 지역이었다. 이 모든 지역들은 '러시아는 중앙이 최소한의 권한을 갖고 지역에 최대한의 특권이 부여되어, 명목 민족들이 영토, 자원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자님과 동시에 얻어, 종교, 상징 등과 같은 문화제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민족국가들의 연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러시아연방의 자치공화국들의 주권선언은 정치적으로는 당시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독립·주권선언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하고, 법·제도적으로는 1990년 4월 26일 소련 최고회의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채택된 '소연방과 러시아공화국 구성주체 간 권한 규정에 관한 법'²⁴⁾의 영향을 받았다. 이 법의 채택으로 소연방 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지위가 같아졌다.²⁵⁾ 자치공화국은 소련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21) 카스피해 인근에 있는 북까프까즈자역의 다게스탄공화국은 복잡한 내부 민족문제 때문에 '주권선언'을 하지 않았다.

22) Ариянин А. На путь к новой федерации//Един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КамДумы по делам Федерации и регионов, политики. —М.: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Республика, 1994. С.11.

23) Един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1994. с. 13(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 ОЛМА-ПРЕСС, 2003. с. 246에서 재인용).

24) 'О разгранич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между Союзом ССР и субъектами федерации'

25) Ведомости Съезда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ССР 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990. № 19. Ст. 329.

적으로 환영한 반면에 러시아연방은 이를 탐탁치않게 생각하였다.²⁶⁾

러시아연방은 소연방에서 채택된 이 법안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와 민주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지역들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으므로 러시아연방은 이를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5월 16일 제 1차 러시아연방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체 자치조직의 권한 확대를 제기하였다. 이 대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민족자치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자치조직도 연방구성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엘친의 생각도 이와 같았으며, 이것은 추후 러시아연방의 주권선언문에도 반영되었다.

러시아연방의 16개 (자치)공화국들은 1991년 5월 7일 소연방 대통령과 구성공화국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시급한 방안’이라는 결의를 심의·채택하였다.

참석한 16개 공화국의 대표들은 새로운 연방조약(소연방과의 조약-필자 주)의 신속한 체결은 소련의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소련과 구성공화국들이 제기한 안을 가까운 시일 내 마무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3월 9일 소연방회의에서 제안된 안은 주권을 선언한 27개 공화국들의 대표자협의회의 지위를 반영하는데, 여기에는 주권 선언 공화국들을 연방 구성공화국으로 인정할 지 자치공화국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²⁷⁾

이 모임 후에 주권을 선언한 자치공화국들은 소연방구성공화국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1991년 5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러시아연방 죄교회의 의장인 엘친과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소련과 러시아의 국가조직, 연방구조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주권을 선언한 자치공화국들은 연방 구성공화국과 동일한 지위로 소련과 조약을 맺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여기서 따파르스탄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공화국들은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로 남기를 희망하였으며, 따파르스탄공화국은 조약을 통해 러시아연방과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당시 러시아연방 죄교회의 의장이었던 엘친은 주권공화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공화국들은 새로운 국명 -- 주권선언한 국명 — 으로 러시아연방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으

26)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3. С. 242-243.

27) Бурятия. 1991. 5. 16. с.1

로 공화국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화국의 지위상승 —소연방 구성공화국으로서의 지위 — 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입장은 엘친의 입장과는 달랐다. 이 자리에서는 연방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주권선언을 한 자치공화국을 연방공화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다.²⁸⁾ 결국 주권선언을 한 자치공화국들은 지역에서는 소연방 구성공화국으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자치공화국으로 존재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처지에 직면하였다. 이 문제는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주권선언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연방 내 지위상승 선언은 자치공화국에 한정되지 않았다. 자치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권화 움직임과 중앙에 대한 자유권의 확대는 그 외 지역, 즉 벤강주, 주, 자치주, 자치구들에게도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 후반기부터 불과 1년 사이에 15개 자치주와 자치구 중 8개가 자치공화국으로, 2개는 자치주로의 지위상승을 선언하였다.²⁹⁾ 1993년 10월 불고그라드주와 스베르들로프스크주가 먼저 공화국으로의 지위 상승을 선언하였다. 엘친의 출신지인 스베르들로프스크주는 혼법을 채택하고 우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 외 칠라빈스크 주 등이 공화국 형성을 선언하였으며, 극동지역에서는 브리모로스끼주(연해주)가 주도하여 지역통합에 의한 극동공화국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한가운데 위치한 끄라스노야르스크주도 공화국으로 지위 상승을 꾀하였다. 러시아연방에서 지역규모가 크고, 연방의 교부금보다 연방에 내는 세금이 많은 ‘기부자’(donator)인 지역들은 소연방 구성공화국처럼 모든 것을 얻고자 하였고, 이는 국가통합력의 약화와 국가해체·분리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³⁰⁾

2) 러시아연방 형성

(1) 조약체결을 통한 연방형성

28) Бурятия. 1991. 5. 16. с.1

29)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3. с. 244.

30)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3. с.251.

러시아연방의 형성은 러시아공화국(RSFSR)에서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으로의 체제변화 과정을 말한다. 러시아연방의 형성은 밖으로는 1990년 6월 주권선언 후에 소연방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안으로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주권선언에 따라 새로운 연방조약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전자는 앞서 소연방의 해체과정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방 구성주체들의 주권선언과 자위상승 선언으로 인해 러시아연방은 새로운 연방체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연방체제의 형성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의 재정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방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은 당시의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고르바초프 즉 소련과 권력투쟁을 하고 있던 당시 러시아연방 대통령인 엘친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였고, 둘째, 연방주의는 당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었으며, 셋째, 연방주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주권선언과 소연방 해체라는 위기 속에 러시아의 해체를 막을 영토전략으로 사용되었다.³¹⁾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재정립은 연방조약³²⁾ 체결 형태로 진행되었다. 러시아연방의 형성과 구성공화국의 권한 등을 해결하는 데 연방조약은 적절한 해결책이었다. 새로운 연방에 대한 생각은 1992년 3월 31일 연방조약(Federal Treaty)을 통해 드러났다. 연방조약은 크게 3가지 형태를 띠었다.³³⁾

- 러시아연방의 구성원이면서 주권을 지니는 20개의 민족기반의 공화국³⁴⁾
- 55개의 영토기반의 지역: 49개 주와 6개 변강주, 2개의 연방도시
- 10개의 자치구와 1개의 자치주(극동지역에 있는 유대인 자치주)

31) Smith, Graham, 1996, "Federation, Defederation and Refederation: from the Soviet Union to Russian Statehood," in Graham Smith(ed), *Federalism: The Multiethnic Challenge*. London · New York:Lonman. pp.167-168.

32) 연방 구성주체들이 주권선언을 하기 이전인 1990년 7월 17일에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연방조약'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33) Nicholson M., 1999, *op cit*, p.14

34) 1992년 6월 잉구세찌야가 제첸-잉구세찌야 자치공화국에서 분리되면서 21개 공화국이 되었다.

연방조약은 곧바로 발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3개 형태의 영토조작들이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방조약은 러시아의 해체를 막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연방조약이 안고 있는 그 자체의 문제는 연방구성주체들간 분평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파르스탄과 체첸은 연방조약에 아예 서명하지 않았고,³⁵⁾ 바슈코르토스탄은 자신들의 주도 하에 작성하였는데, 대외관계와 무역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받았으며, 예산과 세금에서도 다른 구성주체들보다 더 큰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³⁶⁾

공화국의 헌법이 러시아연방 헌법에 우선하는 지역은 7개였으며, 따파르스탄, 사하-야꾸찌야, 바슈코르토스탄, 체첸, 투바공화국은 1992년에 연방예산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9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따파르스탄과 체첸은 거두어들인 세금을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였다. 사하-야꾸찌야공화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100%, 부가가치세 99%, 공채(акция) 94%가 연방으로 이전되지 않고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까렐리야공화국은 지역에서 집행된 세금이 각각 96, 92, 91%이다. 이 모든 과정은 1992-1993년 중앙이 43개 연방구성주체들의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19개의 공화국들이 포함된다.³⁷⁾

주권선언이 민족지역인 자치공화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다민족국가인 러시아연방의 통합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지역과의 협상, 조약체결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일면 당연하였다. 바로 이점이 행정-영토원리에 기초한 다른 지역, 즉 주, 범강주, 자치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1992년 11월에는 ‘행정-영토원리’에 기반한 행정구역 중 53개 지역대표들이 ‘주지사 회의’(Совет губернаторов)를 결성하여 그 대표를 ‘공화국대표 회의 Совет глав республик’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1993년 8월에 몇몇 큰 지역의 행정, 입법 대표들은 중앙과 공화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협상과 조약체결에 대한 논의

35) 이 두 공화국은 연방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국가간 조약체결을 요구하였다(Федерализм власти и Власть федерализма, М., 1997. С.53-54.)

36) Аринин А. На путь к новой федерации//Един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Кам. Думы по делам федерации и регион, политике, —М.: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Республика, 1994. С.18-19.;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3. С.249.

37) Аринин А. *Ibid*, С.19.

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대통령과 내각에 요구하였다. 그들은 공화국에 특권이 부여된 '세금문제'의 협약을 즉각 폐기할 것과 신헌법에 '러시아의 모든 구성주체들의 법적·경제적 평등', '국가의 민족·정부구분'에서 '정부·영토'구분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약 협상의 중지가 포함된 것이었다.³⁸⁾

러시아연방의 주와 변강주들은 조약의 내용과 그 과정이 자신들보다 민족지역에 더 많은 웬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었다. 이들은 소연방의 해체라는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소연방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연방도 해체된다면, 기존에 형성된 경제관계의 단절이 자신들이 연방으로부터 멀어지는 권리에 비해 참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소련의 해체를 통해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소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경제공간을 창출한 연방구성공화국들은 관세문제뿐만 아니라, 급격한 운송비의 상승으로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변강주와 주의 정치지도자들은 민족지역과 동일한 정치적 자위 획득을 요구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성 유지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³⁹⁾ 민족지역이 러시아연방으로부터 탈퇴하려는 상황은 막되, 공화국과 주사이의 정치·경제적 권한 격차는 최소한으로 만들기를 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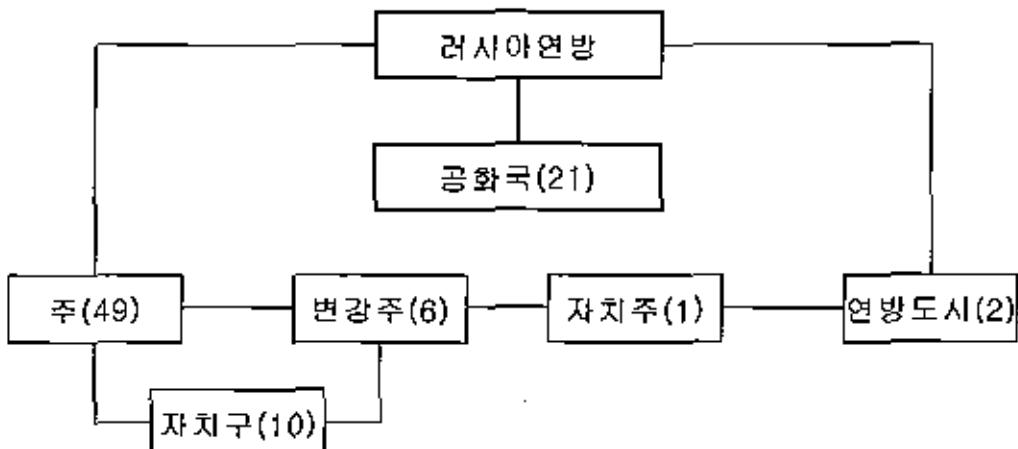
(2) 연방형성: 구성주체의 확정

새로운 러시아연방을 형성하기 위해 1992년 3월에 제시된 연방조약은 모든 구성주체들과 체결되지는 않았다. 연방조약의 제시와 체결은 러시아연방 형성의 시작이었고, 이후 러시아의 연방구조를 형성하는 기본틀이 되었다. 연방조약의 체결로 시작된 러시아연방 형성과정은 신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러시아연방에서 신헌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는 남달랐다. 1980년대 후반, 소비에트시절부터 이어져온 국가적 혼란과 해체·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38)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3. С. 250.

39)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Научный центр "Руссика". М., 1997. С.410.

이자 일차적인 마무리였다. 130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에다가 공화국, 주, 변강주, 자치구, 자치주 등 행정체계의 복잡다기함으로 헌법제정의 문제는 조약체결의 문제처럼 간단하고 수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림 3-2> 러시아연방 행정구역체계

신헌법의 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화국과 연방 영토에 관한 문제였다. 1992년 초기 작업시에 정부형태를 연방으로 규정하였으나, 구성주체들은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다기한 행정구역형태에서 어떤 지역이 연방구성주체에 속하고, 어떤 지역이 속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1990년부터 진행된 공화국과 지역들의 주권선언, 지위상승선언과 맞물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기존 러시아공화국의 구성주체였던 공화국이나 주, 변강주,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자치주의 문제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자치구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자치구는 러시아공화국의 기본행정단위였던 주나 변강주 산하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림 3-2>참조). 주와 변강주가 러시아연방의 기본 구성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그 하부 행정조직인 자치구를 연방의 구성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연방과 주, 변강주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⁴⁰⁾

40)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러시아연방이 형성되고 안정화되었다는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끄라스노야로스크주이다. 시베리아의 동양에 위치하며 면적이 큰 이 지역은 주 산하에 2개의 자치구가 있다. 그 중 하나인 타이파리자치구는 세계적인 나ikel 생산지인 노린스크로 유명하다. 그러나 노린스크는 지리적 위치로는 타의파리자치구

그러나 이미 주권선언을 한 자치공화국을 이제는 '민족자치지역'이 아니라, '국가형태의 공화국'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제 민족지역은 형식적으로는 자치주와 자치구만 남게 되었다. 이는 1992년 3월에 제시된 연방조약의 3가지 형태에도 명시되었던 사항이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역관계 등으로 인해 자치구도 연방구성주체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러시아연방은 <그림 3-2>와 같은 연방구조를 띠게 되었다.

(3) 연방체제의 특성: 비대칭성

러시아연방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원리에 기초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원리'와 '행정-영토원리'가 그것이다. 민족원리란 러시아연방 내 바레시아민족거주지역을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민족원리에 의한 행정구역은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이다. 행정-영토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구분된 행정단위는 주와 변강주다. 변강주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자리적으로 외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거나 중심(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면적은 넓으나 인구는 적은 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러시아 연방체제를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체제는 지방분권화와 연관되어 민주화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러시아의 연방체제⁴¹⁾는 이러한 측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의 특성이 반영되어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⁴²⁾ 다민족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민족지역에 대한 인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적합한 대우가 필요하였다. 그 결과 민족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예 있지만, 행정체계 상으로는 고라스노야르스크주 직속 도시이다. 타이미리자치구는 이러한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고라스노야르스크주는 자치구가 주 산하에 있으므로 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구도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된 후 타이미리자치구는 세금 문제 등(연방에만 세금 납부, 주에는 거부 또는 주와 세금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연방과 직접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도 명백히 연방구성주체의 지위를 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1년 초에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당시까지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41) 이러한 연방체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염밀히 말하자면, 불세비키혁명 후 러시아공화국과 소연방을 구성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42) 강원식, 2000, "러시아연방체제의 구조", 신승권 외, 「현대러시아학」, 한양대출판부, p.44

것은 소비에트시대 아래의 역사적인 유산이었다.

게다가 1992년 이후 러시아연방이 실질적으로 형성되면서 각 구성주체들과 맷은 조약을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 비대칭성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다. 러시아연방 헌법 5조 1항에서는 모든 지역의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⁴³⁾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민족원리’에 의해 구성된 지역의 권한이 강하게 되었다. 특히 공화국은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 위 <그림 3-2>에서 보듯이 89개 행정단위는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주체이지만, 실제적인 권한에서는 위와 같은 위계구조가 존재한다.

이는 연방 중앙과 체결한 조약들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주권을 획득한 공화국과 주 사이의 권한 배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⁴⁴⁾ 영토의 70%를 차지하고 인구의 80%가 ‘행정-영토원리’에 기초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를 지역은 ‘민족원리’에 기초한 공화국보다 더 적은 권한을 부여받았다.⁴⁵⁾

앞서 조약체결과정에서 ‘민족원리’에 기초한 지역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행정-영토원리’에 기초한 지역들의 집단대응이나, 스스로 ‘민족원리’로 형성된 지역과 동등한 공화국으로의 저위상승을 선언했다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러시아연방은 하루빨리 연방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주권선언을 하거나 분리독립을 꾀하던 지역과 먼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조약체결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방의 통합성 유지라는 더 큰 목적 달성과 당시의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러시아연방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지역이었던 따파르스탄공화국과는 조약체결을 통해 재정정책을 조절하였다.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스템, 천도, (석유, 가스)수송관, 수상교통, 통신 등 다른 연방구성주체들과의 조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분야가 따파르스탄과의 권한배분에 관한 조약에서 구

43) 권세온, 2001, “러시아 연방체제의 비대칭성에 대한 고찰”, 홍완석 엮음,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일신사, p.164.

44) 동등한 연방구성주체로서 공화국과 주 사이의 권한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Elazar D.(ed) 1994, *Federal Systems of the World: A Handbook of Federal, Confederational and Autonomy Arrangements*. 2nd Edition.

45) 권세온, 2001, *ibid.*, p.164.

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연방내 주, 벤강주의 조약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대외교류, 즉 외국과의 공식적인 대외경제교류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빠파르스탄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 사하공화국은 해외에 자신의 무역대표부를 개설할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⁴⁶⁾ 이렇듯 민족지역은 행정-영토원리에 기초한 주나 벤강주보다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물론 공화국들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90년대 초반에 공화국들은 국가내 국가로서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지역경제협력체 결성

러시아연방에서의 전환기는 흔히 체제 전환기라 불리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이미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기에 아직 구체제의 특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문제 해결은 항상 그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민족지역의 출현’이 소연방체제, 러시아공화국의 연방체제의 위기와 붕괴에서 발생하였다면, 사회주의경제의 몰락으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들의 노력은 구 경제 지역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0년 초부터 러시아연방에서는 지역경제협력체(*ассоци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the association of economic cooperation*)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지역경제협력체의 결성은 주로 경제적인 목적 — 회원지역간 연대 강화와 대외경제활동의 조정 —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부 협력체는 정치적 목적 — 지역자치 확대, 국가입법기관에서의 활동 조정 —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다.⁴⁷⁾

이러한 경제협력체는 주로 경제지역(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 economic region)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적 범위가 11개 경제지역과 유사하였다. 연합(*association*)은 주로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인 지역단위 — 공화국, 주, 벤강주 등 —로 구성되었지만, 일부 연합에는 러시아 도시연방(*Союз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the Union of*

46) Асимметричная Федерация: взгляд из центра, реалистики областей/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 -2-е изд. -М.:Издательство Института Социологии РАН, 2000. С.144-146.

47) Petrov N. V., Mikheyev S. S., and Smirnyagin I. V., 1993, "Russia's Regional Association in Decline," *Post-Soviet Geography*, Vol.34, No.1, pp.59-66

russian cities)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가장 먼저 결성된 지역연합체는 도시연방으로 1990년 3월 인민대표자대회 선거 후에 결성되었다. 이 연합은 특징상 경제적이 라기보다 정치적이었다.⁴⁸⁾ 경제협력체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나, 8개 지역은 두 개의 경제협력체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들 경제협력체는 주로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협력체별로 활동 내용이 상이하기도 하였다.

총 8개의 경제협력체가 결성되었으며, 일부는 1999년 초까지 활동하였다. 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베리아 협정' 경우, 각 지역의 행정부 및 지역의회 책임자로 구성된 협약위원회(Council of the Agreement)를 최고기관으로 하고,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집행부(Executive Directorate)를 두고 있었다. 1993년에 이르러 '시베리아 협약'은 대외경제, 천연자원 개발, 교통, 범죄, 농업정책, 환경, 원유 및 원유처리 등 경제·사회분야와 입법 및 연방조약 관련문제 등 정치분야의 세부 분야별로 10개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지역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⁴⁹⁾

이들 경제협력체는 연합체간 활동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중앙의 정책에 대해 연합체가 공동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일환으로 1992년 10월 21일 러시아연방 중부지역에 위치한 바로네슈주에서 각 연합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지역간 경제협력체 조정회의'를 설립하였다. 이 조정회의는 1993년 2월 5일 러시아연방 행정부, 그리고 1994년 6월 14일 러시아연방 상원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3년 12월 5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인 보리스 엔친은 러시아연방의 10개 자치구로 형성된 '러시아연방 자치구 연합'(Ассоциация автономных округ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결성을 승인하였다. 이 조정회의의 구성원인 휴코트자치구는 러시아연방 법에 의해 마가단주에서 분리되어 러시아연방에 직접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9개 자치구는 변강주 또는 주에도 속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지녔다. 그리고 '러시아도시연합'(Союз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은 1993년 12월 20일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48) 지역연합체들은 공동의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자발적인 조직이었지만, 일부 연합들은 지방 소비에트지도자들이나 공산당 간부들의 비공식적 만남의 결과였다.(Petrov N.V. et al., 1993:50).

49) Ivankov et. al. 1993; 김성진, 2001: 324 재인용

<표 3-5> 지역경제협력체 결성 상황

연합명	구성 원수	참여지역	결성시기	비 고
북서	11(1)	카렐리야, 고이, 아르헨스크, 몬로고드, 칼리닌그라드, 키로프, 레닌그라드, 무르만스크, 노브고로드, 프스코프, 쟁트-페페르부르크.	1993. 12. 3. (등록)	네네프카자치구 주 후 가입.
중부 러시아	10(2)	브랸스크, 블라디미르, 이바노프, 칼루가, 카스트로마, 모스크바주, 라잔, 스몰렌스크, 트베르, 야라슬라블//칼리닌그라드, 모스크바시	1993. 11. 23. (등록)	
대본가	9(3)	깔라끼야, 모르드바, 마리-엘, 아스트라한, 볼가그라드, 나즈니노브고로드, 사마라, 사라토프, 울리아노프	1991. 6. 10 1993. 12. 24. (공식 등록)	파티스탄, 추바쳅공화국과 빈 자주는 나중에 가 입.
체르노제	6(3)	벨고로드, 바로네슈, 쿠르스크, 려페츠크, 아볼, 향보프//브랸스크, 노브고로드, 둘라	1991. 3. 31 1993. 11. 23. (등록)	
동까프까즈	7(3)	아르케야, 디개스탄, 까바르지노-발카리야, 복오세야찌야, 고라스노다르, 스타브로풀, 흐스토프	1994. 1. 14. (등록)	잉구체피야, 깔의 끼야, 까라창예바- 체르캐시야가 나중 에 가입
대우랄	5(4)	쿠르간, 아렌부恩施, 헤.EventQueue, 스베들로프스크, 친라빈스크//바슈코르토스탄, 우드무르트, 투엔, 고이-페鹜자치구	1991. 6. 9 1994. 1. 20. (등록)	초기 명칭은 러시 아 우랄지역 주간 경제협력체
극동연합	11(2)	부랴찌야, 사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 무르, 캄차트카, 아가안, 사할린, 치타, 유 데인자치주, 츄코트카		초기엔 러시아연방 극동과 바이칼동부 지역의 경제협력체 였음. 아게자치구, 까락 스끼자치구는 나중 에 가입
서베리아 청정	19	알타이, 부랴찌야, 트바, 하카시야/알타이번 강주, 고라스노야르스크, 아르쿠츠크, 케메 로프, 노보시비尔斯크, 울스크, 동스크, 투 엔, 치타/아게부랴온, 타이미르, 우스찌-오 로다, 한티-안시, 예벤크, 아할로-네네쓰끼 자치구	1991. 7. 1	

제4장 부랴찌야공화국의 발전과정과 주권화 과정

1. 공화국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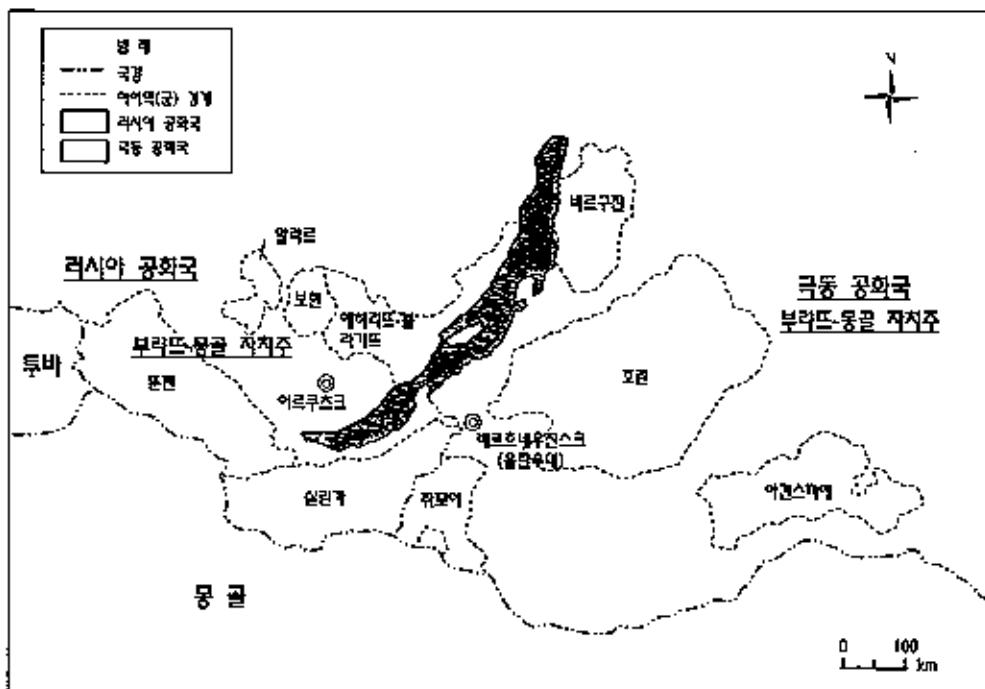
1) 자치공화국 수립(1923년)

17세기 중반 러시아제국에 귀속된 이래 부랴찌야지역은 이르쿠츠크현 자바이칼 주에 속하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이 발생하고, 잇따른 내전으로 부랴뜨민족은 일시적으로 러시아제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내전 후 백군과 간접주의자들이 부랴찌야지역에서 축출되면서 1922년 극동공화국은 러시아공화국에 독립적인 자치공화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부랴뜨민족은 두 개의 자치주로 존재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경계는 바이칼호였으므로, 부랴뜨 민족지역은 러시아공화국과 극동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지도 5>에서 보듯이 바이칼호 서부지역은 러시아공화국 부랴뜨-몽골자치주로 편재되었고, 바이칼 동부지역은 극동공화국 부랴뜨-몽골자치주였다. 알라르, 보한, 에히리뜨-블라가뜨, 푸낀, 실린가 지역과 바로구진, 호리, 아긴스까예, 치꼬이 지역이 각각 러시아공화국과 극동공화국에 속하였다. 현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올란우테(베르흐네우진스크-당시 도시명)는 극동공화국의 영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부랴뜨 민족지역은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러시아공화국과 극동공화국으로 분리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인 1923년 5월 30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ВЦИК) 간부회는 부랴찌야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결의¹⁾를 채택하였다. 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부랴찌야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을 수립하고, 수도를 올란우테에 둔다는 것이 간부회 결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자치공화국의 면적은 현재보다 조금 더 큰 384,837km²이었다.

1) 간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Саниев Г. Л. 1993. С.3-16).

1. 시베리아와 극동의 부랴뜨-몽골 자치주를 하나의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으로 합치고 수도는 베르흐네우진스크(Верхнеудинск)에 둔다.
2.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 하에 8월 1일까지 공화국의 경계를 확정할 특별위원회를 수립 한다.
3. 제 1차 회고회의 소집 전까지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혁명위원회(Ревком)에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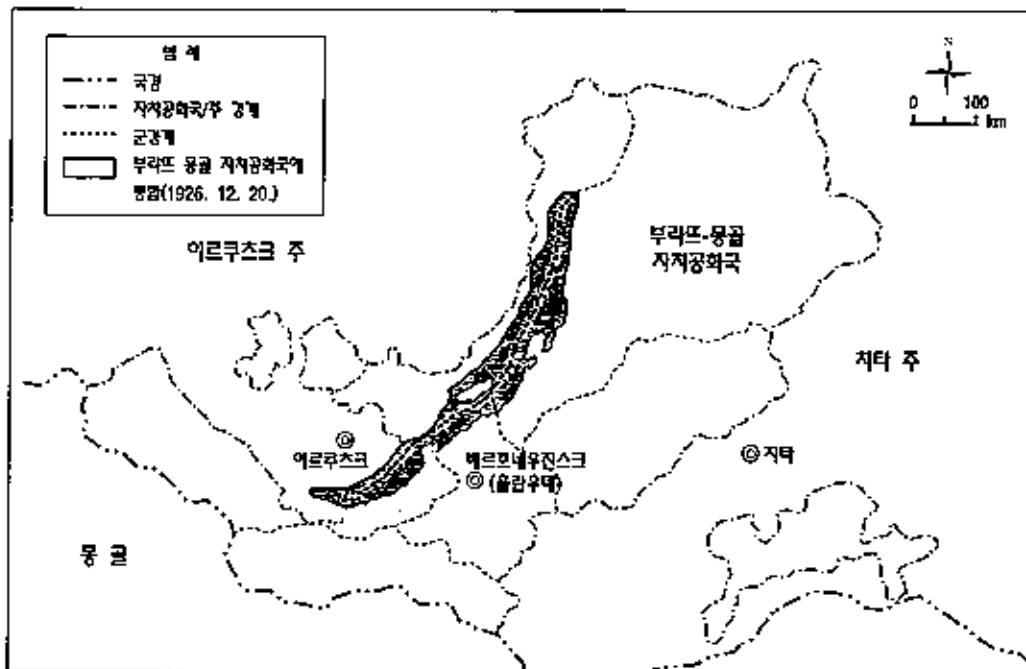
<지도 5> 부랴뜨-몽골 자치주 영토(공화국 수립 전: 1922년)

출처: Елаев А. А. 2000. С.155.

1920년대 초·중반은 러시아공화국이 국가적, 영토적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라 행정구역의 개편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공화국이 수립된 후 약 3년이 지난 1926년 바이칼호 동안(東岸), 현 부랴뜨씨야공화국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까반군이 이르쿠츠크주에서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면서 부랴뜨민족지역은 바야흐로 통합된 단일행정구역으로 존재하게 되었다(<지도 6> 참조).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은 정부공식언어로 러시아어와 부랴뜨-몽골어를 채택하였으며, 소비에트시기의 민족정책의 일환이었던 원주민화(또는 본원적 민주화, коренизация)정책으로 부랴뜨민족이 자치공화국 소비에토의 50.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원주민 중에서 고급 인력들을 미처 양성하지 못하였기에, 행정통치기관의 주요 직책에서 부랴뜨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중 단지 10%만이 부랴뜨민족이었고, 군단위에서는 약 1/3이 부랴뜨민족이었다. 당시 지역 내 199개 소비에트 중에서 러시아어로 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에트가 76개밖에 되지 않았다.²⁾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부랴뜨민족이 러시아제국에 귀속

된 지 250여년이 지났지만, 러시아민족과 문화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부랴뜨민족의 일상적인 생활(언어를 포함하여)에까지는 깊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러시아민족은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부랴뜨민족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군단위의 농촌지역 소비에트에서는 부랴뜨민족의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다.



<지도 6> 민족지역 단일 행정구역 형성-까반군 편입(1926년)

출처: Елаев А. А. 2000. С.187.

2) 민족지역분리(1937년)

2) Санжиеев Г. Л. Образ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с её знач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 70 лет. — Улан-Удэ: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е изд-во. 1993. С.8.

1937년은 소연방의 역사에서 암울한 시기였다. 소연방의 지역과 민족을 봉문하고, 모든 민족과 지역의 역사에서 단절과 질곡의 시기였다. 부랴찌야지역과 부랴뜨민족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체첸과 고려인으로 대변되는 강제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1937년에 부랴뜨민족도 고려인과 동일한 이유로 억압을 받았다. 고려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이주 낭하였다면, 부랴뜨민족은 비록 강제이주의 고통은 겪지 않았지만, 단일한 민족정치조직을 형성해 온 자신들의 민족지역이 3개의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는 고통을 겪었다. 행정구역의 분리·분할로 부랴뜨민족은 통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되었으며, 각각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행정구역개편은 부랴찌야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연방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다른 어떤 지역이나 민족보다 부랴뜨민족에게 더 큰 손상을 끼치게 되었다.

1937년에 소연방은 1930년대 초반에 수립된 7개 행정단위를 14개의 새로운 변강주, 주, 구로 개편하는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였는데,³⁾ 부랴찌야공화국은 1930년대 초반이 아니라 1923년 소연방 형성 부哩에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행정구역개편에 포함되었다. 물론 부랴찌야공화국이 행정구역개편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부랴찌야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동시베리아주를 분할·개편하는 와중에 부랴찌야공화국의 영토도 함께 포함된 것이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소연방 공산당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 1937년 9월 25일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⁴⁾(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은 '동시베리아주를 이르쿠츠크와 치타주로의 분할에 관한'("О разделении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Иркутскую и Читинскую области") 문제를 삼의하고,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ШК ССР)의 이러한 결의 사항을 채택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삼의된 행정구역 개편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⁵⁾

- 동시베리아주를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로 나눈다.
- 다음의 도시와 군을 치타주로 귀속시키며….

3) Известия. 1937년 9월; Елаев А. А. 2000:216에서 제인용

4) 약자로 ЦК ВКП(б) 위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식 표기는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Всесоюзн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большевиков)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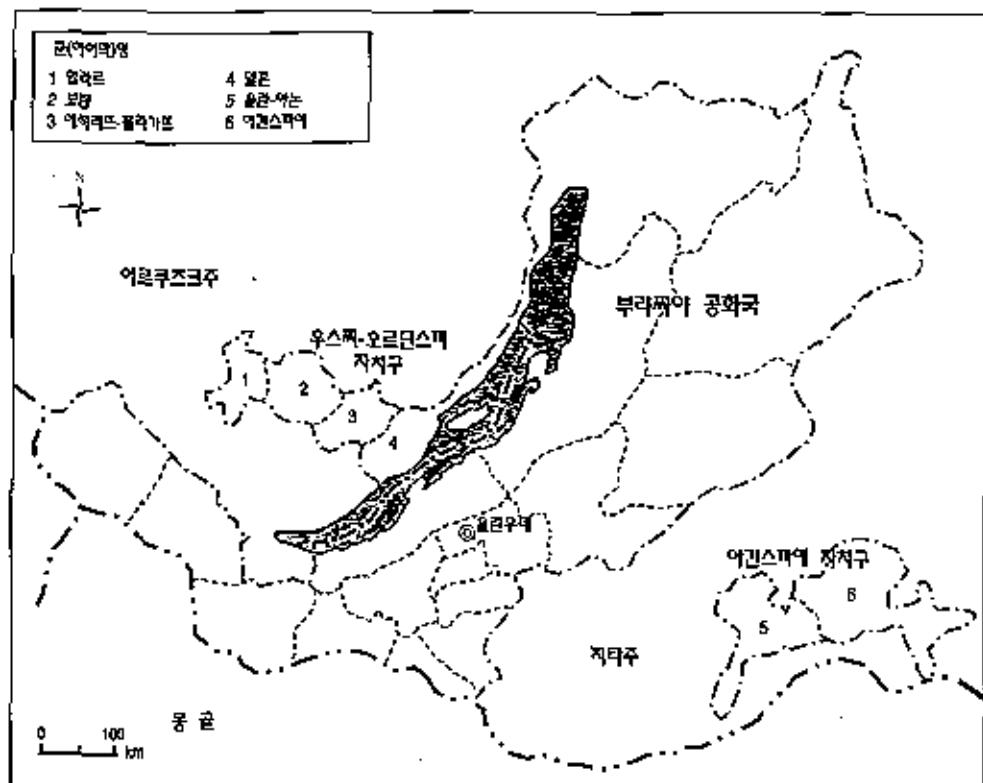
5) РИХДИИ. ф.17. Оп.3. д.992.л.11.; Елаев А. А. 2000:216-217 제인용.

- 독립적인 행정단위인 극동공화국 제이스크주를 폐지하고, 그 주의 도시와 군을 치타주에归属시킨다.
- 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의 아긴스까예와 올란-아논스크 아이막(군, аймак)⁶⁾을 치타주에归属시키며, 아긴스까예를 군소재지로 하고 치타주에 속하는 부랴뜨-몽골 민족구(Агинский Бурят-Монголь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округ)를 수립한다.
- 구 동시베리아주의 나머지 도시와 군들은 이르쿠츠크주에 남겨 둔다.
-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의 알라르, 보한, 에하리뜨-블라가뜨, 알흔 아이막을 이르쿠츠크주에归属시킨다.
- 우스찌-오르딘스끼를 군소재지로 하고 이르쿠츠크주에 속하는 부랴뜨-몽골 민족구를 수립하며, 알라르, 보한, 에하리뜨-블라가뜨 아이막과 까로프스크군의 시리뜨스낀, 이프셰프스크, 까자친스크 농촌소비에트를 새로 수립되는 민족구에 포함시킨다.

'동시베리아주를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로의 분할에 관한' 결의는 1937년 9월 26일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부랴찌야공화국의 정부기관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의 헌법, 특히 제 15장(영토 통합성)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은 1937년 8월 중순 제 7차 소비에트 임시대회에 신헌법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의 영토는 공화국의 동의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⁷⁾ 소연방과 러시아공화국은 민족지역, 즉 자치공화국으로 존재하는 지역에서 명목민족의 자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으며, 자치공화국의 영토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헌법에 반하는 조치들이 중앙에 의해 수시로 발생하였다. 소연방은 자치공화국의 '민족(문화)자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통치 하의 전제정치로 인해 이러한 원리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게 되었다.

6) 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과 산지 암타이 자치주에서 사용하였던 행정구역 단위로서 지위나 규모면에서 소비에트 시설의 라이온(군, район)에 해당된다.

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4. 20. с.3



<지도 7> 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의 영토 분할(1937년 9월)

출처: История Бурятской АССР. 1959.

1937년 9월의 소연방 중앙위원회의 결의와 공화국의 분할은 — 비록 민족이해를 보호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민족정책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당의 민족정책은 새로운 기구와 국가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즉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의 전쟁 위협이 증가하고,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에서 민족형성 과정이 활발해지는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럽 러시아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중앙은 불안감을 느꼈으며, 동부 국경지대, 특히 바이칼 동부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⁸⁾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족조직으로서의 공화국을 약화시키는 부랴뜨-몽골 영토의 분할이었다. 그 다음의 조치가 부랴뜨 민족엘리트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민족발전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이는 인사정책으

8) Еласов А. А. 2000. Бурятский народ: становление, развитие,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М., С.217.

로 이루어졌는데,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공산당 지역위원회의 핵심 직책(서기)에 러시아민족인 이그나찌예프(С. Игнатьев)를 임명하고, 아긴스까예와 우스찌-오르딘스끼 민족구는 치타주와 이르쿠츠크주의 공산당이 확실히 통제하게 하였다.⁹⁾

공화국과 부랴뜨민족을 세 개 행정단위로의 분할은 소연방 공산당의 지속적인 민족정책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부랴뜨-몽골 ‘민족구’를 수립하였다는 것은 행정구역 제도상으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부랴뜨민족의 지위향상, 공식적 가치 보장에 해당되지만 — 물론 이러한 자치 보장도 형식적인 일면에 그쳤지만 — 부랴뜨민족 전체의 민족통합과 발전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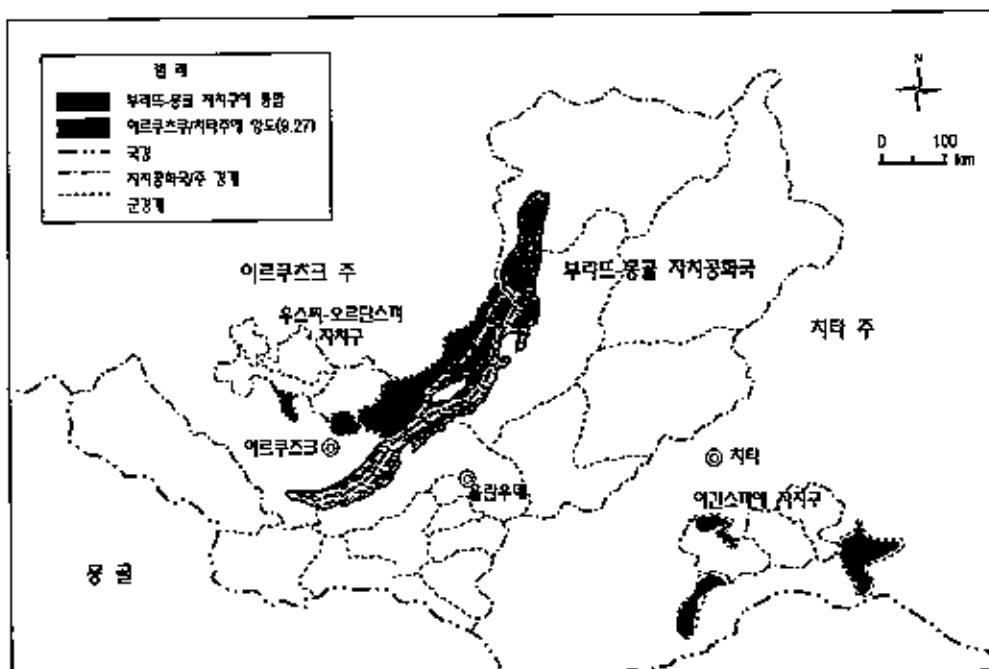
단지 형식적이고 형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광활한 영토를 지닌 행정단위를 세분하여 주민들, 민족구성원들과 보다 친밀한 접촉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분된 행정구역이 민족원리가 아닌 일반 영역원리에 기초한 주(이르쿠츠크주, 치타주)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 일차적인 문제점이었고, 그러한 개편의 와중에 각각 두 개 아이막이 민족구에서 분리되어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에 귀속되었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점이기도 하였다. 민족지역, 민족구에서 완전히 분리된 두 지역은 바이칼호 서안에 위치한 알흔¹⁰⁾ 아이막과 바이칼동부 지역에 위치한 울란-아는 아이막이었다.

왜 소연방 공산당은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는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이는 행정구역 개편의 결과, 부랴뜨 민족지역에서 민족수의 감소를 통해 알 수 있다.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의 분리와 4개 아이막의 이전으로 공화국에서 민족구성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1926-1939년 동안 부랴뜨야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156,900여명이 증가하였지만 (40.3%), 부랴뜨민족의 수는 13,800여명이 감소하였다. 부랴뜨민족영토의 축소와

9) Елаев А. А. 2000. *ibid.*, С.217-218.

10) 바이칼 서안에 위치한 알흔지역은 부랴뜨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바이칼 호수와 시안에 있는 알흔섬은 전세계 샤먼들의 성지로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이들 부랴뜨민족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알흔지역은 부랴뜨민족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알흔군을 부랴뜨민족지역에서 제외하고 일반 행정-영토원리에 기초한 러시아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르쿠츠크주에 귀속되었다는 것은 부랴뜨 민족정신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받아들여졌다.

민족 구성원의 감소로 부랴뜨민족의 약화가 초래된 것이다. 또한 민족지역의 분리와 민족간의 단절로 민족전통과 문화는 각기 독자적인 과정을 겪게 되었다.



<지도 8> 행정구역 재조정(1937년 12월)

출처: Елаев А. А. 2000. с.223.

이렇듯 소연방 당국이 부랴뜨민족의 약화를 추구한 목적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는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난 해가 1937년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1937년은 소연방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이고,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스탈린에 의한 소수민족의 강제이주, 고려인 강제이주가 일어난 해가 1937년이다.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의 분할과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강제이주는 동일한 해에 발생했다는 공통점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언뜻 별개로 보이는 이 두 사건은 단일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며,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단행된 것이었다. 1930년대 만주를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점차 극동과 서베리아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역사적 상황이 강제이주, 행정구역 분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스탈린과 소련 당국은 일본군들이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회유·포섭하여 소련에 반기를 드는 상황을 우려하여,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서 고려인들을 강제이주시켰다. 당시 고려인들은 소연방에서 독자적인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¹¹⁾, 그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안이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방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였다. 그것도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고, 소연방의 안보와 안정에도 별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었다.

부랴찌야지역의 행정구역 개편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만주에서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가던 일본은 중국의 내몽고지역까지 진출함으로써 시베리아의 남부지역에서는 일본과의 잠재적인 전선이 형성되었다. 자신의 뒤 밀까지 다가온 일본도 문제였지만, 그 국경지대에 이민족이 단일거대민족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또한 위협이었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부랴뜨민족(당시에는 부랴뜨-몽골민족으로 인식됨)이 양 세력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할 여지도 있었으며, 안보상황이 취약한 변경지방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해 범몽골민족을 규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부랴뜨민족이 배반이라도 하게 되면, 중앙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혁명이 발발하였을 때, 부랴찌야지역은 이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운동 — 그리 강하지는 않았지만 — 이 발생한 전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소련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단일민족인 부랴뜨민족을 분할하고, 분리된 지역을 러시아민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관할 하에 놓음으로써 일본과의 결탁이나 소련당국에 대한 반기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부랴뜨민족이 ‘범몽골주의’적 민족주의를 부추겼다면 일본과 온밀히 내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러시아민족으로 대표되는 소연방 중앙에게는 부랴뜨민족의 배반 여부 등 실제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단지 연방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에 대한 중앙통제력을 상실하고 싶어하지

11) 소련 당국이 고려인들을 일본인으로 취급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사할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 공식적인 소연방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투표권까지 부여받지 못하였다.

않았을 뿐이며,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민족주의 운동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연방의 체제 안정성을 꾀하고자 합일 뿐이었다. 연방 중앙, 즉 러시아민족에게는 부랴뜨민족이나 몽골이나 일본이나 다 같은 아시아민족이었다. 연방의 통합력을 저해 할지도 모를 민족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토전략’(행정구역 개편, 민족지역의 분리)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는 민족에게 있어 민족지역이 갖는 의미를 짐작케 한다.

3] 공화국명 변경(1958년)

1923년에 수립된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은 1958년에 ‘부랴뜨자치공화국’으로 공화국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1958년 7월 7일 소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 “부랴뜨 민족의 요구와 최고회의 간부회, 공화국 공산당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을 ‘부랴뜨자치공화국’으로 변경한다”는 명령(указ, decree)이 발표되면서였다. 소연방 중앙이 부랴찌야의 공화국명을 변경한 근거는 더 이상 부랴뜨민족은 봉골족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소비에트 발전을 거치면서 원주민인 ‘부랴뜨-몽골민족’이 ‘부랴뜨 사회주의 민족’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실제 이유는 당시 러시아와 중국간에는 국경이 명확하게 획정되지 않았고, 중국은 자신의 국가에 거주하는 민족의 민족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주장하였다. 이에 흐르시초프는 중국의 내몽고지역과 민족적, 역사적 특성을 공유하는 부랴뜨-몽골민족의 민족명에서 몽골을 삭제함으로써 영토분쟁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소연방공화국 간부회의 결의에 앞서 이 문제는 지역에서 먼저 심의되었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심의한 것은 부랴뜨-몽골 문화학술연구소였는데, 공화국명 변경을 위한 심의의 핵심내용은 당시까지 ‘부랴뜨-몽골민족’으로 불렸던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였다. 연구소장에게는 루만체프(Румянцев)와 씨비꼬프(Цибиков)의 두 개의 안이 제출되었다. 루만체프의 안은 “부랴뜨민족은 봉골어 민족에 속하며, 봉골족과 인종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써여 있다. 라쉬드-아드-진의 ‘몽골민족의 비사(秘史)’에는 봉골족은 바이칼근처의

12) Бурятская обла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ПСС. Хроника. Книга вторая. С.96.

바르구진-뚜룸(Баргузин-Тукум)국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다. 17세기 중엽 바이칼동부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되었을 때,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던 몽골로부터 하타긴(хатагины), 아파간(Атаганы), 산풀(сонголы), 사르풀(сартулы), 가반구뜨(габангуты) 등의 몽골 종족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부랴뜨민족이 비록 터키족과 통구스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로 몽골어 민족에 속하였다. 부랴뜨-몽골공화국의 토착민족은 부랴뜨민족으로 불리고, 주로 부랴뜨-몽골민족으로 불린다. 죄비코프도 부랴뜨민족은 17-18세기 몽골에서 이주한 종족으로 몽골족과 인종적, 언어적 공통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¹³⁾

공산당 부랴뜨-몽골 주 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시 제 1서기인 할하로프(А.У. Хахалов)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공화국명 변경 심의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심의에 참가한 연구소의 학자들은 두 안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학자들은 공화국명 변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랴뜨민족의 기원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화국명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58년 3월 20일 공산당 주위원회 사무국회의에서도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서 공화국명 변경을 위한 다음의 두 안은 총즉시시키고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에서 부랴뜨자치공화국으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올바르고 학문적 토대가 있는지 고려해야 하고, 둘째, 제기된 공화국명 변경안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이었다.¹⁴⁾

그러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당시 지역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하물며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설명도 없이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명령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은 ‘부랴뜨자치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4) 주권선언-공화국수립(1990년-)

1980년대 말 소연방 전역에서 민족주의, 분리주의가 발생하고, 1990년 6월 러시아공화국의 주권선언에 뒤이은 러시아연방내 자치공화국들의 ‘주권화 행진’이 벌어지던 시기인 1990년 10월 8일 부랴찌아공화국은 주권선언을 하였다. 부랴찌아공

13) Чоомитдоржнев lld. б. Вернуть название "Бурят-Монголия", "Бурят-Монгол" Нэрье Иэргээхээ. Сост. Д. ист. наук. Улан-Удэ. 1998. с.10.

14) Чоомитдоржнев lld. б. Ibid, 1998. с.9.

화국의 주권선언은 러시아공화국내의 자치공화국에서 소연방을 구성하는 연방공화국으로의 지위 상승을 선언한 것이었지만,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러한 선언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다만 1992년 러시아연방과 조약체결을 통해 주권공화국으로서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되었으며, 1994년 2월 신헌법을 채택하고 그 해 6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부랴찌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2.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화 과정

1) 공화국의 주권선언

[1] 주권선언 과정

① 주권화 행진에 편승

부랴찌야공화국은 언제부터 '주권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는가? 이러한 시점을 부 자르듯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국면과 지형은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정치지형이 형성될 조건이나 맹아들이 그 아전의 지형 속에 내포되어 있다가 정치적 계기를 통해 그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아바예프(Абаев, Т. Н. 2003)는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화 과정이 198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후 소연방과 마찬가지로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다양한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공화국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주권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시점을 1989년으로 보고 있다.¹⁶⁾ 비록 1988년에 민족전선이 형

15) 다그마예프도 1985-1989년 사이에 민족과 민족문화의 부활이 시작된 시기로 보고 있다(Дагбаев Э.Д. Пресса и национ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региона(опыт политологического и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Улан-Удэ. 1995. С.40.).

16) Строганова Е. А. Бурят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возрождение(Конец 80-х —середина

성되었지만 이 조직은 거의 유명무실하였고, 1989년에 들어서 비로소 민족과 민족문화의 부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민족문제와 함께 공화국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우라바나예바(урбанаева М.)를 비롯한 4인의 민족지식인들이 ‘부랴찌야에서의 민족문제’¹⁷⁾를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부랴찌야공화국의 사회·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랴뜨민족이 처한 상황을 극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았다. 부랴찌야지역은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의 측면에서는 러시아연방내에서 그리 뒤지지 않지만, 경제발전이 더디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은 이유는 이러한 자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 배경은 바로 당시의 소비에드 연방체제 하에서는 자치공화국(ASSR)이라는 지위가 지역발전이나 지역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민족문제’의 경우에는 1937년 위현적으로 진행된 부랴찌야지역의 행정구역개편으로 부랴뜨민족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923년 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단일한 ‘부랴뜨 민족지역’을 형성해 왔지만, 1937년 스탈린시대의 위헌적인 행정구역개편으로 부랴뜨민족이 분할·분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족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민족문화의 발전이 더디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9년에 민족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당시 소연방에 팽배하던 민족주의적 경향에 영향을 받아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소연방구성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선언이 잇따르고, 러시아공화국 내에서도 자치공화국들이 주권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부랴찌야지역을 빗겨가지 않았다. 부랴찌야지역의 지식인들에게 이러한 분위기는 부랴찌야공화국도 주권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1990년 6월 12일 러시아연방이 주권선언을 하자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빨빠르게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연방의 주권선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권화 시기’에 부랴찌야공화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부랴찌야자치공화국 최고회의 산하에 ‘러시아연방의 주권선언’을 심의하고 부랴찌야공화국 주권선언의 초

90-х годов XX века,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М.-Иркутск, Наталис, 2001. С.55-56.

17) Урбанаева М., Мухайлов Т., Рандалов Ю.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в Бурятии. Улан-Удэ. 1989.

안을 작성할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이 민족발전과 국가발전의 내적 요구에 의해 ‘주권선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에 불어닥친 독립선언, ‘주권화 행진’에 발빠르게 편승했다는 것은 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원이었던 이코프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 당시 (부랴찌야자치공화국-필자 주) 최고회의에는 단지 두 명의 법률가뿐이어서 입법, 치안, 병무위원회 의장으로 나를 자명했지. 1990년 6월 러시아연방의 주권선언 후에 공화국은 즉시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문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위원회에 일임했지. 이미 6월부터 작업이 완성하게 진행되었어. 처음에는 이러한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몽색하고 관련기구를 조직하는 것이었어.(게르만 이코프의 인터뷰)¹⁸⁾

1980년대 중반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 시작된 소연방의 개혁, 개방정책은 독립선언과 주권선언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연방 중앙의 통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권역누수현상이 심화되었다. ‘떠돌아 다니는’ 권력을 먼저 나서서 좁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부랴찌야공화국도 그러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지만, 이를 준비할 내부적인 자원이 부족하였고, 지역에 몇몇 있는 전문가들을 급조해 주권선언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② 주권선언안 작성위원회 결성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 산하에 조직된 위원회에서는 체일 먼저 지역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법률가와 사회활동가들을 위원회에 영입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주권선언안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주권선언의 일정 등을 준비하였다.

1990년 8월 부랴찌야자치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는 그해 10월에 있을 제 2차 최고회의에 ‘부랴찌야 자치공화국의 주권선언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화국 의회의 상설위원회 의장인 파블로프(Павлов И. Г.)와 부랴뜨 민족지식인인 산쥐예프(Санжиев Г. Л.)의 주도 하에 주권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들

18) Болотов С., Митяпов В. 2003. С.34.

은 이전에 최고회의에서 공모한 9개의 안을 검토하고, 제시된 안들을 바탕으로 주권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주권선언문이 부랴찌야자치공화국 제 2차 최고회의에서 제출되고 채택되기 이전에 미리 간부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③ 주민여론의 수렴

주권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1990년 8월 말에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와 지역인론인 '부랴드 우넨'(Буряад унэн)과 '프라브다 부랴찌야'(Правда Бурятии)의 주최 하에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원탁회의'에는 공화국의 정당, 행정부 및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의 학자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였다.¹⁹⁾

'원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는 '파연 지금 이 상황에서 부랴찌야자치공화국이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당한지',²⁰⁾ 정당하다면 '주권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주권선언문에 담겨야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주권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화국의 국가(정치)·경제·민족·문화주권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 산하에 결성된 위원회에서는 주권선언문을 공모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소연방 구성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하였고, 러시아연방 내 일부 민족지역에서도 주권선언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부랴찌야공화국이 주권선언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주권선언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²¹⁾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 대의원이자 초기에 주권선언안 작성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

19) '원탁회의'에는 당시 부랴찌야자치공화국 공산당 제 1비서인 포타포프(Л. В. Потапов)와 최고회의 부의장인 사르잔(В. В. Саржан), 각료회 부의장 가브마예프(Р. Б. Гармаев), 노동조합 의장인 만주예프(Г. Н. Манжуев) 등 정부 공식부서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부랴찌야 센터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8. 29).

20) 1990년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독립·주권선언으로 소비에트의 통합성이 급격히 약화되는 시기에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이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끓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21) 1990년 8월에는 지역의 사회활동가, 사회원로(전쟁·노동영웅 등) 등 58명이 소련 상원 최고회의에 공화국의 영토를 1937년 이전으로 회복해 줄 것에 관한 문서를 보냈다(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8. 24.)

원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위원회에서 주권선언문에 대해 공모하자 지역내 반응이 상당히 좋았자, 모두 9개의 안들이 제시되었고,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들을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최고 회의 위원들이 심의하도록 제출하였지(게르만 이적코프, 최고회의 의원).²²⁾

부랴찌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권선언을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사회적으로도 주권선언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러시아연방이 주권선언을 한 6월 이후, 특히 주권선언에 대해 삼의한 10월 직전에 지역언론 매체에는 주권선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주도 법률가, 학자, 사회운동단체, 정당 및 민족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중에서 주권선언문의 형태로 언론매체에 발표된 것은 모두 6가지였다.²³⁾

④ 압도적 지지로 주권선언 결정

주권선언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최고회의에 제출된 몇 개의 주권 선언문을 검토한 뒤, 1990년 10월 8일 제 2차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 제 12기 회의에 '부랴찌야공화국 주권에 관한 선언'("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Бурятской АССР")이 정식으로 제출되었다.²⁴⁾

주권선언 채택과 관련하여 부랴찌야공화국 각료회의(*Sовет Министров*)에서 선언 안을 작성하고, 최고회의 간부회에서 심의한 안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최고회의에는 총 169명의 의원 중 140명이 참석하였다. 그들 중 20명 이상이 주권선 언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단상에 나올 만큼, 주권선언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시 러시아뿐만 아니라, 부랴찌야공화국이 당면한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화국에 상당한 독립성(*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independence*)²⁵⁾이 주어져야 하며, 주권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

22) Болотов С., Митыпов В. 2003. с.35.

23) Семенов М. Суверенитет—эт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удьбу республики//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5. 10. 10. с.1-2.

24) 제 2차 최고회의 12기 회기는 1990년 10월 8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주권선언문은 당시 최고회의 의장인 불라예프(С.Н. Булаев)가 제출하였다.

출원 '주권선언문'은 참석의원 140명 중 단 4명만이 기권을 하고, 136명이 찬성할 만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여명의 의원들이 나와 주권선언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파력한 것은 주권선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선언에 담긴 내용에 대해 이견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공화국의 '명칭'에 관한 것이었다.²⁶⁾ 바로 '공화국명'에는 부랴찌야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지역정체성'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이 민족지역이므로 '민족정체성'의 문제까지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주권화 과정은 10월 8일 최고회의에서 '주권선언문'이 채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권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소연방과 러시아연방과의 관계, 그 속에서의 지위와 위상의 문제, 주권공화국으로서 제반의 제도적,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문제 등은 한편으로는 중앙(소련, 러시아연방)과의 관계의 재설정의 문제를 제기했고, 주권공화국으로서의 기틀을 잡는 문제는 내부적인 동의와 합의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

1990년 10월 8일에 부랴찌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Byryat SSR)을 선포한 뒤, 1994년 2월 22일 신헌법을 채택함으로써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화 과정은 장도의 여정을 마쳤다.

[2] 주권선언의 내용

러시아연방의 주권선언문과 공화국의 견사국,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부·랴찌야센터 학자인 산쥐예프(Г. Л. Санжиеев) 박사와 사회단체가 작성한 초안을 참고하여 부랴찌야자치공화국(Бурятская АССР) 각료회의에서 '주권선언안'을 작성하였다. 주권선언문은 전문과 총 15개장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에서는 주권선언의 기본원리와 주권선언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권선언의 내용을 고찰하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주권

25) 그러나 여기서는 소연방 구성공화국처럼 완전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에 가까운 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26) 제기된 안들 중에는 '부랴찌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BCCP), '부랴뜨-몽골 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Бурят-Монгольская АССР), '부랴뜨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БурАССР) 등이 있었다.

선언이 주로 ‘민족지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주권선언에 담긴 내용이 ‘민족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권선언이 흔히 전환기라 일컬어지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점과 결부된다. 주권선언 당시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은 민주화과정에 있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문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주권선언문에는 기존 사회주의시절에 발생했던 계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 민주주의적인 과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가령, 이전에는 모든 권리가 소비에트나 공산당으로부터 나왔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핵심 원리로 하였지만, 주권선언문에서는 3권 분립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민주주의적 측면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으로 여기서는 ‘지역주의적’ 측면과 연계되는 부분만 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주권화과정에서도 지역주의의 핵심 내용인 지역정체성과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만 살피고자 한다.

① 공화국 지위 문제

주권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역의 권한, 연방 내에서의 지위상승의 문제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대외관계에서의 독립성과 대내적인 일에서 지역(공화국)의 법이 최고권위(верховенство, supreme)를 지님을 의미한다.

주권을 선언하기 전까지 부랴찌야공화국은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일원인 러시아공화국의 자치공화국이었다. 비록 소연방 인민대표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한 권한은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정책을 비롯한 세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권한이 지역에 있지 않았다. ‘공화국’이었으므로 물론 현법과 제반 법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종이에 써어진 단순한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 내에서 최고의 권위는 소연방이나 러시아연방의 현법이나 법이었다.

반면에 소연방 구성공화국들은 자신의 영토에서는 공화국의 현법과 법이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 게다가 구성공화국들에겐 연방탈퇴 권한이 있었기에 법적 효력은 실제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었다. 연방 구성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부랴찌야공화국도 오랫동안 ‘명목민족’이 거주해 온 ‘민족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차이는 커다.

따라서 부랴찌야공화국은 주권선언을 통해 기존의 자치공화국(ASSR)에서 연방

공화국(SSR)로 지위 상승을 선언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의 핵심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공화국명에 붙어 있는 ‘자치’(autonomous)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에트시기 민족지역에 부여된 ‘민족(문화)자치’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정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② 연방과의 관계

주권선언을 통한 공화국의 지위상승은 연방체제 내에서의 지위와 연방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공화국에서 러시아연방과 동등한 연방 구성공화국로의 지위상승을 선언함으로써 먼저 러시아연방과의 관계가 제기되었다. 부랴찌야공화국에 앞서 주권선언을 한 따파르스탄공화국은 러시아연방에서 완전탈퇴하며, 러시아연방과 동등한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지위를 지닌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주권선언이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공화국 인구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러시아민족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권선언문에 연방과의 관계를 명시하였다. 선언문의 전문에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에 속하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며…(중략). 부랴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cccp)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법을 인정하는 구성원이며, 또한 러시아연방의 민족-영토와 영토조직의 권리들 존중한다.

선언문의 전문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랴찌야공화국은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문제로 여전히 남는 것이 러시아연방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러시아연방과 동등한 소연방 구성공화국을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은 ‘민족지역’의 주권선언 전에도 다민족국가의 특성이 반영되어 복잡한 연방구조를 지녔는데, 주권선언 후에는 이러한 구조가 더욱 복잡하고 기묘한 연방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부랴찌야공화국은 소연방이나 러시아연방에서 분리독립한 의사가 없음을 명백

히 천명하였지만, 그렇다고 연방가입이나 탈퇴의 권한까지 연방 중앙에 양도한 것은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등 다른 소연방 구성공화국처럼 연방 구성공화국으로서 연방탈퇴의 권한을 새로 지니게 되었다. 주권선언문 제 8 조는 연방 가입과 탈퇴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부랴찌야공화국은 연방과 새로 체결되는 조약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③ 공화국의 성격: 다민족국가

최고회의에서 주권을 선언하기 전까지 지역 내에서는 주권선언문에 담겨야 할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주권선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대부분 ‘공화국의 지위’ 향상에 관한 부분은 모두가 공통으로 제기하였지만, 제안주체들의 사회적 처지나 특성에 따라 강조점이 달랐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작성자의 민족성에 따라 좌우되었다. 부랴드 민족지식인인 산취예프 박사의 안이 정부의 공식적인 ‘주권선언문’에 많이 반영된 것은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전연방차원에서 높아지는 민족주의적 경향, 민족부활은 부랴찌야공화국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였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권선언문의 앞부분에 배치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주권선언문에서 부랴찌야공화국은 다민족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민족성에 상관없이 부랴찌야국민으로서 모두 동등한 권한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권선언문 제 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부랴찌야공화국 주권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민들이 지니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부랴찌야공화국의 헌법과 연방조약의 기초 하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④ 공화국의 권한: 자원소유권

소비에트연방체제는 정치체제의 중앙집권만큼 경제체제의 중앙집권도 강하였다. 흔히 소비에트경제를 일컬을 때 중앙집권경제 또는 명령경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권선언 이전까지 부랴찌야공화국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서 자치권이 거의 없었다. 소비에트 지역정책이 지역에 초점을 둔 지역계획이라기보다 부문정책 중심이었고, 이 계획의 수립, 집행의 책임도 지역보다는 연방중앙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문계획이 지역계획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관리들은 권한이나 기금, 정보 등은 없어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만 지나게 되었다. 지역계획과 정책도 중앙에서 수립되었으므로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²⁷⁾

주권선언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방에 귀속되어 있는 권한과 자원의 소유권 등을 지역이 찾아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의 외부유출이 적고, 그만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유럽러시아를 위한 자원기자의 역할을 했던²⁸⁾ 시베리아지역에서는 쇠퇴하는 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천실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은 주권선언문 10장에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과 영공은 부랴찌야공화국의 자산으로 이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을 지닌다. 모든 형태의 자산과 관련된 법체계는 공화국 최고회의의 사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⑥ 민족관계와 민족문제

부랴찌야공화국은 다민족지역이다. 러시아연방에서 민족으로 과악되는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 지역에도 거주하였다.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주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지역의 주인인 공화국암을 선포하는 ‘주권선언’이지 특정민족의 ‘민족자결선언’이 아니었기에, 민족문제도 주권선언 내용 중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소련과 러시아연방이 안고 있는 민족문제, 민족갈등이 주권선언을 통해 지역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선언문에는 이와 관련하여 민족성에 관계없이 그 권리 를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6장에서 언급하였다.

27) Kirkow, Peter, 1997, pp.23-45.

28) 커코우(Kirkow P. 1997:23)는 소비에트 지역정책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지역계획에서 부문(branch)계획의 우선과 강조이며, 둘째, 지방예산에서 독자적인 수입 규모가 작고, 셋째, 유럽지역과 시베리아지역간 농신-주변부 관계이다. 즉 시베리아지역은 유럽지역을 위한 자원공급기자의 역할을 하였다.

소연방내에 자신들의 민족정부를 갖고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민족지역을 떠나 부랴찌야공화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ethnic),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주권선언문에 제 민족들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민족갈등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부랴찌야공화국은 다민족지역임과 동시에 ‘명복민족지역’이라는 것이다. 즉, 부랴뜨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이다. 앞서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랴찌야의 민족문제’에서도 부랴뜨민족의 억압과 쇠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주권선언문에 부랴뜨민족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부랴뜨어 문제를 포함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은 국가와 사회적 삶에서 부랴뜨어의 발전과 사용 및 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민족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제 11장).

2) 주권선언의 배경 및 목적

(1) 주권선언의 배경

당시의 동치메커니즘은 지역의 경제안정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보장할 수 없는 체제였다. 소비에트체제는 연방구성공화국간에는 평등을, 자치공화국에는 ‘자치’를 부여한다고 ‘평문화’하였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체제보다도 중앙집권적인 체제였다. 이를 경제정책, 경제메커니즘의 측면에 한정에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지역들로 하여금 ‘주권쟁취’에 대한 의욕을 더욱 부추겼다.

① 민족지역성 회복-민족자결권 획득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은 지역 자체에서 ‘주권국가 수립’에 대한 요구가 정치, 사회, 역사적으로 성숙되어 나타났다기보다는 당시 소연방을 휩쓸었던 ‘주권화 행진’에 ‘무임승차’한 측면이 더 강하다.

주권선언의 과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권선언을 통해 지역에서 언고자 하는 목적까지 단지 외부에서 주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의 ‘정당성’은 이미 소비에트 형성과정에서부터 존재하였다. 봉세비키는 1917년 11월 러시아혁명(10월 혁명)을 완성하고 소비에트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히 민족지역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1917년 11월 15일 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민족정책이 마련되었다. 대회에서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기본원리로 ‘러시아민족권리선언’(Декларация прав народов России)을 채택하였다. 이 원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러시아 제 민족들의 평등과 자주성, 둘째, 민족은 독립국가를 형성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자결권을 지닌다. 셋째, 모든 민족이나 민족종교의 특권과 제한을 철폐하고, 넷째, 러시아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나 종족집단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민족자결권’에 의해 민족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은 이미 주권선언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경제자립을 위한 권한 전무

이러한 기본 자격에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을 촉진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지역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화국 재정부 안으로 작성된 선언문²⁹⁾을 보면, 무엇보다도 자치공화국으로서 지니는 권한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난다. 거의 전무한 권한으로는 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 재정부 주권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국면에서 소비에트연방의 구성주체로서 자치공화국의 국가적 지위는 권리와 권한(полномочия, authority)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할 수가 없으며,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략)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위한 어려와 의지를 반영하여 자치공화국의 자위를 기우하며, 부랴찌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ECC

29) 재정부의 주권선언안은 1990년 10월 8일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주권선언문을 채택하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발표된 몇 가지 안 중의 하나이다.

권)을 선언한다.³⁰⁾

자치공화국에 주어지는 권한이 국히 적었고, 대부분은 소연방이나 러시아연방에 그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각 지역들은 지역내 존재하는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 부랴찌야공화국에는 26개의 중앙 부서와 기관소속으로 독자적인 예산을 지닌 200개의 기업이 존재하였다.

상품교역에서도 지역은 권한이 거의 없는 수동적인 존재였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상품구매가격은 지역에서 생산해서 파는 물품판매가격의 1.5배에 달하였다. 예를 들어, 부랴찌야공화국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것보다 더 비싼 최종재를 수입하였다. 유럽러시아 지역을 위한 자원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의 경제-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에서는 부문간 연계가 거의 신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은 타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반 이상이 수출되었다. 게다가 바이칼-아무르철도 건설 산업이 한창이었기에 원료, 금속, 기계, 설비 등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랴찌야공화국은 더더욱 소비 지역이 되었다.³¹⁾ 그러나 이러한 경제-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상품의 교역조건, 또는 연방차원의 분업구조에서 지역 경제활동의 기여도가 정확하게만 측정된다면 그나마 문제는 덜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여도를 측정할만한 안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예산증가율을 지역수입률을 따라가지 못했다.³²⁾ 이러한 권한의 문제와 경제-산업구조의 특성이 주권선언을 더욱 절실하게 한 원인이었다.

③ 연방 구성공화국과의 권한 격차 심화

개혁·개방 이후 사회는 점차 경제자립과 재정자립의 방향으로 변해하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주화과정과 함께 사회적, 지역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립정책'이 시행되었다. 1989년에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권리와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주권과 자치, 자립재정의 확대에 기초한 경제·사회부분의 지도방침의 개혁 원칙"³³⁾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그것이다. 연방 구성공화국은 독자

3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9. 16. с.4

31) Урбанаева и др. 1989. с.14.

32) Ibid. с.15.

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른바 '자립정책'이 소연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은 '자치공화국'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통치체제는 중앙의 관청이나 기관에 사회경제적 발전방향을 배타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와 재정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이는 중앙 관청이 사회적 자산을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에서 파생되는 실질적인 권력이었다. 또한 '재정자립'의 경우에도 소연방 또는 러시아연방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윤이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이전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경우에 소연방이나 러시아연방에 속해 있는 기업, 관청들에 대한 세금 과세율이 1-15% 정도였는데, 이 과세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³⁴⁾

(2) 주권선언의 목적

① 경제주권의 취득

부랴찌야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한 가장 큰 목적은 경제주권을 담성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주권이라는 개념을 경제주권, 정치주권, 문화주권으로 구분한다는 자체가 역설적일 수 있으나, 1980년대 후반에 소연방은 민주화와 문권화과정을 겪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적 영역에 걸쳐 일괄적으로 진행된 개혁, 개방이 아니라, 부문별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주권에 대한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당시의 지역경제상황의 어려움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랴찌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러시아연방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1인당 주거면적이 러시아평균보다 3㎡나 작고, 물품생산량은 러시아연방에서 62번째였다. 비생산부문에서의 1인당 저축액은 러시아 평균보다 16%정도 적고 발틱공화국에 비해서는 반 밖에 되지 않았

33) "Общих принципов перестройки руководства экономи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ой в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ах на основе расширения их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сам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34)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7. 8. c.2

다.³⁵⁾

이러한 경제상황은 부랴찌야공화국의 1인당 주민소득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표 4-1> 참조). 1인당 소득은 러시아연방에 비해 낮은데 반해서 생필품 구입의 가격은 연방 평균보다 높았다.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엉겔지수로 부랴찌야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의 열악함은 더욱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 1인당 소득과 주요식료품가격과의 상관관계(당해년도 12월 기준)

단위: 루블, (%)

	1992		1993	
	1인당 소득	19개 생필품 가격 ^a	1인당 소득	19개 생필품 가격
러시아연방	11,121	4,373(39) ^b	116,325	30,724(26)
부랴찌야공화국	8,250	4,710(57)	92,164	34,232(37)

주: 1) 식료품가격은 공화국, 주, 면강주 등의 수도의 가격임.

2) 괄호안의 %는 소득대비 주요식료품 가격 비중임(엉겔지수).

출처: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1994. с.510-512.

주권선언을 자지한 사람들은 경제주권을 실현하면 부랴찌야공화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지역의 잠재력, 즉 자원, 목재, 모피, 금 등 지하자원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³⁶⁾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권선언 당시 부랴찌야공화국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모든 정책결정이 연방 행정부나 관청에 종속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지역의 주요산업의 연방종속성은 더욱 심각하였다. 주권선언 후 초대 부랴찌야공화국 부총리의 말은 이러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방소유의 부서와 관청 중에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했던 곳은 주로 삼림, 모피와 광물을 조달하는 일을 맡은 부서와 관청이다. 부랴찌야공화국에는 삼림, 석탄, 텅스텐,

35)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7. 8. с.2

36) Хонктуев О. В. 1996. с.77-78.

금, 구리, 납, 석면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일년에 지역에서 4.5백만t의 삼림을 벌채하고, 4백만 톤의 석탄을 채굴한다. 그러나 얼마를 벌목하고, 얼마를 채굴하며, 어디로 운송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중앙이 지휘한다. 지금껏 우리는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에 간청을 해야만 했고, 이 풍부한 자원을 어디에 팔 생각을 끊어 꾸지 못했다.

제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 공장과 산업복합체 등이 많이 있지만 이 중 95%는 중앙이 관리했고, 본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비재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전체적으로 1인당 1,290루블의 물품이 생산된다면,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단자 622루블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경제자립에 대한 지향을 강화시킨 원인이다.(아갈로프(В. Агалов), 부랴찌야공화국 부총리)③7)

경제주권의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친연자원의 소유권 문제는 지역특성에 걸맞는 사회·경제 및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다양한 형태의 경제발전의 문제, 대외경제관계의 독립성 및 직접적인 대외경제활동을 행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고회의에서 채택한 주권선언문의 10장에는 연방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의 제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공화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② 민족과 민족문화의 발전

'민족원리'에 기초한 행정구역인 자치공화국의 주권선언은 자연스럽게 민족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자치공화국은 연방 내 비러시아계 민족의 거주지역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 민족에게 인정정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연방 체제, 러시아연방의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존재했던 70년간은 비러시아민족에게는 민족정신, 민족문화의 쇠퇴이자 민족자체의 존립의 위기로 느꼈다. 70여년간 진행된 소비에트화, 러시아화속에서 자신의 민족성, 민족적 정치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랴찌야공화국에서 주권선언이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되었던 '부랴찌야에서의 민족문제'라는 문건은 주권선언의 일차적인 필요성을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의 억압·쇠퇴를 막고 민족발전을 이루는 데서 찾고 있다. 문건의

3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1.

저자인 부랴뜨민족지식인들은 부랴찌아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되는 역사, 소비에트화·러시아화 과정 및 결정적으로는 1937년 스탈린 시대 진행된 위헌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부랴뜨민족이 쇠퇴하였다고 보고 있다. 부랴뜨민족의 자결권, 주권의 획득은 쇠퇴하는 부랴뜨민족과 민족문화를 다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주권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랴뜨민족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에 부랴뜨민족 문제에 관한 언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주권선언문의 제 11장은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부랴찌야공화국은 국가와 사회적 삶에서 부랴뜨어의 발전과 사용 및 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민족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

언어는 민족의 유지·발전과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이지만, 부랴뜨어의 발전은 부랴뜨 민족발전의 내용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 주권선언 전 부랴뜨 원로들이 소연방에 보낸 서한에서도 부랴뜨민족 쇠퇴의 핵심원인을 1937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고 있고, 분리된 3개 부랴뜨지역의 통합이 부랴뜨민족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권선언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고, 단지 1975년 공교육에서 사라졌던 부랴뜨어를 국가와 사회적 삶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부랴찌아지역의 원주민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다민족사회의 지역 특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민족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선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부랴뜨어를 강조했을 뿐이다.

3) 주권선언에 대한 입장

[1] 주권선언에 대한 찬성과 높은 관심

부랴찌야공화국은 따파르스탄, 꼬미, 까렐리아, 샤하-야꾸찌야공화국에 이어 러시아연방에서는 여섯번째로 주권선언을 하였다. 이미 소연방 구성공화국에서 주권

선언을 하였고, 러시아연방 내 다른 민족지역, 그 중에서도 자치공화국들은 대부분 주권선언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었기에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주권선언, 주권화가 당연하며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1990년 6월 러시아연방이 주권선언을 한 뒤, 이를 심의하고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공화국 최고회의 산하에 조직된 위원회의 활동에 사회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주권선언에 대한 사회적이나 관심은 높았다.

주권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원 중의 한 명이 안드레이 울림퀴에프(Андрей Ульимкиев)였는데 그와 함께 사회단체나 학자들과 함께 공동활동을 했고, 주권선언문에 관해 공모를 했지. 반응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이었어. 총 9개의 안들이 제출되었어. 이중에서 하나의 안을 수정보완하여 의원들이 심의하도록 제출하였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주권선언문의 채택과정에서 여실히 반영되었다. 1990년 10월 8일 제 2차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에서 공화국 각료회의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 참석인원 140명 중 136명이 찬성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이는 앞서 주권선언의 배경과 목적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부랴찌야공화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였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전무하였던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주권의 획득은 지역발전을 위한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2) 주권선언 반대

① 분리주의와 러시아연방해체에 대한 우려

모든 사람들이 주권선언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최고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하였는데, 이는 주권선언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표시라고 할 수 있다. 혹 주권선언이 당시 소연방을 훨쓸고 있는 분리·독립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발트 3국을 필두로 분리독립운동이 고양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민족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연방 내 자치공화국들의 주권선언열풍이 러시아연방의 해체로도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때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선언이 민족지역에서 '명목민족'이 부각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록 부랴뜨민족이 대대로 거주해온 땅이지만, 지역주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민족에게는 지역의 주인에서 '객'으로 처지가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② 경제자립에 대한 회의

주권선언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경제자립, 경제주권의 획득이었지만,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주권선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랴찌야공화국이 과연 경제주권을 실현할 만한 내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중앙의 재정 지원 없이 과연 독자적으로 지역을 유지·운영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이 한창 주권선언문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한 일간지에 경제적인 이유로 주권선언을 반대한다는 독자투고가 있었다. 제목도 '우리는 주권과 함께 무엇을 기다리는가?'처럼, 경제주권의 실현은 이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포만감은 주지만, 실제 손에 펼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주권을 획득한다면 산림과 자원에 대한 차분권 등을 얻을 수 있고, 바이칼로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선언의 이면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파블로프(Павлов)에 의하면, (공화국의) 예산 부족액은 2억루블에 달하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공화국이 교부금(дотации)을 지원하는 데 이 자금은 소련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주권을 획득하면 공화국의 예산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것인가? 그러나 은행이 러시아정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부족액에 대한 대안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현재 공화국내에 존재하는 소련 소속의 기업들이 공화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이른다. 이들마저 세금납부를 기절하면, 유일한 대안은 공화국 소속의 기업들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치극히 작다. 결국 주권선언은 재정 지원의 중단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공화국은 주권화를 통해 노지와 주택 등의 소유와 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 절과 토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지역의 공공부자금이 증가할 것이고, 관광산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현재 열악한 관광인프라를 개발할 자금을 지역내에서는 조달할 수 없다. 결국 허울좋은 주권을 얻을 수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러시아공화국이나 소련에 제정적으

로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주권화에 반대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경제를 회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주권화는 좀더 기다려야 한다(유르핀(K. Дорожин), 울란우테 거주자)

재정자립도가 낮아 연방지원금을 받는 낙후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이 경제주권을 달성하고 연방지원금이 중단되면 지역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다. 게다가 연방소유 기업들이 지역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시 45%나 달했는데 연방기업으로부터의 지원과 세금납부가 줄어들면 더더욱 어려운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당시 소연방과 러시아연방 소유기업, 관청, 기관 등의 소유권 문제는 연방과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언은 해 놓았지만, 이것이 부랴찌야공화국의 의도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³⁸⁾ 결국 번약한 재정기반으로 인해 주권선언이 역으로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주권선언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권화과정은 단지 선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연방국가를 표방하였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소연방, 러시아연방에서 주권화는 일차적으로 연방중앙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했고,³⁹⁾ 다음으로는 주권선언의 각론에 대한 지역주민(공화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했다. 여기서는 주권선언의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의견은 주권선언의 전문과 15장에 걸쳐 적시된 내용에 대한 의견임과 동시에 주권선언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다. 이러한 과정은 부랴찌야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는 지역정체성의 문제와도 밀접히 결부되는 것이고,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민족정체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간략히 크게 이슈

38) 주권선언 5주년 기념으로 한 부랴찌야공화국 고위관리(미하일 시미노프, Михаил Семёнов) 와의 인터뷰 기사에 보면 이러한 우려는 이후 현실로 그대로 드러났다. “주권선언을 한 뒤 5년이 지난 후에, 부랴찌야공화국은 많은 것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친연자원과 기타 자원들의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직전에 연방과 ‘권한배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기로 하였다(Бурятия, 1995. 10. 10. C.1-2).

39) 첫 번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부랴찌야공화국은 주권화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연방과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주권선언 당시에 제기되었던 소유권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 되었던 문제들만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① 공화국명 문제

공화국명은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을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누구의 어떤 국가냐는 것이다. 주권선언은 공화국의 지위상승 선언이다. 러시아연방 내 자치공화국의 지위에서 러시아연방과 동등한 소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으로 지위를 높인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공화국명에 들어 있는 '자치(autonomous)'라는 명칭은 자연스럽게 삭제되는 것이다. 부랴찌야공화국은 주권선언문의 전문에서 공화국명을 '부랴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임을 선포하였다. 주권선언문에는 당시 소비에트 사회의 체제변화, 민주화와 지역의 주권획득이라는 것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문제의 극복, 민족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얹힌 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권선언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이념과 원리가 포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랴찌야공화국은 아직 '소비에트', '사회주의'체계의 유지를 선언하였다. 이는 주권선언의 핵심적인 목적이 전문과 각 장에서 서술한 항목의 수와 관계없이 소연방 구성주체로서의 지위상승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 개혁주의자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화국명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부랴뜨'라는 문제였다. 왜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민족의 이름이 사용되느냐에서부터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바꾸는 측면에서 1958년전까지 유지되었던 '부랴뜨-몽골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민족의 경우에는 특정민족명이 공화국명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제기하였고, 부랴뜨민족 층에는 민족정체성을 몽골민족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② 연방 중앙과의 관계: 소연방, 러시아연방

과연 주권선언을 통해 부랴찌야공화국이 연방체제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소연방을 구성하는 다른 공화국이나 러시아연방 내 다른 지역과는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의 문제는 주권선언에 대한 찬반 여부와도 결부되었다.

공화국명에서 드러나듯 부랴찌야공화국은 명확하게 소연방 구성공화국으로 자선을 규정하였다. 자차공화국임으로 인해 얻지 못하던 권한과 권리로 소연방 구성공화국이 됨으로써 그것을 획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다. 주권선언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다 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기존에 러시아연방 산하의 자치공화국이었는데, 주권선언을 하게 되면 러시아연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였다. 주권선언은 연방구성원으로서의 등등한 지위를 갖게 될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주권선언이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주권선언문의 전문에는 “부랴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법을 인정하는 구성원이며, 또한 러시아연방의 민족·영토와 영토조직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선언 이후에도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특히, 러시아연방의 명목민족인 러시아민족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이들은 이미 발틱 3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에 대한 역차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미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③ 부랴뜨 민족지역의 통합 문제

부랴뜨민족의 부활과 발전을 원하는 이들에게 부랴뜨 민족지역의 통합문제는 절실한 문제였다. 단일한 민족지역이 각각 3개의 별도 행정구역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부랴뜨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고, 도시화로 인해 부랴뜨어와 부랴뜨문화가 점차 쇠퇴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랴뜨민족발전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민족통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였다. 더구나 이러한 행정구역의 분리가 스탈린시대 위헌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명분이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통합문제는 복잡한 문제였다. 이미 2개 부랴뜨자치구는 각각 이르쿠츠크와 치타주에 속해 있기에 한편으로는 지역간 문제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랴뜨 민족지역의 통합은 부랴뜨민족주의의 부활로도 인식되었기에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비부랴뜨민족과의 민족갈등이나 긴장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4) 소결

부랴찌야공화국에서 주권선언은 당시 지역의 정치, 경제적 폭발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대 말 1990년 초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 자체적인 내적 동력이 작용한 것이라기보다 러시아연방 또는 소련 내에서 일어났던 변화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

공화국의 중추세력인 지배엘리트들은 정치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투쟁에서 이데올로기적, 민족적 특징에 의 형성된 것이다. 정치적 지배를 위한 투쟁에 있어 모든 장애물과 도덕적 제한이 사라진 당시의 정치에서 정당제도의 쇠퇴는 민족성에 따라 지배엘리트들의 경계를 지우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민족지향의 권력집단의 투쟁은 일시적으로 민족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지금껏 평온한 상태였던 민족관계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다.

주권선언에 대해 중앙(소연방과 러시아연방)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주권선언을 인정한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당시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이었던 엘친은 단지 ‘모든 민족은 주권을 자닌다’라는 말만 수차례에 언급하였을 뿐이다.

제5장 민족부활-민족답론의 대두

1980년대 후반에 소연방지역을 휩쓴 분리독립과 러시아연방내 지역들의 '주권화 행진'은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들이 각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은 존립의 위협에 직면하고 연방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력을 심각하게 해손당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연방체제를 유지하고 '갑자기 불이터친' 열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요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었다.¹⁾ 게다가 체제변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더 많은 경제적 권한을 얻기 위해 수립된 '지역경제협력체' 등 소비에트의 정치, 경제는 소연방 공산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 지역소비에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출현' 외에도 '민족의 부활'을 전환기 러시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민족의 부활'은 고르바초프에 의해 진행된 개혁·개방 정책과 분리독립, '주권화 행진'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났다.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정책은 소연방 내 제민족들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에트민족·국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개별 민족집단의 민족성은 그리 중요한 문제도 변수도 아니었다. 소연방 공산당과 소비에트들은 끊임없이 '소비에트민족'의 발전을 과장, 선전해 왔지만, 개방정책으로 인해 공개되는 각종 문서는 소비에트 발전 과정, '소비에트 민족화'는 다름 아니라, '러시아화', '러시아 민족화'였으며, 개별 민족집단들에게는 민족억압과 쇠퇴의 과정이었음을 반증하였다. 소비에트 시기 사회주의의 원리인 '국제주의 internationalization'와 민족자결

1) 물론 이러한 과정은 상황을 아주 단순화시킨 것으로서 소연방차원의 분권화는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령 러시아연방의 경우에 1990년대 초반에 지역으로 갑자기 권력이 이동하게 된 측면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의 권력투쟁의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고르바초프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던 자유주의자 엘친은 소연방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의 힘을 빌려야 했다. 지역에 그만큼의 권력을 주면서 자신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것이다. '권력의 주고받기'인 것이다. 엘친은 비록 '시민혁명'을 통해 초대 러시아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공산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와의 갈등과 권력투쟁에서 성숙하지 않은 시민사회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우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과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에 바탕을 두고 민족우에와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족적 특장과 색채가 퇴색되었다. 때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민족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결과였다. 단적인 예로 스탈린에 의해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에 진행된 강제이주와 민족지역의 철폐²⁾는 말할 것도 없으며,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통해 민족지역으로 러시아민족이나 유럽민족들을 이주 시킴으로써 민족지역내 '소수민족'의 비중이 감소하고³⁾ 민족문화가 소외하게 되었다. 글라스노스씨는 민족지역의 명목민족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장에서는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민족의 부활'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발생하였고, '민족부활'은 다민족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민족정치과정'(the processes of ethnic politics)에 대해 보고자 한다.

1. 민족의식의 자각과 형성

민족의식이란 특정 민족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공동체의 존재와 함께 한다. 민족 또는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민족성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도 가능하지만, 타민족과 구별되는 자민족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강조·발전시킴으로써도 가능하다. 민족간 구별을 가능케 하고, 민족의식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민족적 정표로 언어, 영토, 종교 등이 주로 사용된다.⁴⁾

민족의식은 내부적으로는 민족간의 동질감이나 일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때로는 민족간 갈등이나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1980년대

2) 민족지구 철폐의 대표적인 예로 1940년대 초반 블가강 유역에 존재했던 독일인자치구의 철폐를 들 수 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소련지역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자 스탈린은 소련방내 독일인들이 파시스트에 협력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독일인자치구를 철폐하고 이들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등지로 장례 이주시켰다.

3) 발틱 3국은 1940년대에 소련방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러시아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다.

4) Хотинец В.Ю. Этническ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 СПб.: Алетейя, 2000. С.55.

후반 소련방공화국에서 영토를 둘러싼 민족간 갈등의 발생5)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민족적 인체감은 민족적 동일시(ethnic identification)과정을 통해 형성된 민족의식에 기반한다. 민족과 민족성은 언어, 영토 등의 민족적 징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민족과 민족집단을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민족의식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의식은 서로 같다는 민족적 동질감이 동반될 때라야만 형성되는 것이다.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이 자연적 산물이라기보다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인 것과 마찬가지로,⁶⁾ 민족의식도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민족부활'은 민족의식의 자각과 함께 시작되었다.⁷⁾ 민족의식은 자신이 어떤 민족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민족성을 지닌다는 의식이다. 민족의식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여 이때 민족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물론 소비에트 서절에도 민족은 존재하였으며, 10년 정도에 한 번씩 진행된 인구조사⁸⁾에서 통계적 의미만

-
- 5) 대표적인 예로 1987년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민족의 거주지인 나고르나 - 카라바흐 자치주와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아르메니아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러시아연방에서는 잉구세찌야와 북오케찌야간의 영토분쟁이 발생하였다.
 - 6) 민족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논의는 엔더슨(1983), 이강원(2000) 등의 논문을 참고.
 - 7) 민족 또는 민족성의 부활은 자신의 역사,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을 언급·강조하는 민족지향(nation-oriented)을 의미한다. 20세기 말 부랴뜨민족부활의 움직임은 부랴뜨민족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경향은 아니었다. 이미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민족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부랴찌야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될 때부터 그 후 2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부족으로 간주되었던 부랴뜨민족이 독자적인 민족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것이다. 당시 민족형성을 주도한 집단은 인텔리겐차였다. 그러나, 그들은 혈통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기반한 부랴뜨민족 형성, 부랴뜨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제국, 러시아민족과의 보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민족형성을 추구하였다. 동양적 특성을 버리고 서구문화에 편승하고, 현연부족관계의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것이 그들 주장의 핵심이었다.(Бильтрикова A. B. 2001:31-40)
 - 8) 1970년대 말까지 소련에서는 소수민족이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의 형성은 미국과 달리 소수민족지역을 점령하고 학살함으로써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연방제 형태로 발전하였고, 소비에트시절 인테르나트(интернат-기숙학교) 등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소수민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기에 민족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79년에 실시된 소연방차원의 인구조사는 이들의 예상이나 바램과 달리 소수민족들이 급격히 쇠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비에트시절 민족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바로 이 시점 이후이며, 내부적으로 민

지널 뿐이었다. 민족의 식별은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절에는 민족성이 사회·정치적 삶에서 그리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았으며,⁹⁾ 이러한 민족의 구분이 민족의식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연방은 형식적으로는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였으며, 연방공화국과 자치공화국 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인정하는 민족원리가 연방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였지만, 소비에트 운영에서 민족변수보다 계급변수가 더 큰 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소수 민족들은 민족의식의 강화·발전은 곧 정치적 억압과 박해를 동반한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민족의식의 성장과 민족주의가 대두되었을 때는 두 말 할 나위도 없었으며,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성장이 예견되었을 때도 억압이 가해졌다. 1930-40년대 스탈린의 폭정으로 대변되는 강제이주는 말할 것도 없고, 2차 대전이 반발하기 전 외세의 영향력이 미치는 변경지역에서 소연방의 통합을 저해하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박해와 억압이 자행되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경우에도 1930년대 후반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내몽고와 시베리아남부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부랴뜨 민족인 텔리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자행되었다.

글라스노스트의 시행으로 드러난 소비에트와 민족발전의 역사는 '소비에트 국민·민족'이 더 이상 국민들을 통합할 수 없는 단순한 의제적 담론임을 보여주었다. 민족이 거주해 온 민족지역을 기반으로 협통적 특성에 따라 제 민족들은 민족의식을 강화,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족의 시대'라고 할 만큼 민족의식의 자라는 부랴찌야공화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 소연방의 민족지역에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변수로 대두되었다.

1) 민족의식 자각의 배경

(1) 민족지역의 부각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 9) 소비에트 70여년 농악 사회·정치적 삶에서 민족성이 중요하게 고려된 적도 있었다. 소연방 건설 초기 '본원적 민주화(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이 시행될 때였다. 소비에트 구성과 주요 정책에 원주민을 중용하거나 우대하였다.

지역 내부에서 차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외부의 사회적 변화에 '무임승차'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부활' 과정도 주권선언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연방공화국 차원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족의식의 성장하고 민족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러시아연방내 민족지역에서는 이보다 다소 늦은 1980년대 말부터 '민족변수'가 본격적인 문제가 되었다.

소연방차원에서 형성된 정치지형, 즉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즉자적으로 민족의식을 형성하고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분리독립과 '주권화의 행진'은 민족지역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들의 연방인 소연방은 달리 표현하면, '민족공화국의 연방'이라 할 수 있다. 소연방을 구성하는 연방공화국들 — 카자흐스탄공화국을 제외하고 — 에서 공화국의 이름을 형성하는 명목민족은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 구성공화국들의 독립·주권선언은 정치적 독립이나 연방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언이었지만, 명목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지역의 독립·주권선언이었으며, 이 과정을 명목민족이 주도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민족문제와 연관이 되었다. 게다가 주권선언은 1910년대 레닌의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민족주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선언이었으므로 민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다.

부랴찌야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의식의 성장은 주권선언과 함께 이루어졌다. 비러시아민족인 부랴뜨민족과 에벤크민족이 대대로 거주해온 부랴찌야지역은 비록 소연방공화국만큼 명목민족의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1980년대 말까지 엄연히 자치공화국으로 존재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족의 자치가 인정되었다. 주권선언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민족의 자치'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연방내에서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이 지니는 자치권을 실제로 구현하겠다는 선언이었으므로 민족의식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다.

(2) 민족쇠퇴에 대한 위기의식

① 지역에서 부랴뜨민족의 인구비율 감소

주권선언과 맞물려 성장한 민족의식은 민족,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나타났다. 민족의식의 자각과 성장은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직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 부랴찌야지역이 러시아에 귀속된 이래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부랴뜨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졌다. 이러한 부랴뜨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자신의 민족영토에서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부랴뜨민족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연방의 북부지역에 분포하는 북부소수민족처럼 쇠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부랴뜨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주, 치타주이다. 이들 3개주는 19세기 후반까지 이르쿠츠크현 자바이칼주¹⁰⁾에 속해 있었다. 이 당시 부랴뜨민족은 지역 전체(1,190,674명)에서 약 25%(288,355명)가량을 차지하였고, 자바이칼주 중에서 현재의 부랴찌야공화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부랴뜨민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러시아제국의 확장의 역사, 소비에트의 발전과정은 다름 아니라 러시아민족의 이주와 팽창의 과정인데, 특히 20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로 각 민족지역에서 러시아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러시아민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르쿠츠크주의 경우 1897년에는 부랴뜨민족이 지역 전체인구(514,267명)의 약 20% (108,867명)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1989년에는 약 2.8%(2,773,700명 중에 77,330명)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3%도 되지 않는 극히 적은 부랴뜨민족만이 이르쿠츠크주에 있는데, 그나마도 우스찌-오르딘스끼 부랴뜨자치구(42,298명)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에 러시아민족은 1897년에 378,383명으로 73.6%였지만 90여년이 지난 1989년에는 2,354,700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르쿠츠크지역은 20세기 후반에는 더 이상 부랴뜨민족이 거주하였던 민족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랴뜨민족은 극히 적은 수가 거주하고 있고, 러시아민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 자바이칼주(Забайкальская область)는 바이칼호의 동부지역으로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부랴찌야공화국, 치타주(아긴스카예 부랴뜨 자치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러시아어의 사전적 의미로 바이칼 호수 건너편에 있는 주라는 의미다. 호수 건너편의 의미는 서쪽에서 보았을 때는 바이칼 호수 동부지역이 건너편 지역이지만, 동쪽에서 보았을 때는 서부지역이 건너편지역이다. 이렇듯 행정구역명에서 조차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회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역 내부에서 차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외부의 사회적 변화에 ‘무임승차’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부활’ 과정도 주권선언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연방공화국 차원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족의식의 성장하고 민족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러시아연방내 민족지역에서는 이보다 다소 늦은 1980년대 말부터 ‘민족변수’가 본격적인 문제가 되었다.

소연방차원에서 형성된 정치지형, 즉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즉자적으로 민족의식을 형성하고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분리독립과 ‘주권화의 행진’은 민족지역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들의 연방인 소연방은 달리 표현하면, ‘민족공화국의 연방’이라 할 수 있다. 소연방을 구성하는 연방공화국들 — 카자흐스탄공화국을 제외하고 — 에서 공화국의 이름을 형성하는 명목민족은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 구성공화국들의 독립·주권선언은 정치적 독립이나 연방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언이었지만, 명목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지역의 독립·주권선언이었으며, 이 과정은 명목민족이 주도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민족문제와 연관이 되었다. 게다가 주권선언은 1910년대 레닌의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민족주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선언이었으므로 민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다.

부랴찌야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의식의 성장은 주권선언과 함께 이루어졌다. 비러시아민족인 부랴뜨민족과 에멘크민족이 대대로 거주해온 부랴찌야지역은 비록 소연방공화국만큼 명목민족의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1980년대 말까지 엄연히 자치공화국으로 존재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족의 자치가 인정되었다. 주권선언은 다름아니라, 이러한 ‘민족의 자치’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연방내에서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이 지니는 자치권을 실제로 구현하겠다는 선언이었으므로 민족의식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다.

[2] 민족실퇴에 대한 위기의식

① 지역에서 부랴뜨민족의 인구비율 감소

주권선언과 맞물려 성장한 민족의식은 민족,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나타났다. 민족의식의 자각과 성장은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 부랴찌야지역이 러시아에 귀속된 이래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부랴뜨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졌다. 이러다가 부랴뜨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자신의 민족영토에서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부랴뜨민족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연방의 북부지역에 분포하는 북부소수민족처럼 쇠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부랴뜨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주, 치타주이다. 이들 3개주는 19세기 후반까지 이르쿠츠크현 자바이칼주¹⁰⁾에 속해 있었다. 이 당시 부랴뜨민족은 지역 전체(1,190,674명)에서 약 25%(288,355명)가량을 차지하였고, 자바이칼주 중에서 현재의 부랴찌야공화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부랴뜨민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러시아제국의 확장의 역사, 소비에트의 발전과정은 다름 아니라 러시아민족의 이주와 팽창의 과정인데, 특히 20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로 각 민족지역에서 러시아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러시아민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르쿠츠크주의 경우 1897년에는 부랴뜨민족이 지역 전체인구(514,267명)의 약 20% (108,867명)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1989년에는 약 2.8%(2,773,700명 중에 77,330명)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3%도 되지 않는 극히 적은 부랴뜨민족만이 이르쿠츠크주에 있는데, 그나마도 우스끼-오르딘스끼 부랴뜨자치구(42,298명)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에 러시아민족은 1897년에 378,383명으로 73.6%였지만 90여년이 지난 1989년에는 2,354,700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쿠츠크지역은 20세기 후반에는 더 이상 부랴뜨민족이 거주하였던 민족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랴뜨민족은 극히 적은 수가 거주하고 있고, 러시아민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 자바이칼주(Забайкальская область)는 바이칼호의 동부지역으로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부랴찌야공화국, 치타주(아긴스카예 부랴뜨 자치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러시아의 사전적 의미로 바이칼 호수 건너편에 있는 주라는 의미다. 호수 건너편의 의미는 서쪽에서 보았을 때는 바이칼 호수 동부지역이 건너편 지역이지만, 동쪽에서 보았을 때는 서부지역이 건너편지역이다. 이렇듯 행정구역명에서 조차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회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표 5-1> 부랴찌야지역의 주요민족별 인구구성의 변화

단위: 명

민족	1897		1926	1989		
	이르쿠츠크현	자바이칼주	부랴찌야	부랴찌야	이르쿠츠크주	치타주
전체	514,267	676,407	491,266	1,038,252	2,773,700	1,375,340
러시아	378,383	444,900	258,796	726,165	2,454,700	1,216,325
부랴뜨	108,867	179,487	214,957	249,525	77,330 (42,298) ²⁾	66,625 (42362) ³⁾
예벤크	2,017	3,043	2,808	1,679	878	1,075

주: 1) 1897년의 이르쿠츠크현은 바이칼 서부지역인 현재의 이르쿠츠크주에 해당되고 자바이칼주는 부랴찌야공화국과 치타주를 포함한 지역에 해당됨.

2) 우스찌-오르다 자치구

3) 아긴스까예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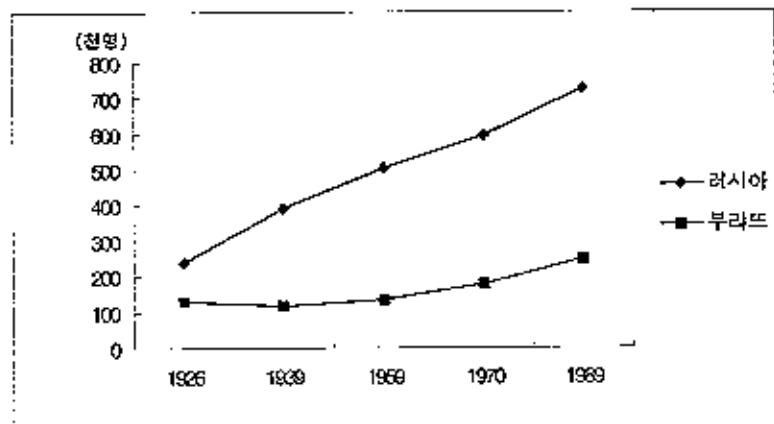
출전: Мангатаева Д. Д. 2000, С.188-189.

치타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1897년에는 치타주는 행정구역상으로 부랴찌야공화국과 함께 자바이칼주에 속해 있어 정확한 인구통계를 파악할 수 없지만, 1989년에 부랴뜨민족은 66,625명으로 지역전체의 4.8%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러시아민족은 88.4%로 총 1,216,325명이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단순히 부랴뜨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랴뜨 민족지역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복만이었던 부랴뜨민족은 바이칼호수 서쪽 이르쿠츠크지역에서부터 호수의 동쪽 치타주에 이르는 광활한 거대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왔지만, 대대로 자신의 삶을 이어온 민족지역에 이민족인 러시아민족의 유입으로 민족지역의 잠식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비교적 부랴뜨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부랴찌야지역의 경우도 두 지역과 동일한 패턴의 인구변화를 겪었다. 1926년 부랴찌야자치공화국이 수립된 3년 후에 실시된 소연방 인구조사에 의하면, 부랴찌야지역에서 부랴뜨민족과 러시아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각각 43.8%와 52.7%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이미 그 격차가 심화되어 부랴뜨민족은 지역전체의 24%에 지나지 않고, 러시아민족은 70%나 되었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부랴찌

야지역을 대표하는 두 민족인 부랴뜨민족과 러시아민족의 1926년부터 1989년까지 인구증가패턴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부랴뜨민족은 1926년에서 1939년사이에 인구감소를 겪은 뒤 1989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띠지만, 러시아민족은 1926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림 5-1> 부랴찌야지역 주요민족의 인구변화

출처: Госкомстат РБ, Буряты в зеркале статистики. 1997. с.8.

1926년에서 1939년 사이에 부랴뜨민족의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1937년 위헌적인 행정구역개편으로 부랴찌야지역의 일부 군이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소연방 차원에서 진행된 인구조사에 의하면, 1926년부터 1989년 사이 63년간 부랴뜨민족의 인구증가는 116%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러시아민족은 280%나 증가하였다. 여전히 ‘부랴찌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랴찌야는 더 이상 부랴뜨민족의 땅이라 할 수 없다. 부랴찌야지역은 역사적으로나 부랴뜨민족의 땅일 뿐이지, 러시아민족이 유입된 지 35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부랴찌야를 대표하는 민족은 이제 러시아민족이 되었다.

부랴뜨민족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부랴뜨민족문제가 불거지고 부랴뜨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인구구성의 문제를 지역의 주요한 사회현안으로 제기한 것은 부랴뜨 민족인텔리들이었다. 이들은 러시아지역에 거주하는 북부소수민족들이 어떻게 몰락되어 가는지를 소비에트 발전과정에서 생

생히 눈으로 목격했기에, 이들의 위기의식은 를 수밖에 없었다. 1989년 현재 러시아연방에는 북부소수민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25개 민족이 있다. 이중에는 부랴찌야지역의 원주민 중 하나인 에멘코민족도 포함된다. 러시아연방 인구의 약 0.12%(182,000 여 명)를 차지하는 25개의 소수민족은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규모가 워낙 미미하였기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바로 부랴뜨 민족인텔리들의 우려는 지역내에서 부랴뜨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한다면 중국에는 이들도 북부소수민족과 같은 운명에 처한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발현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부랴뜨민족문화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부랴찌야국립대학교 교수의 말은 이러한 우려를 잘 드러내준다.

사회주의체제는 민족자결과 민족우애를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측면이 자본주의진영에 비해 사회주의진영이 지니는 우월성이라고 생각하였지. 미국은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형성되었지만, 러시아는 소수민족들의 자치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학제적 결합을 통해 평화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빛음이 소비에트시기 일반적인 어ဓ이었지. 미국과의 끊임없는 세계경쟁을 벌이고 있던 소련방은 항상 미국의 이런 약점을 공격하였지. 그러나 1979년도에 실시된 인구조사는 소연방 당국자들을 당혹케 만들었어. 그들의 예상, 바램과는 달리 소연방 내 소수민족들은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조차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지. 이러한 결과를 광산당이 브리네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래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지식인들을 통해 소수민족들에 대한 연구를 시켰지. 내가 소수민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부럽부터이지.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부랴찌야지식인들 사이에서 부랴뜨민족도 중국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어. 부랴뜨민족의 지역내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 이런 측면이 부랴뜨민족사이에서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네게델 등의 민족단체를 결성케 한 원인이 되었지(만가따예마, 부랴찌야국립대학교 자리학과 교수)

지역에서 점점 소수민족으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민족문제를 전환기 부랴찌야공화국이 해결해야 하는 핵심문제들 중 하나로 제기한 것이다.

② 민족어 구사율 감소

민족쇠퇴에 대한 위기감은 부랴뜨민족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의 감소보다 부랴뜨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언어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귀속감과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언어에는 민족의 개성과 정신이 스며있는 민족의식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표 5-2> 민족별 모국어 인식률과 제 2언어 구사율

단위: %

민족	연도	모국어 인식률			제 2언어 구사율 ¹⁾		
		자만족어	부랴뜨어	러시아어	자만족어	부랴뜨어	러시아어
전체	1970	88.0		12.0		62.0	
	1989	94.5		5.3	0.9	20.5	
	1994	94.8	0	5.2	0.6	0.3	24.0 74.4
부랴뜨	1970	96.0		5.0		65.0	
	1989	89.4		10.6	1.6	73.6	
	1994	89.9	-	10.1	1.1	-	77.9 20.7
러시아	1970	99.9		-		-	
	1989	99.9		-	0		-
	1994	100	-		0	0.4	- 98.8
우크라이나	1970	48.0		52		45.0	
	1989	50.0		49.9	13.9	44.0	
	1994	38.4	0	61.6	8.4	0	37.9 52.4
파따르	1970	73.0		27		62.0	
	1989	42.5		42.5	6.0	52.8	
	1994	55.3	1.0	43.7	3.7	2.2	54.3 38.5
애벤크	1970	61.0		36		55.0	
	1989	48.6		48.6	2.1	45.3	
	1994	21.8	0.7	77.6	4.8	0	21.8 73.5
벨라루시	1970	36.0		64.0		34.0	
	1989	38.4		61.3	11.8	35.7	
	1994	30.8	0	69.2	10.0	0	30.0 59.2

주: 1) 1970년과 1989년 사이에 제 2언어 구사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975년 공교육에서 부랴뜨어 교육이 폐지되었기 때문임.

2) 1994년 인구조사는 전체 인구의 5%를 표본조사한 것임.

자료: Бурятская АССР в Цифрах(1923-1973). 1973.

Госкомстат РБ.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и языку. 1990.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по владению языками. 1995.

소연방 인구센서스 자료의 언어상황을 통해 당시의 민족의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70년 부랴찌야지역에서는 자민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8%였지만, 1989년에는 94.5%로 증가하였다. 시간이 흐르고 소비에트화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족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당시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에서 민족담론, 민족주의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은 '모국어 인식률'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모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국어 인식률은 모국어 구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모국어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랴찌야지역에서 모국어 구사여부가 큰 문제로의 대두는 지역의 원주민인 부랴뜨민족과 에벤크민족사이에서였다. 부랴뜨민족의 경우에 1970년에는 부랴뜨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민족 전체에서 95%였는데, 1989년에 이르러서는 89.4%로 낮아졌다. 반면에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5.0%에서 10.6%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부랴뜨인들 중에서 부랴뜨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자신의 민족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상관없이, 실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부랴뜨 민족지식인, 민족주의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40-50대와는 달리 20-30대에서 부랴뜨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랴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언어정책의 변화¹¹⁾에서 기인한다. 부랴찌야지역에서는 1975년에 언어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부랴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부랴뜨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는 그동안 부랴뜨어로 교육하였는데, 1975년 부랴뜨어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11) 부랴찌야공화국이 수립된 1923년 이래 부랴찌야지역에서는 3차례에 걸쳐 언어·문자개혁이 있었다. 1931년까지 부랴뜨민족은 고농글문자를 사용하였으나, 문자개혁으로 라틴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부랴뜨어의 표기를 라틴어에서 키릴문자로 바꾸었다. 이러한 문자개혁은 부랴뜨 문화와 민족정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975년의 언어 개혁이다. 당시 부랴찌야자치공화국의 최고권력자가 부랴뜨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중등학교에서 부랴뜨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부랴뜨어 사용이 현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Урбанаева М., и др. 1989).

러시아어로만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부랴뜨어 수업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교육에서 부랴뜨어를 배우지 못했다.

둘째는 도시화로 인한 것이다. 울란우데와 세베라바이칸스크 등 도시지역에서는 부랴뜨민족과 러시아민족만이 아니라, 부랴찌야지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소수민족 중 노년층은 자신의 민족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젊은층은 러시아어만을 구사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혼재되어 생활하므로 의사소통의 수단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어가 되었다. 부랴뜨민족도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표 5-3>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1989년 부랴뜨민족의 모국어인식률은 도시와 농촌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농촌지역에서 대부분(96.7%)의 민족구성원이 자신의 민족어(부랴뜨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는 민족구성원의 80% 정도가 부랴뜨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꼴로 러시아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다.

<표 5-3> 부랴뜨민족의 모국어 인식률과 제2언어 구사율(1989)

단위: %

	모국어 인식률(%)		제 2언어 구사율(%)		
	부랴뜨어	러시아어	부랴뜨어	러시아어	기타
전체	89.4	10.6	1.6	73.6	0.1
도시	80.3	19.7	3.0	74.0	0.1
농촌	96.7	3.3	0.5	73.3	0.1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и языку. 1990.

부랴뜨 민족지식안과 민족주의자들은 부랴찌야지역의 도시화율이 이미 60%에 이르렀고 꾸준히 이촌향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부랴뜨민족 중에서 부랴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뿐더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994년 전체 인구의 5%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부랴뜨민족의 경우에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부랴뜨어 사용은 29.2%에 지나지 않고, 70.8%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직장도 이와 유

<표 5-4> 교육기관, 집, 직장에서 사용 언어(1994년)

단위: %

민족명	사용장소	민족어	부랴뜨어	러시아	기타
전체	교육기관	74.1	0	25.9	0
	집	87.3	-	12.7	
	직장	76.2		23.8	
부랴뜨	교육기관	29.2		70.8	
	집	68.2	-	31.8	
	직장	28.6		71.4	
러시아	교육기관	100.0		-	
	집	100.0	0	-	0
	직장	100.0		-	
우크라이나	교육기관			100.0	
	집	3.3	-	96.5	2
	직장			100.0	
파따르	교육기관	3.0	2.9	94.1	
	집	10.1	1.7	88.2	
	직장	0.5	0.5	99.0	
에벤크	교육기관			100.0	
	집	8.2	0.7	91.1	
	직장	1.9		98.1	
벨라루시	교육기관			100.0	
	집	0.8	-	99.2	
	직장			100.0	
기타	교육기관	4.5	0.7	94.8	
	집	18.0	1.3	80.3	4
	직장	3.0	0.2	96.6	2

주: 전체 인구 중 5%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по владению языками.
1995.

사한데, 부랴뜨어를 사용하는 직장은 28.6%이며 러시아어가 71.4%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랴뜨 가정에서 조차 가족간의 대화에서 부랴뜨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가족이 약 1/3인 31.8%나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부랴뜨인들 중에 40대 이하에서 부랴뜨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랴뜨어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러시아민족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집, 직장에서 부랴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전체 인구

중 약 70%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이 부랴뜨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부라뜨어는 부랴찌야공화국의 공식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점점 더 쇠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③ 피억압 역사에 대한 자각

민족구성원간에 자신의 민족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지니는 경우에 민족의식은 더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민족이 이민족에 의해 억압당했을 경우에 민족의식은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 소연방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이 시행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소연방 전역에서는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고, 소비에트 시기 억압과 박해를 받은 민족들의 명예회복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러시아연방에서는 1992년 '피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과 결의' 등이 채택되었다. 이 법의 채택으로 러시아연방 도처에서 민족부 활운동이 더 활기를 띠었으며,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부라뜨민족을 중심으로 부라뜨민족이 '피억압민족'임을 주장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나, 넓게 말하자면 소연방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은 소비에트시기에 억압을 당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와 사상을 포기해야 했으며, 특정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들은 박해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시기 부랴찌야지역에서 약 200개 이상의 러시아정교가 문을 닫았고, 1920년에 울란우데에 2000여명의 유대인이 거주하며 자신의 교회와 학교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남아 있는 교회와 학교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부랴찌야지역에서도 소비에트시기 피억압 민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연방차원에서 준비하는 법과는 별개로 공화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 의장인 포타포프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21명의 최고회의 대의원과 21명의 학자, 법률가, 사회운동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초안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부랴뜨센터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¹²⁾

12) Чиренпилов Д. Н. О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70 лет. —Улан-Удэ: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93. С.96.

2) 민족정체성 형성

1990년대를 전후하여 민족정치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각광받는 주제가 다양한 민족과 사회집단의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의 문제이다. 다양한 민족집단의 특성뿐만 아니라, 민족정체성의 구조와 기능 등에 관한 연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¹³⁾

민족 부활과 민족의식의 성장은 민족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졌다. 특정 민족에 대한 소속감인 민족의식은 민족 구성원간 일체감을 통해 강화된다. 민족적 일체감은 민족적 동일시과정을 통해 발현되므로, 민족의식은 민족정체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체성의 기본 특징인 '자아'와 '타자'의 구분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간의 경계를 따라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나는 어떤 민족의 구성원이고, 내가 속한 '우리 민족'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부랴찌야지역의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에게서 먼저 나타났으며,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부랴뜨 민족지식인들이었다. 일반 주민들은 소비에트 시절에 자신의 민족 역사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기에, 민족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당시에는 소수민족의 역사는 소비에트 발전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방정책이 시행되고 과거의 역사가 공개되면서 이를 먼저 접하게 된 것은 바로 민족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자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민족의 역사에 대해 재고찰하게 되었다. 민족자결권,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선전 문구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발전과정은 민족의 억압과 쇠퇴 과정이며, 야기한 부랴뜨 민족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자각하였다. 이들은 소비에트시기에 단절되고 왜곡된 민족성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민족의 기원과 특성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정신·사상의 측면에서 민족정체성 추구였다.

전환기의 국가와 지역 정치에서 민족이 중요 변수로 부각되는 민족정치과정은

13) Елаев Н. Э. Теоретические подходы к изучению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науке//Этнолого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п.1. Сб. ст. -Улан-Удэ: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2000. с. 29.

정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강요’하였다. 만약 민족이 단지 생물학적 특성, 혈통적 특성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라면, 민족과 민족정체성은 전환기 러시아사회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전횡적 스탠란 시대에 악압받은 민족들을 달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에트 민족·국민’이라는 담론도 브레즈네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나름의 사상과 담론을 필요로 한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으며, 그 사상과 담론은 사회발전의 이념상과 국민적 바램이 융복되어 나타난다. ‘민족담론’이 전환기 러시아 정치에서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된 것은 소비에트 민족이라는 담론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비에트시기의 주요 담론이었던 ‘국제주의’나 ‘조국에 대한 현신’ 같은 넓은 구호로는 더 이상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없었으며¹⁴⁾ 이러한 구호 속에 실제로는 러시아민족을 제외한 다른 소수민족의 발전은 뒤쳐졌다는 자각이 새로운 민족담론을 형성하였다. 전환기 지역과 민족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였으며, 다민족 사회에서 러시아민족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도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론이 필요하였다.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고, 그러한 요구가 ‘민족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1] 부랴뜨민족 정체성 추구

① 봉골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

부랴뜨민족 정체성을 봉골민족에서 추구하는 것은 민족 기원과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혈통과 언어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부랴뜨민족을 봉골민족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14) Стrogанова Е. А. Бурят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возрождение(Конец 80-х — середина 90-х годов XX века,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И. —Иркутск, Наталис, 2001. С.57.

부랴뜨민족은 오래 전부터 바이칼호수의 동서에 분포하는 남시베리아의 몽골어 민족이라는 것이다. 부랴뜨민족이 몽골계 민족이라는 것은 몽골의 역사적 기록에도 나와 있다. 라쉬드-아드-진의 ‘몽골민족의 비사(秘史)’에는 부랴뜨민족은 바이칼 북동부의 바르구진-뚜쿰(Баргузин-Тукум)국¹⁵⁾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다. ‘비사’에는 부랴뜨민족은 17세기 중엽 바이칼 동부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되었을 때,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던 몽골로부터 몇 개의 부족¹⁶⁾들이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하여 형성한 몽골족의 일부라고 쓰여 있다. ‘비사’에서는 투르크제(싸요뜨)와 퉁구스제(에벤크민족) 민족도 부랴뜨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 민족은 그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은 몽골계 민족에 속하였다.¹⁷⁾ 이러한 역사적 기원으로 부랴찌야공화국은 1923년 공화국 수립 당시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부랴뜨민족과 몽골민족과의 공통성은 언어적 특성에서도 드러난다. 부랴뜨어에는 많은 방언들이 있지만, 크게 4가지 방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⁸⁾ 호리(Хоринский диалект), 에히리뜨-불라가뜨(Эхирит-булагатское наречие), 알라라-툰낀(Аларо-тункинское наречие), 쫀골라-사르풀(Цонголо-сортульское наречие) 방언이다. 방언

15) 바르구진 지역은 부랴찌야공화국의 북서쪽, 바이칼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랴뜨민족뿐만 아니라 에벤크민족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16) 비사에는 하타긴(хатагны), 아따간(атагны), 산골(сонголы), 사르풀(саартулы), 가반구뜨(гаангуты) 등이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한 몽골 부족이라고 쓰여 있다.

17) Вернуть название "Бурят-Монголия", "Бурят-Монгол" Нэргэс Нэргээхэ. Сост. Д. ист. наук Чимитдоржнев Ш. Б. Улан-Удэ. 1998. С.10.

18) 부랴뜨어는 크게 4가지 방언으로 나뉘어지는데, 민족을 이루는 주요 부족집단과 제를 같이 한다. 4가 집단은 다음과 같다.(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Бурятии. Москва: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1. С.258)

1. 호리족 방언(Хоринский диалект)은 호리족, 아게족, 투구누이(또는 투구누이-힐로고)족의 말투를 포함한다. 부랴뜨어 중에서 가장 큰 방언인 호리 방언은 부랴찌야공화국에서 큰 3개의 군—이라브나, 호리, 깨련가군—에 퍼져 있다.
2. 에히리뜨-불라가뜨(Эхирит-булагатское наречие) 방언이다. 이 방언은 주로 바이칼호 서쪽지역인 이르쿠츠크주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에히리뜨-불라가뜨, 보한(Бохан)과 올흔(Ольхон)방언과 바이칼 동부지역의 바르구진(Баргузин) 방언을 포함한다.
3. 알라라-툰낀방언(Аларо-тункинское наречие). 이 방언에는 알라르, 툰낀-아낀방언과 자까엔, 운기 부랴뜨 방언이 포함된다.
4. 쫀골라-사르풀 방언(Цонголо-сортульское наречие)은 쫀골라와 사르풀 두 개의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방언은 부랴뜨민족 거주지역 중 주로 남부지역에서 사용된다. 이 방언은 18세기 초에 농꾼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언어였으며, 아직까지 몽골어의 특성이 남아 있다.

은 대개 부랴뜨민족을 구성하는 주요 종족별로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방언권과 종족 분포권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 중에서 특히 쫀골라와 사르풀 두 개의 방언으로 구성된 쫀골라-사르풀 방언(Чонголо-сартульское наречие)은 주로 남부지역에서 사용되는데, 이 방언은 18세기 초 봉골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언어였으며, 아직까지 몽골어의 특성이 남아 있다.

이렇듯 부랴뜨민족은 역사적 기원이나 언어적 측면에서 몽골계통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의 형성에서 민족성과 민족의 기원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공동의 민족성을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족정체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성의 어떤 측면을 부각하고, 왜 그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며, 민족정체성 형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민족을 매개로 한 정치성의 정치가 어떻게 발현되고, 이러한 정치성의 정치를 통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부랴뜨민족 지식인들은 왜 민족정체성을 몽골계 민족에서 찾으려고 했는가? 몽골민족으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것은 20세기 말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인가? 흔히 ‘범몽골주의’로 분리는 부랴뜨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소비에트 형성 초기에도 이미 존재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뛰어어 내전(1918-1921년)이 발생하였을 때, 러시아는 혁명을 주도한 적군과 이에 반대한 백군으로 양분되었다. 부랴뜨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적군이나 백군에 속하기 보다 부랴뜨-몽골 민족의 독립적 정체(政體)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17년에 개최된 ‘부랴뜨민족대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¹⁹⁾

부랴뜨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부랴뜨민족의 정치·경제적 자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분은 범몽골민족의 실체적인 통합을 추구하였다. 러시아연방내 3개 부랴뜨민족 거주지역 — 부랴찌야공화국, 우스찌-오르딘스끼 부랴뜨 자치구, 아긴스까예 부랴뜨 자치구 — 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

19) 1917년 10월 베르호네-우진스크(현 울란우데)에서 개최된 부랴뜨민족대회에서 “부랴뜨민족의 행정단위(아이막, аймак)는 인접한 러시아 민족의 행정기관의 종속에서 벗어나 영토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독립적임”을 선포하였다.(Варнавская, П. К. 2002. с.24-25).

국의 내몽고가 참여하는 독립국가 수립이 부랴뜨민족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97년 수립된 '부랴뜨민족회의'에까지 이어졌다.

또한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을 몽골족과 연관시킨 의도는 주권선언 후 공화국명의 변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말~90년대 초의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아공화국은 주권선언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전환기에 놓여 있었기에 국가명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구 소련방과 러시아연방의 행정구역명은 민족 지역에서는 원주민명을 사용하였다. 몇 몽골족의 일부로서 부랴뜨민족정체성을 추구한 것은 다름 아니라 1958년 이전의 공화국명을 복원하기 위함이었다. 부랴찌아의 공화국명은 '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Бурят-Монгольская АССР)'이었으나 1958년에 '부랴뜨자치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부랴뜨민족은 몽골민족과 혈통적, 언어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새로 결정되는 공화국명은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몽골민족의 일부로서 부랴뜨민족 정체성을 추구한 세력들의 주장이었다.

② 중앙아시아 민족으로서의 부랴뜨민족

부랴뜨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유목이었다. 부랴찌아지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서부터 남쪽으로 봉골과 중국의 내몽고까지 펼쳐진 광활한 스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 소, 말 등의 유목을 통해 삶을 영위해 왔다. 부랴뜨민족이 유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2-4세기 무렵이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카스피해를 거점으로 생활하던 터키계통의 유목민들은 동으로 동으로 이동하여 티벳과 중국의 내몽고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이 지역에 투르크한을 형성하였다²⁰⁾. 바이칼호 인근지역에 분포했던 부랴뜨민족은 적절적으로는 투르크한의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이들과 빈번한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부랴뜨민족은 유목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유목문화가 바이칼 인근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전환기 새로운 민족정체성과 민족의식을 추구하면서 부랴뜨민족을 중앙아시아 민족으로서 정립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랴뜨민

20)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Бурятии. Москва: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1. с. 114.

족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소비에트시기 이후가 아니라, 부랴뜨민족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되면서 민족적 생활양식을 점차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것이다. 정착 농경생활을 하는 러시아민족이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농경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강과 너른 들에 정착하게 된으로써, 부랴뜨민족의 이동공간은 축소되고 유목생활은 점차 공간적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중앙아시아적 민족 특성의 회복과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인 유목생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제국에 귀속된 지 이미 350년이 지났고, 70여년 간의 소비에트과정을 거치면서 유목생활을 지속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사회경제적 위기로 목축에 종사하던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이미 많은 수의 부랴뜨인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민족의 쇠퇴, 민족의 부활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지역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라던가, 민족적 생활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 민족혼의 문제였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봉요로운 민족도 민족의 정신을 상실하였을 때,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영속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랴뜨민족혼의 회복, 민족사상의 추구를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생각하였고, 이를 통해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민족정체성 형성의 요체를 고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종교·철학사상인 ‘텐게리(тэнгэри)’에서 찾았다. 텐게리는 ‘영적 하늘’(духовное небо, spiritual sky)이라는 의미로 최상의 존재와 종교적 에너지 공간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참된 삶의 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고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텐게리를 신과 동일어로 이해하였으며, 모든 삶과 존재의 근원으로 인식하였다. 부랴뜨 민족과 몽골민족에게 ‘부르한’(Бурхан)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 텐게리는 신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부랴뜨민족의 신화에서 ‘텐그리적 세계관’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으며, 민족적 소재에도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²¹⁾ 그리고, 바이칼 인근 지역부터 극동의 사하-이꾸찌야공화국에 널리 퍼

21) Урбанаева, И. С. Наманская Философия Бурят-Монголов: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е Тэнгрианство в Свете Духовных Учений в Двух Частях. РАН СО ИМБТ. Издательство Бурятского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СО РАН, Улан-Удэ, 2000. С.101-103.

져 있는 샤머니즘도 이러한 텐그리적 정신 유산으로 간주하였다.

중앙아시아민족으로서 부랴뜨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일부 민족지식인들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부랴뜨 민족구성원들은 이러한 주장은 부랴뜨민족이 정신적으로 중요롭고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다는 것을 파시하는 단지 하나의 주장으로 간주했을 뿐이다. 이는 이러한 주장이 공허하고 현실적이지 않았으며, 불교와 샤머니즘이 이들에게 보다 익숙하고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2) 민족문화와 재정립

민족이 전환기 부랴찌야의 정치, 사회에서 주요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부랴뜨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세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은 부랴찌야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 ‘민족담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민족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은 세상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변수’는 민족 자체의 문제로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더 많은 권력획득의 수단으로서도 등장하였다. 소비에트시기 ‘계급’이 개인과 집단을 규정하는 주요기제로서 작용하였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체제를 개혁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세력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더 이상 ‘계급’이라는 외피는 개인과 집단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이 ‘민족’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이제 ‘민족 담론’이 지배적인 전환기 러시아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은 ‘민족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부랴찌야지역의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과 러시아연방의 명목민족이자 부랴찌야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민족이 정치적 권력과 이익 획득을 위해 민족적 결집을 하였다면, 그 외 소수민족들은 지역 내 거대민족간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민족을 동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격적인 민족정치과정은 지역의 제 민족들의 민족적 각성과 결집을 이루어 냈다. 권력이 ‘민족적’으로 활동될 것 같은 사회에서 독자적인 민족으로 정립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볼 여지가 높은 것이었다.

① 원주민으로서의 싸요뜨민족의 부활

전환기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에서 민족지역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다는 것은 민족지역내 명목민족 또는 원주민들이 주요한 정치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낡은 체제를 변혁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시기에 특정 민족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정치주체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민족이 권력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최소한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보다 수월하게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소비에트시기에 명목민족이나 원주민에게 특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록 당과 소비에트가 절대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초기 소비에트시기에는 '본원적 민주화'정책을 바탕으로 당과 권력기관에 인정 정도 원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원주민에게 특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자차공화국의 명목민족에게 '지역활당제'를 통해 매년 몇 명씩 모스크바대학에 입학할 특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부랴찌야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랴뜨민족과 에벤크민족이 지역의 원주민으로 통용되었다. 여기서 통용되어 왔다는 의미는 소비에트시절에 '원주민의 자위'가 그리 중요한 명함이나 간판이 아니었으므로, 지역에서 어떤 민족이 원주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였다던가, 지역을 구성하는 민족간에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제국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 시작한, 러시아제국이나 소연방에 속하게 된 시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이 통념적으로 원주민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언어적 특성과 분포지역에 따라 북동부지역은 에벤크민족의 땅으로 간주되었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부랴뜨민족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방언이 심해 부족간에 의사소통이 꽤 힘들고 일부 역사적 기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개 부랴뜨민족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의 중심에 민족이 자리잡게 되면서 이러한 민족적 차이는 새삼 커지게 되었다. 아니 민족적 특성의 차이가 작을 지라도, 이러한 차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두된 것이 싸요뜨민족(*сыютэ*)이다. 싸요뜨민족의 거주지는 부랴찌야공화국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투바공화국²²⁾, 남쪽으로는 몽골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22) 투바공화국은 러시아연방 21개 공화국 중 하나로서 알타이공화국과 부랴찌야공화국 사이

싸요뜨민족은 인근의 쌩안산맥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랴뜨민족 중 하나의 종족으로 존재해 왔다.²³⁾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부랴뜨민족보다 투바민족과 유사한 종족 집단이며, 언어적으로는 투바공화국의 따롄쓰(Толкынчи), 몽골의 휴수굴(Хубсугул) 족과 비슷한 터키어군에 속한다. 생활양식과 생계활동양식도 이들과 유사하다. 최근에 부랴뜨민족과 빈번한 문화접촉의 결과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생활양식도 점차 부랴뜨민족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²⁴⁾

싸요뜨민족이 부랴뜨민족과는 별개의 독자적 민족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이다. 1926년 이르쿠츠크에서 '아긴 싸요뜨의 경제·통계, 생활, 의료·위생 조사를 위한 지방위원회'가 조직되어 민족에 대한 실사를 하였다. 이르쿠츠크 대학교의 괴뜨리 교수의 주도 하에 실시된 조사에서 위원회는 아긴지역에 거주하는 500여명의 싸요뜨민족을 북부소수민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랴찌야자치공화국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싸요뜨민족 거주지에 오히려 더 강한 세금정책을 부과하여 지역과 민족을 통제하였다.²⁵⁾

20세기 후반 민족부활의 움직임이 다시 일어난 것은 1992년이다. 둔킨군의 소록마을의 주도 하에 '싸요뜨문화센터'가 설립되었다. 문화센터는 민족의 문화적·정신적 발전과 민족(수)공업의 부활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식적인 민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3년 들어 올란우데와 이르쿠츠크의 학자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통해 싸요뜨민족은 러시아연방의 공식적인 민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② 러시아민족 일부의 재정립

소련의 해체는 연방공화국의 각 민족들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에 위치하며, 남으로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1944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러시아 공화국에归属되었으나, 터키계 투바민족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3) 소연방차원에서 공식적인 민족식별은 약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다. 싸요뜨민족은 1897년 인구조사부터 한번도 공식적인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부랴뜨민족으로 식별되었다.

24)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Бурятии. Москва: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1. С. 348.

25) Бурятия. 1998. 11. 13. с.3.

공함과 동시에, 러시아연방 내 자치공화국의 다양한 주민집단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집단간에도 상당한 '민족사회과정'을 초래하였다.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진행된 이러한 변화는 민족집단들의 지위·역할에 관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였다. 민족 간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고찰은 어떤 민족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거주분포를 형성하게 되었는지가 전제된다. 러시아민족의 이주는 다양한 자연-역사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였다.²⁶⁾

민족의식의 차자, 민족정체성의 형성 및 강화는 소수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민족적 문제였다. 러시아민족도 이러한 문제에서 벗겨나 있지 않았으며,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도 않았다. 1993년 5월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서 는 러시아민족의 일부가 '부랴찌야 구교도(舊教徒) 대회'를 개최하였다.

구교도들은 소비에트시기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민족성과 민족정신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비단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러시아민족은 러시아연방, 소연방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의 소위 '형님'(старый брат)의 역할을 했으므로, 다른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이 그들의 독창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었다. 민족화합을 이루기 위해 '형님'의 역할을 하는 러시아민족이 '아우들'인 다른 민족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족간 우애와 공존을 위해,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민족정신이 퇴색하고 민족문화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구교도들의 이러한 판단은 대회에 참석하였던 군대표들의 발언에서 잘 드러났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특히 문화를 잃어버렸고, 뛰어난 전통을 상실하였다. 이전에 구교도집안에서는 누구도 보드카를 마시지 않았으며, 단배를 피우지 않았고, 방탕하게 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산양 심이 없고 공허한 영혼에서 기인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추 한 일에는 눈을 감고, 때때로 스스로 그들의 좋지 않은 행동을 묵인하곤 한다. 나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모든 것이 신앙심의 부족 때문이다. 아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며, 교회에도 가지 않고, 대신에 술을 마시고 있다.(무흐르시비르군, 빠블루쓰까야)²⁷⁾

26) Петров Е. В. Этно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Проблемы нового этапа 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 —Улан-Удэ:Изд-во ВИЦ СО РАН, 2001. с.41-51.

27) бурятия. 1993. 5. 21. с.1.

이러한 민족성, 민족문화, 민족정신의 상실은 전환기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게다가 문제의 심각성은 민족의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들이 민족정신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데 있었다.

우리 마을은 쇠락하고 있다. 웃어른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호흡 젊은이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없이 고서, 성상 등 민족의 자주심과 위태함이 스며있는 조상들의 소중한 물건을 쓸모없는 신식 문건과 바꿀 수 있다.(파르바가파야군, 치부니나)²⁸⁾

나도 우리들의 젊은이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세대 중의 한 명으로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와 교회의 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하며, 성직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구교문학을 출간할 방도를 찾아야 하고, 구전 예술과 음악 등의 보존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호리군, 이바노프)²⁹⁾

구교도대회는 이렇게 약화된 민족성과 민족정신을 정교정신의 복원을 통해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소비에트시기에 사라진 교회를 다시 복원하고, 민족정신을 계도할 성직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에서 러시아적 정신을 부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교도’ 대회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종교적 교리와 의식(儀式)의 동질성에 기반한 대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교도대회는 1991년 개최된 부랴뜨민족대회(전부랴뜨대회)와 달리 비정치적인 목적³⁰⁾을 지니고 있었다. 전환기 부랴찌아공화국뿐만 아니라 전 러시아에서 나타난 복잡한 사회·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정신부활과 역사적 근원으로의 회귀는 민족문화·종교 공동체로서의 구교도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믿을만한 지향이었다.

구교도대회가 부랴뜨민족대회와 다른 점은 비단 비정치적, 종교 및 의식개혁 대회라는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부랴뜨민족대회가 민족지식인들의 주도 하에 ‘위로부터의 민족부활운동’이었다면, 구교도대회는 각 지역과 마을별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민족부활운동’이었다. 구교도대회는 1990년대 초부터 부랴찌아자역의 군소재지와 마을 등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된 정교부활, 특히

28) Бурятия, 1993. 5. 21. с.1

29) Бурятия, 1993. 5. 21. с.1

30) 물론 1980년대 말-90년대 초에 러시아연방이나 각 지역에서의 ‘민족별 결집’은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떠었든 비정치적 목적을 떠었든 정부와 타민족에게 그것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구교도적 교리에 기반한 종교적, 문화적 활동들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었다. 주로 부랴찌야공화국의 남부지역인 따르바가파이, 비추라, 하수르파, 끄라스늬 치꼬이, 발쇼이 꾸랄라이, 꾸이툰, 노바야 부랸 등에서 소비에트시기에 사라진 러시아민족 문화의 독창성을 부활하고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교회를 재건하고 소비에트시기에 변경된 고유한 역사적 지명을 복원하는 등 지역별, 마을별로 러시아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부활하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³¹⁾ 그 형태는 지역별, 마을별로 다양각색이었다. 이는 구교도 부활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자연발생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별, 지방별 자생적인 움직임이 공화국차원으로 승화된 것이 1993년 5월의 '구교도 대회'였다.

소비에트시기 종교적 자유가 막닫되고, 낮은 교회들이 폐쇄됨에 따라 종교, 문화, 관습 등을 상실한 억압민족으로 자신들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되었을 때, 원주민이었던 부랴뜨민족 뿐만 아니라 러시아민족도 공동보조를 취했는데, 이들이 바로 구교도들이었다.³²⁾

그러나 이 대회는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러시아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이라고 하여도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은 통칭하여 '시비락(сибиряк)-시베리아인)'이라 부르며, 또한 지역별로 세분하여 부르고 있다. 그 중 바이칼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은 '바이칼 너미의 시비리아인'이라는 '자바이칼 시비락(забайкальские сибиряки)'으로 불린다.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정교를 믿으며 유사한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부랴찌야지역을 포함한 시베리아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은 거주지역과 이주시기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큰 기준은 이주시기이다. 189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시베리아지역으로 온 사람들을 구분하며, 전자는 구정착자(старожилы), 후자는 신정착자(новоселы)라 한다.³³⁾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의 구분도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이

31) Бурятия. 1993. 6. 2. С.3.

32) Бурятия. 1993. 5. 21. с.1

주시기에 따라 구분한다. 이주시기에 따라 이주민이 겪은 역사적 경험에 달랐고, 그들의 이주목적과 형태도 달랐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구분기준에 의하면, 부랴찌야지역의 러시아민족은 구정착자, 시메이스끼(семейские), 바이칼 동부 까자크(забайкальские казаки) 세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구정착자들로 이들은 19세기 말 이전에 이주한 러시아민족의 후손들이 다.³⁵⁾

초기에 이주한 러시아민족은 부랴찌야지역에서 주로 곡물경작에 적합한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주로 실린가, 우다강 주변의 골짜기나 바이칼호 연안지역에 정착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계층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구정착자들의 사회-민족적 과정은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실제적으로 19세기 말 까지 러시아민족의 부랴찌야지역 정착은 주로 청장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러시아민족과 원주민인 부랴뜨, 에벤크민족간의 결혼이 상당히 많았다. 단적으로 민족간 동화과정은 이러한 잡혼의 결과에 단례 있었다. 한편으로 까르임(каримы)로 불리는 '경계 집단'(пограничные группы, border group)이 생겨났으며, 부랴찌야로 이주한 비러시아민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뒤 러시아민족에 흡수되어 버렸다.³⁶⁾

두 번째 집단인 '시메이스끼'(семейский)(가족의)는 18세기 경부터 부랴찌야지역으로 아주하였는데, 이들은 종교, 문화, 의식에서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구교도적 전통을 지니는 구정착자들과 달리 가족단위로 시베리아와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이주로 러시아민족의 연령구조도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으나, 엄격한 종교적 규율은 이미 정착한 사람들과의 융화를 쉽지 않게 하였다. 특히 부랴뜨, 에벤크민족 등 이교도와의 잡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이스끼들의 고립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의 원주민과의 경제교류가 단절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간헐적인 혈연적 관계로 이어졌다. 시메이스끼

33) Петрова Е. В. 2001. С.42-43.

34) Затеев В. И. Русские в Бурят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Улан-Удэ:Издательст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2. С.84.

35) Петрова Е.В. *op cit.* С.42-43.

36) Затеев В. И. *op cit.* С.84-85.

들은 현지 러시아민족 뿐만 아니라, 구교도로 개종하는 부랴뜨민족과도 결혼하였다. 그 결과 이미 1897년에 부랴뜨민족 중에 정교(구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375명에 달하였다.³⁷⁾

부랴찌야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된 17세기 종엽부터 소비에트시기에 이르기 까지 부랴찌야를 비롯해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러시아민족이 자속적으로 유입하였다. 그러나 시베리아 개척 초기에 이주한 사람들과 소비에트시기에 이주한 사람들 간에는 민족적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시베리아지역을 개척한 이들은 카자크³⁸⁾인데, 이들은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을 병합하고 러시아제국의 영토를 시베리아와 극동지역까지 확장하였다. 이들에 의해 시베리아지역이 개척된 후 곧바로 러시아민족이 이주하였는데, 이 당시에 유입한 러시아민족은 흔히 구교도(舊教徒, старообрядцы)라 부른다. 이들은 주로 18-19세기에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수법과 유목에 종사하던 부랴뜨민족과 에벤크민족에 경작기술을 전파하였다. 소비에트시기 본격적인 산업화과정에 부랴찌야지역, 시베리아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구교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한 슬라브계 러시아민족이지만, 이주시기에 따라 이들을 달리 부르는 것은 이들 간에 종교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제국 시기에 이주하였든 소비에트시기에 이주하였든 이들의 종교는 정교이다. 그러나, 이들간에도 종교의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호를 그을 때 손가락을 몇 개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구교도들은 1654년 니콘의 종교개혁 이후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시베리아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구교도들은 소비에트시기 러시아민족은 형님의 역할을 하면서

37) Болонев Ф. Ф. Народный календарь сибирских Забайкалья(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начала XX вв.). -Новосибирск, 1978. с.12

38) 코삭이라고도 불리는 카자크인들은 '자유인'이라는 더키어에서 유래하였다. 이들의 기원과 민족적 특징을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을 지칭하기도 하고, 러시아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러시아민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민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파르민족이 슬라브계인 러시아민족과 다르듯이 까자크인들도 러시아민족과 다른 별개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정설로 통용되는 것은 전자이다. 주로 러시아의 중부지역, 체르노제지역에 거주하던 농노들 중에서 지주의 박해를 피해 농촌을 떠난 농노집단을 가리키는데, 따파르와 투르크의 침입이 빈번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변방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후자는 러시아중부에서 까프까즈산맥 북부의 유럽대생원에 거주하던 민족을 까자크인으로 바라본다.

많은 것을 소수민족들에게 양보하였고,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해손되었다고 생각하였다.

3) 민족단체의 결성

(1) 부랴뜨민족단체

① 정치·사회단체

<초기: 민족주의단체·정당 부흥>

낭과 소비에트 중심으로 운영되던 부랴찌야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민족조직, 정치조직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소연방의 민주화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페레스트로시카 수호 민족전선’(Народный фронт в защиту перестройки)이 결성되었는데,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부랴뜨국민전선(Народный фронт Бурятии)으로 1988년 말에 결성되었다.³⁹⁾ 국민전선의 일부 부랴뜨민족은 부랴뜨 민족지역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결성된 단체라기보다 개혁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조직이었다. 국민전선은 조직원의 인적구성에서 보더라도 민족단체라 할 수 없다. 국민전선은 부랴뜨민족뿐만 아니라 러시아민족도 조직원으로 참여하였다.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정치조직은 ‘부랴뜨-몽골민족당(БМНП, Бурят-Монгольная Народная Партия)’이다. 민족당은 소연방차원에서 민족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민족을 화두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들은 민족의 정신적, 영토적 통합을 통해 부랴뜨-몽골민족의 부활을 목표로 하였다.⁴⁰⁾ 이를 위해

39) Прокинов И. Т.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пост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Политология и социология: Наука об образование, реальность. —Улан-Удэ:Изд-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2001. с.198-201.

40) 부랴뜨-몽골민족당은 당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의 부활을 중심문제로 하였지만, 체제 전환기라는 국면에서 사회주의 폐지와 시장경제 도입을 주장한 정치적 입장으로서는 자유 주의적 경향을 지닌 정당이었다. 이들은 공산당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당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부랴뜨민족지역의 통합, 공화국명의 변경과 부랴뜨 문자 개혁이었다. 소비에트시기는 부랴뜨민족의 쇠퇴기였고, '소비에트화'와 '러시아화'를 거치면서 부랴뜨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는 인식 하에 민족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결성된 조작이었다. 1990년 11월 창립대회를 개최하였고, 의장엔 부랴찌야국립사범대학 교수인 아치로프(Очиров И. Н.)가 부의장엔 소기업 충지베태인인 프로나키노프(Проныкинов И. Т.)가 선출되었다.

부랴뜨-몽골 민족당의 결성은 지역에서 다양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화국 원주민의 부활이었다. 여기에는 부랴뜨민족의 역사적 이름인 '부랴뜨-몽골'의 복원을 포함하였다.⁴¹⁾ 부랴뜨-몽골 민족당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일부 민족주의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부터 소연방지역에서 팽배한 민족문제가 드디어 부랴찌야지역에서 도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민족성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부랴찌야정부 기관이었다.⁴²⁾ 부랴뜨-몽골 민족당이 제기한 민족지역 통합의 문제는 부랴찌야 정부당국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문제였다. 소비에트시기의 영토분할, 민족분리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비민족적인 조치였지만, 이는 이미 '역사'가 되었고 이를 다시 돌리려면 인근 지역과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었다.

당원들간에도 부랴찌야지역에서의 '민족정치 과정'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원들간 내부적 의견 차이는 전환기 역동적인 지역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빈번하게 잡음과 갈등을 양산하였다. 빈번한 당 지도부의 교체는 이를 잘 보여준다. 당내의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1992년이었다. 당시 부랴찌야공화국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가 공화국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자격 문제였다. 주권선언 한 부랴뜨민족지역의 초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느 민족이 되느냐의 문제는 지역정체성을 민족지역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민족지역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었다. 당시 초대 의장이었던 아치로프는 1992년 대통령 자격에 관해서 '부랴뜨어 구사 여부'를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통령 자격과 관련한 의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한참인 시점에 민족주의정당인 부

41) Крянев Б. П.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и предвыборные блок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Улан-Удэ:Издательст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1996. С.8.

42) Проникинов И. Т. 2001. С.199.

랴뜨-몽골민족당의 의장이 ‘민족의 입장’을 포기하고, 러시아민족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당내 반발이 크게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초대의장인 아치로프는 당 의장직을 박탈당하였고, 그를 지지했던 온건화—민족관계의 측면에서—들은 그와 함께 동반 탈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더욱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당을 장악하였다. 당은 한동안 프로나끼노프와 하무파예프를 공동의장으로 임명하였다가 1992년 11월경에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당의장은 티벳 의사인 노민-투이야 바아따라이(Номин-Туяа Баатарай)가 맡게 되었다.⁴³⁾

부랴찌야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부랴뜨민족에게도 부랴뜨-몽골민족당이 제기한 문제는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렇다고 부랴뜨민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당에 참여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당원이 가장 많을 때가 100-120여명 수준이었다.⁴⁴⁾ 급진적 부랴뜨민족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주민들은 당이 너무 민족적 색채가 강하여 민족관계의 악화와 갈등의 문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고, 이러한 주민정서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1993년의 러시아연방 국회의원선거와 1994년에 시행된 부랴찌야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다만, 몇몇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부랴뜨-몽골민족당은 자신의 활동을 부랴찌야지역을 넘어 아건스까예와 우스찌-오르딘스끼까지 확장하고 싶어하였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올란우데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들은 ‘민족변수’를 끊임없이 정치화하려 했지만, 이는 대체로 실패로 귀결되었다. 민족적 기반에서 다른 정치·사회단체와의 정치적 연대도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명목민족의 민족부활운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단체로 ‘네게델’(Нэгэдэл)을 들 수 있다. ‘단결, 통일’(единение, unity)이라는 의미의 조직명이 발해 주듯, 네게델은 부랴뜨민족의 통합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당시 체제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서 바람직한 변화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보았는데, 부랴찌야지역에서 건전한 시민사회는 소비에트시기 역암당하고 분

43) Крянев Б. П. 1996. с.9.

44) 소비에트 시절에 유일한 정당이었던 소련공산당 부랴찌야시부는 당시 당원이 약 5,000여 명이었다. 그러나, 부랴뜨-몽골민족당은 자체 당원수를 60, 200, 2000명까지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계산하였다.

열된 명목민족이 통합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네개엘의 결성은 부랴뜨-몽골 민족당의 분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992년 빈번한 내홍을 겪던 부랴뜨-몽골 민족당에서 하무따예프를 비롯한 급진적 민족주의자들도 탈당하여 네개엘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부랴뜨-몽골민족당보다 더 급진적이었고, 인적 구성에서도 더 제한적이었다. 정치적 목표와 조직구성의 편협함으로 인해 네개엘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였다. 주로 지식인들--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베라아지부-부랴뜨센터(BSS CO PAH)---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두고 지역에서는 '교수당'이라고도 불렸다. 그만큼 지역여론은 이들의 주장은 뭔가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은 많은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조용하였다. 게다가 그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받기는커녕,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였다.

많은 주민들이 네개엘이 정말 민족지역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의심했어. 그들은 우스찌-오르дин스끼자치구에 비해 아긴스까예자치구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 그들이 실제로 민족부활과 민족지역 통합, 그 자체가 부랴뜨민족의 절대절명의 과정이라고 여겼는지 나도 의심하고 있어. 말만 많았지 실제 활동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 대부분 첨소물 출산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네개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중국, 몽골과의 무역이었지. 여행에서 돈을 빙리 설당과 보드카를 사고, 이를 중국에 팔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민족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렸다면,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일까?(고라네프, 부랴찌야공화국 대통령정치자문위원장, 정치학자)

<증기: 민족주의 단체 쇠퇴>

부랴찌야에서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민족단체의 수립이 이어지고, 이들의 활동도 비교적 왕성하였다. 당시는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민족담론'이 사회와 정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담론이었다. 민족의 부활과 발전을 위해서든, 아니면 민족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이든 민족단체의 수립은 우후죽순처럼 빙져나갔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러시아연방의 형성이 본격화되면서 민족담론이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민족문제가 소연방, 러시아연방의 핵심 아젠다로 제기된 당시의 민족담론은 러시아민족 대 소수민족의 구도를 떠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러시아민족이 명목민족인 러시아연방 대 소수민족이 명목민족인 민족지역, 즉 중앙 대 지방의 구도를 떠있지만, 연방주의에 기초한 러시아가 재형성되면서 민족담론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계기는 연방조약의 체결, 연방의회 선거 등이었으며, 부랴찌야지역에서도 공화국이 수립--현

법 제정,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되면서 ‘민족답론은 점차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민족단체의 수립이나 활동도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후기: 민족주의 단체의 일시적 부흥>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민족정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춤했던 ‘민족답론’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연방이 ‘민족정책’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랴찌야공화국의 민족정책 수립에 지역의 제 민족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부랴뜨민족 내부에서는 자성과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3-4년 선거를 거치면서 부랴뜨-몽골민족당과 네게넬 등 정치·사회단체들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고 단체의 정치력이 매우 떨어졌기에, 공화국의 민족정책 수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1991년 제 1차 전부랴뜨대회를 거치면서 ‘전부랴뜨문화발전연합’이 결성되었지만, 이 단체는 부랴뜨어 교육과 전통의 복원 등 지극히 문화적인 활동에 경도되어 있었으므로 그 정치적 활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부랴뜨민족 내부에서는 새로운 정치단체를 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차 민족답론의 시대’에 부랴뜨민족단체의 결성은 1996년 3월 25-26일에 개최된 ‘제 2차 전부랴뜨대회’⁴⁵⁾가 계기가 되었다. 1991년 제 1차 대회 후 5년 만에 개최된 ‘전부랴뜨대회’에서는 부랴찌야공화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 네게넬 대표인 하무파예프는 ‘부랴뜨민족회의’(Конгресс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적,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전부랴뜨문화연합은 주권선언에서부터 제기되었던 부랴뜨민족의 사회·정치적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므로, ‘회의’를 창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⁴⁶⁾

45) 제 2차 전부랴뜨대회에는 무표권을 지닌 333명의 대표와 100여명의 사람들이 초청받았다. 제 2차 대회는 부랴뜨민족만이 아니라, 공화국에 거주하는 제 민족대표들도 참석하였다. 부랴찌야, 이르쿠츠크, 치타, 아킨스까예, 우스찌-오르딘스끼와 몽골과 자방자치단체장, 경무기관, 부랴뜨문화센터 대표(모스크바, 레제르부르크, 키예프, 이우츠크, 네룬그리, 캄차트카)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파파로, 유태인, 에벤크, 독일, 고려인 민족문화센터 대표들도 참석하였다.(Правда Бурятия, 1996. 4. 5.)

46) Бурятия, 1996. 3. 28. c.1-2.

<표 5-5> 부랴뜨민족회의 창설에 관한 단체별 입장

찬 성	반 대
부랴뜨민족지식인, 네게델, 부랴뜨-몽골민족당, 이산민족	부랴찌야공화국 행정공무원, 전부랴뜨문화연합, 러시아공산당 부랴찌야 지부, 2개 주(이르쿠츠크, 치타), 2개 자치구

네게델의 ‘부랴뜨민족회의’ 창설 제안에 대해 대회에 참석한 대표들간에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주로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부랴뜨민족은 반대한 반면, 민족지식인들 중 일부는 찬성하였다.

‘회의’ 창설에 대해 찬성한 사람들은 주로 부랴뜨 민족단체와 민족지식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정치영역에서도 부랴뜨민족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새로운 민족단체를 설립하기를 희망하였다. 그간 민족문화단체, 지역별 향우회 등은 민족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원인을 민간단체가 민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전통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에서 찾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민족단체가 악화되면서 정부에 이를 강제할 주체들이 없으므로 ‘부랴뜨민족회의’는 반드시 창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문화, 언어, 전통의 부활을 위해 전부랴뜨문화연합이 창설되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이 단체를 제외한 어떤 조직도 제대로 민족 과제를 실현하는데 나서고 있지 못하여, 정부기관은 모든 민족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도 바쁘다. 전부랴뜨문화연합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문화적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정치영역에서 원주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조직은 하나도 없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부조작에 대한 견해와 삶의 원칙이 있는데, 신진적인 민족정책 실행 속에 이러한 것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부랴뜨몽골민족당이나 네게델같은 민족운동단체같은 민족정치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 단체들은 대중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들은 극단적으로 급진적인 시각에 기초하였고, 부랴찌야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영향력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결국 이 단체들은 부랴뜨민족의 이해를 대변자가 되지 못했다.⁴⁷⁾

‘회의’ 창설에 반대한 사람들은 주로 정부기관과 문화단체 및 인근 지역의 대표들이었다. 이들은 1980년대 말부터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공화국을 훔쳤었던 민족 문제가 공화국 수립 등을 거치면서 어렵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민족단체의 결성으로 민족갈등의 재발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제 2차 전부랴뜨대회에서는 ‘부랴뜨민족회의’ 설립이나 1차 대회 후에 만들어진 ‘전부랴뜨문화발전연합’을 좀더 정치적이고 개혁적인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도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지 약 3개월이 지나서 ‘회의’ 결성을 주도했던 몇몇 대표들이 다시 모여 ‘부랴뜨민족회의’를 결성하였다. ‘회의’는 부랴찌야공화국을 비롯한 러시아연방의 5개 구성주체⁴⁸⁾와 중국, 몽골에 사는 부랴뜨민족단체가 참여하였다. 민족의 이해를 보호하고, 공화국의 민족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족간 화애와 민족관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회의’는 기존에 존재했던 민족단체와 달리 각 지역⁴⁹⁾에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29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회의’는 1991년에 창립한 민족문화단체 ‘전부랴뜨문화발전연합’의 목적과 유사함과 동시에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연합’이 문화, 전통, 언어 교육에 치중했다면, ‘회의’는 좀더 정치적이었다.

② 민족문화단체

최초의 민족정치조직인 부랴뜨-몽골민족당이 창당하고, 급진적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민족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사람들은 이와 다른 성격의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측면에서 민족문제에 접근하기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부랴뜨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부랴뜨문화의 부활을 위한 ‘(도시)부랴뜨문화센터’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전민족적, 전지역적 차원에서 조직을 결성하려고 했지만, 공화국의 권력구조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도시조직의 형태로 전환하였다.⁵⁰⁾

47) Бурятия. 1996. 2. 9.

48) 다섯 개 구성주체는 부랴찌야공화국을 포함해 이르쿠츠크주, 카타주, 우스찌-오르ды스끼 자치구, 아긴스끼예자치구이다.

49)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끼원가, 무호르시비르군과 윤·한우데시의 소비에트군에서 지부가 결성되었다.

50) Пронинов Н. Т. 2001. С.199.

그러나 실제로 부랴뜨문화센터의 활동은 거의 없었으므로 부랴뜨 예술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에만 한정되지 않는 사회단체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부랴뜨민족문화의 쇠퇴는 단지 민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족문화의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며, 부랴뜨문화와 전통이 러시아의 그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부랴뜨문화의 쇠퇴는 소비에트시기의 민족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인식 하에 부랴뜨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부랴뜨-몽골민족당처럼 민족간등을 유발할 여지가 다분한 민족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진적 민족정당인 '부랴뜨-몽골민족당'에 비해 민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칠천 인기가 있었다. 부랴뜨지식인들이 새로운 민족사회단체, 민족문화단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때마침 1991년 '전부랴뜨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회 후에 부랴뜨민족의 통합과 정신부활을 위해 '전연방부랴뜨문화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연합'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부랴찌야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연방 지역의 다른 도시에서 생겨난 문화센터들의 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그 중심은 울란우데에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연방 차원의 연합으로 공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 연방공화국에 문화센터 또는 향우회 등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끼예프 문화센터만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연합'은 명칭에서 '전연방'을 삭제하고, '전부랴뜨문화발전연합'으로 변경하였다.⁵¹⁾

[2] 러시아민족단체

1980년대 말부터 부랴찌야지역에서의 민족단체 결성은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민족의 정치화, 정치의 민족화 과정은 탈소비에트화 과정에 있는 모든 민족의 보편적 과정이었으며, 또한 모든 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러시아민족의 정치화, 민족화 과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랴뜨민족이 정당, 사회·문화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족을 조직화, 정치화한 것처럼, 러시아민족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자신들을 규합하였다. 1980년대 중반 러시아사회에서 민족이 정치·사회·문화의 주체이자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부랴찌야의

51)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4. 18. С.3.

러시아민족도 자신들을 ‘민족’으로서 사회와 역사에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88년 지역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민족의 정치·사회단체가 결성되어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초기 러시아민족단체는 모든 러시아민족을 대상으로 중앙차원에서 조직적, 대규모적으로 결성되지 않았다. 계층적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결성되었다가 이후 통합의 과정을 겪었다. 가장 먼저 결성된 단체는 1988년 종교적 색채를 띤 정교애국회 ‘구원’(Спасение, rescue)이었다. ‘구원’은 우랄·시베리아 애국 단체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정교애국회는 1992년 1월 28일 부랴찌야공화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 이 단체는 1990년대 들어 러시아연방에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면서 민족종교인 정교부활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었다. 이들은 1930년대 폐쇄된 사원을 복구하고, 러시아민족이 남긴 문화역사의 기념물을 복원하고, 그 곳에 박물관과 기념물을 전시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였다. 정교애국회는 종교에 기반하여 러시아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고자 하였다.

뒤이어 러시아제국 당시 시베리아 개척에 앞장을 섰던 까자크족의 후예들이 ‘바이칼동부 까자크 기병’(Забайкальское казачье войско) 울란우데 지부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앞서 결성된 ‘구원’보다 민족적 색채가 보다 강하였는데, 심지어 단체 결성을 주도한 유리 까시야노프(Юрий Касьянов)는 자신이 유대인 혈오자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서 먼저 지부를 결성하고, 뒤이어 남부지역으로 점차 확산하여 노보-끼쥔가(Ново-Кицинга), 캐흐탸(Кяхта), 비추라(Бичура)에도 지부가 결성되었다. 까자크 선조들이 부랴찌야지역에 진출하고 점령했던 그 길 그 과정을 따라, 350여년이 지나서 후손들이 다시 까자크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복원·계승하였다.

개별적, 고립적으로 결성되었던 러시아민족 단체들은 1990년 말을 기점으로 점차 통합되고 조직화되었다. 1990년은 소연방지역뿐만 아니라,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민족담론이 정점에 달한 시점이었다. 소연방공화국의 문리·주권선언과 러시아연방의 민족지역에서 주권선언이 봇물을 이뤘던 때였다. 그 해 10월 8일에는 부랴찌야공화국도 주권선언을 하였기에, 민족문제는 침례한 정치·사회문제가 된 시점이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은 발틱 3국, 우크라이나 등 소연방공화국의 독립·주권선언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주권선언에 대한 러시아민족의 우려는 그리 작지 않았다. 주권선언 당시 공화국 최고회의에는 러시아민족이 다수였고, 부랴찌야 전체 인구에서도 러시아민족이 70%를 차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소연방·러시아연방 전역의 ‘민족반통’의 문위기와 주권선언의 기본원리로 인식된 ‘민족자결’로 인해 러시아민족은 하루아침에 부랴찌야공화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다. 남의 잠에 셋방살이하는 처지가 된 것처럼 보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족관계는 원만하였고, 러시아민족이라고 해서 정치·경제적 기회가 제약되거나 권리가 침해당한 적도 없었지만, —그보다 러시아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가 제약된 경우는 있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은 지역에서 러시아민족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위기감은 개별적, 고립적으로 존립하던 러시아민족단체간의 통합을 이끌어 냈다. 부랴찌야지역의 ‘민족지역화’, 부랴뜨민족의 정치화, 민족정치과정의 첨예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러시아민족간의 연대와 정치세력화가 요구되었다. 1991년 11월 30일 ‘구원’, 베르흐네우진스크 까자크 지부(Вехнеудинский казакий о круг), 비추라 구교도 공동체(Бичурская старообрядческая община), 기업체인 부랴뜨·지진학(Бурят-геология)의 주도집단이 참여하여 ‘바이칼동부 러시아민족연합’(ЗС РН, Забайкальский Союз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을 결성하였다.⁵²⁾ 러시아민족의 권리와 이해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러시아민족연합’은 비러시아민족이 명목민족, 원주민들에게만 민족문화자치를 보장하는 ‘민족지역의 철폐’를 요구하였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바이칼지역에서 카자크부대의 제전을 주장하였다. 원주민, 명목민족에게 주어지는 차별적 특권을 폐지함과 동시에 러시아민족의 힘을 강화할 방도를 모색한 것이었다. ‘연합’은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발생한 비러시아민족의 민족부활, 민족주의적 경향에 맞서 러시아민족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우랄·시베리아 애국 단체연합에 참여하였으며, 러시아제민족회의(Российский общенародный собрание), 러시아민족 사원(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собор)과 협력하였다.⁵³⁾ 러시아민족의 조직화, 특히 ‘연합’이 민병대의 창설까지 주장함으로써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민족담론의 확산, 민족의식의 성장은 지역에서 ‘러시아민족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구교도, 까자크 등 하위 민족정체성(sub-national identity)을 추구하던 러시아민족 내 소집단(sub-group)들은 ‘부랴뜨민족’, ‘부랴뜨민족주의’에 맞선 단일한 대항세력으로 자신들을 정립하였다. 부랴찌야지역의 민족정치과정은 서로 다른 아주

52)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2. 4. 23. c.3.

53) Елаев А. А. 2000. с.272.

의 역사와 경험을 지닌 러시아민족 소집단은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케 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 러시아민족의 조직화는 세부민족(sub-nation)으로 분화되던 러시아민족을 단일한 민족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러시아민족의 분화는 소비에트시기의 민족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러시아민족들은 소비에트시기의 '소비에트국민·민족화'는 '러시아화'였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민족은 자신들도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희생자라 생각하였다. 그들은 '국제주의'로 인해 러시아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개승·발전시키지 못하였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민족사상과 정신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민족의 부활 과정은 전체 러시아민족으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교도, 까자크 등으로 자신을 인식하였다. 자신의 민족성, 민족정책성이 부랴껴야로 이주한 조상들의 정체성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하위민족으로 분화되던 러시아민족은 1990년 주권선언을 거치면서 하나의 단일한 민족으로 정립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이칼동부 러시아민족연합'으로 나타났다.

둘째, 러시아민족의 조직화는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타민족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자 방어적인 조직화였다. 러시아민족은 전연방과 지역에서 민족담론과 민족주의가 확산되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민족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민족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부랴뜨민족이 전환기 체제재편 과정에서 '민족을 무기'로 사용하였다면, 러시아민족은 이러한 부랴뜨민족에 맞서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민족을 사용하였다.

러시아민족단체의 형성이 구 소연방을 휩쓴 민족의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부랴뜨민족단체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결집, 민족단체 결성은 지역에서 민족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었다. 1991년 창립 당시 '러시아민족연합'의 회원수는 109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러시아민족 구성원들조차 러시아민족의 '정치적 결집'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민족발전과 통합 모색

1) 민족지역의 통합

민족의식의 성장과 민족쇠퇴에 대한 위기의식은 부랴뜨민족 발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원주민인 부랴뜨민족이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더 이상 민족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소비에트·사회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족문화와 전통이 단절되어 민족적 생활양식은 거의 사라졌고, 민족성과 민족의식을 반영하는 핵심인 만족어 구사자도 줄어들어 민족쇠퇴와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은 날로 높아졌다. 특히 도시지역과 젊은 세대의 만족어 구사율이 다른 지역과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므로 민족발전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족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선결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부랴뜨 민족지역의 통합문제였다. 민족은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발전하며, 영토를 상실한 민족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족의 삭별은 혈통과 언어 등의 민족적 특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영토적 범위를 경계로 삭별하기도 한다. 그만큼 민족과 영토의 문제는 떨리야 떨 수 없는 범주이다. 지구상에서 영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유일하게 존재했던 민족이 유대인이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수립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도 바로 민족의 유지와 생존에서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민족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이 민족지역의 통합문제였다. 1922년 내전으로 일시적으로 부랴뜨민족은 행정구역상으로 러시아공화국과 극동공화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17세기 중엽 부랴찌야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된 이래 부랴뜨민족은 단일한 영토 하에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1923년 두 개 공화국으로 나뉘어져 있던 부랴뜨민족은 민족정치조직인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민족발전을 이를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1937년 위헌적인 조치로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부랴뜨민족지역은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됨으로써 민족발전에 지장이 되었다. 부랴뜨민족은 민족발전을 위해 이러한 왜곡과 굴절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민족지역 통합을

모색하게 되었다.

[1] 1937년 이전 영토회복

1937년에 단행된 위헌적 행정구역 개편은 부랴뜨민족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바였으므로, 민족부활의 시대에 민족발전을 위해 분리된 민족지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민족지역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부랴찌야지역에서도 개혁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페레스트로이카 협력 국민전선’이 결성되었다. ‘국민전선’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을 위한 지역조직이자 바이칼호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운동단체로 결성되었지만,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던 일부 세력 중에는 민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집단도 있었다. 이들은 국민전선 내 급진적인 문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민족적으로는 대부분 부랴뜨민족이었다. 이들은 소연방 구성공화국에서 민족주의의 열기가 높아지고, 개혁정책으로 연방공화국문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부랴찌야공화국을 자치공화국에서 연방공화국으로 높일 것을 제기하였다. 1988년은 소연방을 훔쓸었던 주권화의 열풍이 아직 본격적으로 불기 전이었다. 개혁정책에 편승하여 지역의 지위 상승과 권한 확대 등을 꾀한 것이었다. 지역의 문제와 함께 고려된 것이 민족의 문제였으며, 민족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1937년에 분리된 영토를 다시 부랴찌야공화국으로 원상회복한 것을 주장하였다.

비록 1988년 ‘국민전선’에서 민족지역통합에 대한 주장이 가장 먼저 제기되었지만,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1989년 부랴뜨민족지식인들에 의해서였다. 1989년 우르바나예바(Урбанаева М.)를 비롯해 4명의 민족지식인들은 ‘부랴찌야에서의 민족문제’를 발표하고, 분리된 세 개 부랴뜨민족지역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민족지역통합 주장은 행정구역개편으로 민족이 분리되고, 각각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에서 독자적인 민족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부랴뜨민족문화는 단절되고 왜곡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60여년의 단절의 시간을 겪었고, 더 이상 지체되면 부랴뜨민족의 통합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전선과 몇몇 민족지식인들의 민족지역 통합에 대한 주장은 부랴찌야지역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 소연방 당국에 공식적인 제기를 한 집단도 있었다. 1990년 8월 부랴찌야 공화국의 사회활동가와 베테랑(전쟁과 노동 영웅) 등 원로 58인은 소연방 최고회의 민족회의⁵⁴⁾ 의장인 니샤노프(Р.Н. Нижанов)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들은 서한에서 1937년에 위헌적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을 무효화하고, 예전의 경계로 공화국을 재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이 보낸 서한의 일부분을 보면, 1937년의 행정구역개편의 본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별몽골주의’의 경제적·지역적 기반을 제거한다는 명분 하에 진행된 영토분할, 특히 초현법칙이고 전횡적인 기괴한 조치의 시행은 민족분열의 공식적인 원인이 되었다.⁵⁵⁾

이들 사회원로들이 소연방 당국에 보낸 서한은 부랴찌야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서 부랴찌야공화국뿐만 아니라, 두 개 자치구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⁵⁶⁾

이제 부랴뜨 민족지역의 통합문제는 민족자식인과 민족운동세력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영토통합의 문제는 부랴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제기하는 문제가 되었다. 자신이 부랴뜨민족의 엘리트이고 지식인이라면, ‘민족부활의 시대’에 당연히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민족문제 해결이 그 목적이던지, 아니면 ‘민족을 정치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던지, 그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1980년대 말 이후에 수립되는 부랴뜨민족의 사회·정치단체는 민족통합과 민족지역통합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부랴찌야지역의 최초의 민족정당인 부랴뜨-몽골민족당(BMPT)은 부랴뜨민족의 부활을 주요 목표로 창설된 정당으로 민족지역의 통합을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1937년의 행정구역개편이 당시 공화국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진행된 위헌적 조치였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과거회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1937년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의 불법성은, 민족지역통합 주장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차원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칼 인근지역은 러시아연방의 타지역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부활이나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54)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55)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8, 24.

56) Елаев, А. А., 2000. С.266.

것이었다. 통합된 바이칼 인근지역은 단순히 러시아연방의 행정구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행정·입법·사법권을 지니는 독자적인 정부단위로서 러시아연방과는 조약체결을 통해 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단순히 민족지역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넘어, 부랴뜨민족과 바이칼 지역의 역사적 근원·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1년 8월 부랴뜨-몽골민족당이 러시아민주당(DPR) 부랴찌야지부와 함께 발표한 ‘부랴뜨민족문제에 대한 공동선언⁵⁷⁾에서 잘 드러난다.

1937년 행해진 부랴뜨-몽olian 자치공화국의 영토분할은 공화국의 영토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성을 파괴하였다. 양당은 공화국의 영토적 통일성 회복에 동의한다. 이것은 공화국의 주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단일한 생태·경제지구로서의 바이칼 지역의 형성과 관련된다.

양당은 부랴찌야의 분리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러시아연방과 체결하도록 정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문화적·경제적 연계를 회복할 것이며, 조약에는 지역발전과 공화국의 재판권 회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부랴뜨민족의 성지인 알흔군의 발전계획이 포함된다.⁵⁸⁾

제 정당과 단체 및 민족지식인들의 민족지역 통합에 대한 주장과 노력은 ‘전부랴뜨대회’(Всебурятский съезд)로 이어졌다. 1991년 2월 22일에서 24일까지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 올란우데에서 개최된 제 1차 전부랴뜨대회는 ‘민족통합과 정신부활’을 주제로 하였다. 1937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삼실된 민족간 내부적, 혈연적 연계를 복원하고, 민족의 근원과 전통, 민족문화를 부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바이칼 주변에 있는 민족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민족부활은 소연방 내 민족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 민족지역에서 촉발된 민족부활과 정온 민족지역을 떠나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산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부랴뜨대회는 세 개의 부랴뜨민족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쌍뜨-뻬쩨르부르크, 사하-이꾸찌야 등과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등 소연방 각지의 부랴뜨민족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심지어는 중국의 내몽

57) 공동선언은 총 8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부랴찌야공화국의 영토 통합의 문제는 그 중 두 번째 항목이다. 8개 항은 민족정책, 시민권, 공화국 원주민, 부랴찌야대통령 자직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8) Бурятия, 1991. 8. 31. c.2.

고지역에 거주하는 부랴뜨민족도 참여하였다.

1991년 2월 22일 사간 축제인(부랴뜨민족의 음력설-필자 주)에 맞춰 민족통합과 정신부활을 위한 제 1차 전부랴뜨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소연방의 부랴뜨 대표들과 우스찌-오르딘스끼, 아긴스끼에 부랴뜨 자치구, 이르쿠츠크주, 치타주의 대표들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알마타, 비슈캐크, 스베르들로프스, 파릴 및 러시아연방의 다른 도시들의 부랴뜨문화센터, 몽골, 중국 내몽고자치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대회에는 592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Елаев А. А. 2000:274)

대회에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부랴뜨민족이 참가하였지만, ‘민족통합과 민족정신 부활’에 대한 생각은 그 차이를 뛰어넘었다. 대회에 참가한 약 600여 명의 대표자들과 120여명의 방문객들은 3일간의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랴뜨민족의 통합과 정신부활을 위해 ‘전연방부랴뜨문화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부랴뜨민족의 높은 관심과 참여, 부랴뜨민족과 민족문화의 상황의 열악함에 대한 의견일치 빛 ‘문화연합’ 같은 조직적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제 1차 전부랴뜨대회는 민족지역통합의 문제에 관해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회를 준비, 조직한 주체의 문제와 관련되었다. 1차 대회는 소련공산당 주위원회의 주도로 준비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았고,⁵⁹⁾ 약 5개월 전 주권선언 당시에 언급되었던 민족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제 1차 전부랴뜨대회 후 약 1년 반이 지난 뒤, 또 하나의 ‘전부랴뜨대회’(общебурятский хурал)⁶⁰⁾가 개최되었다. 1992년 11월 17-18일 이틀간 울란우데에서 부랴뜨-몽골민족당과 민족운동단체인 네게델이 대회를 조직하였다. 1991년 개최된 ‘전부랴뜨대회’ 이후에 부랴뜨민족대회의 소집의 권한은 ‘전부랴뜨문화발전연합’⁶¹⁾(ВАРК)에게 있었다. 그러나, 단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연방부랴뜨문화연합’은 소연방차원에 흩어져 있는 부랴뜨민족문화단체의 통합적인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고,

59) Елаев А. А. 2000. С.273-274.

60) 1992년 개최된 ‘전부랴뜨대회’는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는 1991년 대회와 동일하지만, 러시아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1991년 대회는 ‘Всебурятский съезд’이지만, 1992년 대회는 ‘Общебурятский хурал’이다. ‘대회’라는 명칭도 러시아어 ‘съезд’(스에스뜨, congress)를 사용하지 않고, 부랴뜨·몽골민족어인 ‘хурал’(후랄)을 사용하였다. 두 대회는 대회명칭 뿐만 아니라, 주최측과 참여대상이 서로 달랐다.

61) 1991년 ‘전부랴뜨대회’ 후에 부랴뜨민족의 문화발전을 위한 단체로 ‘전연방문화발전연합’을 결성하였지만, 곧이어 단체명을 ‘전부랴뜨문화발전연합’으로 변경하였다.

그 활동내용도 민족문화와 전통, 언어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부랴찌야지역에서 고조되었던 민족지역의 통합문제에는 소홀하거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부랴뜨민족주의 세력 중 일부가 다시 ‘전부랴뜨대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대회를 주최한 단체의 성격에서 드러나듯이, 의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⁶²⁾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부랴뜨민족지역 통합에 관한 것이었다. 대회를 조직한 두 단체, 부랴뜨-몽골민족당과 네게텔은 급진적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당시 부랴뜨민족 내부에서도 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였지만, 아들이 ‘전부랴뜨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은 지식인, 정부지도자, 노동단체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⁶³⁾ 아는 부랴뜨민족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지역사회에서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족지역의 통합 문제는 러시아연방 차원의 정치에 영향을 받아 지역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80년대 후반부터 소연방을 휩쓴 민족문제는 소수민족, 억압민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러시아연방 차원에서도 1990년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어 1992년 4월 26일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네 가지 기준⁶⁴⁾으로 제시된 이 법에는 민족 또는 민족영토조직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그 중 첫 번째 조항이 민족영토에 관한 것으로 민족정부조직의 철폐나 불법적인 민족영토의 경계 변화에 해당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부랴찌야지역은 법, 제도상으로는 1937년 이전의 단일한 민족영토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 계기로 부랴뜨의 몇몇 민족사회단체들과 인텔리들은 1937년 영토분리의 불법성과 부랴뜨민족이 억압민족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더욱 강화하였다. 지역

62) 전부랴뜨대회의 의제는 ‘공화국의 구 지명 복원’, 즉 1958년 이전의 공화국명인 ‘부랴뜨-몽골 공화국’의 회복과 ‘부랴뜨민족지역 통합’, ‘부랴뜨민족의 정치조직 건설’, 그리고 ‘도지사 유화’였다. 1992년은 소연방이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처해 있었으며, 농촌지역인 부랴찌야지역에서 도지사유화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콜호즈, 소프호즈 등 집단농장이 민영화되면서 농촌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극심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63) Бурятия. 1992. 11. 4. С.2.

64)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민족 또는 민족영토조직에 관한 법이다. 첫째, 민족정부조직의 철폐나 불법적인 민족영토의 경계 변화, 둘째, 민족문화, 언어, 전통 등의 경시, 억압, 셧체, 민족관계의 비방, 마지막으로 대량 구금 등에 관한 법이었다.(Ширяевиков Д. И. 1993:91-92)

사회에서의 이러한 압력으로 1992년 부랴찌야공화국 정부도 이 문제를 연방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⁶⁵⁾ 이와 아울러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이 법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부랴찌야지역의 첨예한 문제이자 무랴뜨민족의 바램이었던 민족지역의 통합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부랴찌야지역에서도 1993년 6월 3일에 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에서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억압민족의 문제에 대한 결의(постановление, decree)를 채택하였다. 1937년 위헌적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는 총 9개항으로 된 결의문의 첫 번째를 장식하였다.⁶⁶⁾

법치국가와 민주사회의 건설은 국민에 대한 친왕과 불법적 정치유산의 철폐를 요구 한다. 러시아공화국의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에 기초하고, 부랴찌야공화국의 국민들의 역사적 평등 회복 등을 위해 부랴찌야 공화국의 최고회의는 다음을 결의한다.

1. 1937년 9월 26일의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시베리아주를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로의 분리"에 관한 결의와 특히 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의 6개 군을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에 양도한다는 결정, 1937년 10월 4일의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의 현법에 위배되며, 자치공화국 주민들과 최고권력기구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랴찌야공화국의 영토와 인구의 상당한 순실, 경제적 잠재력의 약화, 무랴뜨민족과 단일민족국가의 붕괴와 부랴뜨민족을 몇 개의 민족국가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부랴찌야공화국의 최고정치기관의 간부회에서 억압민족의 문제, 1937년 부랴찌야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의 위헌성의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것이 곧 부랴찌야공화국이 직접 나서서 세 개 민족지역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의 제정과 결의의 채택은 소비에트시기에 부랴찌야에 거주하는 제 민족들이 억압 받았음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자 역사적 판단의 문제였지, 당시의 억압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보상을 한다던가 이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관한 문제는 부랴찌야지역이 아니라 러시아연방 차원⁶⁷⁾에서 해결해

65) Елаев А. А. 2000. с.287.

66) Бурятия. 1993. 6. 24. с.3

67) 물론 억압민족의 문제는 러시아연방이 문제의 직접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소연방차원의 문제였다. 소비에트시기로 정치적으로 러시아연방은 곧 소연방을 의미하였고, 실제로도 소수 민족의 억압과 관련되는 문제는 소연방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1년 8월

야 할 문제였기에, 부랴찌아공화국은 공화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민족 중에 어떤 민족이 어떻게 억압받았다는 것을 환기하고 선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1992년에 러시아연방에서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과 결의’ 등이 채택되었지만, 1993년 6월 부랴뜨민족지역에서 통일한 결의를 채택할 때까지 러시아연방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진행된 조치는 없었다.⁶⁸⁾ 따라서, 부랴뜨민족지역의 통합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한 집단들은 부랴뜨민족지식인과 정당, 민족단체들에 한정되었다.

(2) 범몽골지역 통합 제기

부랴뜨민족의 부활과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던 민족통합, 민족지역 통합 문제는 바이칼 인근의 부랴뜨 민족지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바이칼 지역의 부랴뜨민족지역, 즉 부랴찌아공화국, 우스짜-오크딘스끼자치구, 아긴스끼자치구와의 통합이나 1937년 이전 영토로의 회복은 민족지역 통합안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러시아연방이나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몽골, 중국의 내동고의 부랴뜨민족 거주지역과의 통합도 민족부활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제기한 집단은 1980년대 말에 결성된 민족문화공동체 ‘제세르’(Гэсэр)였다. 제세르는 러시아공화국 내 모든 부랴뜨민족지역을 통합하여 단일 공화국을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제세르가 이를 주장한 시점인 1980년대 말까지 러시아연방의 지역에서 주권선언이나 분리독립의 문제가 가지화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다만 소연방공화국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팽배하고 발티 3국을 중심으로 소연방체제의 문제, 주권·독립선언이 본격적으로 모색되던 시기였다. 러시아연방의 주권선언이 1990년 6월이고, 부랴찌아공화국이 1990년 10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제세르의 주장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다. 부랴뜨민족지역의 통합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바로세우기’ 측면도 지니고 있었지만, 통합된 민족지역은 단일공화국으로 건설하자는 것은 단순한 지역통합, 행정구역개편의 의미를 넘어 부랴뜨민족의 ‘민족국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들

구테타 실페와 엘친이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해가면서 소연방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능력을 상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68) Чиренпилов д.д., 1993, с.92.

은 통합민족지역과 러시아연방, 소연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분리주의적 경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였다.

1992년 부랴뜨-몽골민족당의 일부 세력들이 결성한 민족단체 '네게델'은 분리주의적 경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네게델은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하여 몽골어권 민족들의 '중앙아시아 연방'을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중앙아시아 연방'은 부랴찌야공화국과 몽골은 물론, 부랴찌야공화국의 서쪽에 위치하는 투바공화국과 카스피해 서안에 있는 칼피끼야공화국, 그리고 중국 내몽고의 두 개 자치기를 포함하였다.⁶⁹⁾ 네게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연방과는 독립적인 몽골-부랴뜨민족의 독립국가를 수립하자는 주장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졌다. 1996년 제 2차 전부랴뜨대회 후에 결성된 '부랴뜨민족회의'도 몽골과 중국 내몽고의 자치기를 포함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은 소비에트사기를 거치면서 부랴뜨민족이 쇠퇴하였고, 민족이 부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랴뜨민족지역의 통합이 결실하다는 점에서는 다른 민족단체들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범몽골지역 통합'의 저변에는 '1937년 이전 영토회복'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이는 단순히 '민족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인가'라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차이점이 아니었다.

첫째, 러시아연방, 러시아민족과의 관계에서 부랴찌야공화국, 부랴뜨민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1937년 이전 영토회복'이 소비에트시기 중앙에 의해 임의적으로 단행된 왜곡된 역사를 지역에서 바로잡는 수준이었다면, '범몽골지역 통합'은 러시아연방, 러시아민족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억압과 왜곡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전자가 러시아민족과 함께 러시아연방 국민을 형성하는 민족으로서 부랴뜨민족을 사고하였다면, 후자는 러시아민족의 대립향으로서 부랴뜨민족을 사고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민족지역 통합문제가 민족부활,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선언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 10월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 후 연방조약의 체결과 부랴찌야공화국 수립(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전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연방과의 관계 문제와 맞물려 제기된 것이었다. 즉, 민족지역의 경계(boundary)설정 문제가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다.

69) Блаев А. А. 2000. С.271.

둘째, 민족성,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 '1937년 이전 영토회복'과 '범몽골지역 통합'은 공히 부랴뜨민족은 몽골족과 문화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37년 이전 영토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랴뜨민족을 몽골족과 구별되는 '부랴뜨-몽골'로 인식하였다면, '범몽골지역 통합'은 몽골어 부족으로서 부랴뜨민족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민족부활은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근원을 찾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총체적이고 완전한 민족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민족들의 민족국가가 아니라 전민족의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범몽골지역 통합'은 극단적 민족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으므로 부랴찌야지역 내부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었지만, 러시아연방에서의 탈퇴와 러시아의 연방체제·영토문제를 근본적으로 혼들고 부정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기된다면, 연방중앙과의 갈등도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것이었다. 부랴찌야지역의 한 학술단체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부랴찌야 주민들 중 단자 13%만이 '공화국의 지위 변화'를 동반하는 '몽골과의 통합'이 부랴찌야지역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⁷⁰⁾

(3) 민족지역 통합에 대한 두 자치구의 견해

부랴찌야공화국에서 제기된 민족지역 통합의 당사자인 우스짜-오르딘스끼와 아긴스끼에 부랴뜨 자치구의 부랴뜨주민들과 자도총들은 이에 대해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 전환기 러시아연방에서 발생한 계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통합으로 인한 정치력의 증가는 중앙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연방체제의 재편기에 각 지역들은 지위상승을 꾀하거나 인근지역과의 경제협력체 결성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정치, 경제적 권한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연방에서 동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하는 통로에 위치한 세 개 부랴뜨민족지역의 통합은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강력한 정치적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합 문제에 대해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민족지역의 통합이라는 것이 당장에 가시화된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상황으로 면 훗날이나 가능한 문제

7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4. 3. 9.

라고 생각했기에 당장에 반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지역이 통합문제에 대해 똑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통합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르쿠츠크주에 속해 있는 우스찌-오르딘스끼 자치구였다. 1990년대 초 우스찌-오르딘스끼 자치구는 아긴스까에 자치구에 비해 민족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이들은 부랴찌야공화국에서 전개되는 민족부활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비록 자치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급진적 민족단체인 네게델과 부랴뜨-몽골민족당이 주최한 1992년의 ‘전부랴뜨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지역 통합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기⁷¹⁾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고, 자치구 정부도 이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였다. 이에 반해 아긴스까에 자치구는 이러한 논의에서 어느 정도 벗겨나 있었으며, 우스찌-오르딘스끼 자치구에 비해 부랴찌야공화국의 민족주의 세력들의 관심을 받지도 못하였다. 아긴스까에 자치구는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에 비해 규모도 작았으며,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경제력도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가 통합에 찬성하게 된다면, 아긴스까에 자치구는 자연스럽게 동참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한때 민족지역통합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많았고, 이에 대한 주민투표까지 고려했던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도 1992년을 기점⁷²⁾으로 점차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들에게 민족지역의 통합은 전환기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민족부활·민족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안 중의 단 하나일 뿐이었지,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거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민족지역통합은 지역에 궁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복잡한 손익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지역 통합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 변화는 무엇보다도 연방체제에서 자치구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다. 1992년 3월 31일 러시아연방 중앙과 연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치구는 독립적인 구성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변강주, 주에 속해 있으

71) Абаев Т. Н. 2003. С.21.

72) 1991년 10월 러시아공화국이 “우스찌-오르딘스끼부랴뜨자치구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면서부터 이러한 경향이 조금씩 나타났다. 이 법에 의해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는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로서 독자적인 민족영토 자치조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Елаев А. А. 2000:269)

면서 소수민족의 부분적 자치 — 주로 문화분야에 한정되며, 소비에트 시기에는 정치적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 — 만 보장되었던 위상에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독립적 연방구성주체가 된 것이다. 연방구성주체로의 지위상승은 민족지역 통합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끔 하였다. 이전에는 이르쿠츠크주에 속할 것인지 부랴찌야공화국에 속할지를 선택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독립적 주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이전에는 통합문제를 매개로 이르쿠츠크주나 부랴찌야공화국과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연방조약 체결 후에는 이제 중앙파도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민족지역의 주권선언과 채권의 독립선언 등으로 러시아연방의 영토 통합성 유지를 무엇보다 우선과제로 하고 있던 중앙으로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공학적 계산 속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지위상승'이라는 선물을 중앙으로부터 받은 상황에서 연방중앙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민족지역통합을 뇌함으로써 중앙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었다. 이는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러시아연방의 많은 민족자치구가 직면한 문제였던 빈약한 경제력은 중앙에 발목 잡힌 쪽쇄와도 같았다. 중앙의 교부금 없이는 지역예산을 수령할 수가 없었기에 중앙파의 마찰은 상당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이렇듯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의 민족지역통합에 대한 변화된 사고는 1993년 1월 우스찌-오르딘스끼 자치구 지사와 부랴찌야공화국의 신문 '부랴찌야'와의 인터뷰⁷³⁾에서 잘 드러난다.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에서는 (민족지역 통합이 논의된-필자주) '전부 라뜨대회'에 15인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공식대표로 선출한 적이 없으며, 누구도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단지 두 명이며, 그 중 한 명은 주소비에트 인민센터 소속원이다. 오늘날 영토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주민들은 동요하고 있으며, 일부는 나에게 "정말 우리는 통합하느냐?"라고 물기까지 한다. 다만 민족문화, 전통, 관습 등의 부활은 긍정적이

73) 인터뷰는 1993년 1월 아기스까예자치구 지사 씨다쉬예프(Гуро-Дарма Чедамнев)와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 지사 바蹋가예프(А. Н. Батагаев), 그리고 이르쿠츠크주 민족관계국 부국장 마글라예프(А. А. Маглеев)가 바이칼 인근지역의 문제-주로 경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울란우데를 방문하였을 때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한다.(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 행정장 바파가에프, A. N. Батагаев)⁷⁴⁾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가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은 취한 것은 지역의 경제·산업구조와도 연관된다. 소비에트시절 이미 50여년 동안 이르쿠츠크주 산하에 존재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르쿠츠크주와 밀접한 연계망이 형성된 반면에 부랴찌야공화국과는 민족적 동질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 전형적인 농촌자치인 자치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주요 시장이 이르쿠츠크주였으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산품 등 생필품의 주요 공급지가 이르쿠츠크주이기도 하였다. 자치구는 부랴찌야공화국과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보완적인⁷⁵⁾ 산업구조·연계망을 훼손시키길 원하지 않았다.

민족지역 통합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민족지역 통합의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던 이르쿠츠크주도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민족지역 통합은 러시아연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첨예한 문제인 민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

자치구가 연방구성주체가 된 후에 영토통합의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관용적 민족관계를 유지할 때이다. 이르쿠츠크주의 부랴뜨민족에게 영토통합과 관련해서 '전부랴뜨'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르쿠츠크주 민족관계국 부국장 마글리예프(A. A. Маглеев)⁷⁶⁾

민족지역 통합에 관한 아긴스까예자치구의 상황도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에 비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차에, 연방조약 체결을 통한 자치구의 지위상승은 통합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다. 아긴스까예자치구의 통합에 대한 태도는 지사의 냉소적인 생각에서 엿볼 수 있다.

74) Бурятия. 1993. 1. 14. с.1.

75) 물론 지역의 일부 지식인들은 농산품과 공산품간의 불평등한 거래로 자치구는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르쿠츠크주보다 농업이 발전한 부랴찌야공화국과 통합하는 것이 자치구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6) Бурятия. 1993. 1. 14. с.1.

우리 아긴스까에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당도 정치단체도 없다.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민족지역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제안받았던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접해보질 못했다. 지금 부랴찌야공화국의 민족운동단체에서 통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단체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가 할가할부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결무되고 우리와 통합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공식적으로 제기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숙고해 볼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민족주의단체인 '네게델'이 민족지역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는 이제야 우리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연방구성주체가 되었음을 의미 함-필자 주),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연방구성주체이며, 주(치타주-필자 주)와는 (구 소비에트시절의 종속관계가 아니라-필자 주) 조약관계를 맺고 있다.(아긴스까에 자치구 지사 쩐다쉬예프, Гуро-Дарма Чедаминев)⁷⁷⁾

이들 두 개 부랴뜨민족 자치구의 지사들은 민족지역의 정치적 통합은 명백히 반대하였지만, 민족지역간의 경제교류나 민족어, 전통 등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아긴스까에자치구 지사는 울란우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원활으로 울란우데에 자치구의 대표부를 설립하기를 희망하였다.

(4) 민족지역 통합 실패

민족지역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부랴찌야지역이었지만,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937년 이전 영토 회복'의 문제는 '억압민족의 명예회복'에 관련된 문제로 정치·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지닌 문제였고 마땅히 명예회복 되어야 한 문제였지만, 당장의 통합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거나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통합은 역사적 정당성의 문제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물론 지역에서 통합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거나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부랴뜨민족단체와 지식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것은 전환기에 불물처럼 쏟아져 나온 수많은 문제 중의 단지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또한, 러시아연방에서 '억압민족의 명

77) Бурятия. 1993. 1. 14. C.1.

예회복에 관한 법과 결의'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민족지역간 통합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민족지역 통합은 역사적, 정치적 당위의 문제이기에 앞서 현실의 문제였다. 과거 왜곡된 역사의 교정, 민족지역의 통합이 전환기 어려운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의 문제였다. 혹, 안그래도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통합문제에 대한 여론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 민족지역의 통합은 부랴찌야공화국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당사자인 두 개 부랴뜨자치구는 물론 이거니와 러시아연방 중앙과도 관련된 문제였다.⁷⁸⁾ 연방 중앙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행정구역변화를 처리하는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민족지역간 통합을 반대하였다.⁷⁹⁾ 부랴찌야 주민들이 민족지역 통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게다가 부랴뜨민족지역의 통합은 부랴찌야에 거주하는 바부랴뜨민족과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역사회의 여론이 어떻든 부랴찌야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부랴뜨민족지식인들이 나섰고, 사회·정치 단체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행정당국도 이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부랴찌야 정부는 민족지역 통합문제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1937년 행정구역 개편이 공화국 헌법에 위배되고, 공화국 최고 의사결정기관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게세르, 네게델 등이 제기한 모든 부랴뜨민족 거주지역의 통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였다. 이는 범동군 주의에 기반한 분리주의적 주장으로 다민족사회인 부랴찌야에 거주하는 제 민족들의 통합에 해가 되고, 러시아연방 중앙과도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

78) 부랴뜨민족지역의 문제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랄지역에 있는 토미공화국, 토미-페름 자치구, 페름주도 유사한 민족들이 서로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존재한다.

79) 러시아연방에서도 엘친의 측근이나 러시아자유민주당은 민족원리에 기반한 행정구역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연방 동양에서 활동하는 일부 세력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부랴찌야지역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채첸도 아니고, 딱마르스탄도 아니며, 중앙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랴찌야지역으로서는 연방중앙의 의사에 만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분리주의적 경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93년 6월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의 결의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반대하였다. 채택된 결의문의 3장에는 당시 부랴뜨민족단체들이 주장한 범봉골민족의 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소비에트시절의 범봉골주의, 반소비에트적 경향을 비난함으로써 부랴찌야공화국 정부 당국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소비에트시절-원자주) 부랴뜨민족 중 일부 집단들의 소연방으로부터 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을 분리하기 위한 범몽골주의적, 반소비에트적 경향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⁸⁰⁾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지역 통합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정부당국의 태도를 보면, 전환기 '민족부활의 시대'에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랴뜨민족 부활과 부랴찌야지역의 발전은 상호 밀접히 관련되었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부랴뜨민족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부랴찌야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랴찌야지역이 발전하면 부랴뜨민족의 통합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충분조건이 아니지만, 후자는 전자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랴찌야는 이미 100여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지역이므로,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의 부활과 통합은 다른 민족에게는 위기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원주민이자 명목민족이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통합되고 규합한다면, '민족담론'이 지배적인 시대에 비명목민족은 남의 집에 셋방살이하는 듯한 불안감에 짜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민족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2) 이산민족의 결집

(1) 이산민족단체 결성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연방의 민족문제가 민족지역을 중심을 발생했다고 해서

80) Бурятия. 1993. 6. 21. с.3.

민족문제가 민족지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민족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이 소연방공화국의 명목민족이라고 해서 민족문제는 명목민족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바야흐로 전 연방이 '민족의 시대'에 치해 있었고 '민족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때, 소연방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어떤 민족이던지 간에 모든 지역과 민족은 '민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민족원리'로 구성된 지역(공화국, 자치주, 자치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영토원리'로 구성된 지역(변강주, 주, 연방시)에서도 '민족변수'는 정치·경제·사회 등 계반 영역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담론 중 하나였다. 민족담론이 전연방을 휩싸고 있었으므로, 일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집단들도 민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신이 속한 민족이 특정지역의 명목민족이라면, 즉, 자신의 민족지역이 러시아연방에서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민족들의 관심은 다른 어떤 민족들 보다 높았다. 자신의 민족과 민족지역이 러시아연방에서 주요 정치주체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⁸¹⁾ 반대로 '민족변수'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적 질서 재편 과정에서 자민족이 배제되거나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민족에게 있어 기회의 상실이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랴뜨민족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민족의식의 고양, 민족 부활과 민족발전에 대한 관심은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민족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989년 현재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부랴뜨민족은 417,425명이다. 그 중 81.7%인 341,185명이 민족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 우스찌-오르딘스끼자치구, 아긴 스까예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쿠츠크주와 치타주에 거주하는 부랴뜨 민족까지 더한다면, 대부분(94.3%)의 민족구성원들이 여전히 민족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랴뜨민족은 소비에트시기 고려인, 체첸인들처럼 대규모 강제이주⁸²⁾를 당하지도 않았기에 민족지역 밖에 거주하는 이산민족이 그리 많지 않다.

비록 민족지역 밖에 거주하는 민족구성원들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이를

81) 실제로 남지역에 비해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파마르스탄, 바슈코르토스탄, 사하-이꾸찌야공화국 등은 정치적 권한뿐만 아니라, 세금·교부금 등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와 특혜를 받았다.

82) 1937년 이후 소연방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민족은 고려인, 체첸인, 독일인을 비롯해 10개민족이다.

이산민족들도 1980년대 말부터 민족부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구 소연방의 대도시에 거주하는데, 가장 규모가 이산민족거주지(diaspora)는 사하-이꾸찌야공화국으로 약 8천명 가량이며, 모스크바에 2,000여명, 쌍뜨-뻬쩨르부르크 1,008명, 고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에 약 1,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 소연방지역에는 우크라이나 849명, 카자흐스탄에 1,172명, 우즈베키스탄에 635명이 거주하고 있다.⁸³⁾ 비록 구 소연방지역은 아니지만, 부랴뜨이산민족은 중국의 내몽고지역에 약 6,000명,⁸⁴⁾ 몽골에 약 35,000여명 존재한다.

소비에트시절에 부랴뜨민족문화가 급격히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역외 지역의 이산민족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상황이었다. 이산민족들은 소비에트시기 '국제주의'와 '단일 공동체 형성' 정책으로 민족문화의 탈각파 이민족과의 통화가 더 깊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가적인 민주화와 민족문제의 부각은 부랴뜨 이산민족들의 민족문화센터 건립으로 이어졌다. '민족문화자치'라는 원칙 하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이르쿠츠크 등에서 민족문화센터가 건립되었다.

각지에 창설된 민족문화센터는 민족문화와 전통의 복원, 민족어 교육 및 민족사상·종교의 고취 등 지역의 특성이나 주도한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부랴뜨 이산민족 대표인 씨베노바(Н. Ч. Цыбенова)의 주도 하에 창설된 '우랄'(урал)은 부랴찌야지역 출신들에게 부랴뜨어와 문화를 보급하였다.⁸⁵⁾ 그와 함께 민족전통과 명절을 부활하였는데, 1991년 2월에 모스크바의 동방박물관에서 부랴뜨민족의 전통명절인 '사간간'을 기념하는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 행사는 옥란우네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간간 기념식과 동시에 진행된 것이었다. 행사에는 전체 150명이 참석하였다.⁸⁶⁾ 쌍뜨-뻬쩨르부르크의 민족문화센터는 민족종교와 사상 부활에 사업의 역점을 두었는데, 민족문화센터는 지

83) Буряты в зеркалье статистики, Улан-Удэ, 1996. С.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2000. 9. 8. С.12.

84) 중국의 내몽고지역에 문포하는 부랴뜨민족의 수에 대한 정확한 품계는 없다. 이는 부랴뜨민족이 중국에서 공식적인 민족으로 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중국의 내몽고지역에 거주하는 부랴뜨민족은 적계는 6,000여명에서 많게는 10,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세네렌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85) Елаев А. А. 2000. С.280.

86)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모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2000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사간간 기념식에는 약 1,500여명의 동향인들이 참석하였다(Правда Бурятии, 2000. 9. 8. С.12).

역의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20세기 초에 결성되었다가 소비에트시절에 사라진 불교사원의 복원과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994년 자선단체인 '극동'(Дальний Восток, The far east)의 지원으로 부랴뜨민족의 역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와 문화를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 하에 부랴뜨-몽골지향의 문화단체가 창설되었다.⁸⁷⁾

이러한 민족문화센터 외에도 부랴찌아울신의 부랴뜨민족 향우회도 결성되었는데, 가장 먼저 발틱 연안지역에서 결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으로 확산되었다.⁸⁸⁾ 향우회는 민족문화센터와 달리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지역 밖에서 민족병력을 바탕으로 한 민족전통의 복원에 일정정도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주로 사간기간에 모여 민족의 전통음식을 나눠 먹고, 음악, 춤 등을 공연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향, 동포들이 타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산민족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족부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에서도 점차 이산민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기는 1991년 2월에 개최된 '전부랴뜨대회'였다. 대회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민족통합과 정신부활'은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 1차 전부랴뜨대회를 거치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랴뜨민족문화센터간의 교류와 통일적인 활동을 위해 민족지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의 민족문화센터를 지부로 하는 '전연방부랴뜨문화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민족부활'을 위한 민족단체의 결성은 민족지역이나 이산민족거주지에서나 예외는 없었다. 그러나, 민족지역과 이산민족거주지에서 결성된 민족단체들의 성격은 차이가 났다. 민족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민족문화단체 외에도 부랴뜨-몽골 민족당, 게세르, 네게렌 등 정치사회단체들도 결성되었음에 반해, 이산민족거주지에서는 민족문화센터나 향우회 등 비정치적, 문화적 활동에 초점을 두는 단체만이

87) 물론 키예프에서는 1974년에 '부랴뜨문화협회'가 결성되었지만, 이는 부랴뜨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Елаев, 2000:280). 이는 부랴뜨민족의 민족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 아니라, 부랴뜨민족과 부랴찌야지역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88) Правда Бурятии, 2003. 3. 28.

결성되었다. 이는 민족지역에서 발생한 부랴뜨민족운동의 특성과 발전 과정에 기인한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민족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발생한 민족운동은 연방중앙파의 갈등이나 대립이 별로 없었다. 물론 부랴찌야공화국은 다른 자치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시기에 형성된 연방체제를 바꾸고,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상승하기 위한 주권선언을 했지만, 이러한 주권선언이 소연방구성공화국이나 체첸, 파파르스탄공화국처럼 러시아연방 중앙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선언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즉 ‘민족의 시대’ 중앙-지방간 대립은 러시아민족과 소수민족(부랴뜨민족)간의 대립을 의미하는데 부랴찌야지역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민족간 대립’이 극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중앙-지방관계의 단절이나 체손을 초래하는 민족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권선언의 문제도 연방파의 관계보다 지역내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산민족거주지에서 결성된 민족단체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이산민족단체들은 민족지역과 정신적, 정서적 원체감의 획득이나 민족성의 유지·강화에 초점을 둔 활동을 하게 되었다.

(2) 민족지역으로 이산민족 이주

① 세네鬟 부랴뜨의 이주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은 부랴뜨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자결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지역에서의 민족자결은 민족과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바로 그 민족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권선언은 소비에트시기에 형식적으로 주어졌던 자치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자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자신의 민족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주권선언은 원주민의 지위상승을 의미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민족지역과의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이산민족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지역을 떠나 이민족의 땅에서 이민족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왔기에, 민족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민족적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선택의 문제에서 가장 큰 정치적 논란이 바로 ‘고향, 모국’에 대한 것이었다.⁸⁹⁾ 민족지역을 떠난 이산민족들에

게 '모국, 고향'은 어디인가라는 문제였다. 특히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벗어나 타국에 살고 있는 이산민족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이의한 논란이 가장 강하게 세기한 이산민족이 중국의 내몽고지역에 거주하는 세네렌 부랴뜨인들이었다. 이들은 20세기 들어서서 민족지역을 떠나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다. 이들은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고 곧이어 내전이 발생하였을 때, 민족지역에서의 어수선한 정치상황을 피해 중국의 내몽고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1918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긴스까예지역에서 일어났으며, 뒤이어 부랴찌야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남부지역인 실련가, 쥐다, 자까멘지역에서 이주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주는 1930년대 소연방차원에서 집단화가 진행될 때였다. 일부는 중국 내몽고와 다른 지역이나 몽골로도 이주하였지만, 대부분 중국 내몽고의 세네렌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세네렌 부랴뜨인들은 내몽고의 자치기 — 비록 부랴뜨민족이 독립적인 민족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에 거주하였으므로 부랴뜨어와 부랴뜨전통을 비교적 잘 보전할 수 있었다.⁹⁰⁾ 부랴뜨민족의 언어와 문화 및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암에도 불구하고 부랴뜨 민족정체성을 지닐 수 있었다. 비록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부랴뜨인들과는 국적이 다르지만, 민족적 동질감과 정서적 유대감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세네렌에서의 '모국, 고향'에 대한 향수와 논란은 다른 이산민족거주지 — 예를 들어, 부랴뜨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모스크바의 부랴뜨인 — 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다.

세네렌 부랴뜨인들의 '모국, 고향'에 관심과 논란은 실제 민족이동으로 이어졌다. 1993년 약 300여명의 세네렌 부랴뜨인들이 민족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에 약 100여명은 자신의 '고향'인 아긴스까예자치구에 남고 나머지 200여명은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 정착하였다.⁹¹⁾ 이들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주케 한 것은 궁핍한 삶이 아니라, 바로 '모국, 고향'에 대한 동경과 애착이었다.⁹²⁾

이들을 민족지역으로 끌어들인 또 하나의 동인은 부랴찌야공화국과 중국의 내몽고간 교류와 협력이 1980년대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민족의 부활과 이산

89) Боронеева Д. Ц. 2001. С.83.

90) 실제로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 살고 있는 부랴뜨 청년들에 의해 세네렌 부랴뜨들이 부랴뜨어를 더 잘 말한다.

91) Бурятия. 1993. 7. 24.

92) 물론 이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러시아교육을 시키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민족에 대한 관심으로 1989년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 의장인 불다예프가 중국의 내몽고를 방문하였으며, 1990년과 1991년에 중국 내몽고 자치기 주석이 울란우데에 답방을 왔다. 두 자치지역 수반들의 방문과 답방은 두 지역간 우호와 공식적인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문화관계를 발전시키며, 세네හ 부랴뜨인들의 역사적 모국으로의 이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교류⁹³⁾가 시작됨으로써 세네හ 부랴뜨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보다 수월해졌다.⁹⁴⁾

② 민족지역에서 적응의 어려움

70여년 만의 '모국'으로의 '재이주'는 이들이 기대한 만큼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들은 선조들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 세네හ 부랴뜨인들은 부랴뜨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부랴뜨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익숙하며,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부랴뜨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구 몽골어를 쓸 줄 아는 등 누구보다 민족성과 민족전통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역사적 모국'에 정착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주한 300여명 중에 1998년까지 약 20여명만이 러시아시민권을, 약 120여명이 영주권을 획득하였다. '모국'으로의 '재이주'를 위한 법적, 물질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살던 중국 내몽고로 돌아가야 했다. 이들의 이주목적 중의 하나가 자녀들에게 러시아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지만, 이러한 목적도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1992년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부랴뜨어가 정부어로 공식 지정되고, 공교육에서 부랴뜨어 수업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였기에,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세네හ 부랴뜨들은 부랴뜨어로 수업하는 1번 민족학교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안이 없었다.⁹⁵⁾

이들이 '역사적 모국'에 정착하기 쉽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93) 해마다 10여 명의 세네හ 부랴뜨와 에멘코들은 부랴찌야국립대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받는다. 러시아는 외국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만, 이들 동포들은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94) Елаев, 2000. с.278-279.

95) Боронеева Д. И. 2001. С.83-84.

민족지역의 경제상황이 이들을 수용할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민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도 이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세네렌 부랴뜨인들이 이주하던 1993년에는 사유화, 자유화, 시장화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소비에트시절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행정당국과 사회적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둘째, 이들의 언어구사문제 때문이었다. 이들은 부랴뜨어는 잘 구사하였지만, 러시아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부랴찌야공화국은 물론이거니와 아긴스까예자치구에서도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러시아어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러시아어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록 세네렌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고등, 중등교육 이상을 마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방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민족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사회'에로의 동화도 쉽지 않았다. 중국의 내몽고지역에서 중국인들과 혼존하며 민족의 문화를 지켜온 세네렌 부랴뜨들과 민족문화의 억압과 질곡을 겪으며 러시아민족에 동화되면서 살아온 부랴찌야의 부랴뜨들과의 문화적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세네렌 부랴뜨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침단적으로 극복하고,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주한 사람들의 정착을 돋기 위해 '세네렌 부랴뜨 향우회'(Землячество Бурят в Сибири)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부랴찌야공화국, 아긴스까예자치구의 행정당국, 사회단체와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네렌 부랴뜨들의 민족지역에의 안착을 도모하였고, 부랴찌야공화국의 다른 향우회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하였다⁹⁶⁾.

3) 민족문화·전통의 부활

① 민족에 부활

① 정부공식어 설정

96) Буряты, 2000, 6, 15. с.4.

민족과 문화발전에서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언어문제이다. 언어는 민족사상과 정신이 담겨 있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언어문제는 부랴뜨민족이 쇠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소연방에서 민족의 식별은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족어 구사여부와 어떤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생각하는지를 통해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가늠한다. 따라서, 민족어의 상황은 민족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협통적 순수성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민족어를 모르고서는 민족의식이 강화될 수 없다. 이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서 잘 드러난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한국어로 말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노년층과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젊은층 사이에 민족의식이나 모국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노년층은 한국을 '역사적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반면에, 젊은층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에트시기에 부랴찌야지역에서는 3차례에 걸친 문자·언어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그 중의 한 번은 문자·언어 자체의 개혁이라기보다 언어사용의 변화였다. 1931년, 1939년 두 차례의 문자개혁이 민족정체성의 변화와 결부되는 것이라면, 1975년 공교육에서 부랴뜨어 사용 금지는 민족의식의 약화와 관련되었다. 민족의식, 즉 민족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고서는 이전과 같은 민족정체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부랴뜨민족지식인들이 부랴뜨어의 부활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것도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민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민족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데, 민족어의 사용과 부활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부랴뜨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정부 공식어로 지정하여 부랴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주권선언 후에 부랴뜨민족은 부랴뜨어를 정부 공식어로 지정할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결성되었던 정치·사회단체의 주요 활동 내용 중의 하나도 바로 부랴뜨언어 문제였다.

1992년 6월 10일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는 '부랴찌야공화국 민족언어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부랴뜨어는 러시아어와 함께 정부 공식언어가 되었다. 모든 행정기관의 문서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부랴뜨어로도 작성해야 하며, 정부기관의 명칭도 두 공식언어를 병행하게 하였다.

② 민족어 출판·방송의 증가

정치적 자유의 확장과 과거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1990년대 초 지역에서는 출판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출판 분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부랴뜨어로의 출판이 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부랴뜨어를 공식적인 언어로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줄어들었던 부랴뜨어 출판은 1990년대 초판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간한 140권의 책 중에 39%인 56권에 달하였다.

<표 5-6> 부랴뜨어 출판 상황

연도	1992	1997	1998	1999	2000	2001
책수	23	22	34	32	39	59

자료: Жамналова Н.Н. Издательство РБ. 2002.

그 중 30%가량은 부랴뜨문화에 관한 것으로서 민족문화의 부활에 따른 관심이 부랴뜨문화 관련 도서의 출판으로 이어졌다. 부랴뜨어 출판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1996년에는 부랴뜨어로의 출판이 잠시 주춤하였다는 것이다. 출간된 총 51권의 책 중에서 부랴뜨어는 8권에 지나지 않았다. 1992년에 비해 4배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출판 감소는 부랴뜨어 교재의 감소에서 기인하였다.⁹⁷⁾ 1990년대 초 부랴뜨어가 정부공식어로 채택되고, 학교에서 부랴뜨어 수업 시간이 생기면서 부랴뜨어 교재가 출판되었으나, 4년이 지나면서 부랴뜨어 교재에 대한 수요가 이미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③ 민족어교육 시행

1992년 부랴뜨어가 정부 공식언어로 지정되면서 관심은 부랴뜨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문제였다. 비록 공식언어로 지정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 제도적으로 부랴뜨어 사

97) Елаев А. А. 2000. С.288-289.

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이 각급 학교에서 부랴뜨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문제였다. 먼저 초중등학교에서 일주일에 3시간씩 부랴뜨어를 수업하고, 대학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부랴뜨어를 강의하였다.

민간분야에서도 부랴뜨민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랴뜨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단체가 형성되었다. ‘부활’(возрождение)이라는 클럽이 1991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핵심목적은 부랴뜨민족의 뿌리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부랴뜨어 교육이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여전히 교육에 사용되는 주요언어는 러시아어였다. 이에 부랴뜨 지식인들은 부랴뜨어로 교육하는 학교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울란우데에 소재하는 20번 학교를 부랴뜨학교로 변경하였다.

[2] 민족전통 · 관습의 부활

① 민족신앙의 부활

민족의 부활은 잊혀지고 사라졌던 민족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부랴뜨민족의 전통사상이자 종교는 샤머니즘과 불교이다. 유목민이었던 부랴뜨민족은 중앙아시아민족의 영향을 받아 17세기 불교가 도래하기 전까지 민족의 대표적인 신앙은 샤머니즘이었다. 부랴뜨민족은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거주하는데, 바이칼호의 암흔섬은 전세계 샤머니즘의 성지로 유명한 만큼 부랴뜨민족과 샤머니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17세기 티벳불교가 몽골을 거쳐 부랴뜨민족에게 전파되면서 부랴뜨민족거주지역의 남동부를 중심으로 불교 사원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였다. 불교와 샤머니즘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불교가 종교적 색채를 명확히 했다면, 샤머니즘은 복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1930년대 말 종교박해로 사라졌던 불교사원이 1990년대 초에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의 남쪽에 위치한 아볼가지역에서는 불교 사원이 재건되고, 티벳에서 수련하던 승려들이 다시 부랴찌야지역으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부랴찌야지역에서도 티벳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990년대 초 이불가 사원은 러시아연방 불교⁹⁸⁾의 본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91년 러시아에 불교 전파 250주년 기념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정치적,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면서 샤머니즘의 의례도 다시 행해졌다. 마을의 입구에 장승이 세워지고, 높은 고개나 성지 근처에는 주술적 행위들이 다시 행하여졌다.

② 민족사상의 복원

몽골과 부랴찌야지역의 유목민들에게는 ‘텐그리엔스트바’라는 사상과 함께 ‘제세르’(Тэсэр)라는 영웅이 있다. 제세르가 살존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10세기 경부터 중앙아시아민족의 구원과 발전을 이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졌다. 몽골을 중심으로 한 초원지대에 널리 퍼져있던 영웅 제세르에 대한 신화는 1717년 구 몽골어로 출판되었다.

민족의식의 성장은 민족기원에 대한 관심과 민족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정체성과 민족의 정신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제세르는 다시 복원되었다. 1992년 울란우테에서 제세르 출판 27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기념식에는 부랴뜨민족, 러시아민족, 몽골족뿐만 아니라, 부랴찌야공화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연합의 대표도 참석하였다.⁹⁹⁾

중앙아시아 민족의 영웅인 ‘제세르’를 기리는 축제도 개최되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축제는 부랴찌야공화국을 비롯한 두 개 민족자치구와 이르쿠츠크주, 치타주에서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개최되었다. “제세르 시대-중앙아시아민족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축제는 작가동맹, 전부랴뜨문화발전연합과 부랴찌야공화국 문화부의 주도로 거행되었는데, 민족 전통, 관습, 언어 등을 부활하고 이를 민족구성원들에게 교육·계몽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다.¹⁰⁰⁾ 1995년에는 제세르 10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민족지역의 중심인 부랴찌야공화국의 울란우테에서 개최되었는데, 축제는 시낭송, 전시회 등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98) 러시아연방에서 불교를 믿는 지역은 부랴뜨거주지역 외에도 카스피해 근처의 깔의끼야공화국이 있다. 이곳의 명목민족인 깔파꼬인들은 몽골이 유럽지역으로 전출할 때 이주한 사람들로 혈통적으로는 몽골과 부랴뜨인들과 유사하다.

9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4. 20. с.3.

100) Правда Бурятия. 1993. 7. 17. с.1.

③ 민족명절의 부활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다른 성원들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기호일 수도 있다. 자신이 어떤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즉 민족의식을 지닌다는 것은 민족구성원간에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일한 감정이나 행동양식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족의 풍습이나 의례 등은 이런 측면에서 민족적 소속감과 민족의식을 증가시키는 유력한 배개가 된다.

1990년대 들어 민족화합을 이루고 새로운 민족·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소비에트민족정책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민족 명절이 다시 부활하였다. 민족 전통과 명절은 개별 민족들의 민족성과 민족의식을 강화한다는 근거에서 금지되었는데, 동일한 근거로 다시 민족명절이 부활하였다. 부랴뜨민족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사갈간(Sagaalgan)과 수르하르반(Surkharbani)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명절이 '민족부활의 시대'에 다시 부활한 대표적인 명절이다.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담론의 대두, 민족부활과 민족통합 등 정치적인 측면은 주로 민족지식인들이 제기하고 주도하였지만, 민족명절의 부활은 민족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활동의 결과였다. 민족 명절은 그 민족의 풍습이 응축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민족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일상적 실천(practice)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특징에서 기인한다.

대대로 음력을 사용해온 부랴뜨민족은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음력 1월 1일¹⁰¹⁾을 매우 산성시하였다. 이날이 바로 사갈간이다. 사갈간은 다른 말로 '벨리 메샤쓰'(белый месец, white month)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랴뜨민족이 '흰색'을 신성한 색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신성한 날 이므로 사갈간을 '벨리 메샤쓰'라 부른 것이다. 우리의 음력설과 같은 명절인 사갈간은 1월 1일부터 3일간 지속되는데, 사갈간 기간에는 주로 흰옷을 입고, 모닥불 주위를 맨돌면서 자신의 몸을 닦은 흰색 천을 모닥불에 던지면서 액운을 쫓고 한 해의 무운을 기원한다. 사갈간 기간에는 마을별로 모여 전통 음악, 춤, 놀이 등을 즐긴다. 우리의 음력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갈간 기간에 자신의 고향을 찾지

101) 부랴뜨민족의 음력은 우리의 음력보다 약 1달 정도 늦다.

않고 거주지에서 동향사람들과 명절을 보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울란우데에 지역별 '향우회'(землячество)가 결성되었는데, 사간간 기간에는 이 향우회 주도로 공연과 만남을 갖는다. 수르하르반은 몽골어권 민족들의 여름 명절의 하나로 수르하르반은 사간간과 달리 체육행사가 주가 된다. 해마다 초여름에 각 부족이나 마을별로 힘과 용맹을 겨루는 자리였다. 말타기, 활쏘기와 레슬링과 유사한 경기인 '바리바'(борьба, wrestling) 등 각 지역별로 무예를 겨루는 행사였다.

«혈연·지연관계로의 민족문화»

이러한 명절의 부활은 단지 전통과 풍습이 다시 부활하였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부랴찌야지역에서 부랴뜨민족의 전통명절의 부활은 부랴뜨민족의 혈연·지연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달리 말하면, 지역별 혈연·지연관계는 전체 부랴뜨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색과 차이를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전체 부랴뜨민족의 통합과 민족정체성의 강화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서는 사간간 기간에 각 지방출신들끼리 서로 모여 자신들의 출신 지역의 전통 음악과 춤 등을 공연한다. 이러한 행사는 각 지방 출신들의 모임인 향우회가 조직한다. 동향인들의 모임인 향우회는 전체 부랴뜨민족들의 규합을 위한 지방조직이라기보다 동향인들끼리의 교류를 원차적 목적으로 생겨났다. 1990년대 말까지 부랴찌야공화국에는 약 20개의 향우회가 결성되었는데, 부랴뜨민족의 특성상 출신지역이 같다는 것은 동일 부족임을 의미한다. 즉 향우회는 지방조직이자 혈연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간간 기간에 향우회별로 진행되는 행사는 전체 부랴뜨민족으로서의 동질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의식을 심어주게 되어 민족통합보다는 민족문화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부랴뜨민족은 스스로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제국에 귀속되고 리사아민족과 공존하게 되면서 러시아민족에 대한 대립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각 부족을 아우르는 동일 민족의식을 예초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사아민족과 확연히 구분되는 전체 동양민족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부랴뜨'라는 민족명이 불게 된 것도 러시아민족이 진출하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면서부터였다. 부랴뜨민족의 각 부족 간의 차이는 러시아민족에게는 크게 보이지도 않고, 쉽게 느낄 수도 없는 것이었

기 때문이다.

<<민족정체성보다 지방적 정체성을 강화>>

민족통합을 이루고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민족부활의 과정에서 다시 생겨난 부랴뜨민족의 전통명절은 기대와 예상과 다른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수르하르반은 각 군별로 부예를 겨루고 공연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방 행정기관이 이를 준비하고 주도하였다. 군별로 입장하고, 군별로 모여 앉으며, 군별로 대항하는 양식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 각 부족별, 마을별 부랴뜨민족 간의 경합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각 군별 지역주민간의 경합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부랴뜨민족, 범몽골어권 민족과 함께 발전한 '수르하르반'은 역사적으로는 매우 '민족적'이었지만, 부활한 수르하르반은 민족적 특성이 탈각되고 '지역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경마, 씨름 등 수르하르반의 주요 종목은 '민족적'이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형식은 '지역적'이었다. 따라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성, 지방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변화하였다. 부랴뜨민족의 전통명절에서 부랴찌야국민의 체육대회로 변화한 것이다.

<<러시아민족명절의 부활은 상대적으로 비약>>

1990년대 들어 부랴뜨민족은 자신들의 민족명절을 기리고 이를 지역의 주요 축제일로 만들었지만, 러시아명절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다. 러시아민족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마슬레니짜(масленица)¹⁰²⁾를 들 수 있다. 매년 2월 말경에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마슬레니짜는 슬라브민족의 원시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마슬레니짜는 한마디로 슬라브민족의 봄맞이 행사이다. 아직 추위가 한창인 2월 말경에 겨울과 작별하고 점점 따뜻해지는 햇살을 찬양하는 축제이다. 이 기간에 '블린'(блин)을 만들고 이웃들을 초대하여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¹⁰³⁾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부랴뜨민족 명절인 사갈간과 비교했을 때, 마슬레니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사갈간이 부랴찌야지역의 농촌뿐만 아니라, 수도인 울란우데에서도 성대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마슬레니짜는 농촌의 러시아촌

102) 영어로는 팬케이크 주간(Pancake Week)라고 한다.

103) http://cafe.naver.com/korua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5

락에서나 행해지고 있다. 지역 인구의 70% 가량을 러시아민족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민족 명절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민족부활 의식’이 부랴뜨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이다. 즉 전환기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담론’은 민족별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부랴뜨민족은 민족발전의 문제를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사고하였다면, 러시아민족은 주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민족담론’을 인식하였다. 물론 러시아민족의 경우에도 종교를 바탕으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이것이 전통이나 문화적 측면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부랴뜨민족이 민족발전을 목적으로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을 동원한 반면에, 러시아민족에게는 민족의식, 민족정체성이라는 문제가 부랴뜨민족보다는 절실하지 않았다. 러시아민족의 정체성은 지역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연방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부랴뜨민족은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3. 민족관계의 변화와 그 영향

1) 민족갈등의 발생

민족으로의 결집, 민족의 재편 등 민족정치과정으로 인해 민족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연방체제에서 지역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주권선언은 의도와 달리 부차적인 문제였던 민족문제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부랴찌야가 러시아에 귀속된 아래 지역에서 민족간 분쟁이나 갈등이 쉽게하게 발생한 적이 없었다.¹⁰⁴⁾ 비록 초기 러시아민족의 진출과정에서 경작지를 둘러싼 러시아민족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마을 차원에서 소규모로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민족갈등이 지역전체의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부랴찌야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되는 과정에서 민족분쟁

104) 러시아제국으로의 귀속도 비교적 평화적인 과정을 거쳤다. 당시 부랴뜨민족을 구성하던 부족 중 가장 큰 세력이었던 호리 부랴뜨인들이 쌍브-페쩨르부르크의 봇뜨르 대제를 찾아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부랴찌야를 러시아에 반치기로 하였다. 가장 큰 부족의 ‘항복’으로 다른 부족들은 더 이상 러시아제국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나 갈등이 비교적 격하고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부랴뜨민족(ethnic buryat)이 '민족'(nation)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가장 큰 부족인 흐리부랴뜨가 자신들의 지위보장을 전제로 러시아제국에 투항하였기 때문이었다. 35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양민족간의 평화공존이 '민족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혼들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지역이 불안하다. 민족적 열망의 분출이 지역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다. 빈곤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찾는 테 혈안이 되어 있다. 민족과 민족의 속죄양을 찾고 있다. 한 측면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만러시아민족 정서를 보이고 있다. 상호관계의 공간에서 쇼비니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다수 민족에 대한 원한에는 도덕적 타락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원망이 있다..."나는 단지 단일한 혈통으로 결합된 인간공동체만 인정한다."는 아돌프 히틀러가 우리 지역에서 부활한 것 같다. 현실 상황에서 민족성에 따른 민족통합의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105)(친학박사, 부랴뜨민족)

사람들은 자그마한 만족이기주의의 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동시베리아인문대학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족사회환경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응답한 학생들은 민족 갈등의 이유 중에 하나로 전통과 문화에 대한 몫이해를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부랴뜨야의 역사와 문화도 러시아 역사와 문화만큼 교육해야 한다.106)(만파또프, B. Mantapov, 철학박사)

<경제위기로 민족갈등 심화>

기본적으로 민족갈등은 민족주의의 발생에서 비롯되었지만, 체제전환기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침예하게 되었다.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자유화, 사유화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새로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부랴뜨민족 중 일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이민족, 주로 러시아민족에게서 찾았다. 물론 이들은 경제위기의 본질을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와 지역에 정치·경제적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연방체제에서 기인함을 알고 있었지만 — 그렇기에 이들은 주권선언을 한 것이다 — 주민들의 경제적 궁핍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민족 간에 고용기회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105)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12. 9.

10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12. 9. с.3.

사회조사에 의하면, 경제상황의 악화가 민족갈등의 원인이었다.¹⁰⁷⁾

<민족성에 따른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사이에서는 민족성에 따라 고용기회 등 경제적 기회에서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부랴찌야지역에서 실제로 민족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주민들간에 이러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우리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업종은 다 러시아민족이 차지하고 있지. 교통·통신과 자원 개발 관련 업종이 다 그들 몫이야.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민족성에 상관없이 취업기회가 동등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미 이들 업종의 주요직책은 러시아민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신규채용에서 자민족을 우선으로 뽑지. 그렇다고 법·제도상으로 민족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민족성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지. 부랴뜨인들은 대대로 상공인들을 좋게 평가했던 것은 아니야. 그보다 학문하는 사람들을 존경했지. 동양 문화라고 할까? 러시아민족은 이제에 밖고, 병예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고 있지. 복잡한 문제이지만, 부랴뜨민족이 심리적으로 취업기회가 제약되어 있나고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이야.(라드나예프, 부랴뜨민족, 부랴찌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민족간 경제적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생각은 비단 부랴뜨민족만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러시아민족의 경우에도 특정 분야는 부랴뜨민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구조로 인해 러시아민족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국립부랴찌야대학교 교수전의 2/3 가량이 부랴뜨민족이다.¹⁰⁸⁾

대학원은 계속 다닐까를 고민 중이다. 현재 우리파에는 러시아민족이 아무도 없다. 모두 부랴뜨민족이다. 내 기억으로는 언제 우리파에 러시아민족이 교수로 있었는지 가물가물하다. 과학아카데미 부랴뜨센터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러시아민족이기 때문에 교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나타샤, 지리학과 대학원생, 러시아민족)

주민들은 민족성에 따른 정치·경제적 기회의 제약은 민족관계가 많이 개선된

107) Бурятия, 1994. 8. 16. C.4.

108) 부랴찌야대학교 사회·경제지리학과의 경우에는 강사들 포함하여 8명 전원이 부랴뜨민족이다.

199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995년, 1996년에 부랴찌야공화국 국회의 민족관계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민족관계에서 부정적 현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혈연지연관계에 따른 지위 부여'를 꼽고 있었다. 정치·경제적 기회와 지위 상승이 능력보다 민족성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랴찌야지역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민족별 문화가 뚜렷하다. 결국 혈연관계는 만할 것도 없고, 지역관계도 바로 민족성을 의미한다. <표 5-7>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65-70%가량이 민족성에 따른 특권과 제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 40%가량은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민족사이의 반감을 야기하고, 민족관계를 악화시키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었다.

<표 5-7> 민족관계에서 부정적 현상의 발생 빈도

단위: %

부정적인 형태	1995(4월)		1996(4월)	
	빈번함	드물	빈번함	드물
혈연지연관계에 따른 특권적 지위 부여	43.9	21.9	40.4	29.7
타민족에 대한 비우호적, 적대적 인식	15.9	38.9	9.8	45.0
민족관계에 기반한 폭력 행위	10.0	31.7	6.8	39.0
타민족의 관습, 전통, 언어에 대한 경멸	8.8	34.0	5.8	36.8
민족간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는 편견 유지	6.5	35.8	6.7	32.1
친분, 민족에 따라 주택, 복지의 불평등한 배분	-	-	35.2	30.5

출전: Карнишев А. Д. 1996. с.9.

그러나, 지역에서 실제로 혈연지연관계에 따라, 민족성에 따라 특권적 지위가 부여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설령 특정 분야에 특정 민족이 집중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민족성을 기준으로 채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제로 어떠한 지와 상관없이, 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물론 민족관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민족관계라는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고,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민족관계는 상황적, 맥락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관계를 악화시킨 물질적인 근거도 있다. 이는 전통적인 생계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원주민들은 체제 전환으로 인한 경제위기 외에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러시아민족을 비롯한 유럽민족의 이주를 들고 있다. 지역의 동·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수렵과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에멘크민족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북부 지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바야칼-아무르철도(BAM, Baikal-Amur Magistral) 공사가 진행되었고, 동부지역에서는 금과 석탄을 채굴하면서 수렵과 목축지대인 동북부지역의 환경이 급속도로 훼손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경제활동양식의 만남, 서로 공존하기 힘든 공업과 농업의 만남은 공업에 의한 환경파괴로 농업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유목에 종사하는 부랴뜨 민족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였다. 농촌으로 이주한 러시아민족은 하천변에 정착하였으며, 이들의 농경활동은 하천을 오염시켰는데, 그 결과 유목에 종사하는 부랴뜨민족은 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오염된 하천으로 인해 가축에도 치명적이었다.

2) 민족관계에 대한 주민인식

민족주의의 발생, 민족단체 결성, 경제위기 심화를 비롯해 심리적, 정서적 반감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민족갈등은 민족부활의 시대가 도래하고, 민족담론이 사회의 지배담론으로 형성되면서 나타난 부정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부랴찌야지역에서의 민족갈등은 소연방공화국이나 체첸을 비롯한 까프카즈지역에서의 민족갈등과는 차원도 달랐고, 그 강도도 달랐다. 소연방공화국에서의 민족갈등은 상대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민족지역이 러시아제국의 영토에 포함된 것은 러시아민족에 의한 식민화의 결과였고,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정치, 경제적 문제는 이민족에 의한 경제·사회체제의 강제적인 어식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소연방공화국의 독립은 달리 말하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민족과의 공존이 아니라, 러시아민족과의 단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랴찌야지역에서의 민족갈등은 상대 민족의 존재에 대한 부정¹⁰⁹⁾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민족간 경쟁'의 결과라 할 수 있

다. 그러한 경쟁에서 ‘지역의 주인’에게 기득권과 특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주권선언은 연방 중앙으로부터 정치·경제적 권한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선언이다. 주권선언은 연방체제의 변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었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에게는 부랴뜨민족 대 러시아민족의 대립양상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였다. 러시아연방 대 부랴찌야의 대립구도가 러시아연방의 명목민족인 러시아민족 대 부랴찌야의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의 대립구도로도 인식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주권선언의 본질에 대한 적확한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권선언이 제 민족들이 경쟁하는 다민족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 담론으로 구성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담론은 사회적 갈등, 민족갈등을 양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한 갈등을 봉인하고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권선언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민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따라 민족갈등의 발생여부나 그 양상 및 강도 등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민족갈등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민족간 경쟁에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민족별 조직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의 결집은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세반 영역에서 자민족의 이익을 증대하고, 자민족의 반언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공화국 대통령 자격을 둘러싼 문제가 그러하고, 원주민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그러하며, 명목민족·토착민족에 대한 의회에서의 의석 할당제 문제에서 그러하였다. 민족별 조직화는 자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결집으로,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간 균형을 훼손한다는 인식이 민족갈등을 양산한 것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를 전후하여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관계는 실제로 어떠하였으며, 주민들은 민족관계, 민족갈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족간 반감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기존 민족관계의 기본틀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문제가 불거진 1980년대 후반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부랴찌야센터의 설문조사¹¹⁰⁾는 이를 잘 보여준다.

109) 물론, 부랴뜨-봉건민족의 뉴립국가 수립을 주장했던 네게렌, 부랴뜨민족회의 등 극단적인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해 민족관계가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10)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부랴찌야센터는 1989년-1993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 조사에 의하면, 지역에서 '민족담론'이 계기되기 시작한 1989년보다 1993년에 민족관계가 더 나빴다. 부정적인 민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989년에는 0.8%에 지나지 않았지만, 1993년에는 10명 중 1명 가량(9.7%)이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1989년에는 81.8%인데 반해 1993년에는 79.3%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미 소연방차원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민족의 불결'이 몰아치고 민족갈등이 발생하였지만, 부랴찌야지역은 1989년까지 '민족의 불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부랴찌야에서는 1989년 이후에 '민족담론', '민족정치과정'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의 민족정치 과정의 본격화는 '향후 민족관계의 변화 추이'에 대한 주민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민족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989년에는 3.3%인데 반해 1993년에는 1.5%밖에 되지 않았다. 소연방공화국에서는 이미 1985년 이후에 민족갈등과 문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기류는 곧이어 부랴찌야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1993년에는 주권선언 후 공화국의 정치체제와 부랴뜨민족발전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민족문제가 지역의 주요현안이었기에 민족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조사시점인 1993년 10-11월에는 이미 공화국의 정치체제와 헌법 등이 윤곽을 잡아가는 시점이라,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표 5-8> 민족관계에 대한 주민인식

단위: %

민족 관계	1989	1993
서로 존중	17.5	29.4
좋은 관계를 유지	64.3	49.9
부정적인 관계 형성	0.8	9.7
악화될 것임	3.3	1.5

자료: Бурятия. 1993. 12. 28. c.3.

주민설문을 실시하였다. 1989년 1-2월에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1991년 5-6월, 1993년 10-11월에 마지막 조사를 하였다. 수도인 울란우데를 비롯해 비추라, 무호르쉬비르, 실린가 등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정치적, 민족관계와 민족 통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해 준다. 첫째,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정치는 1989년 이후 시작되었고, 둘째, 1993년에 민족정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민족갈등이 이미 극에 달하였으며, 셋째, 늦어도 1993년에는 러시아민족은 지역에서 자신들이 공화국형성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부랴찌야지역에서의 민족갈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으로서의 러시아민족과 부랴뜨민족간의 대립이 아니라, 러시아연방 명목민족인 러시아민족과 부랴찌야공화국의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간의 대립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설문조사를 한 1993년 10-11월은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그해 12월 러시아연방 헌법 체택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와 연방의회 선거, 1994년 2월 부랴찌야공화국 헌법 제정과 6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정치활동, 민족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이러한 민족정치의 활성화로 인해 민족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989년에 비해 1993년에 월등하게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것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1993년에는 1989의 1/2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러시아민족이 부랴찌야공화국의 공화국형성민족임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민족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표 5-9> 민족관계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단위: %

민족관계	1993	1995
좋음, 상호존중	16.9	14.6
긍정적, 상호이해	67.4	74.0
불안족	11.5	8.8
나쁨, 적대적 관계	2.1	1.6

출전: Бильтикова А. В. 2001.

1993년 이후 민족갈등이 점차 약화되고, 민족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한 설문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5년의 본 설문¹¹¹⁾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므로 두 설문

111) 1995년 513명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의료, 행정, 법률, 산업, 문화, 학문·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을 성, 연령, 도시·농촌, 사회적 역할, 직업변수 등을

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민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그 패턴은 알 수 있다.

민족관계가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93년에는 84.3%임에 반해 1995년에는 88.6%에 달하였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93년에는 13.6%인데 반해, 1995년에는 10.4%에 지나지 않는다. 즉, 1989년부터 본격화한 민족갈등이 1993년 이후부터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민족관계, 민족갈등에 대한 인식이 민족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한 1995년과 1996년 사이 민족관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미미하나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랴끼야지역의 주요민족인 부랴뜨와 러시아민족을 제외한 그 외 민족들은 다르게 생각하였다. 이들은 1995년에 비해 1996년 민족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금 늘었다. 1995년에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3%인데 반해 1996년에는 4.8%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갈등이 직접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 1995년에는 전혀 없었지만, 1996년에는 4.8%나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부랴뜨마을이나 러시아인마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경우에 민족관계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 1995년에 비해 민족관계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부랴뜨나 러시아민족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이었다. 이들은 7.1%가 그렇게 응답하였다.¹¹²⁾

<표 5-10> 민족관계에 대한 민족별 인식

단위: %

	1995			1996		
	부랴뜨	러시아	기타	부랴뜨	러시아	기타
좋음	29.6	25.8	20.9	24.3	30.0	33.2
별문제 없음	64.3	65.3	74.4	68.3	60.3	54.8
불안함	4.8	4.9	2.3	2.9	3.2	4.8
갈등 폭발 가능	0.3	0.8	0	0	1.2	4.8
대립하기 곤란	1.0	3.2	2.4	2.5	2.5	2.4

출전: Карнилов А. Д. 1996, с.7.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112) Карнилов А. Д. 1996, с.7.

부랴뜨, 러시아민족은 민족관계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 반면에, 그 외 민족은 1996년에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1996년을 전후로 부랴찌야지역에서 민족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랴찌야공화국의 민족정책이 지역의 원주민 — 이때까지 러시아민족은 공식적으로 부랴찌야지역의 원주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원주민으로 통용되었다 —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 외 민족들은 민족정책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3) 비원주민의 이출

'민족'이 정치·행정 등 공적영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관계 등 사적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부랴찌야라는 '민족지역'에 뿌리를 둔지 않은 소수민족들은 남의 집 셋방살이하듯 '집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민족지역'과의 연고가 전혀 없는 민족들은 부랴찌야공화국의 국민에서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되었다. 특히, 소연방공화국의 명목민족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이들은 소연방공화국에서 벌어지는 민족차별, 특히 발탁 3국의 경우처럼, 러시아민족을 비롯한 이민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발생한 지역의 명목민족들은 마치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은 듯 했다.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벌어지는 민족억압과 차별에 대한 인질로서 러시아연방, 부랴찌야공화국에 잡혀 있는 듯 했다. 사회주의 조국 건설의 임무를 떠고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한 이들 소수민족들은 하루아침에 '이주노동자'의 신세가 되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부랴찌야지역에서 부랴뜨민족이 누리는 '특권'을 그들의 민족지역에서 그들의 민족들은 똑같이 누리고 있었다. 아니 소연방공화국에서는 부랴찌야공화국과 비교하기 힘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특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연방체제에서 연방공화국과 연방공화국내 자치공화국간의 지위와 권리의 차이에서도 기인하고, 공화국 인구구성에서 명목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에서도 기인하였다.

이러한 민족담론과 민족관계의 변화는 민족별 내규모 인구이동을 초래하였다. 물론 소비에트시기에도 민족별 인구이동이 있었다. 1937년부터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가 있었고, 2차 대전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시기에 발탁 3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인들의 우랄, 시베리아지역으로의 이주가 있었다. 반대로 러시아

민족의 발틱 3국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 이주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민족문제에 따른 자발적 이동이 아니라, 산업화나 국방을 위한 비자발적인 이동이었다.

1990년대 이후의 인구이동은 민족별 선택적 인구이동이 자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극심한 인구유출이 일어났다. <표 5-11>을 보면, 1990년대 초반 인구유입보다 인구유출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부랴끼야지역에서 민족문제가 불거진 이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매년 1,000여 명씩 증가하였다. 1990년에 인구이동에 따른 순인구감소가 1,021명인데 반해 1992년에는 3,269명에 이르렀다. 1991년과 1992년의 인구유출을 초래한 배경은 같지 않다. 1991년의 인구유출은 부랴끼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이 계기가 되었고, 1992년의 인구유출은 소연방체와 연방구성공화국의 독립이 계기가 되었다. 이는 러시아민족과 우크라이나민족의 인구유출을 통해 알 수 있다. 1991년의 순인구감소 2,255명 중 러시아민족이 약 1/2인 1,062명을 차지하고, 러시아민족의 인구감소도 1990년에 비해 1991년에 2배로 증가하였지만, 1992년은 1991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민족의 인구유출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1990-1991년보다 1991-1992년의 인구유출이 훨씬 많았다. 1990년에는 303명 감소한 데 비해, 1991년에는 798명, 그러나 1992년에는 1,667명이나 감소하여 1992년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전체 인구감소분 3,269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를 통해서 보면, 1990년-1992년 사이 소연방과 지역에서 민족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두 사건, 주권선언과 소연방의 해체가 '민족의 대이동'을 초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인구이동의 원인이 민족갈등, 민족담론이었음은 민족별 이출입 현황을 보면 쉽게 드러난다.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족들¹¹³⁾의 경우에 이입보다 이출이 많았다. 부랴뜨민족은 1990년 51명, 1991년 35명, 1992년 87명으로 인구유출보다 인구유입이 많았다. 자신의 민족지역으로 돌아오는 민족구성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부랴끼야지역의 인구감소를 주도한 민족은 러시아민족과 우크라이나민족이었다. 러시아민족은 1990년에 485명, 1992년에 1,089명

113) 1990년 아제르바이잔인들의 경우에는 유입이 유출보다 36명 많았으며, 1991년, 1992년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은 44명, 11명에 이른다. 여기서는 이출입의 원인을 민족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두 민족의 경우에도 이출입이 민족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연방공화국 중에서도 민족문제, 민족지역의 분쟁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으로서 이로 인해 1988년 이후 6년 동안 양국간 전쟁이 발발하였다.

<표 5-11> 민족별 이출입에 따른 순인구증가

단위: 명

	1990	1991	1992	1995	1997	1998	1999	2000
러시아	-485	-1,062	-1,089	1,230	436	290	153	213
부랴뜨	51	35	87	69	24	11	17	6
바슈끼르	0	0	2	1	1	2	0	1
유대인	-10	1	-1	3	3	0	1	-1
모르드바	0	0	-1	0	1	0	1	1
사하(이꾸트)	0	0	0	0	1	0	0	0
따파르	-18	-28	-11	36	5	11	5	2
추바쉬	0	0	-1	0	3	1	1	1
기타	0	0	0	0	4	12	5	2
아제르바이잔	36	-117	-25	45	29	29	1	13
아르메니아	-2	44	11	177	38	14	12	19
벨라루시	-43	-38	-284	-19	-25	3	-6	-4
그루지야	-12	-10	-2	26	2	5	0	3
카자흐	-37	-26	-72	13	-1	-1	4	12
끼르기즈	-3	-7	-4	-6	1	2	0	3
라트비아	-37	-8	-11	-2	0	0	1	0
리투아니아	-106	-38	-12	2	-3	2	0	0
몰도바	-18	-42	-52	-4	4	6	-7	3
타지크스탄	-5	-1	1	18	5	10	2	6
투르크메니아	-1	-8	-5	0	0	0	0	0
우즈벡	-18	-24	-6	15	10	0	3	4
우크라이나	-303	-798	-1,667	76	18	70	30	21
에스토니아	-4	-1	1	0	0	0	0	0
독일	-40	-74	-52	35	-1	9	5	9
고려인	0	0	0	0	5	6	8	5
그 외	34	-53	-76	26	1	6	8	-1
합계	-1,021	-2,255	-3,269	1,741	561	487	244	318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2002, с.34-35.

이 감소하였으며, 우크라이나민족은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303명 1,667명이 감소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러시아민족이 1990년에 485명,

1992년에 1,089명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러시아민족도 민족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심리적으로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물론 인구이동의 원인을 직접적인 민족갈등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1990년대를 전후로 소연방, 러시아연방은 민족담론이 지배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의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민족지역이 전환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민족담론이 지배'하는 시대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지역과 민족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지역에서 명목민족만을 채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자신의 민족성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인식도 인구이동을 고려하는 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족별 인구이동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민족은 독일, 유대인이다. 다른 민족들은 자신의 민족지역이 소연방의 영토에 존재하지만, 독일·유대인¹¹⁴⁾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민족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독일인과 유대인은 '조국'의 정체이 이들의 이주를 촉진하였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1990년대 들어 소연방에서 민족갈등이 불거지면서 소연방에 거주하던 자신의 동포들을 '조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특별수송기를 이용하여 수십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송환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부랴찌야지역에서도 1990년 10명의 유대인이 이출하였다. 부랴찌야지역에서 독일인들이 유대인보다 순인구감소가 더 많았다. 독일인은 1990-1992년에 각각 40명, 74명, 52명의 순인구감소를 보였다.

민족관계의 악화로 초래된 '민족대이동'은 1995년을 기점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

114) 유대인의 경우에는 제도상으로는 러시아연방에 자신의 민족지역이 있다. 극동지역 하바로프스크 벙강주 남쪽, 아무르주 동쪽에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곳에 유대인 자치주가 있다. 그러나 이곳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대인의 민족지역이 아니라, 1930년대 소련 정부가 그 지역에 인위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1920년대 소연방은 소수민족들에게 민족지역에서의 민족자치를 협용하면서 형성되었다. 독일인의 경우에도 1941년까지 블가강 유역 독일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독일인자치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도 민족자치지역을 수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연방은 그 타협점으로 1930년대 초반 소연방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극동지역의 인구회박지역에 유대인 자치주를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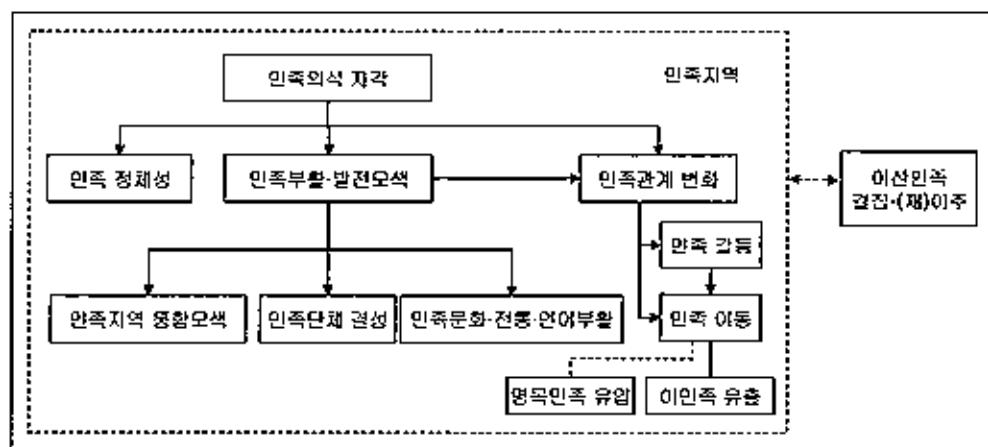
다. 1990년대 초반의 ‘민족대이동’은 인구유출로 나타났다면, 1995년 이후에는 인구유입이 인구유출을 앞지르게 되었다. 1995-2000년 사이에 대부분의 민족들은 부랴찌야지역을 떠나는 사람보다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단 하나의 예외¹¹⁵⁾가 벨라루시인들로 이들은 1998년을 제외하고 인구유출이 유입을 능가하였다. 1995년 이후에 인구이동에 의한 순인구증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1990년대 초반을 휘孱 ‘민족담론’이 부랴찌야지역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니면, 최소한 인구이동을 강제할 만큼 민족갈등이 심하지 않다거나, 또는 ‘희망의 땅’, ‘기회의 땅’인 ‘모국’이 ‘모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주와 역이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민족은 1990년대 초반 민족지역으로 민족별 대이동을 주도한 민족이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역이주를 주도하였다. 1990년대 초반은 국내이동이었지만 — 소연방이 해체된 것은 1991년 12월 31일이지만, 1992년까지 분리독립한 연방공화국에서 국적법 등이 아직 확고히 자리잡지 않았기에 여전히 국내이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 1995년 이후에는 분리독립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 국가간 이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들은 민족적 기대감을 안고 자신의 민족지역으로 이주하였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부랴찌야지역보다 그리 좋지 않았다. 사회주의시절에는 모든 경제활동인구들은 좋은 나쁘든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 사라지거나 약화되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게다가 이주한 민족지역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나마 자신의 집이 있고 생활을 영위해 왔던 원거주지역으로 재이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민족의 재이주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노년층은 자신의 민족지역에 남는 반면에 주로 젊은층에서 재이주가 발생하였다. 노년층은 이런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젊은층은 부랴찌야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다. 젊은층에게는 자신의 민족지역은 머리 속에나 있는 땅이었고, 실질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기에 노년층에 비해 민족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115) 까자흐, 리투아니아, 몰도바, 키르키즈인들이 1995-2000년 사이 한 두 해에 인구유출이 유입을 앞질렸지만, 차이가 미미하여 ‘민족’의 문제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4. 민족담론부활과 그 영향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민족담론의 대두는 민족의식의 차각에서 비롯되었다. 민족의식의 차각은 소연방차원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고, 소연방공화국에서 발생한 민족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민족의식의 차각으로 지역의 제 민족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민족정체성을 추구하고, 민족부활과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 소비에트시절은 민족억압의 시대였다는 인식이 뛰어나게 깔려 있었다. 소비에트시기는 민족언어와 문화, 전통 빛 민족사상이 박해받고 단절되어 민족이 쇠퇴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민족부활과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민족문화와 전통, 언어를 부활·계승하기 위한 제반 노력들이 제도적, 공식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향은 민족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는데, 부랴찌야지역에서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문화단체를 구성한 반면에, 부랴찌야를 대표하는 두 민족인 부랴뜨민족과 러시아민족의 경우에는 문화단체뿐만 아니라, 정치단체의 결성으로도 이어졌다.



<그림 5-2> 민족담론부활과 그 영향

민족부활의 과정을 주도한 것은 부랴뜨민족이었으며, 러시아민족의 정치적 결집은 부랴뜨민족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민족담론’이 정치·사회를 규정하고 있

었고 그 중심에는 명목민족이 있었으므로, 러시아민족은 지역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민족주의적 대응이었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발생하면서 지역내 민족관계에서도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때로는 민족갈등으로 비화되었다. 민족갈등은 소연방공화국에서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로 나타나지 않았고, 심리적 갈등의 형태를 띠었다. 민족갈등이 실제로 상존했다기보다는 민족별 결집이 극단적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으로 다른 민족들을 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형태로 나타난 것이 인구이동이다. 인구이동은 지역에 분포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지만, 명목민족과 비명목민족간의 이주지는 반대로 나타났다. 명목민족은 외부에서 이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비명목민족은 대부분 이출하였다. 이를 주도한 민족이 러시아민족과 우크라이나민족이었다. 민족별 이출지는 대부분 자신의 민족지역이었는데, 이는 이전에 자신의 실제 거주여부와 상관없는 현상이었다. 민족이동은 한마디로 ‘조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한 ‘민족답론’은 민족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역외에 거주하는 이산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 이산단체가 구 소연방지역에서 수립되어 민족문화·전통 부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민족지역과의 지속적, 안정적 연계·교류를 도모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민족지역과의 정서적, 물질적 연계는 ‘민족의 시대’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전판이었다.

제6장 지역정체성 형성과 변화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은 소비에트체제와 연방체제에서 기인한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었지만, 이것은 지역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기존의 연방체제, 연방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방체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였다. 주권선언을 통해 자치공화국에서 러시아연방과 대등한 연방공화국임을 선언한 이상,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물론 주권선언에서 소연방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인 이중적인 지위를 지님을 선언하였지만, 구체적인 분야에서 각각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했다. 그러나, 1990년 부랴찌야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한 뒤 1년이 지나도록 소연방차원에서는 자치공화국의 주권선언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주권을 선언하였고, 자치공화국에서 스스로 연방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소연방차원에서는 여전히 자치공화국으로 취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1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주권선언 전후로 부랴찌야지역에서는 러시아연방과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논란은 민족간 긴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는 이미 주권선언에서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임을 밝혔기에, 남은 것은 러시아연방과 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권한 배분의 문제는 완전한 형태는 아닐 지라도, 1992년 3월 연방조약 체결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되었다.

주권선언으로 제기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정치체제, 정부형태 등에 관한 내부적인 문제였다.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체제와 정부형태의 문제가 남았다. 1990년 10월 주권선언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부랴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정은 ‘공화국 수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말하면 ‘지역 형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화국 수립, 지역형성과정은 통치방식과 정부구조·정책을 바꾸는 단순한 법·제도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로 탄생하는 국가의 국민, 즉 부랴찌야주민들이 ‘부랴찌야’를 어떻게 인식하느

나의 문제는 국가형성, 지역형성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이었다. 부랴찌야지역은 소비에트시기에도 그려하였고 주권선언에서도 ‘공화국’임을 명확히 선언하였기에, 이에 대한 고려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선언 후의 ‘국가 수립’, ‘지역 형성’ 과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은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형성하는 한 축이자 요체이다.¹⁾ 이는 ‘지역의 정체성’(identity of region)과는 또 다른 문제이자 또 다른 차원이다. 지역성, 지역특성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을 구성하는 제반 구성요소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것이라면, ‘지역정체성’은 이와 달리 그러한 구성요소에 대해, 구성요소의 수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 수립, 새로운 지역 형성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새로운 국가 형성’, ‘새로운 지역 형성’, ‘부랴찌야공화국의 수립’ 과정을 지역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1. 지역정체성 형성

1) 민족지역성 회복 제기

먼저 지역정체성에서 핵심적인 의제였던 공화국명의 제정과 그 과정을 통해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정체성을 대변하는 지역상징(국가상징)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정체성의 변화과정을 보고자 한다.

어떤 사물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유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그 사물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형태로 명칭을 붙인다. 그리고 사물의 명칭을 부르는 행위는 그 사물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연상작용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그 사물

1) 유우익(2005: 223-225)은 지역정체성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공간구조의 차원이 이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의식의 세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의 명칭 속에는 이미 그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명에는 이미 지역성이 함축되어 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성을 찾아 지명을 정하는데, 주로 자연적 특성이나 역사적 사실, 또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명을 정한다. 따라서 지명은 지역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며, 계정된 지명은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반복적인 호명을 통해, 사회적·역사적 실천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가 된다.

1980년대 말 이후 민족부활과 주권선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부랴끼야의 '공화국명' 변경·제정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부랴끼야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즉, 지역정체성, 공화국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공화국명 제정 과정을 통해 부랴끼야지역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1) 공화국명 복원 주장

부랴끼야지역에서 공화국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대두된 것은 1989년이었다.²⁾ 구 공화국명의 복원, 즉 1958년 이전의 명칭인 '부랴뜨-몽골자치공화국'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화국명의 복원을 처음 제기한 것은 부랴뜨민족 저식인들이었다. 1989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부랴뜨센터 학자들이 당시 자치공화국 각료회 의장이었던 볼다예프(С. Н. Булдаев)에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고, 뒤 이어 1989년 10월 푸바예프(Р. Е. Пубаев), 막사노프(С. А. Максанов), 자이투예프(Г. Н. Заятуев) 박사가 공화국 최고회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1989년 저식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공화국명 복원' 문제는 1990년에 들어서는 지역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1990년 3월 공화국 문예인들이³⁾ 소련

2) 공화국명 복원을 주장한 기사로는 다음과 같다. Д. Бумбесев, Л. Раднаева, Надо исправить ошибку(1989. 9. 19); В. Наидаков, Ш. Чимитдоржев, Л. Шагдаров, Востановить прежнее название (1990. 9. 29); В.Бадмаев, О чём спорим?(1990. 9. 23); Б.-Д. Рысдалов, Прежде изменить название(1990. 9. 23); И.Пубаев, С.Максанов, П.Коновалов, С.Будаев, Ю.Рандалов, Вернуть прежде название(газета "Бурятия" 1991. 2. 15); Ш.Чимитдоржев, О чём говорят факты?("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4. 20)

3) 르사노프(Д. Лубсанов), 아살하노프(И. Асалханов), 누다예프(И. Будаев), 카미뜨도르주예프(Ш. Чимитдоржев), 카나발로프(П. Коновалов) 박사와 인민작가인 남토예프(И. Номтоев)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부랴뜨민족이었다.

공산당 부랴찌야공화국위원회와 공화국 최고회의, 각료회의에 ‘부랴뜨-몽골’명의 화복 문제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부랴뜨 민족자식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공화국명 복원 문제⁴⁾는 소비에트시기에 변경되거나 사라진 행정구역명의 복원 문제까지 확대되었고, 시민사회에서 정치·행정 등 공적영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8월 24일 공산당 부랴찌야공화국 제 1서기인 폰타포프의 발의 하에 부랴뜨 학자들과 (전쟁·노동) 원로들(veteran, veteran), 그리고 소연방 인민대의원 등 부랴찌야공화국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도부들이 참여하여 1937년 행정구역개편문제, ‘부랴뜨-몽골’로의 공화국명 회복 문제, 지방 행정구역명인 아이막문제 등을 1990년 10월의 최고회의에 제기하기로 하였다.⁵⁾ 1990년 10월 말경에 공화국명의 복원에 대해 최고회의 민족관계위원회의 몇몇 위원도 10월에 개최되는 최고회의 의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공화국명 복원 문제는 최고회의 간부회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었는데, 공산당 주최로 개최된 회의에서 인민작가 에르디네프(Д. О. Эрдинеев)를 비롯한 몇몇 참가자들은 ‘부랴뜨-몽골리야’라로의 재개정을 주장하였고, 1991년 2월에 개최된 전부랴뜨대회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되었다. 1991년 3월 28일에는 부랴뜨사회과학연구소(ВИОН) 학술회의는 공화국명 변경에 대해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1958년의 공화국명 변경과정은 진지한 학문적 검토도 없었고, 역사적 실재도 천지히 무시하였으며,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구 공화국명인 ‘부랴뜨-몽골 공화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재심의하며, 둘째, 부랴뜨 농촌지역의 명칭을 예전 명칭인 아이막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⁶⁾

4) 1990년 9월 부랴뜨사회과학센터장인 나이다크로프(В. И. Наидаков)와 치미뜨도르지예프(Ч. Чимээр тдоржиев), 사그다로프(Л. Д. Сагдаров)박사는 최고회의 의장, 공산당 공화국위원회 비서, 최고회의의 각 위원회장들, 각료회의 의장에게 공화국명 복원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5) 부랴찌야지역 신문인 ‘프라브다 부랴찌야’(Правда Бурятии)에는 각계 원로 58인이 소련 최고회의에 보내는 서한(문서)이 실렸다. 이 문서는 소련공산당 공화국위원회와 공화국 최고회의 민족관계 발전과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심의된 것으로, 1937년 행정구역 개편을 원점으로 들려 다민족지역인 부랴찌야에서 민족간 평등을 실현하자는 내용이었다. 지역 원도들의 이러한 유직임이 공화국 최고회의에 반영된 것이었다.(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8. 24. с.3.)

6) 최고회의 간부회는 3 대 7로 ‘공화국명 복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부결시켰다.

7) Вернуть название "Бурят-Монголия", "Бурят-Монгол" Иэрье Иэргээхэ, Сост. Д. ист. наук Чи

1989년 부랴찌야지역의 부랴뜨 민족지식인들이 제기한 공화국명 변경문제는 1991년에 들어서서 부랴찌야지역을 벗어나 ‘범몽골민족’의 관십사로 확대되었다. 1991년 여름 쿠렌(Курен)⁸⁾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 주, 투바공화국, 칼미키야공화국과 몽골에서 온 참가자들은 “구 명칭인 ‘부랴뜨-몽골’의 복원 문제를 최고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학술회의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⁹⁾ 이는 공화국명 복원의 문제가 부랴찌야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부랴뜨민족의 ‘민족부활’문제와 결부되었음을 보여준다.

(2) 공화국명 형성과정

1990년 주권선언을 전후해서 1994년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부랴찌야의 공화국명에 관한 광범한 논란이 있었다. 주권선언은 연방 내 ‘자치공화국’에서 지역의 주권이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있다는 선언이었으므로, 원자적으로 ‘민족문화자치’를 의미하는 ‘자치’라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 부랴찌야 공화국은 주권선언을 하면서 부랴찌야의 공화국명을 ‘부랴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임을 선언하였다. 기존의 명칭에서 ‘자치’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소연방 구성공화국과 동일한 지위와 명칭을 부여하였다.

공화국명을 둘러싼 초기의 논란, 즉 주권선언 당시의 논란은 지역정체성 또는 민족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와 관련되었다. 공화국명에서 ‘사회주의’, ‘소비에트’의 삭제나 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는 ‘민족부활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체제전환의 시기’이기도 했다. 아니 ‘체제전환의 문제’가 ‘민족부활의 문제’보다 선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의 과정이 민족부활의 과정을 분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엘친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러시아지역에서 점차 지배적인 세력으로 대우되고, 소연방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포기하면서 부랴찌야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다. 1992년 공화국명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삭제하였다.

9) Чингдоржинов Ш.Б. Улан-Удэ. 1998. С.6.

8) 부랴찌야공화국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작은 도시임.

9) Вернуть название "бурят-Монголия", "Бурят-Монгол" Нэрье Иэргээнхэ. Сост. д. ист. наук Чи шингдоржинов Ш.Б. Улан-Удэ. 1998. С.8.

(3) 공화국명을 둘러싼 지역내 담론

새로운 공화국명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부랴뜨 민족지식인,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주권선언의 문제를 원주민인 부랴뜨민족의 부활 문제와 결부시켰다. 이들은 지역정체성을 지역의 원주민과 결부시켜 사고하였다. 지역정체성의 핵심을 민족지역의 민족정체성에서 찾은 것이다. 민족지역인 부랴찌야지역의 주권선언은 원주민인 부랴뜨민족의 주권선언으로 바라보았다. 소비에트시기에 억압받고 쇠퇴되었던 원주민의 부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권을 선언한 부랴찌야의 명칭도 이러한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의 주장에는 역사적인 근거도 있었다. 1923년 자치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1958년까지 부랴찌야지역은 '부랴뜨-몽골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 BACCP)¹⁰⁾로 불렸으나, 1958년 이후에 '부랴뜨 자치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민족주의적 입장을 지닌 부랴뜨 지식인들은 1958년의 행정구역명의 변경이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그 변경이 부랴뜨민족의 민족정체성을 악화, 훼손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주권회복은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부활과 민족정체성의 회복을 가능케 해야 하므로, 지역의 행정구역명도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랴뜨-몽골 공화국'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화국명에 대해 부랴뜨민족도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몽골, 몽골민족과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더 냉정하였다. 1958년의 행정구역명 변경절차가 민주적이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권선언으로 새로운 공화국명을 만드는 문제는 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을 '부랴뜨-몽골'에서 찾던지 아니면 몽골과는 다른 '부랴뜨'로 찾던지 그것은 부랴뜨민족의 내부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다민족지역인 부랴찌야의 지역정체성은 왜 특정 민족에게서 찾는냐는 것이었다. 부랴찌야지역에서 러시아민족은 이미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

10) 소비에트시절 소인방의 민족지역의 행정구역명은 그 지역에 대대로 거주해 온 원주민명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줄여서 '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공화국' 등이다. 소연방공화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공화국의 자치공화국도 마찬가지였다. 1923년 수립된 부랴찌야지역은 원주민인 부랴뜨민족의 민족명을 이용하여 '부랴뜨-몽골 자치공화국'(정확하는 '부랴뜨-몽골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라 불렸다.

고 있고, 부랴찌야지역으로 이주한 역사도 350여년이나 되었으므로, 부랴찌야지역은 부랴뜨민족만의 지역이 아니며, 부랴찌야로 이주한 러시아민족의 거주지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민족명을 바탕으로 공화국명을 지어서는 안되고 다른 민족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 6-1> 공화국명 변경 여부에 대한 주민의식

단위: %

	전체	부랴뜨	러시아	기타
찬성	14	22	9	25
반대	69	62	73	66
마찬가지	8	9	8	8
대답 곤란	7	4	9	-
무응답	2	4	7	-

주: 부랴뜨, 러시아민족의 경우, 합야 100을 넘지만 이는 원자료의 문제임.

출전: Бурятия. 1991. 10. 19. C.2.

지식인들과 지역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공화국명에 대한 논란이 격렬하게 진행되었지만, 일반주민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부랴찌야공화국 최고회의의 의회에 따라 여론연구소지역센터(РШИОМ)가 울란우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공화국명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알 수 있다.

공화국명 변경에 대해 약 14%의 주민들만이 찬성을 하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69%나 되었다. 부랴뜨민족 중에서도 공화국명의 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22%에 지나지 않았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62%나 되었다. 반면에 러시아인들의 경우에는 단지 9%만이 공화국명 변경에 대해 찬성하였고, 73%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랴뜨민족 중에서는 '부랴뜨-몽골 공화국'으로의 변경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특히 29세 미만의 젊은이들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공화국명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지역주민들이 공화국명의 변경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2> 공화국명 변경 찬성 이유

단위: %

	전체	부랴뜨	러시아인	기타
역사적 평등 수립	86	74	100	100
향후 부랴뜨민족의 통합, 정신적, 문화적 부활에 도움	52	65	44	-
공화국 주권수립에 도움	52	44	69	33
민족의 역사적 기념을 복원과 구 몽골어 부활에 도움	17	17	6	68
몽골어권과의 관계를 강화	18	40	-	33
타민족에게 공화국의 자치권 강화를 보여줌	24	22	19	67
향후 몽골과의 영토적 통합의 기반이 됨	2	4	-	-

주: 3개 이하 복수 응답

출전: Бурятия. 1991. 10. 19. с.2.

공화국명 변경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 평등의 회복이라고 답하였다. 부랴뜨민족과 러시아민족 공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명 변경의 필요성으로 이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평등 회복'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은 민족별로 차이가 있었다. 부랴뜨민족은 부랴찌야지역이 러시아제국에 귀속된 아래 부랴뜨민족의 정치성이 약화되고 민족발전이 뒤쳐졌다라는 역사의식에서 부랴뜨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화국명은 부랴뜨민족지역이 명확히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에, 러시아민족은 그간에 공화국명은 부랴뜨민족만을 표현하였으므로 지역의 2/3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민족도 표현하는 방향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랴뜨-몽골 공화국'으로의 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중에 '몽골과의 관련성'을 변경의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표 6-3> 공화국명 변경 반대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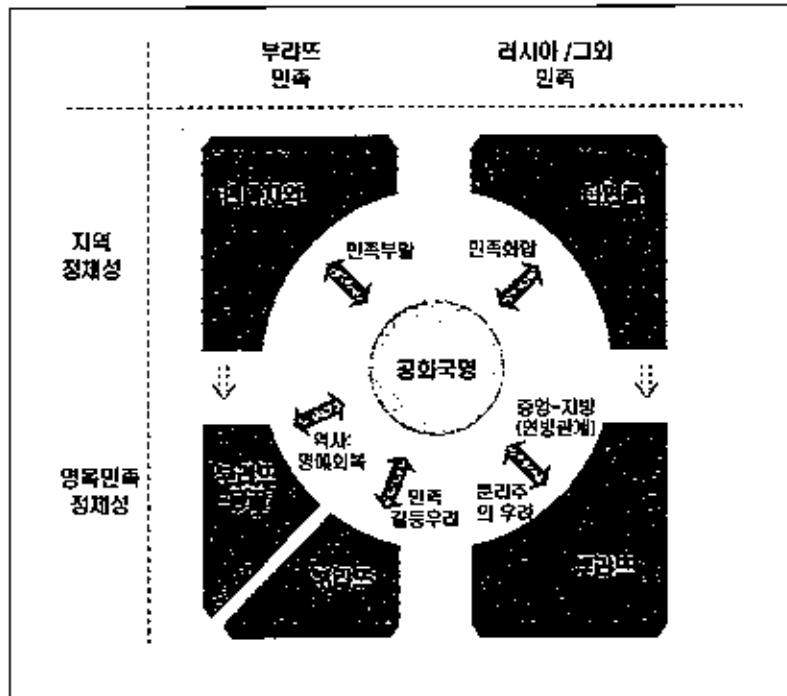
	전체	부랴뜨	러시아인	기타
공화국명 변경이 경제·정치상황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음	77	67	82	75
공화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을 해야 함.	67	44	59	75
공화국에 거주하는 타민족의 반목을 불러일으킴	40	36	41	40
부랴뜨민족의 통합과 정신·문화적 부활에 기여를 하지 않음	31	45	25	12
향후 소련이나 러시아로부터 탈퇴하여 몽골과의 통합 가능성 때문에	17	15	20	-
3개 부랴찌야 지역과의 통합문제를 제기되므로	11	7	14	-
러시아연방과의 관계 악화 초래	6	6	6	12

주: 3개 이하 복수 응답

출전: Бурятия. 1991. 10. 19. c.2.

공화국명 변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화국명의 변경이 실제로 지역이 처한 정치·경제상황의 변화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환기 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에서 파생하는 것이므로 민족정체성의 회복이나 강화 등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대답을 한 사람들은 러시아민족(82%)이 부랴뜨민족(67%)보다 더 많았다. 이는 러시아민족이 부랴뜨민족보다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민족문제에 관심이 적었음을 말해 준다. 부랴뜨민족지식인들이 부랴뜨민족의 통합과 정신부활을 위해 '부랴뜨-몽골'이라는 공화국명을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이에 대해 부랴뜨민족들은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랴뜨민족 중에서도 '부랴뜨민족의 통합과 정신·문화적 부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1%나 되었다. 이 외에 반대 이유로 제기한 것은 '부랴뜨-몽골'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다민족사회에서 타민족과의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높고(부랴뜨 40%, 러시아 36%), 러시아연방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공화국명 변경을 반대하였다. '부랴뜨-몽골'이라는 공화국명의 복원을 들러싼 담론은 지역정체성에 대한 민족

간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먼저, 부랴찌야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민족지역으로 인식하는지 다민족지역으로 인식하는지와 연관된다. 부랴뜨민족은 부랴찌야지역을 '부랴뜨민족지역'으로 인식하고, 공화국명의 복원은 사라지거나 약화된 민족지역성의 회복의 문제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 그 외 민족은 부랴찌야는 역사적으로는 부랴뜨민족의 지역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역성의 변화를 직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미 350여년 전에 러시아민족이 이주하였으며, 소비에트시기를 거치면서 100여개 이상의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지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형성되는 부랴찌야공화국명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고찰,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6-1> 공화국명을 둘러싼 지역·민족정체성 구조

공화국명의一面에는 지역정체성문제와 아울러 명목민족정체성의 문제도 깔려 있다. 구 소련시절부터 민족지역의 행정구역명은 명목민족명을 사용하는데, 명목 민족인 부랴뜨민족을 어떻게 불 것인가의 문제가 결부된다. 이 문제는 부랴뜨민족

내부에서도 그 입장이 달라 나타났다.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부랴뜨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몽골족과의 관련 속에서 찾는다. 즉,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을 '부랴뜨-몽골'로 보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말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인위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민족명, 공화국명의 변화는 실제 민족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한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부랴뜨-몽골'의 회복은 과거 억압역사의 명예회복이며, 민족발전을 위한 기본전제로 간주한다. 반면에 민족주의, 분리주의를 우려하는 부랴뜨민족의 경우에는 부랴뜨민족과 몽골족과는 역사적으로 연계가 있었지만, 근대에 와서 이미 단절되었고, 각자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랴뜨민족의 정체성을 몽골족과의 연계 속에서 찾는 점은 더 이상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은 지역정체성, 민족정체성의 문제보다 당면한 경제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지역·민족정체성이 경제문제 해결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랴찌야가 발전하는 데 있어 봉골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혹 몇몇 민족운동단체의 주장처럼 '부랴뜨-몽골'의 회복이 장차 '범몽골국가'의 수립이라는 분리주의적 경향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2) 지역상징·대표성

(1) 대통령 자격

새로 수립되는 부랴찌야공화국의 대통령의 자격을 어떻게 한 것인가 문제는 헌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침례하게 제기된 문제였다. 이는 1990년 10월의 주권선언에 대한 인식과 '주권'을 소유한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였다. 정부형태와 정치체계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자격문제는 부랴뜨민족과 러시아민족간의 첨예한 갈등을 앙산하였으며, 부랴뜨민족 내부에서도 장온파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부랴뜨민족주의자들은 주권선언은 부랴뜨지역이 민족지역이며, 자치공화국으로 존재했기에 가능했고, 주권선언을 주도한 사람들도 바로 부랴뜨민족이므로, 부랴찌야공화국의 대통령은 부랴뜨민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민족은 자민족이 인구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350여년 동안에 부랴뜨문화와 러시아문

화의 접촉으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부랴끼야 문화'를 만들었으므로 당연히 러시아민족도 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의 자격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은 러시아연방내 주권선언을 한 다른 민족지역은 명목민족에게만 대통령 출마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에서 러시아민족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따따르민족지역인 따따르스탄 뿐만 아니라, 부랴끼야공화국과 민족구성면에서도 유사한 인근의 사하-이꾸끼야공화국도 이꾸뜨민족으로 대통령 자격을 한정하였다.

양 민족간에 이에 대한 타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대통령 자격에서 '민족성'을 대신하여 '언어'가 제기되었다. '부랴뜨민족'에서 '부랴뜨어구사자'로 자격조건이 바뀌었다. 민족의식과 정체성은 언어로 가장 잘 대변되며, 부랴뜨민족이 주권선언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랴뜨어 문제였으므로, 타협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새롭게 부랴뜨어가 정부 공식언어로 지정되었으므로 새로운 대통령은 당연히 부랴뜨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 타협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는 우연적인 요소도 개입되었다. 대통령은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들은 러시아민족 중에서 부랴뜨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대통령에 출마할 만한 사람들에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 6-4> 대통령 자격 요건에 관한 주민의식(옳란우데)

단위: %

대통령 자격 요건	비율
부랴뜨어 구사, 거주기간, 민족성에 상관없이 러시아와 부랴끼야공화국의 모든 국민	30.9
러시아와 부랴끼야공화국민으로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	28.9
민족성에 상관없이 부랴끼야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부랴뜨어를 구사하는 러시아와 부랴끼야공화국의 모든 국민	27.3
어려운 질문	2.3
기타	5.9
무응답	4.3

주 : 전체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원자료의 문제임.

출전: Бурятия. 1991. 10. 19. c.2.

정치권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통령자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지역에서는 대통령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었다. 1991년 공화국 최고회의 의회에 따라 여론연구소지역센터(РЦИО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제 도입에 대해 울란우데 거주자의 35.2%가 찬성하였지만, 반대 의견은 44.1%나 되었다. 18-24세와 50-59세의 연령층에서 대통령제 도입을 찬성하였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¹¹⁾

대통령 출마자격에 관해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을 거쳐 1994년 2월 헌법이 채택되기 전에 결정된 대통령 자격은 특정민족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만 정부공직언어인 부랴뜨어와 러시아어 구사가능자라는 조항으로 결정되었다. 대통령 자격 문제는 부랴찌야지역을 특정민족의 민족지역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다민족지역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2] 지역-국가 상징 형성

대내외적으로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국기(國旗), 국가(國歌), 그리고 문장(紋章)(심볼)이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연방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부랴찌야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을 그러한 상징 아래에서 통합하기 위해 지역상징을 도안하였다. 이러한 지역 상징은 고유한 지역성을 합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그러므로, 지역상징의 도안은 과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물음이 전제가 된다.

부랴찌야공화국은 국가상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1992년 초 의회에 이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결성하여 국가상징에 관한 도안을 공모하였다. 새로운 주권정부의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으로 약 100여 개의 안들이 제출되었다.

1994년 10월에 부랴찌야공화국 헌법 제 108조와 110조에 근거하여 의회(Народный Хурал)에서 “부랴찌야공화국의 문장과 국가 작성”에 관해 공모를 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은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과 국가는 부랴뜨민족과 러시아민족이 모두 공감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야 했다.

11) Бурятия, 1991, 10, 19, с.2.

공화국의 3가지 주요 상징 중에서 맨 처음 제작된 것은 국기였다. 1992년에 제작된 국기는 파란색, 흰색, 노란색의 3색으로 구성되었고, 파란색 바탕의 맨 윗부분에 부랴뜨-몽골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사상과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노란색의 상징(싸움바, соёмбо)을 넣었다. 맨 윗부분인 파란색부분은 전체의 1/2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흰색과 노란색 부분이 1/4씩 차지한다.

부랴찌야공화국의 문장은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잘 드러내준다. 초원을 누비며 유목생활을 하던 부랴뜨민족의 생활양식과 전세계적 자연유산인 바이칼 호수를 통해 지역의 문장을 만들었다. 국기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흰색, 노란색의 3색을 사용하였다. 맨 윗부분에는 노란색으로 영원한 삶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상징 '싸움바'를 놓았다. '싸움바'는 유목민인 부랴뜨-몽골민족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 위로부터 화로, 해, 달을 표현하였다. 중앙 부분에는 푸른색과 흰색을 이용해 바이칼 호수의 파도를 묘사하고, 녹색 바탕에 산지를 넣어 지역의 지형을 보여주었다.

맨 아래 부분은 부랴찌야 주민들이 민족의 환대의 상징인 수장(綏京) '하닥'(Хадак)¹²⁾을 양옆에 긴 듯이 묘사하였다. 하닥의 중앙부분에는 부랴찌야공화국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와 부랴뜨어로 공화국명을 써넣었다.¹³⁾

3) 지역정체성의 본질-민족지역 문제

부랴찌야의 공화국명과 대통령자격에 대한 논란은 결국 부랴찌야지역을 '민족지역'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민족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민족이 원주민'이며, '또 어떤 민족이 이주민'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부랴찌야지역을 민족지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부랴뜨민족을 원주민으로, 러시아민족을 이주민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부랴찌야지역을 민족지역으로 인정하게 되면, 공화국명은 전적으로 부랴뜨민족의 문제로 넘어가게

12) 하닥은 부랴뜨민족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선물을 줄 때 사용하는 푸른색 천으로 주로 비단으로 만든다. 귀빈을 맞아하면서 환영의 뜻으로 목에 하닥을 둘러주던가, 선물을 증정할 때 받는 사람의 양팔 위에다 감싸면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러시아민족이 귀빈을 맞이할 때, 평과 소금을 대접한다면, 부랴뜨민족은 하닥과 함께 양고기를 대접하고 약간의 돈을 준다.

13) Четвертная сессия Народного Хурал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Первый созыв). 17–21 апреля 1996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Издание Народного Хурал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Улан-Удэ, 1996. С.457–460.

된다. ‘부랴뜨-몽골’로 부를 것인지, ‘부랴뜨’로 부를 것인지는 부랴뜨민족의 민족 정체성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족원리’에 기반한 연방체제는 원주민에게는 자신의 민족지역에서 민족자결, 민족(문화)자치의 권리(권리를 부여하는 반면에 이주민에게는 이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림 6-2> 지역정체성 인식 유형

부랴찌야지역이 부랴뜨민족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는 부랴찌야 대통령의 민족성운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민족지역임을 인정한다면, 부랴찌야공화국의 대통령은 부랴뜨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2. 지정학적 위상 부각: 민족에서 경제로

1990년대 전후 러시아연방은 충돌적인 체제전환의 시기에 직면하여 있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체제 개혁을 위해 시행되었던 두 개의 핵심정책, 페레스토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다민족국가의 민족문제를 촉발하였다. 연방 중앙의 입장에서나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나, 어느 하나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 두 문제는 어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

었다. 그러나, 특정 정치적 국면에서 어느 하나가 더 부각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가 부차시 될 수도 있으며,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과 민족의 상황에 따라 두 문제 중에 어느 하나가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

먼저 부각된 것은 '민족문제'였다. 그것은 3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러한 문제제기가 소연방공화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두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그들은 독립선언, 주권선언의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소연방공화국의 독립·주권선언은 비단 '연방체제'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연방을 구성하는 민족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소연방공화국에서 불어닥친 민족주의의 열풍은 러시아연방의 민족지역에서도 '민족주의의 마뜨료슈까'라 일컬어지는 연쇄작용을 촉발하였다. 이리하여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러시아연방은 '민족담론'에 휩싸이게 되었다. 1990년 8월부터 러시아연방의 자치공화국을 필두로 민족지역에서 주권선언이 봇물을 이루게 되고, 주권선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피어오르던 '민족부활'의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부랴찌야공화국도 이러한 '주권화 행진'에 러시아연방에서 여섯 번째로 동참하였으며,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을 중심으로 소비에트시기 억압된 민족의 부활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1937년 분리된 민족지역의 통합과 공적영역에서 사라진 민족어의 부활, 1958년에 변경된 공화국명(명목민족명)의 복원을 비롯해, 민족 문화·전통·의식의 부활 등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민족부활과 발전을 위한 기획은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다민족지역인 부랴찌야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들의 민족부활을 위한 기획이 잇따랐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 사회적 자배담론인 '민족담론'은 1994년 부랴찌야공화국 수립을 전후로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민족담론의 약화는 각 민족들이 제기한 민족문제의 근본적이고 완벽한 해결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다민족사회와 공존을 위한 타협,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의 현실성이 결여된 민족부활 프로그램과 민족부활을 촉발한 '주권선언'이 '공화국 수립'으로 부분적으로 해결되면서 '민족담론'은 그 근거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1992년 체제전환기의 주요문제 중의 하나였던 '경제상황'이 자유화, 사유화 정책으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민족문제의 부분적 해결과 경제위기의 심화는 지역사회에서 '민족담론'이 약화되고 '경제담론'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1) 민족담론의 쇠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는 민족정치단체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소연방차원에서 발생한 민족주의 경향과 함께 소연방의 민주화로 정당과 정치단체의 결성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었다. 부랴뜨민족주의 정당인 '부랴뜨-몽골 민족당'이 지역에서 최초로 결성된 정당이었으며, 게세르, 네게델 등의 민족정치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정당·사회단체들은 1990년 주권선언 이후에 본격적인 민족정치과정에 참여하였지만, 이에 대한 내중적 지지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다원주의가 실현되고 처음으로 실시된 1993년 12월 연방의회(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선거결과로만 보았을 때, 당시 전 러시아연방뿐만 아니라, 구 소련지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민족정치적 과정은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즉, 선거과정이 '민족변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선거에서 민족문제가 중심문제로 대두된 것이 아니라, 사유화, 시장화로 인한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선거 결과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러시아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주도하였던 가이다르의 '러시아의 선택'(Выбор России)은 지역에서 1.74%밖에 득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시장화, 사유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변화에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에 최고 득표를 한 전영은 공산당출신이거나 이와 연관된 '사회평등' 진영이었다.

당시 부랴뜨민족주의를 주도하였던 사회·정치단체인 네게델과 부랴뜨-몽골 민족당은 단체와 당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조차 못하였다. 물론, 이 단체들도 특장 선거연합('단합과 진보')에 참여하였지만, 그 연합이 지역내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더구나 단체의 이름을 걸고 선거운동조차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은 부랴뜨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해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최소한 민족의 문제보다 경제의 문제를 우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민족담론이 사라지고, 민족변수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3년 12월 선거에서 러시아민족주의자인 지리노프스키가 주도하는 당(УДП)은 부랴찌야지역에서 전체 투표자의 22.54%를 득표하였는데, 이 당이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높은 득표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민족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부랴뜨민족부활과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과 소극

적인 저항이 러시아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을 주도한 것은 부랴뜨민족이었음에 반해, 특정 정치적 국면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은 러시아민족에게서 나타났다.

1993년 미국과 러시아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결과¹⁴⁾는 부랴찌야공화국 주민들의 당시 사회에 대한 인식과 민족문제에 대한 생각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러시아와 지역(공화국)경제발전전략, 평화공존, 지역내 민족간 화합과 안정을 추구한 반면에, 극단적 형태의 민족운동, 러시아의 서구지향과 진행되고 있는 '파괴적 특성'의 경제개혁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들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조화를 원하였다.¹⁵⁾

2) 쇠퇴 원인

(1) 경제위기 심화

1990년대 구 소련방 공간은 근본적인 경제변화에 직면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획경제의 거부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기업과 조직의 경제적 독립성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해 부랴찌야지역에서는 광범한 탈국영화,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표 6-5> 부랴찌야지역에서 소유형태별 기업사유화 현황

단위: 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485	165	73	32	21	7	1	3	6
소연방	9	26	17	11	3	2			
러시아	69	47	22	13	13	4		2	1
부랴찌야	407	92	34	8	5	1	1	1	5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187

- 14) Хафф Д., Колтон Т., Левманн С., Губогло. Предвыборная ситуация в России/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 и Институт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ВШС СО РАН. М., 1993.
- 15) Абаев Т. Н.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Бурятии в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ый период/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ё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Улан-Удэ:ИМБиТ. 2003. с.79-80.

1992년 러시아연방이 사유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랴찌야공화국에 있던 각급 소유형태의 기업들이 사유화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총 485개 기업체가 사유화되었고, 1994년 165개로 사유화 정책이 시행된 2-3년 동안 사유화는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초기에는 부랴찌야공화국과 시·군 소유 기업이 사유화를 주도하였다. 소연방 소속의 기업과 기관들은 1994년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사유화되어, 1993년-1996년까지 각각 9, 26, 17, 11개 기업이 사유화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유화과정에서 그나마 정부소유형태를 가장 많이 유지한 분야가 교통과 농촌경제를 담당하는 지질학(geology) 관련 기업체였다. 공업분야에서는 정부소유가 11.1%로 줄어들었고, 건설 14.4%, 농촌경제 15%로 줄어들었다.¹⁶⁾

<표 6-6> 적자기업과 기관의 비율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러시아	15.3	14.0	32.5	34.2	50.6	50.1	53.2	40.8	39.8	43.2
동시베리아	19.8	23.0	43.5	44.8	63.3	64.4	65.9	53.9	46.6	45.4
부랴찌야	27.1	30.3	55.6	54.8	71.1	71.4	70.1	61.0	63.0	55.3
우스찌-모르딘스끼	-	15.7	47.5	34.0	76.5	68.2	72.6	38.9	43.3	55.3
아긴스끼예	-	31.4	72.9	80.0	91.9	83.6	81.0	81.8	84.6	65.5

자료: Гом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00. с.790-791; Госкомстат РБ.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и регионы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2002. с.116-117.

사유화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기업과 지역경제구조를 바꾸긴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야기하였다. 부랴찌야지역의 산업구조는 자원채취산업과 일차적인 가공산업에 치우쳐 있었고 소비재 산업의 발전이 미약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상품이 역외로 수출되었으며, 지역에서 필요한 소비재를 역외에서 수입하였다. 대외의존적 산업·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부랴찌야지역은 사유화와 함께 정부의 교통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적자기업과 기관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4개 중의 1

16) Елаев А. А. 2000. с.257-258.

개 기업이 적자상태에 있었지만, 1996-1998년에는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이 70% 이상에 달하였다. 부랴찌야공화국을 비롯해, 부랴뜨 민족지역인 우스찌-오르딘스끼 자치구와 아긴스끼예자치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업 도산과 사유화, 적자기업의 증가는 지역에서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의 감소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연방에서 실업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실업은 지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자 일 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1992년 부랴찌야지역에서 이미 29,2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465,900여명)의 5.7%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였다. 이후 실업자 수는 급증하여 와활위기가 닥친 1998년에는 94,900여명에 이르렀다.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22.1%) 가량이 실직상태 이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6-7> 부랴찌야공화국의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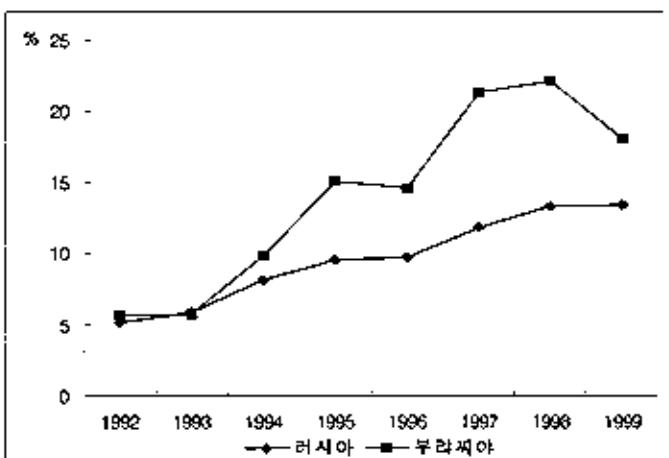
단위: 천명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경제활동 인구	470.1	479.8	470.9	465.9	437.5	424	420.4	432.8	400.5	370.3	395.8
실업자수	-	-	-	29.2	29	48.2	71.6	66.5	94.4	94.9	84.7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02. с.74.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부랴찌야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체제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연방의 모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부랴찌야지역의 경제위기는 러시아연방의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는 문제는 있었다. <그림 6-3>에서 보듯이,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접어들고 실업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부랴찌야지역의 실업률은 러시아연방의 전체 평균과 유사하였다. 1993년에도 각각 5.7%, 5.8%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실업률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연방에서 실업률의 증가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었던 반면에, 부랴찌야에서는 실업자의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부랴찌야지역에서는 1995년에 실업률이 10%대를 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22.1%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러시아연방의 실업률은 각각 9.5%, 13.3%였다.

약 5년 사이에 부랴찌야지역과 러시아연방 전체 평균과의 실업률 격차는 무려 10%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6-3> 러시아와 부랴찌야의 실업률 변화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00. с.95-96.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랴찌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 한다던가 더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업자들만이 아니었다.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시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1인당 월평균 금전소득을 보더라도, 러시아연방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부랴찌야지역은 그보다 더 삼하게 겪고 있었다. 물론 1992년 사유화, 가격 자유화로 러시아연방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발생하였으므로, 수치상의 단순 비교가 얼마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정도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월평균 소득도 전체 러시아평균보다 낮았다. 1999년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소득에서 부랴찌야공화국은 러시아연방 전체 89개 구성주체 중 46번째에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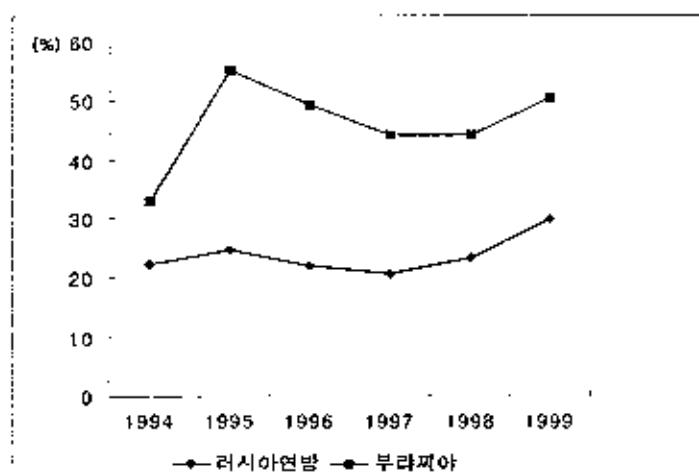
<표 6-8> 1인당 월평균 금전 소득

단위: 1,000루블, 1998년 이후 루블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러시아	0.142	0.215	0.466	4	45	206	525	766	934	999	1,609
부랴찌야	0.134	0.197	0.409	3.2	39	160	372	497	738	643	1,061

자료: Госкомстата Росси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00. С.104-105.

1990년대 부랴찌야지역의 경제위기가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와 닿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을 받는 주민들의 비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4년 지역전체 인구 중에서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는 주민이 33%에 달하였다. 1994년 세 명 중 한 명꼴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던 것이 1995년에는 두 명 중 한 명(55.2%) 꼴로 증가하였다.



<그림 6-4>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 주민 비율

자료: Госкомстата Росси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00. С.134-135.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의 심화와 주민 삶의 질의 저하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치젠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관심을 둘려놓기에

충분하였다. 지역에서 민족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는 주민들의 외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는 아니었다. 민족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성에 훼손을 입을 지는 몰라도, 민족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장에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민족단체의 결성이나 민족부활을 위한 노력들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일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리 높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달랐다.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민족담론'은 '경제담론'에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2] 중앙의존 불가피-빈약한 지방재정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주의는 소비에트시기의 '러시아화'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비에트시기에 민족이 익압받고 절곡받음으로써 민족발전이 뒤쳐지고 쇠퇴했다는 사고에서 발생한다. 지역의 민족주의는 단지 민족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랴찌야는 러시아연방의 한 지역이므로, 부랴찌야지역의 민족주의는 결국 러시아연방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1980년대 말의 왕성했던(타지역과의 비교라기보다 부랴찌야지역에서 시계열적 기준에서) 민족주의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은 부랴뜨민족주의의 바로 이러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지역에서 민족주의의 강화는 중앙과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랴찌야지역은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지속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민족주의자체가 지역주민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연방 중앙의 지원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

1996년 이후의 자료에 의하면(<표 6-9>), 부랴찌야의 세입 중에 연방교부금이 30%를 상회한다. 1996년 32.3%였던 것이 1997년에는 40%를 넘어섰고 1998년에는 50%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부랴찌야공화국은 연방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을 받는 수혜자였으므로, 중앙과의 긴장이나 갈등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간등의 회피는 결국 부랴뜨민족주의의 약화, 민족담론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표 6-9> 지역예산 중 연방교부금 비중

단위: 10억루블(~1997년), 100만루블(199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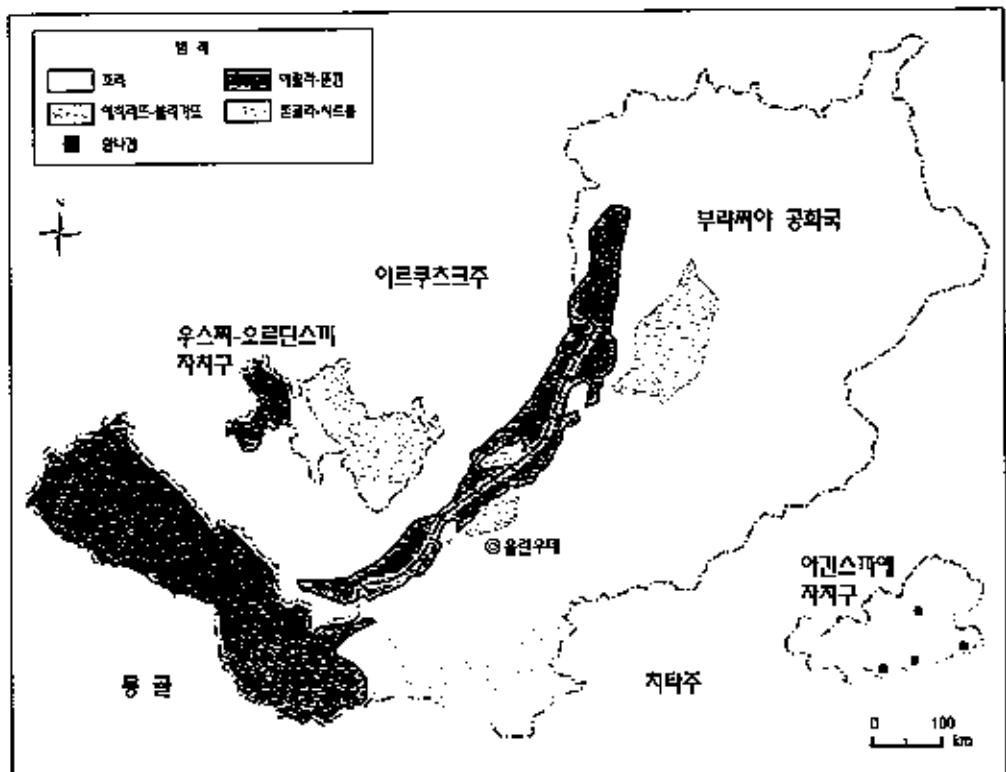
	1996	1997	1998	1999	2000
세 입	1,748.8	2,166.6	2,076.4	3,339.1	4,288.4
연방교부금	565.5 (32.3)	890.6 (41.1)	1,011.7 (48.7)	1,490.4 (44.6)	1,913 (44.6)
세 출	1,962.9	2,826.8	2,039.5	2,791.4	5,440.1
결 산	-214.1	-660.2	36.9	547.7	-1,151.7

자료: Госкомстат Буряти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293.

(3) 민족형성 미완

부랴뜨민족주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9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부랴뜨민족 자체의 문제에서도 기인하였다. 부랴뜨민족은 크게 4개 부족으로 구성된다. 동부의 호리족과 바이칼을 중심으로 한 에히리뜨-불라가뜨족, 서남부의 아랄라-툰낀족, 그리고 17세기 전후 몽골의 내전시기에 유입한 쫀꼴라-사르룰족이다. 이들은 몽골과의 국경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아긴스까에 자치구에 분포하는 햄나간족으로 이들은 분포지역도 넓지 않고, 부족원도 많지 않다. 부랴뜨민족의 방언이 대개 이들 부족의 분포와 유사하다.

부랴뜨민족이 독자적인 '민족'으로 대두된 것은 17세기 중엽 러시아제국에 귀속되면서부터다. 이 말은 부족간 정복이나 교류를 통해 서로 동화되면서 단일한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질적인 러시아민족이 이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상대민족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내발적인 민족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부랴뜨'라는 민족으로 인식된 것도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민족에 의해 서였다. 러시아제국에 귀속되기 전까지 이들은 단일한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지도 않았다. 민족과 민족의식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러시아제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소비에트시기에 '러시아화'는 다른 민족(예, 체첸)에 비해 수월했다고 할 수 있다.



<지도 9> 부랴뜨민족의 부족별 분포

출처: Истро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Бурятии. 2001. С.259.

미완의 민족형성으로 부랴뜨민족주의는 구조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으며, 1990년대 초반 민족전체로 결집하기보다 혈연지연관계에 기초한 향우회(군별)로 모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우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족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민족전통과 명절의 부활에 초점을 두었다.

부랴뜨민족의 이러한 특성으로 부랴찌야의 지역주의에서 명목민족의 민족주의적 색채는 애초부터 약할 수밖에 없었다.

3) 경제교류 방향의 변화

소비에트시절의 부랴찌야공화국은 대외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 생산물이 구 소연방 영토내에서 소비되었고, 지역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도 주로

구 소련방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졌다. 소비에트공간이라는 단일한 경제공간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원리에 따른 분업, 즉 자원·원료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러시아연방, 부랴찌야공화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경제체제의 변화 외에도, 경제공간의 변화도 동반하였다. 시장경제, 개방경제로 전환하면서 러시아연방, 부랴찌야지역은 세계경제체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소비에트 단일경제공간에서 세계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직면하였다. 새로운 경제환경, 넓어진 시장으로 인해 대외경제교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적 범위도 확장되었다.

1992년까지 부랴찌야지역의 대외교역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으며,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구 소비에트체제에서 형성되었던 공간구조에 묶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1992년 사이 지역의 대외교역이 사회주의진영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게다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 몽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이 기간에 대외교역의 약 75% 이상이 두 나라와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입의 경우에는 편중현상이 더욱 극명하였다. 이는 수출입이 부랴찌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나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자체적인 작동원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한 원리는 수출입 관련 통계 작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표 6-10>에서 보는 것처럼, 부랴찌야의 수출입 통계를 지역별, 대륙별로 구분하지 않고, 코메콘(경제상호원조회의,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¹⁷⁾의 회원국, 준회원국 등 코메콘과의 관련성으로 작성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부랴찌야지역이 시장·개방경제로 나아가고 세계시장에 뛰어들면서, 대외교역을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지역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부랴찌야가 교역하는 국가는 구 소련방공화국(독립국가연합과 탈퇴 3국)을 제외하고도 40여개 국에 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을 벗어나 유라시아대륙 전체로 교역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아프리카 대륙(아프리카)과도 교역을 하였다.

17) 코메콘은 1949년 1월 소련의 주도하에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가 참여하여 만든 경제동합기구이다. 이후 알바니아, 동독, 몽골, 쿠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유고슬라비아가 준회원국으로 북한,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와 서방진영에 대항하는 동구권의 경제동합기구였던 코메콘은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1991년 해체되었다.

<표 6-10> 부랴짜야공화국의 국가별 수출입(1990-1992)

단위: 100만 루블, (%)

	수 출			수 입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합 계	14.5	22.9	23.3	20.7	37.9	17.4
소 계	7.8 (53.8)	14.5 (63.3)	8.7 (37.3)	10.1 (48.8)	22.6 (59.6)	7.5 (43.1)
코메콘1) 몽골2)	5.8 (40.0)	13.0 (56.8)	5.5 (23.6)	9.7 (46.9)	20.5 (54.1)	6.2 (35.6)
체코	1.3	1.3	2.3	-	2.1	0.8
헝가리	0.7	0.4	0.2	0.4	-	0.5
중 국	6.7 (46.2)	7.7 (33.6)	12.2 (52.4)	10.6 (51.2)	15.1 (39.8)	6.8 (39.1)
북 한	-	-	1.5	-	-	1.5

주: 1)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2) 괄호 속의 비율은 전체 수출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Бурятия 70 л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1993. с.31.

<표 6-11> 부랴짜야공화국의 수출지역별 총액

단위: 1.000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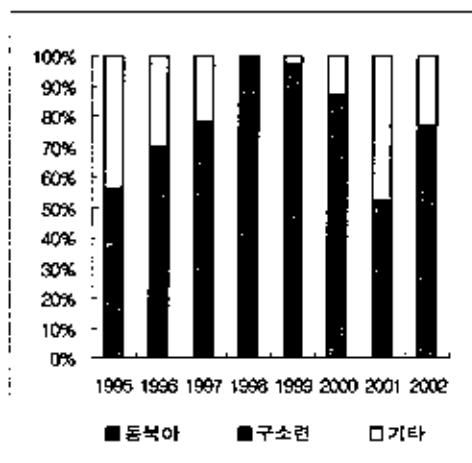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104,823	109,664	133,243	70,359	92,565	109,423	150,597	139,468
기 타	45,768	33,269	29,255	546	2,462	13,819	71,842	32,434
동 북 아	41,017 (39.1)	60,410 (55.1)	87,520 (65.7)	62,348 (88.6)	86,874 (93.9)	91,664 (83.8)	75,196 (49.9)	95,048 (68.2)
중 국	22,743 (21.7)	41,171 (37.5)	50,207 (37.7)	35,300 (50.2)	58,501 (63.2)	70,461 (64.4)	48,254 (32.0)	72,792 (52.2)
한 국	188	387	14,598	5,232	110	225	148	1,963
북 한	837	834	73	49	-	151	-	320
일 본	9,077	944	640	64	8,106	7,844	10,474	
몽골	8,122	17,074	22,002	21,703	20,157	12,983	16,320	19,953
구 소 련	18,038 (17.2)	15,965 (14.6)	16,468 (12.4)	7,465 (10.6)	3,229 (3.6)	3,940 (3.6)	3,919 (2.6)	11,986 (8.6)
CIS	14,858 (14.2)	15,529 (14.2)	14,595 (11.0)	6,136 (8.7)	1,997 (2.2)	3,155 (2.9)	2,051 (1.4)	10,433 (7.5)

주: 괄호는 전체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339-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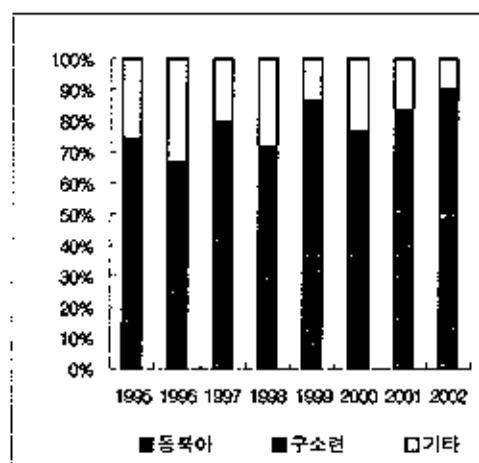
Комстат РБ.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80лет. 2003.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국가, 아시아태평양국가가 부랴찌야의 주요 수출자역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1995년 이후 부랴찌야공화국의 수출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5년 약 40%부터 1999년 약 94%까지 대부분의 수출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이란으로의 일시적인 수출(약 43%, 6,400백만 달러)을 제외한다면, 동북아지역이 부랴찌야공화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초반에도 중국과 몽골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하여 동북아국가와의 교류는 이미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1990년대 초반에 단순히 지리적 위치로서 중국과 몽골이 속한 동북아지역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지역’의 의미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첫째, 1990년대 초반, 중반의 부랴찌야지역의 경제체제, 그 속에서 대외교역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며, 둘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기술, 자본, 노동력, 자원과 시장 등 경제발전의 재반 조건이 유기적으로 갖추어진 지역으로서의 동북아지역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후자의 동북아지역은 보다 정확히 태평양-아시아지역에서의 ‘동북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5> 수출지역별 비중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Сборник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1997. с.84-85 ; Госкомсттат РБ.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339-340.



<그림 6-6> 수입지역별 비중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Сборник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1997. с.84-85 ; Госкомсттат РБ.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339-340.

1995년 이후 수출입 지역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도 부랴찌야지역이 자신의 위상, 경제적 방향을 동북아지역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출액에서 구 소련지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데 반해, 수입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량의 30-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수출패턴은 이미 변하였음에 반해, 수입패턴은 과거 소비에트시절의 패턴이 남아있음의 반증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소비에트시기 '유럽러시아지역을 위한 자원기지'였던 부랴찌야지역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부랴찌야지역이 '동북아지역을 위한 자원기지'로 자신의 위상을 털바꿈 중이라 할 수 있다.

<표 6-12> 부랴찌야지역의 수출입량(1995-2002)

단위: 1,000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출	104,823	109,664	133,243	70,359	92,565	109,423	150,597	139,468
수 입	66,657	54,983	48,974	45,068	24,760	25,250	31,104	40,053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Б.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2. с.339-340.

동북아지역이 부랴찌야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무역수지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1990-1992년에는 수출입 규모가 거의 비슷했지만(<표 6-10 참조), 1995년 이후에는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월등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 수출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부랴찌야지역의 발전과 경제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애초 그 의도와 달리 소연방 구성공화국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개방정책으로 소비에트 시기 각 지역에서 민족억압의 역사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그간 국가적, 국민적 통합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왔던 '소비에트 국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다른 민족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러시아화'를 촉진하는 기제였음이 드러났다. 소연방 구성공화국에서 시작된 민족주의적 경향은 분리주의로 치달아, 결국 1991년에 소연방은 해체되었다.

소연방에서 시작된 민족주의, 주권·독립선언은 러시아연방에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연방내(당시는 러시아공화국) 민족지역인 자치공화국을 중심으로 민족부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형식적으로 주어졌던 '민족(문화)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권선언이 줄을 이었다. 1990년 하반기에 러시아연방내 16개 자치공화국 중 14개 지역에서 주권선언을 하였으며, 이러한 주권선언은 이후 자치주와 일반 행정구역인 주, 변강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러시아는 아른바 '주권화 행진기'에 접어들었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주권선언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발생하였다. 하나는 소연방처럼 연방해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체계의 개혁과 재편이 요구되었고, 다른 하나는 주권선언 후의 지역의 정치·경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형성, 지역형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체계에서 지역의 위상·권한의 문제와 연관되며, 지역차원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전환기에 새로운 지역상의 수립문제와 결부되었다. 즉,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해가 무엇이며, 지역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할 수 있다.

전환기 주권선언이 역사적 민족지역의 다민족사회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초래하였다. 민족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리 나타났고, 주권선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추구하는 목표의 상이함으로 민족관계의 변화는 말할 나위도 없고, 때로는 민족갈등을 양산하였다. 주권선언이 지역주의의 핵심 개념인 정체성의 정치를 동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였다.

이 연구는 주권선언으로 축발된 러시아의 지역주의를 지역과 민족을 둘러싼 정치성 정치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러시아연방의 동시베리아지역에 위치한 부랴찌야공화국을 사례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랴찌야공화국이 주권선언은 소비에트 과정을 거치면서 내적인 준비와 발전을 통한 주도적인 과정이 아니라, 소연방공화국에서 진행되었던 주권·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았다. 공화국의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역이 '대자적인 정치 주체'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전환기 소련의 정치상황에 '즉자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다. 주권선언의 목적은 제한적 자치가 보장되는 자치공화국이라는 위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치권의 획득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경제 주권의 획득이었다. 점차 약화되는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치공화국에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독자적인 권한도 없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은 대부분 역외로 이출되었다. 단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의 95%가량이 연방—소연방, 러시아연방— 소유였다. 게다가 개혁정책으로 소연방 구성공화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자치공화국과의 권한 격차는 더욱 커졌다. 주권선언은 동일한 민족지역으로서 소연방 구성공화국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주권선언에 사용된 기제는 '민족'이었으며, '민족기제'에 대한 인식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자치공화국이 주권선언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민족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소비에트 시절 비록 문구상에 존재했지만, 민족지역의 명목민족에게는 민족자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족성에 따라 '주권선언'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다. '주권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민족지역의 주권선언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치공화국의 지위상승 선언'인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민족'과 '민족지역'을 둘러싼 정치성의 정치로 이어졌다. 즉, 지역의 정치·사회에서 '민족화 과정'을 초래하여 지역주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담론이 지역주의의 주요문제가 되었다. 주권선언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지방관계의 재편을 꾀하고 새로운 연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지만, (다)민족지역에서 민족기제가 개입함으로써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러시아민족에게 '민족'은 주권선언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였지만,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에게 '민족'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자 목적이었다. 그러나, 부랴뜨민족 구성원 모두가 민족을 '목적'으로 사고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의 1990년대를

전후한 시점은 ‘민족문제’의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기’이기도 하였다. 민족의 부활과 발전은 물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민족의 부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도 않으며, 역으로 불필요한 민족갈등을 초래하여 경제위기 국복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민족정치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지역의 민족구성이었다. 역사적으로는 부랴뜨민족의 민족지역이지만, 인구구성의 측면에서는 러시아민족이 70%나 되는 러시아민족의 땅이기도 하였다. 민족정치과정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현실 상황’을 놓고, 민족별로 팽팽한 대립과 경쟁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지역주의의 발전 과정은 인구구성의 측면에서는 지역성, 지역정체성을 둘러싼 ‘역사’와 ‘현실’간의 대립 과정이었다.

셋째, 주권선언은 연방체제의 변화, 즉 중앙-지방관계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권선언 당시 소연방차원에서 팽배한 민족주의·분리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러시아민족과 소수민족(부랴뜨민족)간의 갈등으로 전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권선언에 사용된 ‘민족기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민족성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었다.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민족을 비롯한 그 외 민족들은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이 주권선언을 통해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소연방 구성공화국의 주권선언이 독립선언으로 이어져 연방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부랴찌야지역에서도 일부 부랴뜨민족 자식인들에게서 분리주의적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넷째, ‘민족정치과정’, ‘민족남론’은 1994년을 전후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밖으로는 주권선언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점차 해결되었으며, 안으로는 ‘민족정치과정’을 지속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방조약과 제반 협정의 체결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민족정치과정’을 지속할 ‘민족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랴뜨민족은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전, 민족을 형성하기 전에 부족상태에서 러시아제국에 귀속되었다. ‘민족의 형성과 인식’은 내부적 반전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적 규정을 통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확대해서 말하자면, 민족을 구성하는 각 짐단간에 ‘민족으로 묶임’ 무언가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족정치과정이 시작된 당시부터 ‘단일한 민족적 요구와 목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랴뜨민족지역에서 러시아민족이 이미 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들도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민족정치 과정은 극단적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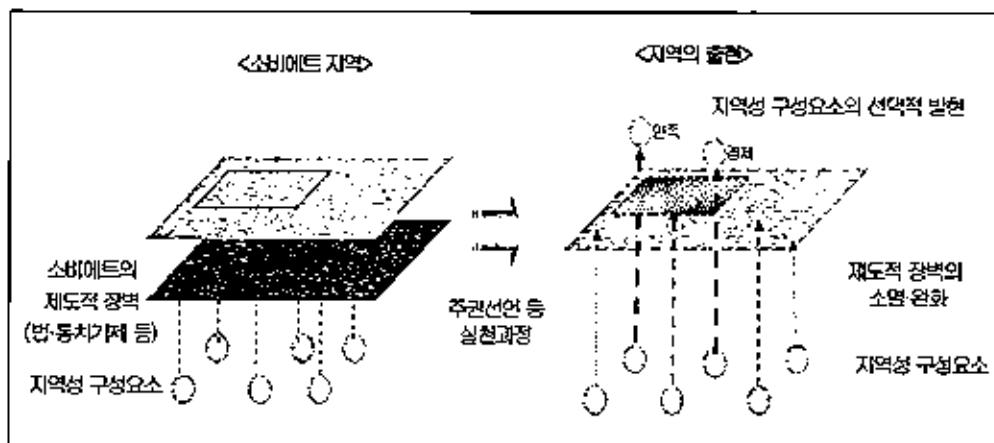
다섯째, 부랴찌야지역의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은 지배담론의 교체를 동반하였다. 초기의 지배담론이었던 '민족담론'은 '경제담론'으로 교체되었다. 전환기 부랴찌야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에서 민족문제는 경제문제와 함께 대두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그 자체에서 접근한다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족문제는 부수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의 교체'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에 적면한 러시아연방은 자유화, 사유화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주권선언 시기, 경제적 권한 배분과 관련되는 시기에 '민족담론의 고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체의 문제가 드러난 시점에서 '민족'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민족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으나, '경제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여섯째, 유럽러시아지역을 위한 자원공급기지였던 부랴찌야지역은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방경제에 따라 세계경제공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겪었다. '전문화'로 대표되는 소비에트 지역정책은 공간적 분업체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시베리아지역은 풍부한 자원의 개발과 원료 생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발되고 생산된 제품은 지역의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유럽러시아지역의 수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부랴찌야지역은 더 이상 기존의 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기존의 경제관계, 공간구조의 변화를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개방경제에 접어든 상황에서 동북아지역, 태평양-아시아지역이 자신의 경제활동무대가 됨으로써, 부랴찌야지역은 기존에 '서부지향'에서 '동부지향'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즉, 부랴찌야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부랴찌야지역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러시아연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몽골과 접하고 있으며, 경제력과 기술력이 높은 인근의 한국, 일본과 문화적으로도 동질적인 부랴찌야지역은 러시아연방이 태평양-아시아, 동북아시아(러시아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통칭하여 남부아시아라고도 함) 지역으로 진출하는 주요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 환경이 변화하

고, 지배집권이 '경제집권'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족지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그 위상이 재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러시아연방에서 발생한 지역주의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지역주의의 발생은 '지역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시기에 지역은 중요한 범주로 변수도 아니었다. 독특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은 오히려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다. 사회주의의 발전은 계급·계층적 차이, 사회·민족적 차이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지역의 출현, 지역의 강조는 오히려 이러한 목표에 저해가 되는 것이었다. 대신에 소비에트 시기에는 '지역'의 자리를 경제적 성격이 강한 '구역'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7-1> 지역 출현의 과정

지역의 출현은 지역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발현하고, 그 요소들이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제도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의 출현은 당, 이데올로기 등의 제도적 장벽이 해체되면서 가능해졌다. 강력한 소비에트 통치기제가 소멸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지역성이 발현하였으며, 그 계기를 만든 것이 개혁·개방정책이었다. 그러나,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었다고 저절로 지역이 출현하고 지역성이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선언과 민족정치화과정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의 출현'은 초기에는 민족지역을 중심으로 전

개되었으며, 이후 일반 행정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민족’과 ‘경제’다. 이는 러시아연방이 다민족국가라는 것의 반증이며, 주권선언과 지역주의가 대두되던 시기가 다른 아니라 본격적인 경제(체제)개혁의 시기임을 의미한다. 지역주의의 전개 과정,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은 이러한 출현한 요소들간의 경쟁과 조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정치화 과정’, ‘정체성의 정치’를 거치면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초기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획득하게 된다. 즉, 그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다. 주권선언 초기의 ‘민족 기제’와 본격적인 지역형성과정에서의 ‘민족’은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활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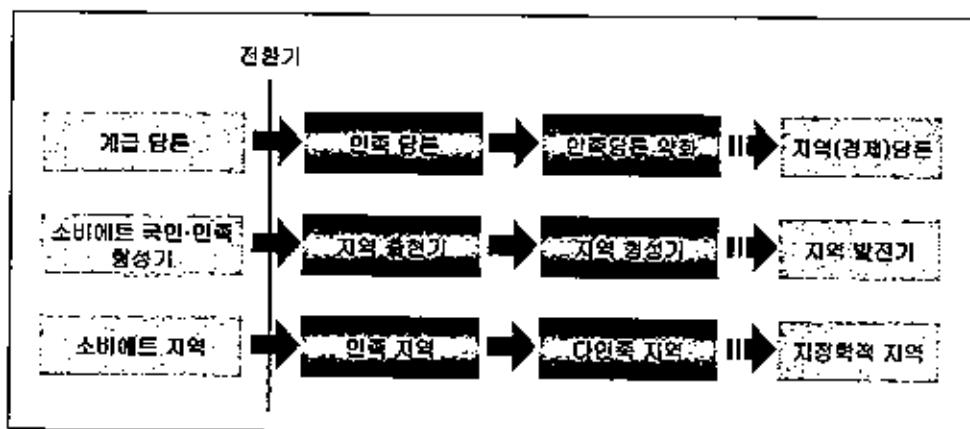
둘째, 체제 전환기, 국가형성기에 민족지역에서 ‘민족의 의미와 역할’의 문제를 짚을 수 있다.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새로운 연방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역할의 문제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민족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형성’이라는 전환기에 중심적인 기제와 담론이 되었던 것은 다른 아닌 ‘민족’(nation)이었다. 이는 민족(nation)을 형성하고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에 ‘정치적 지향,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주권선언을 통해 지역의 이익과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이 동원’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민족지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연방체제와 행정구역체제에서 ‘민족원리’를 통해 — 실제 작동여부와는 상관없이 — ‘민족의 특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기 때문에, 민족은 전환기에 ‘권력 획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동원이 쉽고 유력한 수단인 ‘민족 기제’도 항상 그 힘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형성’ 과정이 어느 정도 완결되거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을 때, 민족은 그 힘이 약화되거나 또는 질곡이 될 수도 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연방이 ‘국가 형성 과정’을 거치고, 시장화와 자유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민족은 더 이상 중심담론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정치 권리’ 획득의 측면에서는 민족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실제적인 ‘경제 권리’의 획득에서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민족의 강조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민족은 정치메커니즘에서 보다 경제메커니즘의 작동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1993년과 1994년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을

때, 민족주의적 정당과 단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출마조차 할 수 없었던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민족은 초기 '국가형성'(지역형성)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국가발전'(지역발전)의 과정에서 그 역할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힘의 분산을 통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자체의 실현에도 지장이 될 수 있다.

민족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또 하나의 상황은 다민족사회에서 협통적 의미의 민족(ethnic)에 대한 지나친 강조이다. 100여 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부랴찌야공화국에서 '민족'(ethnic)에 대한 강조는 민족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에 대한 우려로 민족주의세력은 다민족사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지역주의 특성의 변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지역주의 특성의 변화는 지역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며,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동반한다.



<그림 7-2> 전환기 러시아에서 지역주의의 특성 변화

이러한 과정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지역담론의 변화가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며, 지역경제성의 변화가 또한 담론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전환기 지역주의의 발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의 출현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지역담론은 '민족담론'이었다. 민족지역에서의 주권선언, 민족부활, 민족주의의 발생이 사회의 정치, 경제를 좌우하는 담론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러시아연방과 주권

선언한 지역의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지역출현기 민족담론은 러시아 연방의 명목민족인 러시아민족과 민족지역의 소수민족간의 문제였으나, 주권선언 후 지역형성기에서는 지역 내부의 민족간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연방의 민족지역 중에서 명목민족, 소수민족이 다수를 점하는 곳은 이제 극히 드물다. 21개 공화국 중 단지 4개 공화국만이 명목민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제국과 소비에트시기에 러시아민족을 비롯한 제반의 민족들이 이미 민족지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주권선언의 문제는 명목민족과 직결되었지만, 주권선언 후의 과정은 모든 지역주민들의 문제였기에, 지역형성의 과정은 지역의 민족간의 경합의 과정을 거쳤다. 두 시기의 특징을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주권선언 초기, 민족담론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비명목민족(부랴찌야에서 부랴뜨민족을 제외하고)의 이출과 그 이후 재이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러시아연방의 지역주의는 경제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역주의가 러시아연방 영토 내의 문제였다면, '지역발전기'의 지역주의의 무대는 러시아연방을 넘어선다. 이는 러시아가 이미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체계에 참여하였고, 러시아의 지역들이 세계경제공간에 포섭되면서 나타났다.

넷째, 전환기 러시아의 지역주의는 지역주의 이론의 측면에서 고찰하였을 때, '민족존속론'과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에트 시기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던 '소비에트 국민·민족' 담론에도 불구하고, 소연방은 혈통적 특성에 기반한 '민족적'(ethnic)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전환기 러시아의 지역주의는 한편으로는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소비에트 민족'이라는 틀새에서, 명목민족의 민족의식(ethnic consciousness)에 기반하여 발생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의 중앙집권화에 대항하여 지역의 자치를 실현하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운동, 지역운동의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지역주의의 중심에는 민족지역이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발생과 변화는 민족지역에 대한 인식, 즉 지역정체성과 민족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족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국 문>

- 강원식, 2000, "러시아 연방체제의 구조", 신승권 외, 「현대 러시아학」, 한양대학교 출판부.
- 강원식, 1999/2000, "러시아 연방체제의 구조와 문제점," 「중소연구」, 통권 84호 pp.179-197.
- 고재남, 1996, 「(구소련지역)민족분쟁의 해부」,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502p.
- 권세온, 2001, "러시아 연방체제의 비대칭성에 대한 고찰," 홍완석 역음『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서울: 일신사, pp.151-178.
- 권세온, 2001, "러시아 정치성 모색논쟁의 특징에 대한 고찰," 「슬라브학보」, 16(1), pp. 345-370.
- 기연수, 1995, "소련연방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결성", 정한구·문수언 공편, 「러시아정치의 이해」, 나남: 서울.
- 김성진, 2001, "러시아 개혁정책과 지역주의 (1990~1993): 러시아 외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pp.317-341.
- 김성진, 2003, "러시아 중앙-지방관계의 갈등요인의 변화와 지속성(1999-2000):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1), pp.471-500.
- 김우승, 1998, "러시아 사회 구조와 집단주의", 김우승 외, 「러시아·러시아인」, 현상파인식, pp.345-362.
- 김우준, 2000, "러시아의 신정치질서: 중앙과 시베리아·러시아극동지방 간의 관계," 「國際政治論叢」, 제40집 3호, pp.191-211.
- 베노 베를렌 저음; 안영진 옮김, 2003,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서울: 한울, 365p.
- 성종환, 2003,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방법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19(1), pp.23-48.
- 신범식, 1998,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두 측면에 대한 일고찰", 「러시아 연구」,

- 8(2), pp.249-295.
- 심현용, 2001, "러시아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현대러시아연구회 편, 「현대 러시아의 이해」, 희설당, pp. 164-813.
- 심현용, 2001, "러시아 민족정책과 뿐전 시대", 홍완석 역음,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일신사, pp.179-203.
- 심현용, 2001, "소비에트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중소연구」, 25(4), pp.111-140.
- 안영진, 2004,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박상우 외 저음, 「지식정보사회와 지리학 탐색」(개정판), 한울아카데미, pp.393-422.
- 안영진·박영한, 1998, "서유럽의 지역주의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3(1), pp.57-74.
- 안현수, 1994, "러시아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함, 1992, "러시아 정체성 논쟁과 러시아연방의 장래," 「韓國政治學會報」, 26(2), pp.291-310.
- 유우익, 1981, "중심도시문화와 지역주의," 「도시문제」, 16(11), pp.30-41.
- 유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현대사회」 24, 현대사회연구소, pp. 246-263.
- 유우익, 2005, "통영의 정체성과 통영지지," 「통영지지연구」, 국토연구원, pp.223-249.
- 이강원, 2000, "중국 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조: 어문춘족 사회의 다민족화와 정체성의 정체,"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390p.
- 이승화, 1995, "러시아의 연방주의," 정한구·문수언 편역, 「러시아 정치의 이해」, pp. 269-294.
- 장덕준, 1999,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지역연구 7」, pp.1-24.
- 장덕준, 2000, "중앙-지방 관계에서 본 러시아 개혁의 제약요인: 모스크바와 극동 지역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pp.277-300.
- 장덕준, 2001, "러시아 연방제도와 중앙-지방관계," 현대러시아 연구회 편, 「현대 러시아의 이해」, 서울: 희설당, pp.142-163.

- 장덕준, 2003,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 고찰: 기원 및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43(4), pp.325-351.
- 전홍찬·장덕준, 2000, "중앙-지방관계에서 본 러시아 개혁의 제약요인: 모스크바와 극동 지역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pp.277-300.
- 정옥경 역, 2002, 「러시아민족문제의 역사」, 신아사: 서울.(보호단 나할일로·빅토르 스보보다 공저, Soviet Disunion: A History of the Nationalities Problem in the USSR, Russia)
- 정한구, 1995, "러시아의 지방정치," 정한구·문수언 공편, 「러시아 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pp. 321-346.
- 정한구, 1999, 「러시아의 자비 엘리트: 구엘리트의 변신(變身)과 체제 전환」, 세종연구소.
- 최영진, 1999, 「지역주의이론과 한국정치」, 서울:가산출판사. 228p.
- 한종만, 1999,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정치경제적 관점," 「한국사회과학논총」, 9(2), pp.59-82.
- 한종만, 2004,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인적자원의 중요성-정치경제적 시각," 「슬라브학보」, 24(1), pp.361-393.

<영 문>

- Agnew J. A., 1996, "Postscript: Federalism in the Post-Cold War Era," Graham Smith(ed), *Federalism: The Multietnic Challenge*, London; New York: Longman, pp.294-302.
- Agnew J., 1999, "Regions on the mind does not equal regions of the mi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1), pp.91-96.
- Agnew J. A., 2002, *Making Political Geography*, London: Arnold. 208p.
- Anderson J., 1988, "Nationalism ideology and territory," in Johnston, R. J. Knight, D. B. and Kaufman, E.(eds), *Nationalism, self-determination and political geography*. London: Croom Helm.
- Bassett, Keith, 1999, "Is the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The problem of progress in the light of recent work in the philosophy and sociology of

- sisten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1), pp.27-47.
- Bassin M., 1997, "History and philosophy of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4), pp.563-572.
- Berezkin A. V., Myagkov M., and Ordeshook P. C., 1999, "The Urban-Rural Divide in the Russian Electorate and the Effect of Distance from Urban Centers",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40(6), pp.395-406.
- Bradshaw D., Stenning A. and Sutherland D., 1998, "Economic Restructuring and Regional Change in Russia," in J. Pickles and A. Smith(eds), *Theorising Transi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Soviet Transformation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Bremmer, Ian, 1997, "Post-Soviet nationalities theory: past, present, and future," in Ian Bremmer and Ray Taras(eds),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26.
- Breslauer G. W., 1996, "Identity in Transition: An Introduction", Victoria E. Bonnell(ed), *Identities in Transition: Eastern Europe and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pp. 1-12.
- Connor W., 1972, "Nation-building or Nation Destroying?", *World Politics*, Vol.24, April.
- Dawisha K. and Parrott B., 1994, "National Identity and Ethnicity,"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the Politics of Upheaval*, Cambridge University, pp.57-70.
- Dunlop J. B., 1996, "Orthodoxy and National Identity in Russia", Victoria E. Bonnell(eds), *Identities in Transition: Eastern Europe and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enter for Slavic and East Europe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pp.117-128.
- Elazar D.(ed), 1994, *Federal Systems of the World: A Handbook of Federal, Confederational and Autonomy Arrangements*. 2nd Edition.
- Entrikin J. N., 1996, "Place and region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pp.215-221.

- Entrikin N. J., 1997, "Place and region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2), pp.263-268.
- Graham S., 1989, "Gorbachev's greatest challenge: perestroika and the national agenda,"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8(1), pp.7-20.
- Granberg A., 2000,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policy in the new Russia," Hans Westlund, Alexander Granberg, Folke Snickars(eds), *Regional Development in Russia: Past Policies and Future Prospects*, Edward Elgar: Cheltenham, UK/Northampton, MA, USA, pp.123-165.
- Griffudd P., 1999, "Nationalism," in Paul Cloke, Philip Crang, Mark Goodwin(eds),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Arnold: London, New York, Sydney, Auckland. pp.199-206.
- Hall S., 1993, "Minimal selves," in Gray A. and McGuigan J.(eds), *Studying culture*, New York:Edward Arnold, pp.134-138.
- Hall S., Held D., McGrew T., 1992, *Modernity and its Future*, Polity Press(전호 관·김수진 외 옮김, 2000, 「모더나티의 미래」, 혁신문화연구)
- Hanson P., 1994, "The Center versus the Periphery in Russian Economic Policy," *RFE/RL Research Report*, Vol.3, no.17(29), pp.23-28.
- Hooson, David, 1968, *The Soviet Union: People and Regions*, Belmont:Calif. pp. 122-123.
- Humphrey C., 1996, "Buryatia and the Buryats", Graham Smith(e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Post-Soviet States*, Longman: London and New York, pp.113-125.
- Ignatieff, M., 1993, *Blood and Belonging: Journeys into the New Nationalism*. London:BBC Books/Chato & Windus.
- Jackson P. and Penrose J.(eds.), 1993, *Construction of race, place and nation*. London:UCL Press.
- Johnston R. J., 1997, *Geography and Geographers: Anglo-American Human Geography since 1945*, 5th Edition, Arnold: London · New York · Sydney · Auckland:Arnold.
- Johnston R. J., Gregory D., Pratt G. and Watts M., 2000, *Human Geography*

4th edition, Blackwell Publishers Inc.

- Kim, Seongjin, 2000, *Regionalism in the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of the USSR and Russia: A Case Study of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Glasgow : University of Glasgow.
- Kirkow, Peter, 1998, *Russia's Provinces: Authoritarian Transformation versus Local Autonomy?*, London: Macmillan.
- Lapidus G. W., 1999, "Asymmetrical Federalism and State Breakdown in Russia," *Post-Soviet Affairs*, 15(1), pp.74-82.
- Lynn N. J. and Bogorov B., 1999, "Reimaging the Russia Idea," in Guntram H. Herb & David H. Kaplan(eds.), *Nested Identities: nationalism, territory, and scal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pp.101-120.
- Lynn N. J. and Fryer P., 1998, "National-territorial change in the republics of the Russian North," *Political Geography*, 17(5), pp.567-588.
- Lynn N. J., 1999, "Geography and Transition: Reconceptualizing Systemic Change in the Former Soviet Union," *Slavic Review*, 58(4), Special Issue: Ten Years after 1989: What Have We Learned?, pp.824-840.
- McMann, Kelly M. & Nikolai V. Petrov, 2000, "A Survey of Democracy in Russia's Regions."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41(3), pp. 155-182.
- Mitchneck, Beth, 1997, "The emergence of local government in Russia", *Geography and Transition in the Post-Soviet Republics*, JOHN WILEY & SONS pp. 89-107.
- Murphy A. B., 1991, "Regions as social construct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1), pp.22-35.
- Newman D. and Paa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pp.186-207.
- Nicholson, Martin, 1999, *Towards a Russia of the Regions*, Adelphi Paper 330.
- Paasi A., 1986,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s: a theoretical framework of

-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regions and the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Fennia*, 164(1), pp.105-146.
- Paasi A., 2002, "Place and region: regional worlds and word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6), pp.802-811.
- Paasi A., 2003, "Region and place: regional identity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pp.475-285.
- Painter J. and Philo C., 1995, "Spaces of citizenship: an introduction," *Political Geography*, 14, pp.107-120.
- Pallot J., 1983, "Recent approaches in the geography of the Soviet Un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7(4), pp.519-541.
- Parsons T., 1978, *Action Theory and the Human Condition*, New York:Free Press, p.345.
- Penrose J. & Jackson P., 1993, "Conclusio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onstructions of race, place and nation*, UCL Press.
- Petrov N. V., Mikheyev S. S. and Smirnyagin L. V., 1993, "Russia's Regional Association in Decline," *Post-Soviet Geography*, 34(1), pp.59-66.
- Piiraninen, Timo, 1997, *Towards a New Social Order in Russia: Transforming Structures and Everyday Life*, Dartmouth: Aldershot · Brookfield USA · Singapore · Sydney.
- Radvanyi J., 1992, "And what if Russia breaks up? toward new regional divisions," *Post-Soviet Geography*, 33(2), pp.69-77
- Rose G., 1995, "Place and Identity: a sense of place," in Doreen Massey and Pattes(eds), *A Place in the World?*, The Open University & Oxford.
- Rowney D. K., 1997, "Center-Periphery Relations in Historical Perspective: State Administration in Russia," in Stavrakis P. J., DeBfrdelenben J. and Black L.(eds), *Beyond the Monolith: The Emergence of Regionalism in Post-Soviet Russia*, pp.11-34.
- Shaw D. J. B., 1991, "Restructuring the Soviet city," in M. J. Bradshaw(ed), *The Soviet Union*, Belhaven Press: London
- Shaw D. J. B., 1992, "Siberian Regions Claims Republican Status," *Post-Soviet*

- Geography*, 33(3), pp.197-199.
- Shaw D. J. B., 1992, "Russian Federation Treaty Signed," *Post-Soviet Geography*, 33(6), pp.414-417.
- Shaw D. J. B., 1999, *Russia in the Modern World*, pp.31-33.
- Sheehy A., 1993, "Russia's Republics: A Threat to Its Territorial Integrity?," *RFE/RL Research Report*. 2(20), pp.34-40.
- Shlapentokh V., Levita R., Loiberg M., 1997, "The Contradictory Consequences of Regionalization," *From Submission to Rebellion: The Provinces Versus the Center in Russia*, WestviewPress, pp.203-218.
- Slezkin Y., 1996, "Ethnoterritorial Units in the USSR and Successor States," Victoria E. Bonnell(eds), *Identities in Transition: Eastern Europe and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enter for Slavic and East Europe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pp.92-102.
- Smith B. C., 1985,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George Allen & Unwin: London.
- Smith, Graham, 1991, "The State, Nationalism an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Soviet Republics," in Catherine Merridale & Chris Ward,(eds), *Perestroika: The Historical Perspectives*, London: Edward Arnold, pp. 209-213
- Smith, Graham, 1995, "The Ethno-Politics of Federalism without Federalism," in David Lane(ed), *Russia in Transition: Politics, Privatisation and Inequality*, Lonman:London and New York. pp.21-35.
- Smith, Graham, 1996, "Federation, Defederation and Refederation: from the Soviet Union to Russian Statehood," in Graham Smith(ed), *Federalism: The Multiethnic Challenge*. London - New York:Lonman.
- Stavrakis P. J., 1997, "Russian Regionalism in Post-Soviet," Peter J. Stavrakis, Joan DeBardeleben and Larry Black(eds), *Beyond the Monolith: the Emergence of Regionalism in Post-Soviet Russia*, pp.1-8.
- Stenning A. C., 1997, "Economic restructuring and local change in the Russian Federation", *Geography and Transition in the Post-Soviet Republics*, John

- Wiley & Sons. pp.147-162.
- Stoner-Weiss, 1997, Kathryn, *Local Heros: The Political Economy of Russian Regional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40p.
- Stoner-Weiss, 1999, "Central Weakness and Provincial Autonomy: Observations on the Devolution Process in Russia," *Post-Soviet Affairs*, 15(1), pp.87-106.
- Tolz V., 1993, "Regionalism in Russia: The Case of Siberia," *RFE/RL Research Report*, 2(9), 6 February, pp.1-9.
- Urban M., 1994, "The Politics of Identity in Russia's Postcommunist Transition: The Nation against Itself," *Slavic Review*, 53(3), pp.733-765.
- Vardys V. S., 1972, "Geography and Nationalism in the USSR: A Commentary," *Slavic Review*, 31(3), pp.564-570.
- Weitz E. D., 2002, "Racial Politics without the Concept of Race: Reevaluating Soviet Ethnic and National Purges," *Slavic Review*, 61(1), pp.1-29.
- Williams C. and Smith A. D., 1983, "The national construction of social 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7(4), pp.502-518.
- Young C., Light D., 2001, "Place, national identity and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an introduction," *Political Geography*, 20, pp.941-955.

<Но №>

- Абаев Т. Н.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Бурятии в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ый период/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ё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Улан-Удэ:ИМБИТ, 2003. 129с.
- Абаева Л. Л. О соотношении этнических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в культуре забайкальских Бурят (XVII-X X вв.)//Традиционн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и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Тезисы и материалы докладов и сообщений Всесоюз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АН СССР орден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Институт этнографии им. Н. Н. Миклухо-Маклая. Институт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бурятского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Улан-Удэ, 1990. с.23-27.
- Абаева Л. Л. Этноконфессиональная ситуация и проблемы реализации Закона "О р

елигиоз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Под ред. Базарова Б. В., Рандалов Ю. Б., Курас Л. В. Материалы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и выездного заседания Комитета Народного Хурал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 региональным связям, национ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делам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по вопросу "О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предпринятые действия, проблемы и пути дальн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Народный Хурал РБ, ИМБИТ СО РАН, Улан-Удэ, 1999. С.48-52.

Абаева Л. Л., Крянев Б. П.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Выбор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сентябрь 1994 г.)//Развивающийся избир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в России.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й ракурс. т. п. выборы-93. М., 1995. с.278-291.

Акманов И. Г. Вехи Суверенитета. -Уфа: Башкирское Изд-во «Китап». 1995. -56 С.

Алаев Э.Б.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Понятийно-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Мысль, 1983.

Андреев А. А.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как субъек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сторико-полит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 на соискание учё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к. М., 1998. 24С.

Аринин А. На путь к новой федерации//Един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Кам.Думы по делам федерации и регион. политике. М.: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Республика, 1994.

Артоболевский С. С.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в России: обзор соврем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В. Климанов и Н. Зуваревич(ред), Политика и Экономик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Измерении, Москва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0. С.42-52.

Асимметриче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згляд из центра, республик и областей/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 -2-е изд. М:Изд-во Института социологии РАН, 2000.

Бартуков В. П. Внешне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России и её Субъекта-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1946-2000гг. Улан-Удэ: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2000. 149С.

- Бильтрикова А. В. Интелигенция и процессы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Проблемы нового этапа 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 Улан-Удэ: 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2001. с.31-40.
- Болотов С., Митылов В.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 очерки конца столетия. Историк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е издание. Улан-Удэ: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ИнформПолис", 2003. 286с.
- Боронеева Д. Ц., Халанова Г. Б. К Пробл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Этноса и Его Диаспоры//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отрудников и Аспирантов БГУ:Тез. Докл. в 2-х Частях. Улан-Удэ: Изд-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2001. -ч1. с.81-85.
- Будаева Ц. Б., и др. Общественный перемены Бурятии в условиях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Буря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Улан-Удэ, 1998. с.6-33.
- Бурятия: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основы стратег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Под ред. Л. В. Потапова, К. Ш. Шагжиева, А. А. Варламова, М.:Круглый год, 512С.
- Вернуть название "Бурят-Монголия", "Бурят-Монгол" Нэрье Нэргээхэ. Сост. Д. ис. т. наук Чимитдоржиев Ш. Б. Улан-Удэ, 1998.
- Власть.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Город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автоном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Кратки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М.: Институт Современной Политики, 1996.
- Гельман В., Хопф Т. Центр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России: Рамки анализа//Центр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России/Под. ред. Владимира Гельмана и Теда Хопфа. СПб.:Изд-во Европ. ун-т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Летний Сад, 2003. с.7-28.
- Гладкий Ю. Н., Далгатов И. Г.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оссийского Федерализма// Извест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2003. Вып.3. С.1-10.
- Гладкий Ю. Н., Добрков В. А., Семенов С. П.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и:Учебник. М.:Гардарики, 2001. 752С.
- Дагбаев Э. Д. Политизация интелигенции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Национальная интелигенция, духовенство и пробл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 народов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БНЦ СО РАН Бурятский Институт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Улан-Удэ, 1995. с.17-20
- Доболова З. О. Процессы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Бурятии в 90-е гг.//Проблемы нового этапа 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 Улан-Удэ: 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2001. с.77-84
-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2000-2003 годы/под общей ред. проф. С. Н. Бобылева. М.:Весь Мир, 2003. 136с.
- Дробижева Л. М. Опыт национализма и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в республи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Суверенитет и этническ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идеология и практика/ под ред. Дробижева Л. М., Гузенкова Т. С. РАН 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им. Н. Н. Миклухо-Маклая. М., 1995. С.36-54.
- Дробижева Л. М. Русские в республи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оссии и СНГ. Семинар Московского Центра Карнеки Вып.2: Доклады 1994-1995 гг. Под ред. Г. Бордигова и П. Гобла. М.: "АИРО-ХХ", 1995. с.120-130.
- Дронжева Л. Этническая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Проблемы совместимости //Н. Ю. Лапина(ред),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цессы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власть. М., 2002. С.11-29.
- Дунисова Г. С. Этнический фактор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России 90-х годов. Ростов н/Д: Изд-во Рост. пед. ун-та, 1996. 224с.
- Егоров Е. М.(Президент Конгресса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Конгресс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фактор демографизации республики//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н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Улан-Удэ, 1998. С.54-58.
- Елаев А. А. Бурятский Народ: Становление, развитие,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М., 2000.
- Елаева И. Э. Современное родо-земельческие сети бурят//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чевых цивилизаци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 IV. История, Философия, социология. Филология. Искусство: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Улан-Удэ:Издательство БНЦ СО РАН, 2000. С.23-32.
- Жалсанова В. Г. К Специфике становл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Проблемы нового этапа 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 Улан

- Удэ: 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2001. с.125-139.
- Жуковская Н. Л. В поисках бурят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и//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чевых цивилизаци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IV. История, Философия, Социология, Филология, Искусство: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Улан-Удэ: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2000. с.13-22.
- Затеев В. И. Русские в Бурятия//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н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Улан-Удэ, 1999. с.63-67.
- Затеев В. И. Русские в Бурятии: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Улан-Удэ:Издательст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2002. 578с.
- Зуваревич Н. 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и политика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сле кризиса 1998г.// Политика и экономик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измерении Серия 2000.
-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Бурятии. М.: Дизайн. Инф-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1. 640 с.
- История Бурятия Конец XIX в.—1941г. Часть I . Учебная книга для средн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Улан-Удэ, 1993.
- Карапетян Л. М. Федерализм и Права Народов: Курс Лекций. М.:Изд-во ПРИОР, 1999. 112с.
- Карнышев А. Д.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Бурятии. Улан-Удэ, 1996. 32с.
- Кирилин А. 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 а. М., 2002.
- Климанов В., Зуваревич Н. В.(ред). Политика и Экономик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Измерении, Москва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0.
- Колосов В. А., Мироненко Н. С. Гео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Учебник для вузов. М.: Аспект Пресс, 2002. 479с.
- Комарова В. В., Магомедов Ш. Б.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еги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ктб. 1999.
- Комментарии к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Улан-Удэ:Бурят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96. 176с.

- Крамник В. В. Россия-Поиск Идентичности//Россия. Планетарные Процессы/Под ре-
д. В. Ю. Большакова. СПб.: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2. с.194-232.
- Криндач А. Д.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Известия РАН
Серия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1996. №4. С.78-87.
- Крянев Б. П. Бурятия политиче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
кие движения, блоки и организации(1990-1999). Улан-Удэ: Издательство Бур-
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1999. 234с.
- Крянев Б. П.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и предвыборные блок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Ул-
ан-Удэ:Издательст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1996. 40с.
- Крянев Б. П. Политические истории и предвыборные блок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Цен-
тр электраль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Альтернатива”) Улан-Удэ, 1996.
- Кулас Л. В., Базаров О. Д.,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движе-
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в Бурятии//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государство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к 75-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Улан-Удэ: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1998. с.146-160.
- Лавров А. Развитие бюджетно федерализма в России//Федерализм, №3. м., 2000
с.5-46.
- Ларконоев В. Г. (Владимир Григорьевич).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избирательной с-
истемы в Бурятии (1921-1999гг.)/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ё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БГУ, 2003. 151с.
- Маловецкий А. В. Город и предприятия: Условия совместного развития. М.: Эдитор-
иал УРСС, 2002. 296с.
- Мангатаева Д. Д. Население Бурятии : Тенден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Улан-
Удэ : БНЦ СО РАН, 1995. 131с.
- Митрохин С. С. Предпосылки и основные этапы децентр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Центр-Регионы-Местное Самоуправление. м., 2001. с.47-87.
- Мы сами-ключ к успеху! Из опыта работы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1999. 80с.
- Наеканчина А. П. Эвенки Бурятии : проблема возрождения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Возр

- ожде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культур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 Улан-Удэ, 1998. с.101-103.
-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Научный центр "Руссика". М., 1997.
- Ненароков А. П. Регионализм-Федерализм-Сепаратизм: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России//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оссии и СНГ. Семинар Московского Центра Карнеги. Вып.2:Доклады 1994-1995 гг./Под ред. Г. Бордюгова и П. Гобла. М.:АИРО-XX", 1995. с.132-143.
-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сибирского региона.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неполит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ейству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ибирского регио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Издание третье в одиннадцати томах. Том III,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1998. 76с.
- Павленко С. В. Легитимац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регионализма//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Под общ. ред. Т. И. Заславской. М.: Аспект Пресс, 1996. с.85-94.
- Павленко С. Ю.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и Регионализм:пример Сибири//Регион:Экономика и Социология. 1996. №1. с.59-74.
- Панасюк А. В.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Федерализм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в полиз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М., 2001.
- Петров Н. Формиров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Центр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России/Под. ред. Владимира Гельмана и Теда Хопфа. -СПб.;Изд-во Европ. ун-т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Летний сад, 2003. с.125-186.
- Петрова Е. В. Этно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Проблемы Нового этапа 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 Улан-Удэ: 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2001. с.41-51.
- Потопов Л. В. Развит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70 лет. Улан-Удэ: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93. с.17-25.
- Практика развития суверенитета РБ и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на примере договора Бурятии и России//Бурят-Монгольский вопрос: История, право, политика.
- Пронькинов И. Т.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постсоветски

- я период)/Политология и социология: Наука, образование и реальность. Улан-Удэ: Изд-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2001. с.198-201.
- Пыкин В. М. Соврем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России и Бурятии. Пособие для учителя. Улан-Удэ, 1994. 80с.
- Рандалов Ю. Б. К вопросу об оценке этносоциальной и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Под ред. Базаров Б. В., Рандалов Ю. Б., Курас Л. В. Материалы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и выездного заседания Комитета Народного Хурал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 региональным связям, национ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делам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по вопросу "О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предпринятые действия, проблемы и пути дальн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Народный Хурал РБ, ИМБИТ СО РАН, Улан-Удэ, 1999. с.15-18.
- Распад СССР и Формирование Федерализма Нового Типа//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ОЛМА-ПРЕСС, 2003.
-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и проблемы/Под ред. А. И. Третьякова и С. С. Артоболевского. М.:Эдиториал УРСС, 2001.
- Республика Коми-80 лет. Очерки, посвященные 80-лет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ми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ст. О. Ю. Кузиванова-Сыктывкар: Коми книжное изд-во. 2001. 423с.
- Родоман Б. Б. Внутренний Колониализм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Поляризованная Биосфер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Ойкумена. Смоленск, 2002. с.291-297.
- Санжиев Г. 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правовое положение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Со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и перспективы его развития. БНЦ СО РАН. Улан-Удэ, 1996. с.3-12.
- Санжиев Г. Л. Образ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её знач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 70 лет. Улан-Удэ: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е изд-во, 1993.
- Сапрохина Г. И. Проблем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Центра и Периферии в условиях регионализации//Федерализм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в полигэтн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М., 2001. с.65-81.

- Сидоров М. 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и регионалистика России: Учебник-атлас. М.:ИНФРА-М, 2002. 400с.
- Совет по внешней и обор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тратегия для России: Новое освоение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асть I, Сибирь и Далний Восток: Проблемы интеграции и дезинтеграции. м., 2001. с.63-83.
- Соколин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переписи//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и-ХХ I Век. 2003. №. 12. с.32-33.
- Стрелецкий В. Н. Культурный ландшафт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Известия АН. Серия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2003, №2. с.126-127.
- Стрелецкий В. Н.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регионализации России//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и проблемы/А. И. Трейвич и С. С. Арболовский(ред). м., 2001.
- Строганова Е. А. Бурят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Москва-Иркутск, Наталис. 2001,
- Тархов С. А. Историческая эволюц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еления России//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и Процессы и проблемы. УРСС:Москва, 2001.
- Трейвич А. И.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России: Специфика, дилеммы и циклы//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и проблемы/А. И. Трейвич и С. С. Арболовский(ред). УРСС:Москва, 2001. с.39-66.
- Трейвич А. И., Арболовский С. С. Введение: Что такое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и надо ли с ней бороться//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и проблемы/А. И. Трейвич и С. С. Арболовский(ред). УРСС:Москва, 2001. с.3-9.
- УССР Декларация. Декларац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а Украины: Принята Верхов. Советом Украинской ССР 16 июля 1990г. Киев: Политиздат Украины, 1990.
- Урбанаева, И. С. Шаманская Философия Бурят-Монголов: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е Тэнгриянство в Свете Духовных Учений в Двух Частях/РАН СО ИМВТ. Издательств

- о Бурятского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СО РАН. Улан-Удэ, 2000. с.101-103.
- Федоров В. П.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и Дез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России/РАН. Ин-т Европы. М., 2002. 56с.
- Филиппов Н. К.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Республик-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1992.
- Хафф Д., Колтон Т., Лейманн С., Губогло. Предвыборная ситуация в России/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РАН и Институт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ВНЦ СО РАН. М., 1993.
- Хымиттуев О.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Улан-Удэ:Издательст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6. 126с.
- Цыремпилов Д. Ц. О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родов Бурятии//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70 лет Улан-Удэ: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93. С.88-98.
- Чиркова А. Е., Лапина Н. Ю. Реформа Российского Федерализм: Региональные элиты в поисках стратегии//Россия:Трансформирующееся общество/под. ред. Ядов В. А. 2001. М., С.359-372.

<2> **Б**

- Бурятия 70 л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Госкомстат РБ. Улан-Удэ, 1993
- Бурятия АССР в Чифрах(1923-1973)/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Бурятской АССР. Улан-Удэ.
- Бурятская обла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ПСС. Хроника. Книга вторая. 1998.
- Буряты в зеркале статистики/Госкомстат РБ Управ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Улан-Удэ, 1996.
- Буряты в зеркале статистики/Госкомстат РБ. Улан-Удэ, 1997.
- Ведомости Съезда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ССР 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990. № 19. Ст. 329.
-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Госкомстат РБ. Улан-Удэ, 2002.
-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Бурятской АССР за 60 лет. Юбилей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к/ЦСУ РСФСР.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Бурятской АССР. Улан-Удэ, 1977.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СССР/Госкомстата СССР. М., 1991.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по владению языками/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М., 1995.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и языку/Госкомстат РБ. Улан-Удэ, 1990.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тат. сб. В.2т. Т.1./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М., Р32. 2000. 604с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80л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юбилейный выпуск/Госкомстата РБ. 2003. 305с.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80ле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юбилейный выпуск/Комгостат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2003. 305с.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и регионы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Госкомстат РБ. 2002.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М., 1994.

Сборник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СФСР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обрании, Союзном Договоре и Референдуме И.:Сов. Россия, 1991.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Госкомстат РБ. Улан-Удэ, 2002.

Четвертная сессия Народного Хурал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Первый созыв). 17-21 апреля 1995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Издание Народного Хурал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Улан-Удэ, 1995. с.457-460.

<신문자료>

Бурятия. 1989. 9. 19

Бурятия. 1990. 9. 29

Бурятия. 1990. 9. 23

Бурятия. 1990. 9. 23

Бурятия. 1991. 2. 15

Бурятия. 1991. 2. 15

Бурятия. 1991. 5. 16.

Бурятия. 1991. 7. 17.

Бурятия. 1991. 8. 31.
Бурятия. 1991. 9. 26.
Бурятия. 1991. 9. 28.
Бурятия. 1991. 10. 5.
Бурятия. 1991. 10. 9.
Бурятия. 1991. 10. 10
Бурятия. 1991. 10. 10.
Бурятия. 1991. 10. 19.
Бурятия. 1991. 11. 11.
Бурятия. 1991. 11. 12.
Бурятия. 1991. 11. 15.
Бурятия. 1991. 12. 24.
Бурятия. 1991. 12. 3.
Бурятия. 1991. 12. 4.
Бурятия. 1992. 2. 4
Бурятия. 1992. 2. 25
Бурятия. 1992. 4. 7.
Бурятия. 1992. 4. 17.
Бурятия. 1992. 4. 30.
Бурятия. 1992. 5. 22.
Бурятия. 1992. 6. 16.
Бурятия. 1992. 7. 3
Бурятия. 1992. 7. 10.
Бурятия. 1992. 9. 25.
Бурятия. 1992. 11. 4.
Бурятия. 1993. 1. 13
Бурятия. 1993. 1. 14.
Бурятия. 1993. 2. 17.
Бурятия. 1993. 3. 27
Бурятия. 1993. 5. 21.

Бурятия. 1993. 6. 2.
Бурятия. 1993. 6. 24.
Бурятия. 1993. 7. 24.
Бурятия. 1993. 9. 18.
Бурятия. 1993. 12. 28.
Бурятия. 1994. 8. 5.
Бурятия. 1995. 10. 7.
Бурятия. 1995. 10. 10.
Бурятия. 1996. 2. 24.
Бурятия. 1996. 2. 9.
Бурятия. 1996. 3. 27.
Бурятия. 1996. 4. 18.
Бурятия. 1996. 6. 8.
Бурятия. 1996. 7. 11.
Бурятия. 1996. 7. 16.
Бурятия. 1996. 10. 15.
Бурятия. 1997. 3. 12.
Бурятия. 1997. 4. 3.
Бурятия. 1997. 4. 11.
Бурятия. 1998. 4. 14.
Бурятия. 1997. 4. 17.
Бурятия. 1997. 9. 26.
Бурятия. 1998. 3. 26
Бурятия. 1998. 11. 13.
Бурятия. 2000. 6. 15
Бурятия. 2000. 12. 28.
Бурятия. 2001. 2. 13.
Бурятия. 2002. 1. 10.
Бурятия. 2003. 6. 19
Бурятия. 2003. 7. 4.

Главный Советникъ. №13(45). 2004. 4. 5.
Молодёжь Бурятии. 1991. 10. 5.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7. 8.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9. 1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10. 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89. 12. 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8. 24.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8. 2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8. 2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9. 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9. 1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9. 23.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9. 2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10. 1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0. 11. 11.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1. 11.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2. 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2. 28.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3. 2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3. 2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4. 18.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4. 2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10. 4.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10. 1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10. 12.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1. 10. 1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2. 1. 1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2. 4. 25.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2. 5. 2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2. 11. 1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4. 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4. 2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5. 21.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5. 2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7. 2.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7. 1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9. 3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11. 1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11. 3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12. 15.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3. 12. 28.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4. 1. 14.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4. 3. 9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4. 6. 2.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5. 10. 1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6. 3. 23.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6. 3. 2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6. 3. 27.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6. 4. 5.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7. 4. 3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7. 4. 10.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7. 4. 11.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7. 5. 16.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7. 10. 3.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7. 10. 21.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8. 6. 4.
Правда Бурятии. 1999. 1. 23.
Правда Бурятии. 2003. 3. 28.

Regionalism and Regional Identity in Russia in Transition: A Case Study of the Republic of Buryatia

Kim, Hyosup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estroika and Glasnost of the Gorbachev's administration in mid-1980s inspired national consciousness and proliferated nationalism and separatism among ethnic groups in Soviet Socialist Republic(SSR), leading to national revival and the declaration of sovereign. This expects the longstanding identity of 'soviet nation' in SSR is being replaced by new identity. However, this does not come true in ease. Since most SSRs are multi-ethnic, the declaration of sovereign often entails in political conflict among ethnic groups. This implies that the declaration of sovereign in the contemporary Russia is pertinent to the politics of identity.

This research addresses the process of the politics of identities around regions and ethnicities with a case study of the Republic of Buryatia.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tual purpose of declaration of sovereign in the Republic of Buryatia was achievement economic autonomy. Despite its economic depression, Autonomous Republic(ASSR) was not authorized to establish its own economic policies. ASSR attempted to achieve the same autonomy that SSR had through the declaration of sovereign.

Second, even though 'nation' was the backbone of the declaration of sovereign,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iving the nation along ethnic line. The issue was who becomes the subject of sovereign and how to define nation and ethnic region. In this context, the declaration of sovereign was not only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tension between ethnic Russian and titular nations: Ethnic Russian perceived nation as a momentary tool for sovereign(ity), whereas Buryat did as a

ultimate goal. This difference entailed in a lot of discussion on national identity and often ends with ethnic conflicts.

Third, the discourse on national identity had declined when it turned to 1994. It was not only because newly institutionalized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merged and mitigated tension between them, but also because ethnic Buryat occupied small proportions of the population of the region and was not united against ethnic Russian.

Fourth, economy rather than nation has become a major agenda. As Russian Federation adopted market economy and engaged in global economy, the significance of geopolitical position has been increased. Correspondingly, Buryats re-defined Republic of Buryatia as a part of Northeast Asia.

Taken as a whole, the research summarizes regionalism in Russian Federation in two-folds. First, regionalism indicates the emergence of region. During the Soviet era, Russians pay less attention to region and even consider it undesirable because of its purported emphasis on uniqueness and particularity of a place. Regionalism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calls attention to differences between places, thus reviving locality. Second, regionalism evolves, corresponding to change in regional identity and discourse. The principle discourse on the nation at the early stage of regionalism shifts into the economy.

keywords : regionalism, regional identity, the politics of identity, nationalism, national revival, the process of ethnic politics, the emergence of region, geopolitics, Russian Federation, The Republic of Buryatia

student number: 98208-801

地理學論叢 별호 61

2005년 8월 31일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발행인 : 유우익

편집인 : 박수진

인쇄소 : 신일문화사

